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2720-01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2019. 03.



농림축산식품부

---

#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

2019. 3.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책임연구원	김	종	안
연구원	정	상	택
	길	청	순
	이	소	진
	송	기	선
	김	현	일
	김	진	희
	이	지	은
	노	순	응
	박	은	희
연구보조원	김	연	하
	권	재	현

2019년 3월 10일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 김 종 안





## 《 요약 》

- 이 연구는 현정부의 100대 혁신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푸드플랜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9개 시범지역 분석,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통해 유형별 기본모델과 정책적 확산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지역 푸드플랜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먹거리 보장 실태, 인구구조 변화와 식생활 실태, 인구이동, 농정의 글로벌 대응과제, 지방소멸과 농업농촌의 위기 상황 등을 살펴봄
- 국내외 사례로는 서울시와 전주시, 미국 버몬트주와 뉴욕시, 캐나다의 토론토시와 밴쿠버시를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스웨덴 말뫼시와 런던시의 먹거리전략 2018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음. 또한 미국의 각 주별 로컬푸드 순위를 매년 발표하는 ‘로컬보어(locavore) 지표’의 사례를 제시함
- 또한 2018년 지역 푸드플랜 계획수립 지원 대상인 9개 시범지역의 1000명씩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함. 지역주민들의 푸드플랜에 대한 인지도는 25% 수준이었으며, 최우선 추진과제로 먹거리 복지 강화와 불평등 해소,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환경친화적 먹거리 생산·소비 확산 순으로 응답함
- 9개 시범지자체 먹거리정책 추진 성과와 푸드플랜(안)을 검토한 결과, 거버넌스와 추진체계 구축, 먹거리 공공성 제고, 지역순환체계 구축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식생활개선 부문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위의 조사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사회성, 경제성, 환경성 요소와 성숙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푸드플랜의 유형을 ‘로컬푸드형 푸드플랜’,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으로 설정함
- 로컬푸드형은 주로 도농복합시나 농촌 지역에서 지역생산·지역소비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먹거리보장형은 도시 지역에서 먹거리 불평등 해소와 식생활 개선, 소비자와 생산자간 신뢰회복에 초점을 두고 수립되는 경향이 강함
- 지속가능형은 먹거리의 사회성, 경제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앞선 두 유형에 비해 환경배려에 대한 실천, 먹거리경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먹거리자치와 공동체회복에 초점을 둠
-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공동과제로 농가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체계,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과 푸드플랜 확산시 정책적 효과를 제시함
- 마지막으로 푸드플랜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푸드플랜 공감대 확산과 역량강화 지원을 세부 실행과제, 학교·공공급식 고도화, 도시지역 현물급식 확대, 로컬푸드 내실화, 커뮤니티키친(공유식당) 활성화, 생활밀착형 먹거리정책 인프라 확대, (가칭)중앙먹거리전략지원센터, 푸드플랜 지자체 협의체 구성 운영 등을 제시함

# 목 차

<b>I. 연구 개요</b>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가. 연구 배경 .....	3
나. 연구 목적 .....	3
2. 연구 과제와 방법 .....	4
가. 연구 과제 .....	4
나. 연구 추진 방법 .....	4
<b>II. 지역 푸드플랜의 필요성과 국내외 선도사례 분석</b> .....	7
1.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 .....	9
가. 푸드플랜의 정의 .....	9
나. 푸드플랜의 성격 .....	11
2. 푸드플랜의 필요성 .....	15
가. 먹거리 보장성(Security :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능력) 제고 .....	15
나. 인구·가구 구조변화 대응과 식생활 균형 회복 .....	20
다. 지역으로의 이동인구의 안정적 정착 지원 .....	22
라. 농정의 글로벌 과제 대응 강화 : 기후환경 변화와 인구 100억 시대 대비 .....	23
마. 지정학적 리스크와 먹거리 안전망 .....	26
바. 지방소멸과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한 대응 .....	27
사. 요약 및 시사점 .....	33
3. 국내외 푸드플랜 추진동향과 사례 .....	34
가. 국내외 추진 동향 .....	34
나. 국내 추진 사례 .....	44
다. 해외 추진 사례 .....	53
라. 국내외 동향 및 사례의 시사점 .....	71

<b>Ⅲ. 국민 인식도 조사</b> .....	73
1. 지역 푸드플랜 1차 인식 조사 결과 .....	75
가. 개요 .....	75
나. 응답자 특성 .....	76
다. 설문조사 결과 .....	77
2. 지역 푸드플랜 2차 인식 조사 결과 .....	102
가. 개요 .....	102
나. 응답자 특성 .....	103
3. 요약 및 시사점 .....	115
<b>Ⅳ. 선도지자체 시범사업 점검 및 분석</b> .....	117
1. 1차 모니터링 결과 .....	119
가. 개요 .....	119
나. 주요 모니터링 및 자문 결과 .....	119
다. 소결 및 시사점 .....	141
2. 2차 모니터링 결과 .....	142
가. 개요 .....	142
나. 모니터링 결과 .....	143
다. 모니터링 결과 분석 .....	162
<b>Ⅴ. 유형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b> .....	175
1. 유형구분의 기준 .....	177
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구성 요소 .....	177
나. 유형별 기본모델 1 : 로컬푸드형 푸드플랜 .....	182
다. 유형별 기본모델 2 :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 .....	190
라. 유형별 기본모델 3 : 지속가능형 푸드플랜 .....	205
2.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	214
가. 농가조직화 .....	214
나.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체계 구축 .....	218
다.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	227
라.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	229

3. 푸드플랜 정책 효과분석 .....	230
가. 일자리 창출 효과 .....	230
나. 환경비용 절감 효과 .....	231
<b>VI. 지역 푸드플랜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b>	<b>235</b>
1. 푸드플랜 확산 기반 마련 .....	237
가. 교육자료 및 매뉴얼 개발 보급 .....	237
나. 참여형 푸드플랜 수립 가이드라인 제공 .....	237
다. 지역먹거리 실태·정책분석 방법의 개발 보급 .....	248
2. 푸드플랜 고도화 지원 .....	243
가. 학교급식·공공급식 고도화 지원 .....	243
나. 도시지역 학교급식 현물공급체계 구축 지원 .....	249
다. 로컬푸드 내실화 및 고도화 지원 .....	251
라. 공유식당(커뮤니티키친) 활성화 지원 .....	256
마. 먹거리정책 인프라 확충 지원 .....	258
3. 푸드플랜 지원체계 강화 .....	261
가. (가칭)중앙먹거리전략지원센터 설치 .....	261
나. 푸드플랜 지자체 협의체 구성 및 지원 .....	262
다. 직거래 기본계획 운영 내실화 .....	263
<b>[부록] .....</b>	<b>267</b>
1.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269
2.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	278
3.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	289
4. 지역 푸드플랜 설문 조사지 (1차) .....	295
5. 지역 푸드플랜 설문 조사지 (2차) .....	299

## - 표 목차 -

[표 II- 1] 푸드플랜과 로컬푸드의 관계 .....	14
[표 II- 2] 지역별 먹거리 미보장 인구비율 (2013~2015 기준) .....	16
[표 II- 3] 귀농·귀촌 인구 현황 .....	22
[표 II- 4]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의 주요 내용 .....	23
[표 II- 5] 환경계약 하의 푸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들 .....	24
[표 II- 6] 농업·농촌 주요 지표 변화 .....	27
[표 II- 7] 농업생산의 대농 집중 추이(1990~2015년) .....	27
[표 II- 8] 곡물수입 의존률 주요국[총166국] 현황 (2011-2013 3개년 평균) .....	29
[표 II- 9]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현황 .....	30
[표 II- 10] 먹거리 안전 : 살충제 계란 사례 .....	30
[표 II- 11] 농업·농촌 주요지표 2040 전망 .....	31
[표 II- 12] EU Food 2030의 우선순위 정책과 내용 .....	39
[표 II- 13] 2019년 푸드플랜 패키지지원 사업 내역 .....	42
[표 II- 14]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2019년 사업계획 기준) .....	52
[표 II- 15] Sustainable Food Plan의 실천 계획 .....	66
[표 II- 16] 미국 Locavore INDEX에 따른 평가결과(2018) .....	70
[표 III- 1] 일반국민 조사 응답자 특성 .....	76
[표 III- 2]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구입을 위한 일반시민의 활동 .....	77
[표 III- 3] 지역농산물과 타지역 농산물간의 신선도 및 안전성 인식 비교 .....	78
[표 III- 4]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확대 인식도 차이 비교 .....	79
[표 III- 5] 우리 주변 먹거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악화도 평가(7점 척도) .....	80
[표 III- 6] 먹거리 취약계층 및 계층간 먹거리 불평등에 대한 개선여부 .....	82
[표 III- 7] 식품안전성 및 위생정도(음식점, 급식소 등)에 대한 개선여부 .....	83
[표 III- 8] 비만, 성인병 등을 유발하는 식생활 습관에 대한 개선여부 .....	84
[표 III- 9]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변동성에 대한 개선여부 .....	85
[표 III- 10] 환경에 부담을 주는 농식품의 대량 생산 및 소비 추세에 대한 개선여부 .....	86
[표 III- 11] 나의 국내산 농산물 섭취 비율에 대한 개선여부 .....	87
[표 III- 12] 먹거리 표시제도 관리(친환경, GAP, GMO 표시제 등)에 대한 개선여부 .....	88
[표 III- 13]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자의 영농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개선여부 .....	89
[표 III- 14]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농산물 소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개선여부 .....	90
[표 III- 15] 지역 및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 육성 여건에 대한 개선여부 .....	91
[표 III- 16] 먹거리종합정책(푸드플랜)에 대한 인지도 .....	92
[표 III- 17] 먹거리정책관련 인지경로 .....	93
[표 III- 18] 먹거리종합정책(푸드플랜)이 해결해야 할 과제의 우선도 평가 .....	94
[표 III- 19]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업무추진의 적절한 방법 의견 .....	95
[표 III- 20] 먹거리 거버넌스 조직에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직 응답(5개 중복 답변) .....	96
[표 III- 21] 먹거리관련 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중복응답) .....	98
[표 III- 22] 먹거리관련 정책 중 더 잘해야 할 정책에 대한 평가(중복응답) .....	100
[표 III- 23] 일반국민 2차 조사 응답자 특성 .....	103

[표 III- 24]	먹거리종합정책 과제 의 우선순위	104
[표 III- 25]	건강농산물 생산 및 안전관리 분야 중요도 평가	105
[표 III- 26]	건강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사업 분야 중요도 평가	106
[표 III- 27]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여건 마련 분야 중요도 평가	108
[표 III- 28]	식생활 개선 및 환경 보전분야 세부사업 중요도 평가	109
[표 III- 29]	건강농산물 생산 및 안전관리 분야 시급성 평가	110
[표 III- 30]	건강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사업 분야 시급성 평가	111
[표 III- 31]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여건 마련 분야 시급성 평가	113
[표 III- 32]	식생활 개선 및 환경 보전분야 세부사업 시급성 평가	114
[표 IV- 1]	시범지역의 먹거리정책 모니터링 지표별 평가 기준	162
[표 V- 1]	파리시의 ‘Sustainable Food Plan 2015-2020’에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역할	177
[표 V- 2]	해남군 푸드플랜(안)의 주요 내용	185
[표 V- 3]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의 기본 구성(안)	187
[표 V- 4]	유성구 푸드플랜(안)의 주요 내용	191
[표 V- 5]	서대문구 푸드플랜(안)의 주요 내용	195
[표 V- 6]	충청남도 푸드플랜(안)의 주요 내용	197
[표 V- 7]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의 기본 구성(안)	200
[표 V- 8]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의 기본 구성(안)	207
[표 V- 9]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형태별 장단점 비교	219
[표 V- 10]	화성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일반현황	221
[표 V- 11]	식재료 공급대상 학교, 학생수 및 연간매출액	222
[표 V- 12]	공급 품목 부류별 연간매출	223
[표 V- 13]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공급 현황	223
[표 V- 14]	아산시 학교급식센터 운영 사례	224
[표 V- 15]	푸드플랜의 수립과 실행 거버넌스 사례	227
[표 V- 16]	인구 10만 이상 도시 지역의 푸드플랜 추진시 일자리 창출 효과 추정	231
[표 VI- 1]	예시 : 서울시 먹거리정책 분류체계	240
[표 VI- 2]	통계기법을 이용한 정책우선순위 결정 사례 (충청남도)	241
[표 VI- 3]	밀라노 먹거리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지표 (2018년)	242
[표 VI- 4]	식재료 공급부류별 학교급식지원센터 분류 현황	244
[표 VI- 5]	학교급식지원센터 수발주 프로그램 운영 현황	245
[표 VI- 6]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위탁운영주체 및 매칭 산지	248
[표 VI- 7]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차액지원 기준	248
[표 VI- 8]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차액지원 기준	249
[표 VI- 9]	2019년 무상급식 추진 현황	249
[표 VI- 10]	서울시와 경기도의 친환경학교급식 체계	250

[표 VI- 11]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과 새로운 유통혁신 사례 .....	251
[표 VI- 12]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의견조사 결과 및 로컬푸드유통관리시스템(예시) .....	252
[표 VI- 13] 주요 지역인증체의 현황 .....	254
[표 VI- 14] 로컬푸드 소비자 접근성 향상 사례 .....	256
[표 VI- 15] 지역개발사업과 푸드플랜의 연계 사례 .....	258



## - 그림 목차 -

[그림 II- 1] 지속가능형 푸드시스템과 푸드플랜 .....	9
[그림 II- 2] 먹거리의 다면적 가치와 푸드플랜의 영역 .....	10
[그림 II- 3] 먹거리의 다면적 가치 .....	11
[그림 II- 4] 서울시 포용도시 의제와 푸드플랜의 관계 .....	12
[그림 II- 5] 지역별 먹거리 미보장과 빈곤 가구 비율 (2012~2015년 기준) .....	15
[그림 II- 6] 가구주 특성별 지역별 먹거리 미보장 가구 비율 (2012~2015년 기준) .....	17
[그림 II- 7] 식품군별 권장섭취횟수 및 영양섭취 기준 미만자 비율 .....	18
[그림 II- 8] 주요 지역별 먹거리 부족 가구의 질병 유병률 .....	19
[그림 II- 9] 한국 식생활관련 주요 지표 .....	20
[그림 II- 10] 전국 1인가구 지분변화 및 1인가구 주요 우려요소 .....	21
[그림 II- 11]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 .....	21
[그림 II- 12] 2019년 국제 갈등 지역 .....	26
[그림 II- 13] 미국 볼티모어 식량정책구상(BFPI) 사례 .....	26
[그림 II- 14] 푸드플랜과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	32
[그림 II- 15] 푸드플랜의 시기별 국제적 동향 .....	34
[그림 II- 16] 밀라노 도시 푸드 정책 협약(Food Policy Pact, 2015) .....	35
[그림 II- 17] 세계 주요 도시의 먹거리 정책 주요 내용 .....	35
[그림 II- 18]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 사례 .....	36
[그림 II- 19] 프랑스의 범사회적 먹거리정책 논의 .....	37
[그림 II- 20]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푸드플랜연계 .....	38
[그림 II- 21]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과 지속가능발전목표 .....	39
[그림 II- 22] 광역 푸드플랜 추진 현황 .....	42
[그림 II- 23]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협약 사례 .....	43
[그림 II- 24] 서울특별시 푸드플랜의 민간 거버넌스 활동내역 .....	44
[그림 II- 25] 서울시 먹거리실태 조사 사례 .....	45
[그림 II- 26] 서울특별시 푸드플랜의 추진 체계 및 프로세스 .....	46
[그림 II- 27]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비전 및 주요목표 .....	46
[그림 II- 28]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MOU 체결 현황 (2018년 기준) .....	48
[그림 II- 29] 전주시 푸드플랜 수립배경 .....	49
[그림 II- 30] 전주푸드2025플랜의 주요 내용 .....	50
[그림 II- 31] 전주시 푸드플랜의 주요 활동 .....	52
[그림 II- 32] 미국 버몬트주의 푸드플랜 'Farm to Plate'구성 .....	54
[그림 II- 33] 버몬트주 푸드플랜의 위원회 구성 .....	55
[그림 II- 34] 미국 뉴욕시의 먹거리정책 주요 흐름 .....	56
[그림 II- 35] 뉴욕시의 Food Works(2010)의 주요 내용 .....	57
[그림 II- 36] 뉴욕시 푸드위원회 구성 .....	58
[그림 II- 37] 뉴욕시의 Food Metrics Report .....	58
[그림 II- 38] 토론토시의 먹거리전략(2010)의 목표와 주요 내용 .....	61
[그림 II- 39] 토론토시 푸드위원회 구성 .....	62
[그림 II- 40] 밴쿠버시의 먹거리전략 2020(2013)의 목표와 주요 내용 .....	64

[그림 II- 41] 밴쿠버시 푸드위원회 구성과 운영 .....	65
[그림 II- 42] 북유럽 국가 연합의 Solution menu(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가이드) .....	67
[그림 II- 43] 스웨덴 말뫼시의 먹거리정책 모델 .....	68
[그림 II- 44] 런던시 푸드 2018 .....	68
[그림 II- 45] Locavore Index 분포 (2018) .....	69
[그림 III- 1] 대국민 1차 설문조사 개요 .....	75
[그림 III- 2] 대국민 2차 설문조사 개요 .....	102
[그림 IV- 1] 유성구 푸드통합지원센터 .....	124
[그림 IV- 2] 시범지역의 먹거리정책 영역별 모니터링 결과 .....	164
[그림 IV- 3] 시범지역의 먹거리정책 거버넌스와 추진체계 구축 정도 .....	166
[그림 IV- 4] 시범지역 먹거리정책의 사회경제적 형평성·공공성 수준 .....	168
[그림 IV- 5] 시범지역 먹거리정책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수준 .....	170
[그림 IV- 6] 시범지역의 먹거리순환체계 구축 정도 .....	172
[그림 V- 1]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순환성 .....	178
[그림 V- 2] 푸드플랜의 유형 구분 .....	179
[그림 V- 3] 지역 푸드플랜의 유형별 분포 .....	181
[그림 V- 4] 나주시 푸드플랜(안)의 주요 내용 .....	183
[그림 V- 5] 유성구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안) .....	194
[그림 V- 6] 국내외의 공공먹거리 조달 기준 적용 사례 .....	203
[그림 V- 7] 농가조직화의 3단계 .....	214
[그림 V- 8] 연중 공급 및 수요 품목 분석 .....	215
[그림 V- 9] 기획생산체계 구축 활동 .....	216
[그림 V- 10] 기획생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16
[그림 V- 11] 가공사업 활성화 방안 .....	217
[그림 V- 12] 안전성 관리체계 강화 .....	218
[그림 V- 13] 캐나다 토론토의 푸드쉐어(food share) 사례 .....	220
[그림 V- 14] 화성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체계 .....	221
[그림 V- 15]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례 .....	227
[그림 V- 16] 푸드플랜 기본조례 사례 .....	228
[그림 VI- 1] 맞춤형 푸드플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온라인 교재 개발 .....	237
[그림 VI- 2] 푸드플랜 수립 절차 .....	238
[그림 VI- 3]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주요 내용 .....	239
[그림 VI- 4] 충남도의 식생활평가 지수 및 식품안전성 확보율 분석 .....	239
[그림 VI- 5] 밀라노 푸드협약 기준 정책분석 프레임 .....	240
[그림 VI- 6] 경기도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사례 .....	245
[그림 VI- 7]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체계 .....	248
[그림 VI- 8] 제휴 로컬푸드의 인증기준과 내용 검토 .....	255
[그림 VI- 9] 공동체식당 및 지역내 유휴자원 활용 사례 .....	257
[그림 VI- 10] 타사업 연계를 통한 먹거리 인프라 확충 및 사업 활성화 방향과 사례 .....	259
[그림 VI- 11] 식생활교육 체계 개편 방향 .....	260
[그림 VI- 12] 직거래법의 관련 조항 .....	261
[그림 VI- 13] 유사사례 : 건강도시협의회 .....	262

# 제 1 장

## 연구 개요

- ① 연구 배경과 목적
- ② 연구 과제와 방법



## 1. 연구 배경과 목적

### 가. 연구 배경

#### ■ 푸드플랜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혁신과제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 수립 추진

- 2018년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①농촌형 ②도농복합형 ③도시형 ④광역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함
  - 2018년 시범사업 : 29개 지자체 신청. 9개소 선정 지원
  - 유형별 선정지역 : 농촌형 - 해남군, 완주군, 청양군 / 도농복합형 - 나주시, 상주시, 춘천시 / 도시형 - 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 광역형 - 충청남도
- 그러나 아직은 정책 도입단계로 기본개념과 추진배경, 로컬푸드 또는 학교·공공급식 정책과의 차별성, 기존 농업정책과의 관계 등 정책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다양한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모델, 개선과제와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푸드플랜 정책은 사회적 수요가 매우 높고, 농정의 대상을 도시 지자체를 포함한 전체 국민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을 지향하는 농정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푸드플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와 애로사항, 대응사례, 해결방안 등을 정리·분석하고, 지역특성과 성숙단계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적합한 추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나. 연구 목적

#### ■ 시범사업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과정과 결과를 종합하여 유형별 푸드플랜 추진모델을 개발하고, 정책 과제와 개선방안 제시

- 본 연구는 지역 푸드플랜의 다양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방식, 주요 이슈, 정책연계 및 거버넌스 방식 등 푸드플랜 수립과 사업추진의 기본모델 제시하고자 함
- 시범지역 주민의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먹거리 문제와 인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함
- 또한 다양한 국내외 푸드플랜 사례와 관련먹거리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푸드플랜

정책의 정책적 위상과 성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제도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2. 연구 과제와 방법

### 가. 연구 과제

- 과제1 : 지역 푸드플랜의 필요성 및 국내외 선도사례 분석
- 과제2 : 국민 인식도 조사
- 과제3 : 선도지자체 시범사업 점검 및 분석
- 과제4 : 유형별 푸드플랜 모델개발
- 과제5 : 지역 푸드플랜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 나. 연구 추진 방법

- 국내외 선도사례 분석
  - 국내 사례 조사 : 기초형 - 전주시, 화성시 등 / 광역형 - 서울시, 경기도 등
  - 해외 사례 조사 : (미국) 뉴욕시, 버몬트주 /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 (EU) 런던, 말뫼 등
  - 조사방법 : 문헌조사
- 국민 인지도 조사
  - 시범지자체 9개 지역 주민대상 2회 조사 : 2018년 12월, 2019년 2월 실시
    - 기초지자체 : 8개 시군 \* 100명 = 800명
    - 광역지자체 : 1개 시도 \* 200명 = 200명
  - 1차 조사 : 푸드플랜 인지도, 먹거리정책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향 등
  - 2차 조사 : 푸드플랜 주요 사업별 중요도와 우선순위 조사 등

## ■ 시범지역 푸드플랜 수립 모니터링

- 총 2회 진행 : 2018년 9~10월, 2019년 1~2월
- 1차 모니터링 : 푸드플랜 수립 추진 상황 점검 및 현장 컨설팅
  - 전담조직 마련, 실태조사 진행상황, 거버넌스 구축 등 추진상황을 점검함
  - 지역별 주요 먹거리 이슈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자문을 실시함
- 2차 모니터링 : 푸드플랜 수립 내용 점검
  - 밀라노 먹거리정책 협약 권장 행동 기준 푸드플랜 내용 점검
  - 비전선포 및 주요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 파악

## ■ 지역 유형별 푸드플랜 추진 모델 개발

- 푸드플랜 유형 구분 기준을 푸드플랜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설정함
- 유형별 기본모델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주요 이슈와 대응사례를 분석 제시함
  - 특히, 시범지역 9개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제시함

## ■ 지역 푸드플랜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 앞서 진행한 시범지역 9개소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 결과와 각 지역별 애로사항, 국내외의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화 방안을 제시함
- 기초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거나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는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함





## 제 2 장

### 지역 푸드플랜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분석

- ①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
- ② 푸드플랜의 필요성
- ③ 국내외 푸드플랜 추진동향과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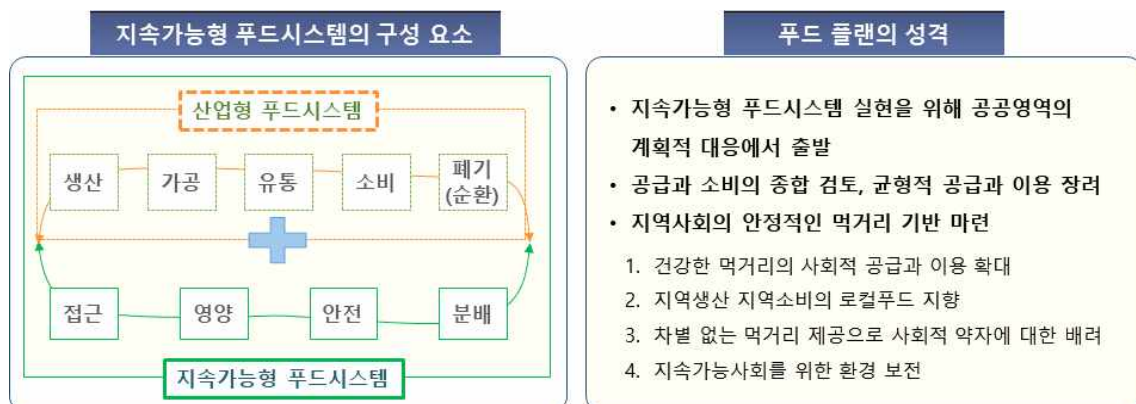
# 1.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

## 가. 푸드플랜의 정의

### ■ 푸드플랜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Food System,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전략

- 푸드플랜의 목적은 대량생산·대량소비에 기반한 익명의 산업형 푸드시스템을 생태적이고 순환적인 지속가능형 푸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임
  - 산업형 푸드시스템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기반한 익명의 먹거리시스템을 의미함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은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가치를 포함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지성 및 안전성, 접근성 등 사회적 정의 실현을 포함하는 생태적이고 순환적 시스템을 의미함
  - 산업형 푸드시스템이 생산-유통-가공-소비-폐기 영역 중심이었다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은 기존 분야에 더해서 접근성-영양-안전-분배 영역까지도 확장된 체계임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은 산업형 푸드시스템에 비해 공급과 소비의 균형,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를 중시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푸드플랜은 정책적 관점에서 정의하자면,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 영양개선, 안전관리, 식생활 교육, 환경보전 등 관련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계획이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해외의 경우, ‘Food Policy’ 또는 ‘Food Strategy’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푸드플랜은 특정한 지역과 범위 내에서 지역민의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이자 정책임

〈그림 II - 1〉 지속가능형 푸드시스템과 푸드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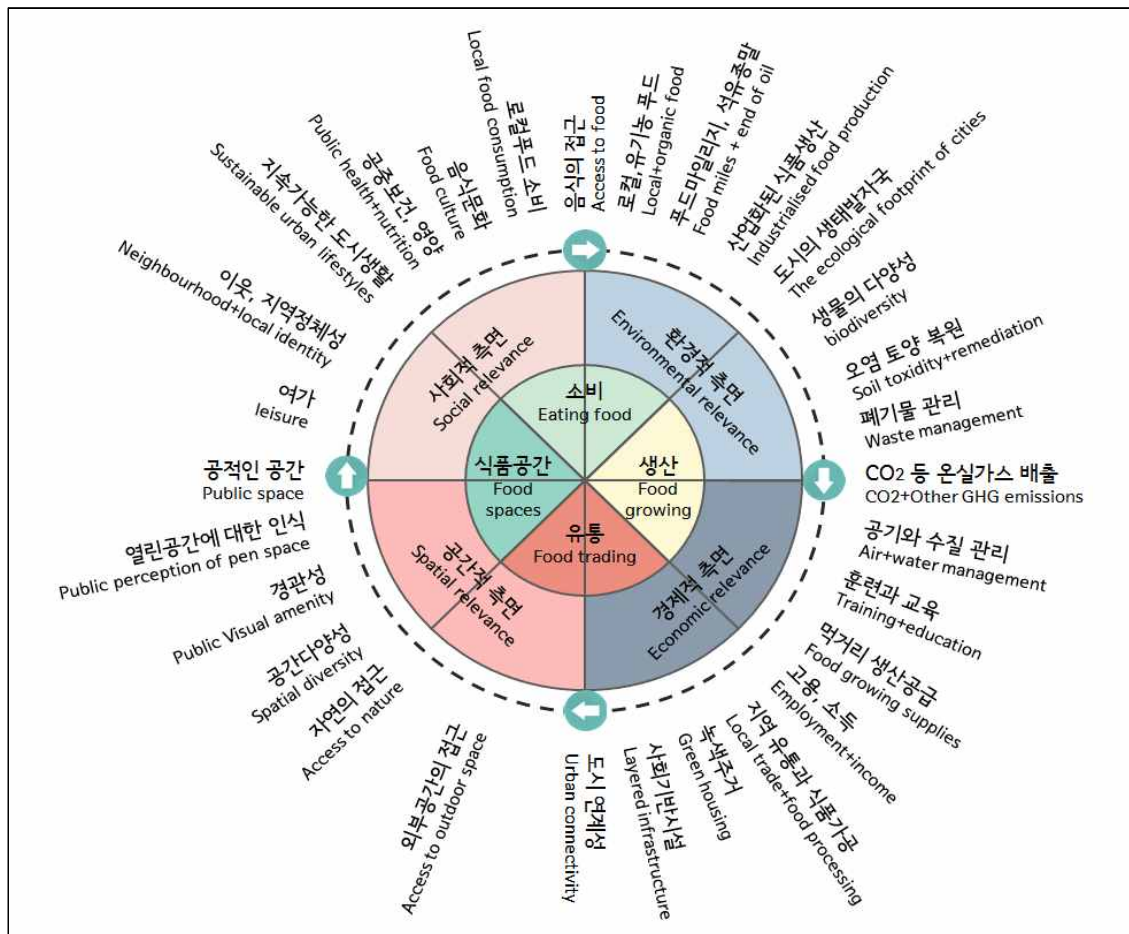
자료 : 길청순 외(2017)

- 푸드플랜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은 생산자인 농업인과 제조·가공·유통업체를 뛰어 넘어 모든 국민 또는 지역주민이며, 정책의 범위도 국민 또는 지역주민이 해결하고자 하는 먹거리 문제와 먹거리의 다면적 가치를 통해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를 포괄함

■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다면적 가치에 기반

- 푸드플랜은 먹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사회적, 공간적,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사회와 경제의 통합정책으로 다음의 4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먹거리 정의(보장) 실현 : 먹거리 불평등 해소,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 먹거리 기본권 실현
  -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 공정한 유통과 소비, 녹색경제 실현
  - 먹거리 기반 협동생활경제망 구축 : 사회적경제, 먹거리경제, 일자리창출, 마을자치 실현
  - 도농상생 실현 : 도시와 농촌의 먹거리, 인력, 자원의 순환 실현

〈그림 II - 2〉 먹거리의 다면적 가치와 푸드플랜의 영역



자료 : Andre Viljoen and Johannes S.C. Wiskerke, Sustainable food planning, 서울시(2017) 재인용

- 최근에는 푸드플랜의 사업영역이 생물종다양성, 지역공동체, 주택, 에너지, 지역개발, 공유자산(Commons)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저탄소 식생활, 음식 폐기물 감축,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생활속 실천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푸드플랜도 건강·안전과 더불어 환경적 활동이 강조되고 있음
  - 지역개발 과정에서도 먹거리경제를 통한 지역재생과 일자리 창출, 녹색경제, 로컬푸드(신선한 식재료의 안정적 확보), 지역주민의 정서적 측면, 사회적 위기 대응 등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푸드플랜과의 정책적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음

## 나. 푸드플랜의 성격

### ■ 개별정책을 연결한 종합정책 : 농업정책+복지정책+환경정책+경제정책+균형발전정책

- 푸드플랜은 하나의 독립된 계획 또는 정책이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먹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연결한 종합 계획이자 정책임. 즉 푸드플랜은 농업정책이자 복지정책이며, 환경정책이자 경제정책이며, 균형발전정책이기도 함
- 푸드플랜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부서간 공감대 형성과 업무 협력, 민관의 거버넌스가 뒷받침되어야 함
  - 실제로 푸드플랜 계획수립과 초기 실행단계에서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과제가 행정부서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그림 II - 3〉 먹거리의 다면적 가치



자료 : 김청순 외(2017)

## 푸드플랜은 포용정책이자 도시정책

- 자본주의가 본격화된 이후 도시의 역동성은 성장의 원천이었으나, 성장의 열매가 많은 도시들에서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UN 해비타트 3차 회의에서 '포용도시(The Inclusive City)'를 주요 어젠다로 제기함
  - 포용도시란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를 의미하는데, 현재의 시민과 미래 세대가 살아갈 도시는 모두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물리적, 정치적, 사회적 공간을 공유하고 적절한 주거와 공공 재화,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함
-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와 도시지역에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먹거리 부문도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불평등과 취약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으로 대표되는 먹거리 관련 질병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 비만의 사회적 비용 2016년 기준 11.5조원(건강보험공단 2018), 최근 급증 추세
  - \* 영양섭취부족인구 비율 : '12) 7.4%→'13) 7.9→'15) 8.5→'16) 10.2 (국민건강영양조사 2017)
  - \* 과일채소 1일 500g 미만 섭취자 비율 : '15) 59.5% → '16) 62.1% (국민건강영양조사 2017)
- 푸드플랜은 먹거리 기본권 차원에서 먹거리 취약인구를 배려하고 먹거리의 불평등과 박탈, 빈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포용정책임
- 또한 서울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푸드플랜은 시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포용도시 정책과 다양하게 연계될 수 있는 확장성 높은 정책임

〈그림 II - 4〉 서울시 포용도시 의제와 푸드플랜의 관계

### 포용성 정책의 의미



자료 : 길청순 외(2019a)

## ■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정책의 관계 : 로컬푸드 정책은 푸드플랜 정책의 한 축

- 일부 현장에서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정책의 관계와 개념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개념적으로 보면, 로컬푸드는 지역생산·지역소비를 통한 중소가족농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푸드플랜은 모든 시민(국민)의 먹거리 보장과 사회·경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로컬푸드는 공급자 관점에서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접근되는 경향이 강함
  - 학교급식·공공급식, 커뮤니티 키친 등의 사업에 있어서도 농산물 공급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함. 다수의 농업인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푸드플랜을 이해하고 있음
  - 로컬푸드 정책으로만 접근할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 시민이 직면하고 있는 먹거리 불평등과 공공성 부족, 먹거리 불안과 불균형적인 식생활, 지역공동체의 약화, 대규모의 음식 폐기물의 발생 등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비해,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생산의 문제와 일반 시민이 느끼는 먹거리 문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푸드플랜은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먹거리와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먹거리의 다면적 가치를 생활 곳곳에서 발현시켜 지역사회를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관점이 강함
- 이런 측면에서 보면, 푸드플랜은 시민과 사회가 직면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전략이자 정책이며, 로컬푸드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이자 좋은먹거리(Good Food)의 생산·공급하기 위한 활동이자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의 출발점에 해당함
- 로컬푸드 관점으로 푸드플랜을 추진할 경우, 거버넌스 활성화와 행정내의 타부서와의 업무협력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됨
  - 실제로 푸드플랜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거버넌스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시각차이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푸드플랜과 로컬푸드의 관계와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표 II - 1> 푸드플랜과 로컬푸드의 관계

구분	푸드플랜	로컬푸드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정의</li> <li>• 생태형 순환체계</li> <li>• 지역활성화</li> <li>• 도농상생 실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형 순환체계</li> <li>• 대안 유통체계 구축(판로 확보)</li> </ul>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지역주민과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 취약인구</li> <li>- 미래세대</li> <li>- 중소가족농</li> <li>- 도시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가족농</li> </ul>
사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와 농촌 전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도농복합시, 농촌 시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생산 가능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복합시, 농촌 시군</li> </ul> </li> </ul>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 사업(직매장, CSA 등)</li> <li>• 학교 · 공공급식, 기업급식 등</li> <li>• 커뮤니티키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식당, 마을급식 등</li> </ul> </li> <li>• 취약계층 영양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 바우처 등</li> </ul> </li> <li>• 식생활교육</li> <li>• 음식폐기물 저감</li> <li>• 먹거리경제: 외식산업, 제도가공</li> <li>• 도시농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매장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꾸러미, 장터, CSA 등도 추진</li> </ul> </li> <li>• (광의)학교 · 공공급식, 기업급식 등</li> </ul>
공 통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가족농의 조직화, 중소가족농의 기본소득 확보</li> <li>• 로컬푸드, 학교 · 공공급식, 지역 푸드인증제 추진</li> </ul>	
차 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는 푸드플랜에 비해 먹거리정의 실현, 지역활성화 관점 부족</li> <li>• 푸드플랜의 핵심은 거버넌스</li> <li>• 도시민에 대한 관점 차이 : 로컬푸드는 소비자, 푸드플랜은 주체이자 대상</li> <li>• 도시농업에 대한 입장차이 발생</li> <li>• 푸드플랜은 사업의 확장성이 큰 반면, 로컬푸드는 상대적으로 협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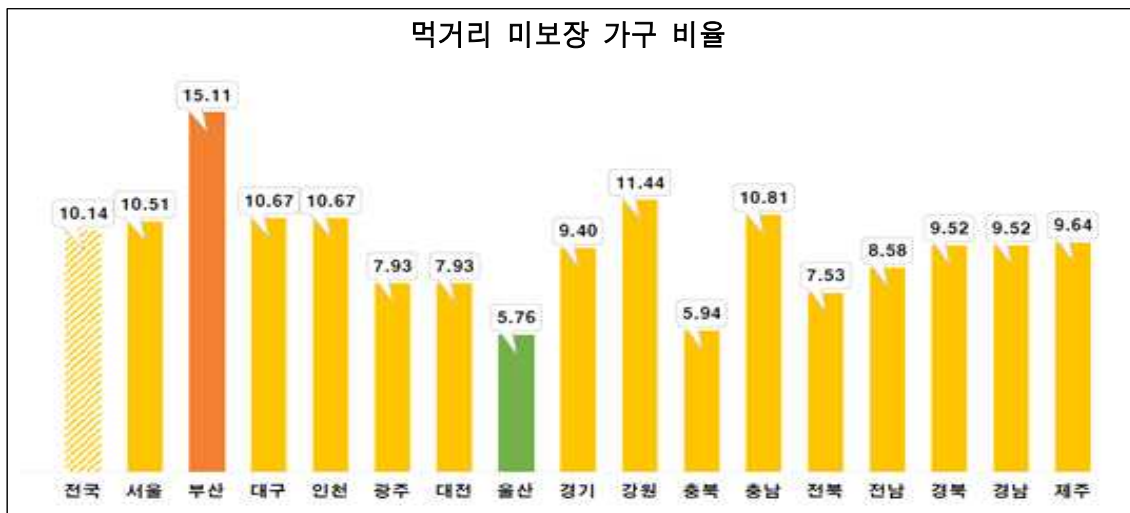
## 2. 푸드플랜의 필요성

### 가. 먹거리 보장성(Security :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능력<sup>1)</sup>) 제고

#### ■ 먹거리 미보장 가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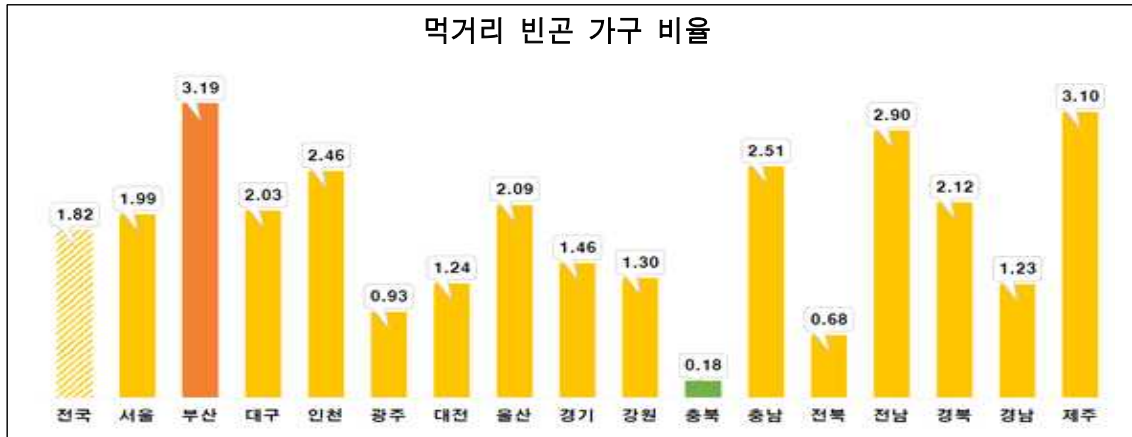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인정한 ‘5% 미만 기아(the hunger) 국가’<sup>2)</sup>로 진입한 이후 정부가 기아인구를 공식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최근에 영양섭취부족 인구가 급격하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전히 배고픔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문제가 아님
  -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양섭취부족자 인구 비율이 2016년에 10.2%로 520만명에 달하고 있음. 2013년 7.4% 대비 2016년 10.2%로 4년 만에 약 140만명이 증가함
  - 건강한 식생활의 주요 지표인 과일·채소 1일 500g이상 섭취자 비율(6세 이상)도 2014년 40.1%에서 2016년 37.9%로 하락함
- 문은숙(2018)의 국민건강영양조사(2012~2015년)와 지역사회건강조사(2016)의 원시데이터 분석자료한 자료에 따르면, 먹거리가 불안정 가구(먹거리 미보장 가구)는 전국 평균 10.14%에 달하며, 배고픔을 동반한 먹거리 빈곤 가구는 1.82%(35만 가구)에 달함

〈그림 II - 5〉 지역별 먹거리 미보장과 빈곤 가구 비율 (2012~2015년 기준)



1) Food Security는 식량 또는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 주체가 국가이거나 국가적 차원의 식량확보 능력을 의미할 때는 ‘식량 안보’로 번역하고, 주체가 개인이거나 개인적 차원의 식량확보 능력을 의미할 경우에는 ‘먹거리 보장’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음

2)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아인구 추정을 통해 5% 이상인 국가만을 추적 관리하고 있음



자료 : 문은숙 (2018)

-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먹거리 불안정 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5.76%, 가장 높은 지역은 15.11%로 나타나 거의 3배 차이가 나고 있음

■ 사회적 약자의 먹거리 안정성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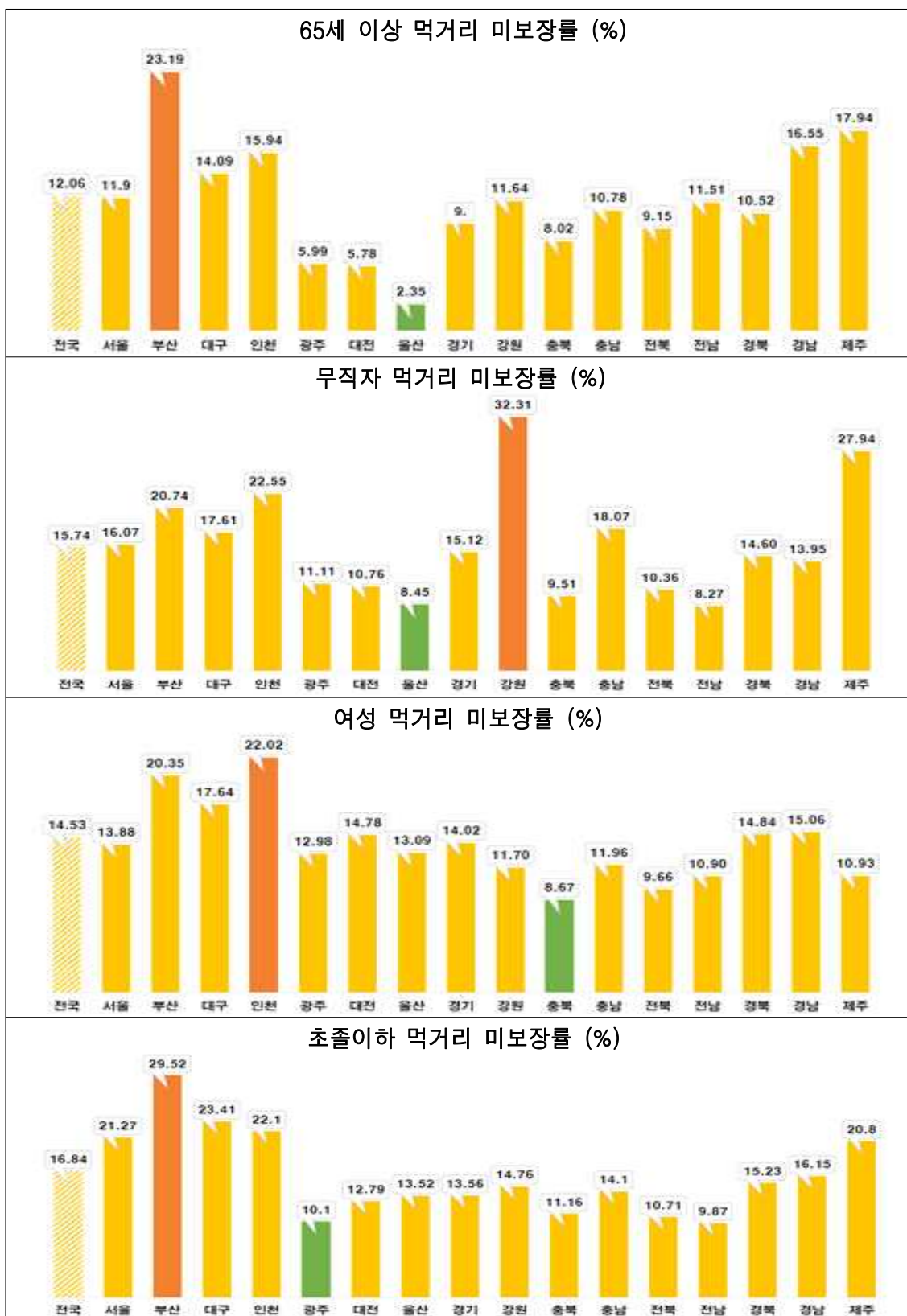
- 가구주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먹거리 미보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구주가 여성, 무직, 65세 이상, 소득수준 중하·하, 중졸 이하 학력인 경우, 먹거리 미보장 가구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전체 먹거리 미보장 가구 비율과 마찬가지로, 가구주의 특성별 먹거리 미보장 가구 비율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 - 2〉 지역별 먹거리 미보장 인구비율 (2013~2015 기준)

구분		미보장 가구비율(%)	구분		미보장 가구비율(%)
성별	남성	7.4	소득 수준	하	21.5
	여성	14.5		중하	12.2
직업	직업종사자	7.3		중상	4.9
	무직	15.7		상	1.0
연령	19~49세	9.1	학력	초졸 이하	16.8
	50~64세	9.5		중졸	13.1
	65세 이상	12.1		고졸	9.2
				대졸 이상	3.6

자료 : 문은숙 (2018)

<그림 II - 6> 가구주 특성별 지역별 먹거리 미보장 가구 비율 (2012~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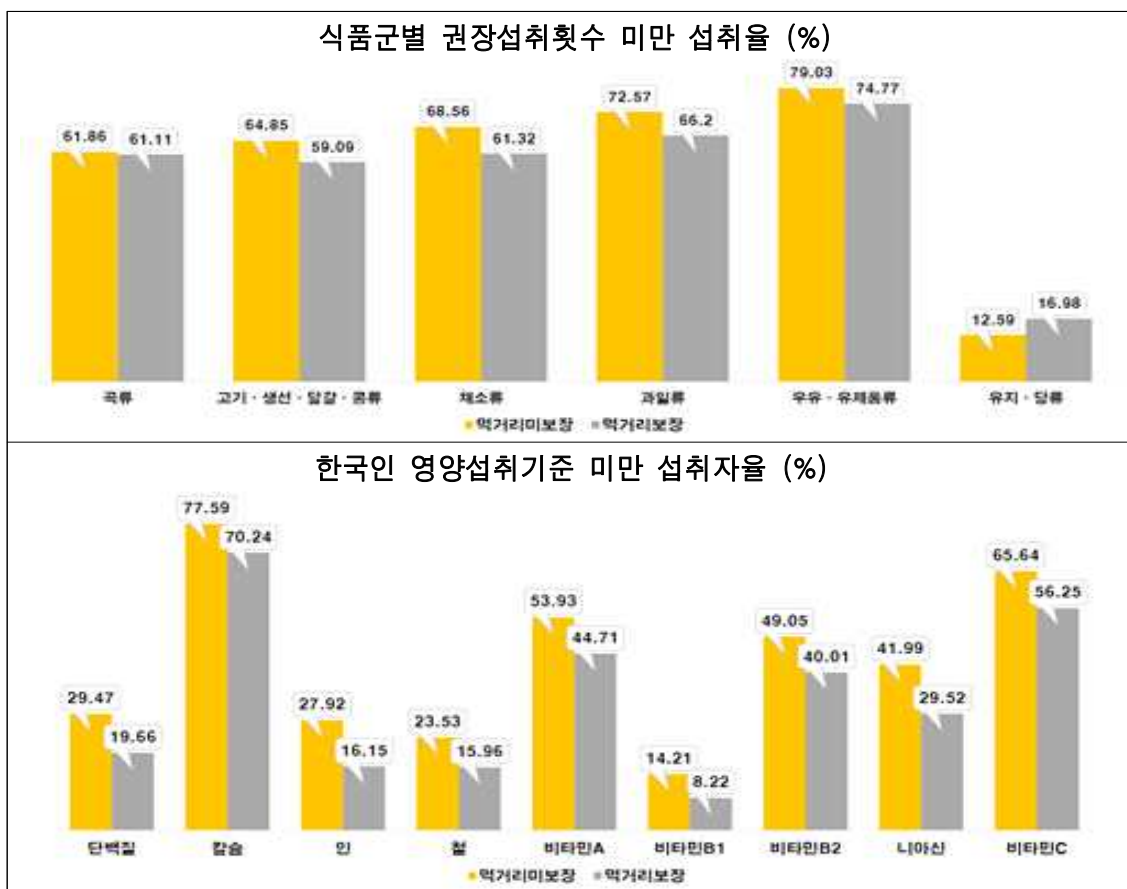


자료 : 문은숙 (2018)

## ■ 먹거리 영양·건강 불평등 심화

- 먹거리 불평등 문제는 영양 섭취의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식품군별로 먹거리 보장 가구와 미보장 가구의 권장섭취횟수 미만 섭취율을 비교해 보면, 곡류는 비슷한 수준이나 고기류, 채소류, 과일류는 권장섭취횟수 미만 섭취 가구 비율이 5~8%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지·당류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음
  - 미량원소에 대해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먹거리 보장가구와 미보장 가구 간에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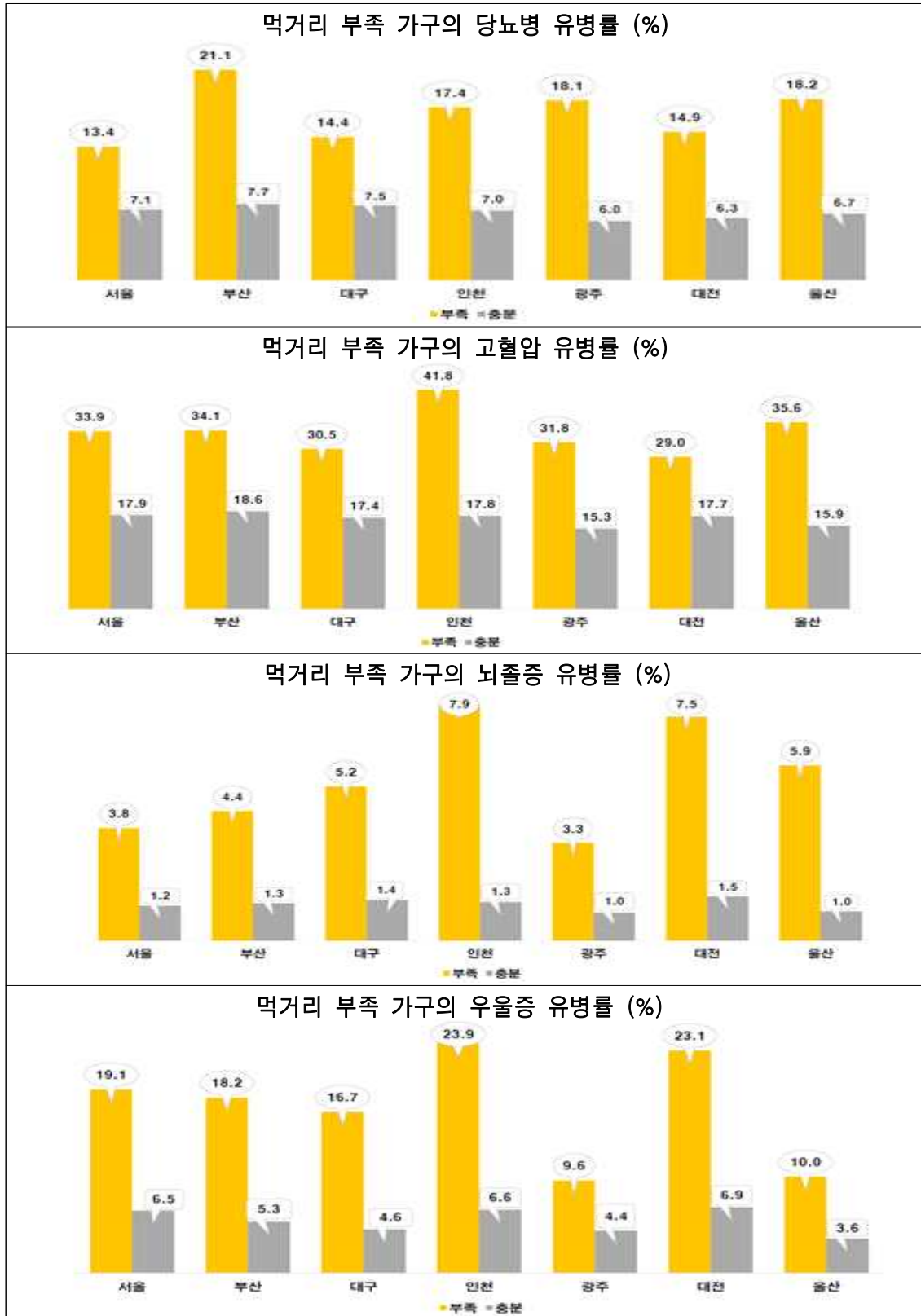
〈그림 II - 7〉 식품군별 권장섭취횟수 및 영양섭취 기준 미만자 비율



자료 : 문은숙 (2018)

- 먹거리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은 먹거리 보장 가구와 미보장 가구의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 차이로도 나타나고 있음
  -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우울증 등 주요 사회적 질병이 먹거리가 부족한 가구가 충분한 가구에 비해 대략 2~3배 높은 유병률을 보임
  - 즉, 좋은먹거리(Good Food)의 충분한 공급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

〈그림 II - 8〉 주요 지역별 먹거리 부족 가구의 질병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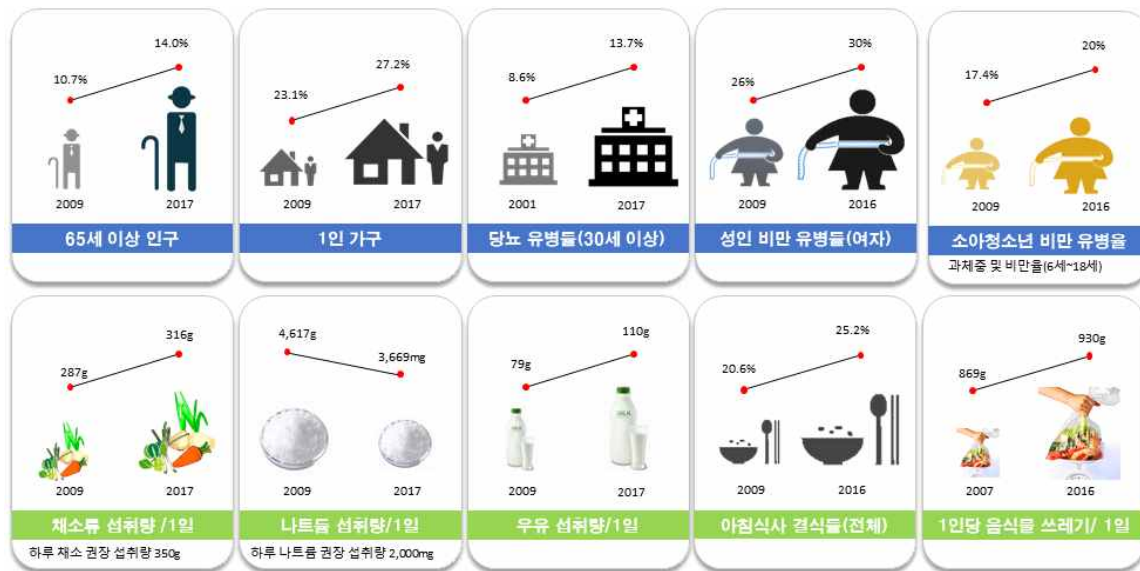
자료 : 문은숙 (2018)

## 나. 인구·가구 구조변화 대응과 식생활 균형 회복

### ■ 가정과 사회의 건강유지 비용 증가

- 식생활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를 보면, 2009년 대비 채소류와 우유 섭취량은 증가하고 나트륨 섭취량은 감소하여 전반적인 영양섭취는 개선됨
- 그러나 아침식사 결식률이 상승하고,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식사횟수는 적으나 한번에 많이 먹는 패턴이 증가하는 등 식생활은 악화되고 있음. 또한, 당뇨 유병률, 성인과 소아청소년 비만율도 높아지고 있어 불균형적 식생활로 인한 질병은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건강보험공단(2018)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1.5조원에 달함

〈그림 II - 9〉 한국 식생활관련 주요 지표



자료 : 김중안 외 (2018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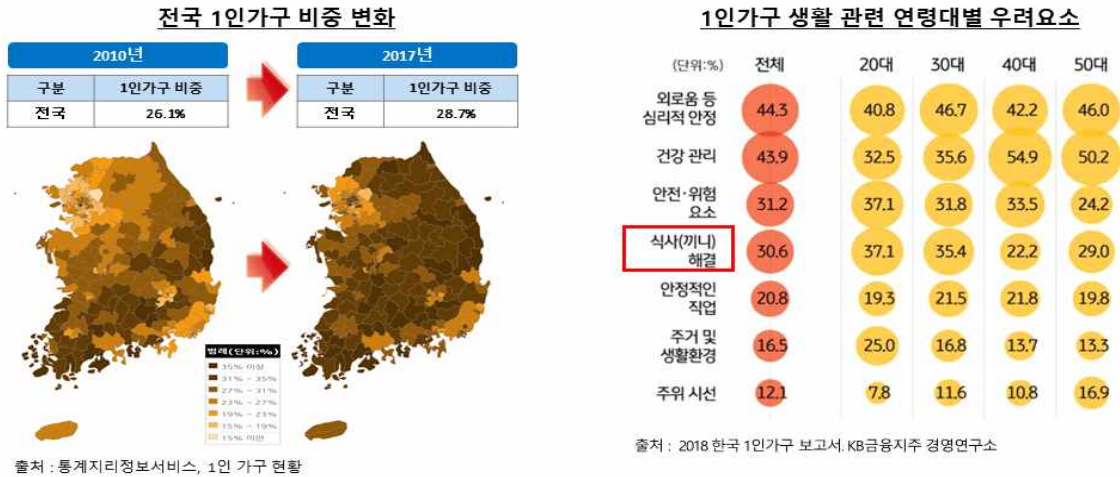
### ■ 1인 가구 증가 : 식사 해결과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 2017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28.7%에 달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1인 가구의 우려요소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외로움 해소, 건강관리, 식사 해결 문제 등으로 나타남



- 1인 가구의 여러 우려요소를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키친(공동체식당, 마을부엌 등)과 공동체 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큰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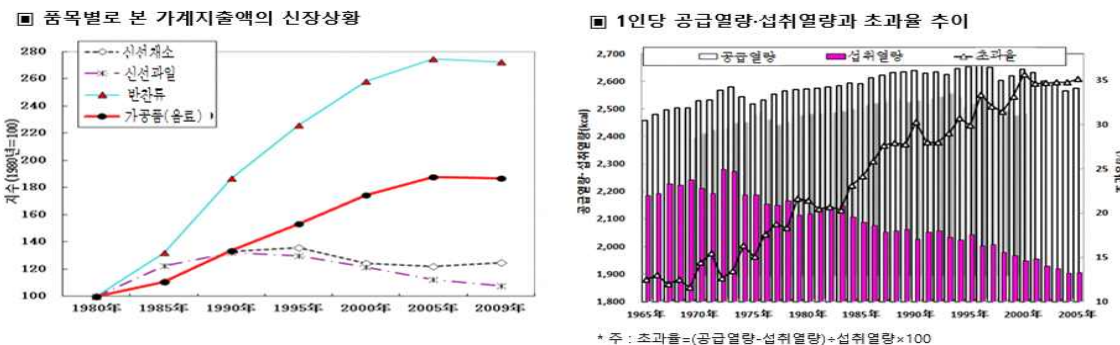
〈그림 II - 10〉 전국 1인가구 지분변화 및 1인가구 주요 우려요소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식생활 변화 대비 필요

- 고령화, 은퇴인구, 1인 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혼밥족, 양극화 등 우리의 식생활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 분석이 필요함
- 우리보다 먼저 유사한 변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식생활·소비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변화는 전체 가계지출 가운데 식품비 비중이 감소함
- 부류별로 보면,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에 대한 지출은 감소한 반면, 반찬류와 가공품에 대한 소비는 크게 증가함

〈그림 II - 11〉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



자료 : 후지시마 히로시 (2012)

## 다. 지역으로의 이동인구의 안정적 정착 지원<sup>3)</sup>

### ■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저성장·양극화로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증가 : 지역이동 50만 시대

- 1955년생부터 시작되는 1차 베이비붐 세대와 1974년생으로 마감되는 2차 베이비부머까지 20년(1955~1974) 사이의 1,700만명 수준의 대규모 은퇴 인구의 발생이 예상됨
  - 이로 인해 소비침체와 경제위축, 사회보장 요구 증대 현실화되고,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일자리 양극화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와 30~40대 청장년층의 귀농귀촌 활성화 등으로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늘어나고 있음. 실제로 귀농·귀촌인 및 가구원은 '13년 423천명에서 '17년에 517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처음으로 '50만명 시대'를 맞이함

〈표 II - 3〉 귀농·귀촌 인구 현황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귀농·귀촌인구(명)	422,770	457,511	486,638	496,048	516,817
귀농인구(명)	17,318	17,976	19,860	20,559	19,630
귀촌인구(명)	405,452	439,535	466,778	475,489	497,18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

### ■ 이동인구의 지역 정착 촉진 : 푸드플랜으로 안정적 소득창출과 공동체 형성 기반 제공

- 인구이동은 사람과 유무형의 자산의 이동을 동반하고, 이는 이동인구와 더불어 향후 지역 활력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것임
- 귀촌인 상당수는 몇 년 지나 귀농으로 연결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최근 농업농촌 영역의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 대규모 은퇴 이동, 도시 지역과 제조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 부족, 집값을 비롯한 높은 생활비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여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10~15년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지역으로의 이동인구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소득 원 마련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함
- 푸드플랜은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판로제공과 더불어 먹거리를 매개로 지역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이동인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3) 박영범 외, 포용 농어촌 중장기 비전과 전략연구, 2019.2. 정책기획위원회. 1, 2장 요약 정리



## 라. 농정의 글로벌 과제 대응 강화 : 기후환경 변화와 인구 100억 시대 대비<sup>4)</sup>

### ■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sup>5)</sup>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채택

-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의 CO<sub>2</sub>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CO<sub>2</sub> 배출과 흡수가 서로 완전히 상쇄되는 ‘Net-Zero’ 배출을 달성해야 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
-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의 실행방안으로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정책을 도시와 지방에서 동시에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금융기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며, 푸드 마일리지 높은 식량(육류, 유제품 등) 소비를 줄이거나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는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함

\* 2019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 가능성(likelihood)과 영향력(impact) 측면에서 기후변화, 기상이변, 자연재해 등 환경적 요인을 최우선 글로벌 리스크로 제시

#### 〈표 II - 4〉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의 주요 내용 (기후변화센터, 2018)

1. 보고서는 제24차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중요한 과학적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며, 핵심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의 CO<sub>2</sub>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CO<sub>2</sub> 배출과 흡수가 서로 완전히 상쇄되는 ‘Net-Zero’ 배출을 달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
  - 지구온도 2도 상승과 비교하여 1.5도 상승시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해수면 상승, 기반시설 등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며,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되는 취약 계층이 2050년에 수억명 감소함
2.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토지, 도시와 기반시설, 산업구조 등 생활과 경제의 전 분야에 걸쳐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3. 기후변화 대응은 지구환경 보전과 더불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근절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함
  -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 관리, 자원소비의 최소화, 온실가스 집약도가 낮은 식량의 소비 등에 국제적 역량이 투입되어야 함
  - 다만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 일부 SDGs와 배치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가별·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4) 박영범 외, 포용 농어촌 중장기 비전과 전략연구, 2019.2. 정책기획위원회. 1.2장 요약 정리

5) IPCC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임. 전문가 협의체로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다루는 의제들에 대해 특별보고서는 작성하는 것이 주된 활동임

■ **글로벌 인구 100억 시대에 대한 대비 : 식량자급률 제고는 지역에서부터 출발**

- 세계인구는 대략 2050~2060년 사이에 10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됨. 세계인구 100억 시대는 ‘늙은 선진국, 젊은 개도국’으로 표현되며 글로벌 무역 및 경제질서 전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UN의 세계인구 전망(2017) : (‘17) 76억명 → (‘30) 86억 → (‘55) 100억 → (‘100) 112억
- 또한, 개도국의 중산층 증가로 육류소비 급증 등 식품 소비형태가 선진국 유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개도국 식생활의 선진국화는 사료곡물 수요의 급증을 의미하는데, 옥스팜 등 국제 기구는 2050년에는 전세계 곡물수요가 지금보다 6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식량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일정 수준의 이상의 국내 자급률 유지하는 것은 기후환경 변화와 글로벌 인구 100억명 시대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식량자급률 제고는 지역의 농업기반과 생산주체를 유지하는데서 출발함. 특히, 지역농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농을 유지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함
- 푸드플랜은 중소가족농이 영농기반의 생태적 환경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 특히, 계약재배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 영농과 적정 생활소득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표 II - 5〉 **환경제약 하의 푸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들(Springmann 외, 2018, 네이처)**

- 급격한 기후 및 환경 변화 속에서 환경 파괴없이 100억명의 인구를 과연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함. 기본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지면 환경 파괴가 증가하고 이는 지구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됨
- 연구 내용 : 상세한 환경 세목과 지구 식량 시스템 모델을 결합하여 지구환경의 한계 내에서 식량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 전세계의 식량 생산과 소비를 추적함
- 연구 결과 : 한가지 해법만으로 지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여러 해결책이 함께 수행될 때 늘어나는 인구를 지속가능하게 먹여 살릴 수 있음
  - 식품 시스템은 기후 변화, 토지 이용 변화, 담수 자원 고갈, 과도한 질소와 인 입력을 통한 수생 및 육상 생태계 오염의 주요 원동력임
  - 201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인구 및 소득 수준의 변화로 인한 식품 시스템의 환경 영향은 기술 변화와 전용 완화 조치가 없을 경우 50~90%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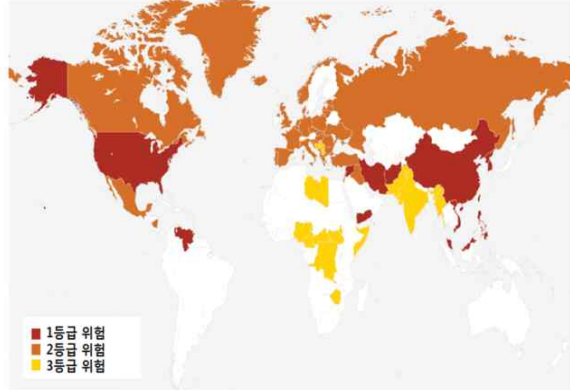
- 기후 변화는 더욱 더 식물성-기반의 식단으로 식이를 바꾸지 않는 한 충분히 완화될 수 없음. 전세계적으로 식물성 기반의 ‘유연한(flexitarian: 채식 위주 식사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육류나 생선도 섭취)’ 식단을 더 많이 채택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반 이상 줄일 수 있으며, 비료 사용과 농업용수 및 담수 사용에 따른 환경 충격을 10분의1에서 4분의1까지 감소시킬 수 있음
- 농경의 관리 관행과 기술을 개선해 농경지와 담수 추출 및 비료 사용에 대한 압박을 줄여야 함. 기존 경작지에서 농작물 수확량을 늘리고, 비료를 재활용하거나 균형 있게 사용하며, 물 관리를 개선하면 환경 영향을 50% 가량 줄일 수 있음
- 음식 쓰레기나 버리는 음식을 반으로 줄이면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식량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음. 음식 쓰레기나 버리는 음식을 반으로 줄이는 일이 전 지구적으로 수행되면 환경 영향을 최대 6분의1(16%)까지 감소시킬 수 있음
- 제언 : 정부 정책과 사업적 접근을 병행하고, 개별정책이 아닌 패키지 정책을 추진함
  - 100억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협력과 실천이 필요함. 식단 문제에서는 종합적인 정책과 함께 비즈니스적인 접근이 필수적임. 건강하고 식물성 비중이 높은 식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천 가능하고 매력적이라고 느껴야 함. 여기에는 정책과 비즈니스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하며 학교와 직장 프로그램, 경제적 인센티브와 라벨링, 식이에 대한 환경 영향과 건강한 식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국가적 식이 지침이 포함되어야 함
  - 농업기술과 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용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지원과 비료 사용 및 수질 관리 규제 개선을 포함해, 연구와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농민들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함
  - 버리는 음식과 음식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포장과 라벨링, 저장과 운반에서부터 법규와 상행위에 이르기까지 전체 식품 공급체계에 걸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버려지는 음식물을 제로로 만들어야 함

자료 : ‘인구 백억 시대, 대비하려면’(사이언스타임스, 2019) 요약

## 마. 지정학적 리스크와 먹거리 안전망

### ■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한 푸드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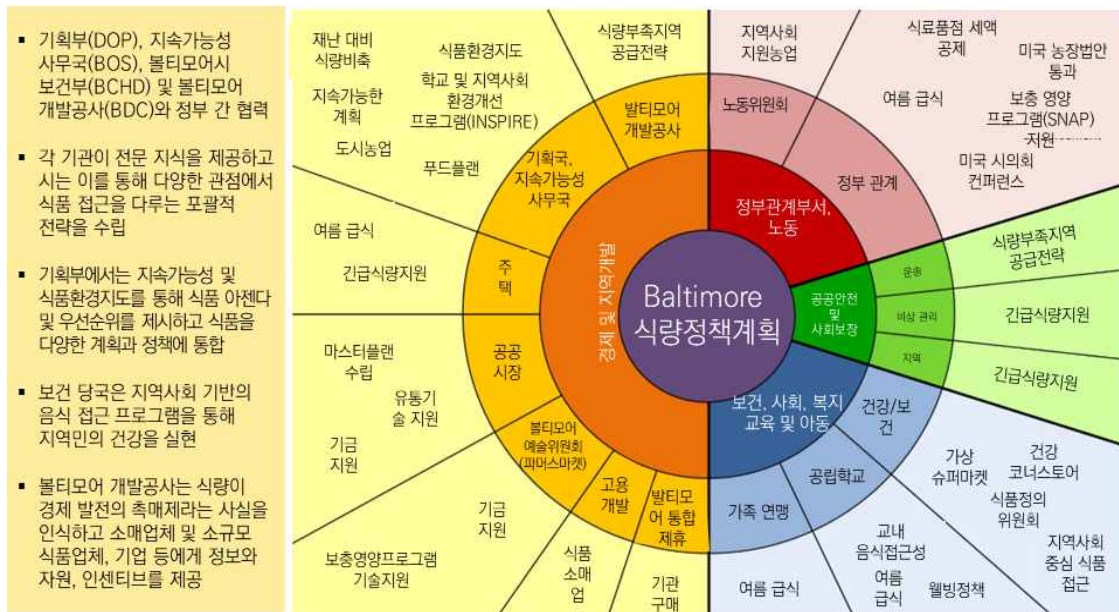
- 최근에 국가간, 지역간 국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다자협력체계가 약화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의 대외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2019년 분재장지역에 대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등급 위험지역에 속함
- 국가적 차원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지정학적 급변사태에 대해 도시 단위에서도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한 먹거리 안전망 확보가 필요함
  - 일례로 미국의 볼티모어시의 '볼티모어 식량계획'에서 위기대응 방안 마련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자료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그림 II - 12〉 2019년 국제 갈등 지역

〈그림 II - 13〉 미국 볼티모어 식량정책구상(BFPI) 사례



## 바. 지방소멸과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한 대응<sup>6)</sup>

### ■ 1995년 WTO체제 이후, 본격적인 글로벌 체제에 편입

- 농산물 수입 확대로 국내 농산물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농업산출과 농가소득이 정체되며 도·농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축산 중심, 대규모 단작 체제와 주로 고령농(高齡農)으로 구성된 영세·중소농이 공존하며 농가간에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농업을 이어갈 후속세대의 미확보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서 농업 생산 뿐 아니라 농촌 공동체의 와해 등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표 II - 6〉 농업·농촌 주요 지표 변화

구분	실적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업 총생산액(조원) [경상]	49.8	49.2	49.0	47.6	48.2
농가수(만호)	114.2	112.1	108.9	106.8	104.2
농가소득 (백만원)	34.5	35.0	37.2	37.2	38.2
- 농업소득비중(%)	29.1	29.5	30.2	27.1	26.3
곡물자급률(%)	23.3	24.0	23.9	23.7	23.4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8.3	5.9	4.5	4.8	4.9
농축산물 수출액(억불)	51.8	56.9	57.2	60.4	63.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주요통계 2018

〈표 II - 7〉 농업생산의 대농 집중률 변화 추이(1990~2015년)

구분	1990(A)	1995	2000	2005	2010	2015(B)	B/A
경작지(3ha이상) 비중(%)	10.2	19.1	25.7	33.3	43.6	43.5	4.3배
논농업(3ha이상) 비중(%)	6.2	14.8	20.0	29.5	37.7	44.4	7.2배
시설농업(2천평이상) 비중(%)	25.5	38.3	47.1	52.9	50.7	51.2	3.8배
한육우(50두이상) 비중(%)	5.5	8.0	25.0	32.5	47.8	63.2	11.5배
낙농(50두이상) 비중(%)	8.7	17.8	50.4	71.6	82.8	88.5	7.8배
양돈(1000두이상) 비중(%)	23.3	36.5	60.2	77.9	88.4	91.0	3.9배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 〈한국 농업생산성 위기〉

- 한국 농업총요소생산성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성장과 성과를 이루었음. 농업총요소생산성은 1961년=100을 기준으로 2013년

6) 박영범 외, 포용 농어촌 중장기 비전과 전략연구, 2019.2. 정책기획위원회. 제1장 요약 정리

한국은 351로, 주요국가 중 이스라엘 460 이외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중국 328, 일본 224, 네덜란드 253 미국 206 등)

- 2010년 이후 한국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정체됨. 주요 선진국들이 R&D투자를 확대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과 큰 차이가 있음
- 급격한 인력유출, 투입재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되며, 새로운 혁신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음을 의미함

자료 : USDA-ERS(2015), Agricultural Productivity Database 데이터 분석

### <농업의 환경 부하 문제>

- 한국은 집약적 농업 생산 시스템으로 높은 환경부하(環境負荷) 상황에 있음. OECD 분석에서 한국은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농지 질소, 인 수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집약적 농업 국가인 네덜란드, 일본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1990년대 이후 2000년대를 거치면서 극적으로 감축된 것과 비교됨 (특히, 네덜란드)
- 농약, 비료, 에너지 등 투입 부문과 관련해서는 최근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농업 내의 불균형적 활용이 심각한 상황임. 예를 들어 농업용 면세유 사용은 5천리터 이상을 사용하는 7%의 농가가 전체의 60% 사용하고, 농사용 전기도 100kW를 사용하는 0.7%의 농가가 전체의 47%를 사용하고 있음

※ [참고] 농림수산업 석유환산 에너지사용량 : '04년 5,545천TOE(3.31%) → '13년 3,485천TOE(1.7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총조사)

자료 : OECD(2018), OECD국가별 농식품검토보고서 - 한국 농업 혁신,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 ■ 도시의 삶의질 악화 및 농어촌 지방소멸 위기 직면

- 우리나라의 2013~2015년 평균 도시인구 비율은 82.7%(농촌인구 비율 17.3%)로 OECD 국가 평균 77.9%(농촌인구 비율 22.1%)에 비해 4.8%p 높음<sup>7)</sup>
- 도시지역의 인구집중으로 교통·주택 문제 악화, 지가상승, 환경오염 등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또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농촌의 공동화(空洞化)와 지역자원의 유희화(遊休化)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지방소멸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20가구 미만 행정리수(농업총조사) : ('10) 3,091개 (8.5%) → ('15) 1,270개 (3.5%)
  - 특히, 농촌 삶의질은 전반적인 생활 인프라의 부족이 심화되고 교육, 복지 등 기초 서비스가 약화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7) 신유선 외,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농업, 201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또한,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통계청 자료(2019.2)에 따르면, 2031년 52,958천명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하고, 2021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도시 지역보다 농촌을 포함한 지역의 초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KREI) : ( '17) 42.5% → ( ' 30) 54.5% → ( ' 40) 62.4%

## ■ 식생활의 변화와 먹거리의 안전·안정 문제 심화

- 국민의 식생활은 가정식에서 외식, 신선식품에서 가공식품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식의 외부화가 확대되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극도로 상승하였고 단발적으로 이어지는 먹거리 안전 사고가 먹거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
- 반면, 국내 농업생산은 쌀 이외의 주요 곡물 생산은 미미한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원예작물도 신선 중심 생산·판매에 머물러 식(食)과의 연계성이 갈수록 취약해 지고 있음
- 농업, 식품산업, 식생활의 연계가 약화되면서 식량자급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17년 곡물자급률은 23.4%에 머물러 있어 외국에의 의존성이 매우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기후변화, 지정학적 변화 등에서 중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임
  - FAO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곡물수입 의존도가 166개국 중 129번째(역순위)를 기록함. 사막국가, 도서국가 등을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임

〈표 II - 8〉 곡물수입 의존률 주요국[총166국] 현황 (2011-2013 3개년 평균)

(단위 : %)

국가명	외국의존률	역순위	국가명	외국의존률	역순위
아르헨티나	-225.3	1	중국	3.4	41
오스트레일리아	-214.8	2	영국	9.1	49
우루과이	-153.1	4	북한	13.6	57
프랑스	-86.3	7	필리핀	17.8	63
우크라이나	-79.5	9	이탈리아	25.3	72
캐나다	-76.7	12	멕시코	30.5	79
태국	-29.4	18	스페인	31.8	83
미국	-19.1	22	뉴질랜드	36.5	88
브라질	-15.3	24	이집트	42.1	98
베트남	-12.6	25	스위스	54.7	109
덴마크	-11.2	28	앙골라	64.1	118
독일	-8.6	31	말레이시아	72.6	125
인도	-8.6	32	일본	75.8	128
폴란드	-4.8	34	한국	77.3	129
미얀마	-2.0	36	이스라엘	93.2	141
(자립·수출국) 37개국			(의존국) 129개국		

자료 : FAOSTAT, www.fao.org/faostat

〈표 II - 9〉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현황

-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17년 23.4%로 사상 최저치였던 2013년의 23.3%에 근접함. 식량자급률도 48.9%로 2016년 50.8%에서 1.9%포인트 하락함. 국제식량안보지수는 2012년 21위에서 2018년 25위로 하락하여 전체적인 식량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곡물자급률 : ('12) 23.7% → ('14) 24.0% → ('16) 23.8% → ('17) 23.4%
  - 식량자급률 : ('12) 45.7% → ('14) 49.7% → ('16) 50.8% → ('17) 48.9%
  - 국제식량안보지수<sup>8)</sup> : ('12) 21위 → ('15) 26위 → ('17) 24위 → ('18) 25위
- 2017년말 곡물자급률을 품목별로 보면, 보리쌀 24.9%를 제외하고 밀 0.9, 옥수수 0.8, 두류 5.4% 등 대부분의 곡물에서 극히 미미한 자급률을 보이고 있음. 사료용을 제외한 주요 식량자급률은 48.9%로, 밀 1.7%, 옥수수 3.3%, 콩 22.0%에 불과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 목표를 각각 27.3%, 55.4%로 설정함
  - 주식자급률(쌀, 밀, 보리의 자급률)의 주식자급률은 63.6%, 열량자급률(1인당 1일 권장열량 2,400kcal)은 50%로 설정함
- 농업생산 여건 등으로 인해 대외의존 현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OECD 국가 중 식량의 대외의존성이 가장 큰 국가로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국제정치 여건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큼

〈표 II - 10〉 먹거리 안전 : 살충제 계란 사례

- EU에서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국내에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공개되면서 심각한 먹거리 위기 상황으로 진화되었음
- 일반 계란 뿐 아니라 유기농계란에서도 암 유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계란 출하 정지와 계란가격 급등, 태국·미국에서 긴급수입을 시행하는 등 큰 이슈로 전개됨
- 타겟은 계란이었으나 국내산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등 전 과정 관리의 불충분성과 정보·환경 관리 등 국민으로 부터의 낮은 신뢰성이 가장 큰 문제로 이해됨

■ 현재 추세 지속시 미래 농업·농촌은 현재보다 악화 예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의 2040년까지의 전망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흐름을 유지할 경우 대부분의 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8) 세계식량안보지수(Global Food Security Index, GFSI)는 The Economist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식량의 구입능력(affordability), 식량의 공급능력(availability), 품질과 안전성(quality and safety), 자연자원과 회복력(natural resources & resilience) 측면에서 식량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임



- 무역수지 적자가 300억\$에 달하고, 농가인구는 15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중도 56.1%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표 II - 11〉 농업·농촌 주요지표 2040 전망

구 분	2017년	2030년	2040년
성장률(%)	3.1	1.6	0.8
무역수지(억\$/조원)	188.1(20.7)	262.8(29.0)	313.3(34.3)
1인당쌀소비(kg)	61.3	50.9	43.0
1인당3대육류소비(kg)	49.1	60.1	64.4
경지면적(천ha)	1,621	1,496	1,446
쌀생산면적(천ha)	865	742	676
농가호수(만호)	104.2	93.9	93.8
농가인구(만명)	242.2	183.1	154.7
농가인구비율(%)	4.7	3.5	3.0
65세이상인구비중(%)	42.5	54.5	62.4
명목농업생산액(조)	48.2	56.8	62.5
명목부가가치생산액(조)	26.7	30.8	33.8
곡물자급률(사료용제외)(%)	48.9	44.3	42.3
실질농가소득(천원)	34,386	35,362	32,128
실질농업소득/비중(천원/%)	9,034/26.3	8,836/25.0	7,891/24.6
도시근로자대비농가소득(%)	63.7	61.4	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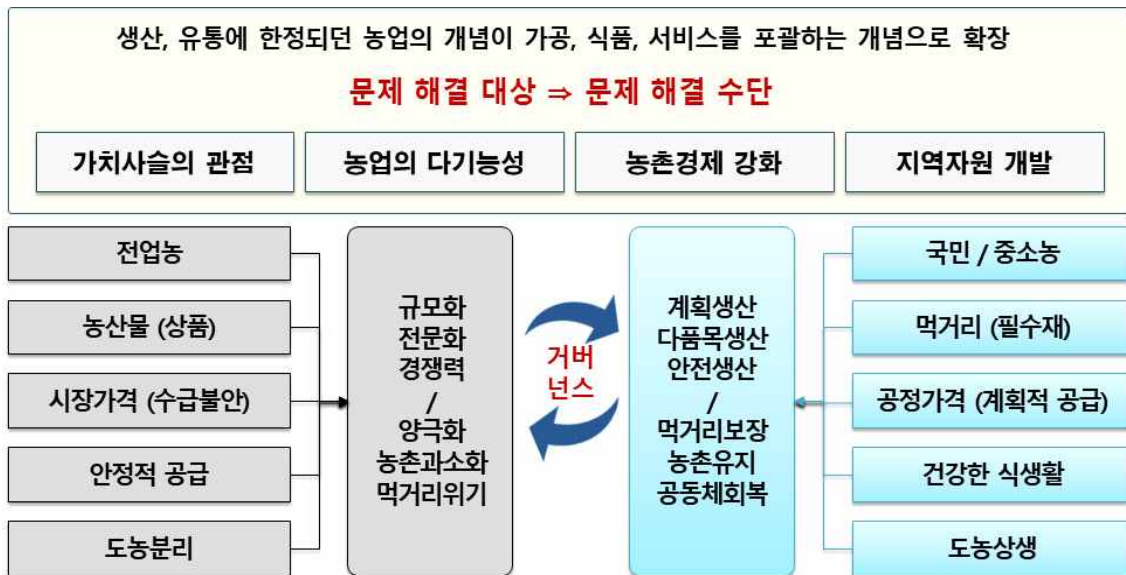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의 2040전망. 포용 농어촌 중장기 비전과 전략연구 재인용.

### ■ 지속가능한 농정으로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

- 해방 이후 농업·농촌은 농지개혁, 쌀자급, 인적·물적 자원의 유출 등 경제성장의 토대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비약적 생산성 향상, 기아탈출,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함
- 1980년대 이후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농정으로 네덜란드와 일본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고투입(高投入)-고산출(高産出) 집약적 농업 생산구조를 형성함

- 이러한 집약적, 산업형 생산체계로 생태·환경 문제, 외부자원 의존형 생산구조, 품목집중과 수급불안 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다양한 한계<sup>9)</sup>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보면, 푸드플랜은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임
  - 농업에 대한 관점도 생산, 유통에 한정되어 있던 것으로 가공, 식품, 서비스, 소비, 분배, 환경 분야로 확장하여 우리사회의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됨
  - 기존의 전업농 중심의 농정을 중소가족농까지 포괄하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국민 먹거리 보장을 정책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농업으로의 농정의 전환을 대표하는 정책임

〈그림 II - 14〉 푸드플랜과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자료 : 박영범 외 (2018)

9) OECD(2018)에 따르면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농지의 질소와 인 농도가 가장 높은 수준. 집약적 농업 국가인 네덜란드, 일본도 여전히 높으나, 199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감축. 농약, 비료, 에너지 등 투입은 감소 : 농림수산업 석유환산 에너지사용량 2004년 5,545천TOE(3.31%) → 2013년 3,485천TOE(1.7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총조사). 농가계층별 투입 불균형 심각 : 농업용 면세유 사용은 5천리터 이상을 사용하는 7%의 농가가 전체의 60% 사용하고, 농사용 전기도 100kW를 사용하는 0.7%의 농가가 전체의 47% 사용

## 사. 요약 및 시사점

- 우리 사회가 사회양극화,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으로의 인구가 동, 기후환경변화 대응, 지정학적 변수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이 새롭게 도약하고, 도시지역에서는 먹거리 정의가 실현되고 지역공동체가 살아나며,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함
- 이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 푸드플랜임.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다면적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정책이기 때문임
- 푸드플랜은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먹거리 문제는 생활 속에서 직접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천가능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푸드플랜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촌이 새롭게 도약하고, 도시지역에서는 먹거리 정의가 실현되고 지역공동체가 살아나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분석과 민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전략수립, 다양한 정책수단의 창조적 활용 및 혁신이 필요함

### 3. 국내외 푸드플랜 추진동향과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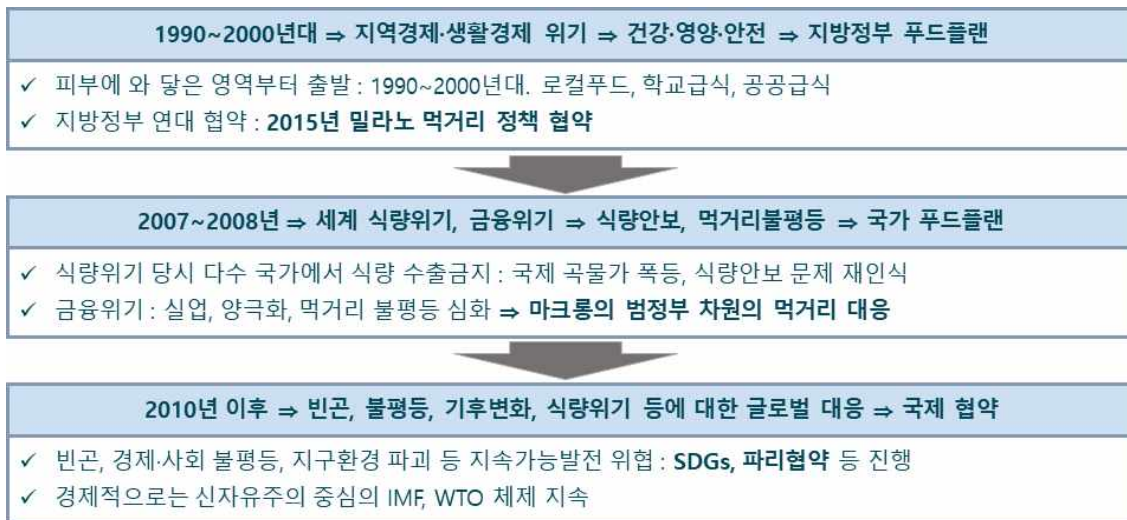
#### 가. 국내외 추진 동향

##### □ 푸드플랜의 국제적 흐름

##### ■ 푸드플랜은 지역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글로벌로 확산

- 푸드플랜이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과 정책은 1990년대부터 본격화됨
- 지역 푸드플랜이 도시단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글로벌 이슈의 발생과 더불어 먹거리 정책의 주체와 대상이 확장되어감
- 최근에는 푸드플랜이 UN의 지속가능발전협약,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협약 등과도 관련성이 높아지는 단계임

〈그림 II - 15〉 푸드플랜의 시기별 국제적 동향



자료 : 박영범 외 (2018)

##### ■ 지역 푸드플랜 : 2000년대 이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수립. 먹거리공공성과 로컬푸드

- 지역 푸드플랜은 1990년대 이후 지역경제·생활경제 위기에서 건강·안전 수요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전세계적으로 확산됨
- 특징적인 것은 2015년 밀라노 푸드협약을 계기로 도시간 국제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지역 푸드플랜 역시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점임

※ [참고] 밀라노 푸드협약

- 2015년 밀라노 국제 엑스포에서 51개국, 117개 도시 및 단체가 참여하는 ‘밀라노 도시 푸드 정책 협약’ 을 체결하고, 세계 주요 도시의 먹거리정책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이행해야 할 활동으로 ‘37개의 권장행동’ 을 발표함
- 2015년 당시 국내에서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여수시가 참여하였으며, 이후 완주군이 추가로 협약에 참여함. 2018년 서울시는 먹거리 공급과 유통분야 특별상을, 완주군이 거버넌스 부문 특별상을 각각 수상함

<그림 II - 16> 밀라노 도시 푸드 정책 협약(Food Policy Pact, 2015)



“current food systems are being challenged to provide permanent and reliable access to adequate, safe, local, diversified, fair, healthy and nutrient rich food for all ...cities which host over half the world population have a strategic role to play in developing sustainable food systems and promoting healthy diets...”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하고, 안전하며, 지역적이며, 다양하며, 공정한 건강하며, 영양이 풍부한 식량에 대해 항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그림 II - 17> 세계 주요 도시의 먹거리 정책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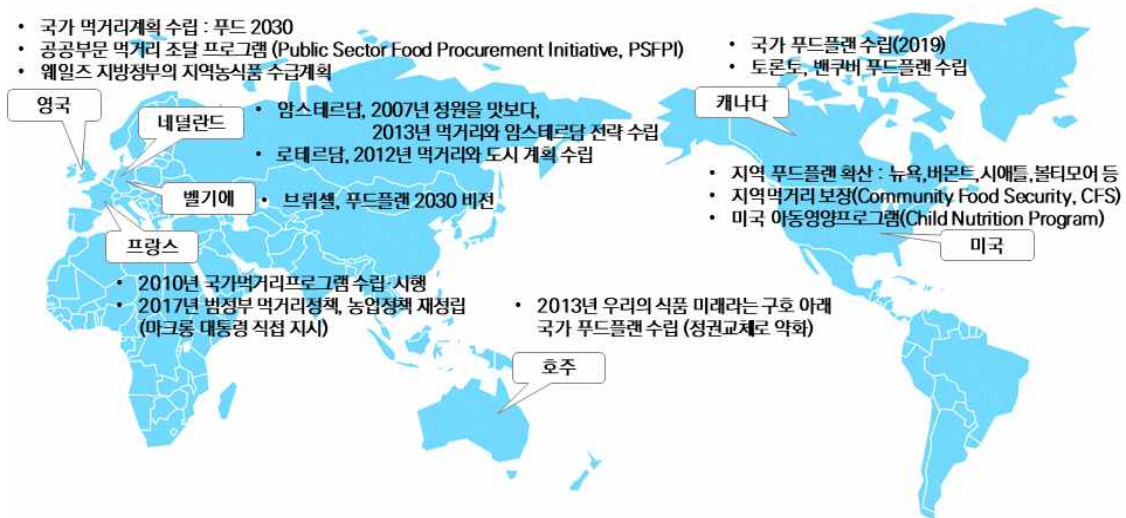
먹거리 불평등 해소	먹거리 접근성 강화	먹거리 불안 해소	먹거리 사슬 강화 및 촉진	지구생태 기여
보편적 먹거리의 규정	먹거리의 건강한 접근(기회) 확대	먹거리 안전기준 수립	생산-소비 공공관계 강화	생산-소비 단계의 저감기준수립
먹거리의 사회복지적 접근	공공급식 영역확장	식원성 질병 해소, 삶의 질 향상 기여	중소농, 가족농 중심의 경쟁력 및 품종의 다양성 강화	생태계 기여지표 적용 (생태발자국, 푸드마일 탄소라벨 등)
제공, 충족이 아닌 기본권으로 보장	사회적약자 우선의 공급체계구축	공공조달을 통해 기준유도 및 확산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소비자 제공 도농관계강화	유통단계 감축 포장용기 전환 음식물 쓰레기 감축
토론토 현장 런던푸드 보고서 브라질 먹거리보장정책	덴마크 코펜하겐의 집 오스트리아 비엔나 스위스 말뚝의 공공 급식망 스코틀랜드 이스트에어셔	영국 공공부문먹거리조달 프로그램(SFF) 코펜하겐 유기농90%급식 비엔나 생대구매	브라질 공공급식 내 30%이상 가족농, 소농 제품구매 영국의 소규모 생산자 입찰제도 스코틀랜드 지역생산자 참여장려	먹거리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별 기준과 방법 상이 보편적 예시적용

자료 : 배옥병, ‘지속가능한 먹거리 종합정책과 먹거리 공공조달 정책 방향’, 2018.9, 농식품부 먹거리선환체계TF 워크샵.

■ 국가 푸드플랜 : 2007년 세계식량 위기 이후 확산. 먹거리보장과 식생활개선에 초점

- 국가 푸드플랜은 2007~2008년 세계 식량위기를 겪으면서 식량안보·먹거리보장을 국가 어젠다로 재인식하면서 본격화됨
  - 특히 비만 등 불균형적인 식생활로 인한 국민의 건강악화와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융위기로 인해 먹거리 취약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기후환경위기 등 글로벌 과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응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국가안보와 기본권 차원의 먹거리 보장(security)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됨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이후 국가 차원의 먹거리종합전략(푸드플랜)이 본격적으로 수립 추진됨

〈그림 II - 18〉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 사례



- 최근에도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국가가 증가함. 2017년에 스웨덴이 의회 승인을 거쳐 발표하였으며, 2019년 3월에는 캐나다가 국가 푸드플랜을 발표함
  - 스웨덴의 푸드플랜은 러시아와의 안보 불안 때문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자급률 50%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함


※ [참고]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먹거리정책 재정립 사례

- 2017년에 대통령 지시로 총리 주관 하에 ‘Loi EGalim(농업 및 식품법)’ 개정을 위해 국가적인 논의 플랫폼을 6개월간 운영함(‘17.7~12)
- 그 결과로 대규모 유통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짐에 따른 생산자의 시장교섭력이 낮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9년부터 시행에 들어감



### 〈그림 II - 19〉 프랑스의 범사회적 먹거리정책 논의

- ❖ **목표** : 농민은 공정한 가격의 농식품 부가가치 사슬 속에서 품위있게 생활. 소비자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농식품 접근
- ❖ **슬로건** : 목적에서 “미래의 식료를 위해 함께 행동합시다”
- ❖ **총리 주관 범사회적 먹거리 논의 플랫폼에서 논의**
  - 공공기관, 민간부문, 활동가, 농업계 파트너, 소비자단체 참여, 생산,가공,소비의 새로운 모델 도출. 정부차원의 법률안 마련
  - 2개의 주제, 14개의 테마: ‘부가가치의 창출과 분배’, ‘모두를 위한 건전하고 안전한, 지속가능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식료’. 모든 참여자들이 14개 테마별 논의
- ❖ 논의 결과들은 다음의 4가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부가가치의 공정한 창출과 분배를 위해 명료하고도 안정적인 공통의 추진방향을 설정
  - 프랑스 국민들에게 보다 건전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먹거리라는 믿음을 공고히 함
  - 좋은 품질의 먹거리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농업과 환경을 조화롭게 함
- ❖ 이러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관련 공공정책들을 긴밀하게 연계해 추진함



자료 : 박영범 외(2018)

- **법규명칭** : 농식품 분야 상업적 관계의 균형 및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을 위한 법  
(LOI POUR L'ÉQUILIBRE DES RELATIONS COMMERCIALES DANS LE SECTEUR AGRICOLE ET ALIMENTAIRE ET UNE ALIMENTATION SAIN ET DURABLE)
- **주요 내용** : ① 농산물 구매가의 10% 마진을 붙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금지 (상법에서 ‘구매가 + 10%마진’ 을 손실의 경계선으로 봄)  
 ② 판촉행사(promotion)에 대한 규제 강화로 ‘1+1’ 판매금지, ‘2+1’ 판매 허용  
 ③ 판촉행사는 총액의 1/3, 물량기준으로 25% 이내로만 허용  
 ④ 동물복지 강화 : 대상영역을 사육에서 운송, 도축까지 확대  
 ⑤ 2022년부터 공공기관 급식에 로컬푸드 50%(친환경 20% 포함) 이상 포함  
 ⑥ 음식물 쓰레기 저감 활동 강화  
 ⑦ 2020년부터 학교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물병 사용 금지

#### ■ 국제 협약 : 지속가능한 농업, 빈곤과 기아 퇴치, 인구증가와 기후환경변화 대응

- 국제 협약은 개발도상국들의 빈곤과 기아 퇴치 차원에서 과거에도 식량문제가 논의되어 왔으며, 2015년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새롭게 제시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 균형잡힌 생산과 소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
- EU도 2016년에 ‘EU Food 2030’을 발표함. Food 2030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 ‘기후에 대응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식품시스템의 순환성과 자원효율성’, ‘지역사회의 혁신과 권한 부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2030년 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참고]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sup>10)</sup>

- SDGs는 UN이 2016~2030년에 국제사회에 제시한 공동목표를 말함.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부문에서 모두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함
- 특히, 17개 목표 가운데 7개(Goal 2, Goal 3, Goal 6, Goal 10, Goal 11, Goal 12, Goal 13)가 푸드플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임
-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을 ①지역 차원(환경 측면) ②국가 차원(이용가능성 측면) ③가구 차원(접근성 측면) ④개인 차원(활용성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모든 SDGs은 이 네 가지 차원과 관련이 있음
- 특히 Goal 12, Goal 16, Goal 17은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을 구성하는 네 가지 차원 모두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을 구성하는 네 가지 차원은 상호 관련되고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의 ‘안정성(Stability)’ 을 유지할 수 없음.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의 ‘안정성(Stability)’ 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을 구성하는 네 가지 차원 각각에 관련되는 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 - 20〉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푸드플랜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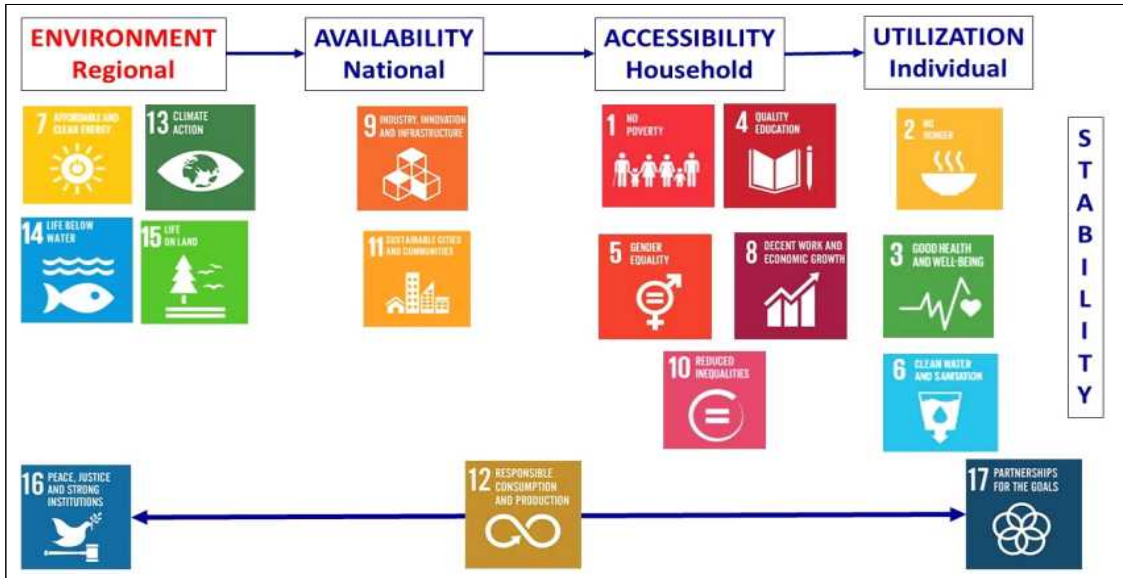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UN이 제시한 2016~2030년 모든 나라(선진국+개도국)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를 말함</li> <l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li> <li>• 이를 토대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li> </ul>	부문	주제	지속가능발전목표
	사회	빈곤기아	1. 빈곤퇴치 <b>2. 식량안보</b>
		보건/복지	3. 보건과 <b>웰빙</b>
교육		4.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환경	여성/평등	5. 성평등, 여성역량강화 <b>10. 불평등해소</b>	
	기후변화	<b>13. 기후변화대응</b>	
	생태자원 수자원	14. 해수 및 담수생태계 15. 육상생태계 <b>6. 물과 위생</b>	
경제	도시환경	<b>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b>	
	일자리	8. 경제성장장과 일자리	
	산업	9. 인프라와 산업화	
제도	생산/소비	<b>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증진</b>	
	에너지	7. 청정에너지	
	평화체제 파트너십	16.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와 제도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자료 : 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

10) 윤지현 외, 지속가능한 식생활·영양 정책 선진 사례 및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개편방안 연구, 2018.12.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p115~118 요약 및 보완.



<그림 II - 21>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자료 : European Public Health Association(2017). Healthy and Sustainable Diets for European Countries

<표 II - 12> EU Food 2030의 우선순위 정책과 내용<sup>11)</sup>

우선순위	내용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	영양가 있는 음식과 물을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함 - 이는 기아와 영양실조를 줄이고, 높은 수준의 식품 안전성과 추적성을 보장하고, 비전염성 식생활 관련 질병의 발생률을 줄임 - 또한, 모든 시민과 소비자가 건강과 웰빙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움
기후에 대응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후대응 식품시스템의 구축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천연자원을 보존하며 기후변화를 완화시킴 - 이는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문화적·환경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식품시스템(생산, 가공, 유통 및 물류 포함)의 포괄성을 확보함 - 자연 자원(물, 토양, 육지와 바다)은 지구환경의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하게 사용되고, 미래 세대에 제공됨
식품시스템의	환경적 발자국을 줄이면서 전체 식품시스템에 자원 효율적 순환 경제

11) 윤지현 외, 지속가능한 식생활·영양 정책 선진 사례 및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개편방안 연구, 2018.12.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p122.

순환성과 자원효율성	원칙을 구현함 -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적인 식품시스템에 순환성을 적용하고 식품 손실과 낭비를 최소화함
지역사회의 혁신과 권한 부여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함 - 광범위한 혁신 생태계로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사회의 요구, 가치, 기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과 부가가치 제품, 상품, 서비스의 창출을 유도함 - EU 전역에서 점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번창하는 도시, 농촌 및 해안 경제와 공동체를 육성함 - 산업 및 식품 생산자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기능하는 시장은 공정한 거래 및 가격,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을 촉진함 - 모든 지리적 규모(Local to Global)에서 식량·영양 안보 관련 정책 개발 및 구현을 지원하는 과학적 증거와 폭넓은 다양한 활동가의 지식을 발굴하여 이용함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6). European Research & Innovation for Food & Nutrition Security

## □ 국내 푸드플랜 추진동향

### ■ 푸드플랜 정책 현황

- 2017년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 83번 과제에 푸드플랜 수립이 포함됨
  - ‘2018년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하위 과제로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18~2022’에서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를 2022년 100개소까지 선정하여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푸드플랜 계획수립에 대한 지원은 2018년에 9개소, 2019년 18개소를 실시함
  - 2018년 지원대상 : 기초지자체 8개소, 광역지자체 1개소 등 총 9개 지자체
    - \* 기초지자체(8) : 서대문구, 유성구, 춘천시, 청양군, 완주군, 나주시, 해남군, 상주시
    - \* 광역지자체(1) : 충청남도
    - \* 거버넌스 구축 지원 : 10개 지자체
  - 2019년 지원대상 : 기초지자체 15개소, 광역지자체 3개소 등 총 18개 지자체
    - \* 기초지자체(15) : 수원시, 이천시, 평택시, 괴산시, 부여시, 서산시, 대덕구(대전), 김제시, 익산시, 순천시, 장성군, 구미시, 거창군, 김해시, 진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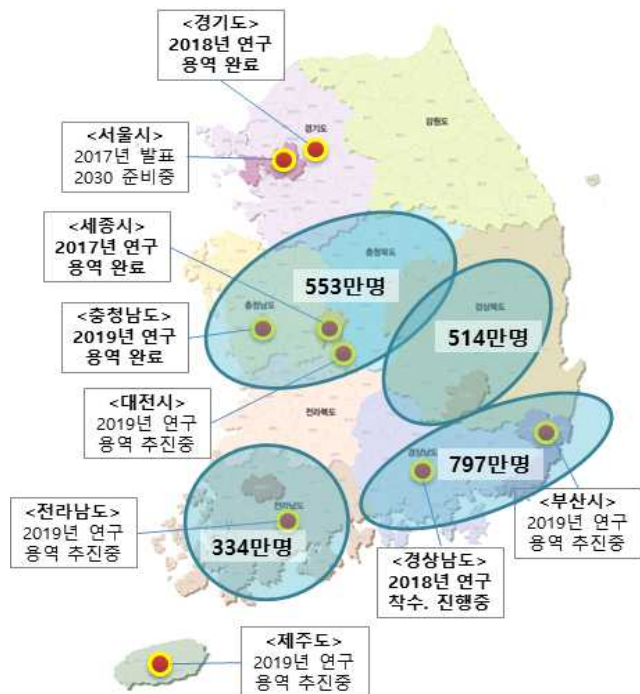
- \* 광역지자체(3) :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시
- \* 먹거리 실태조사 지원 : 7개 지자체 지원 (용역 형태로 공동 진행)
-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해 2018년에 로컬푸드를 공공기관 급식과 군 급식에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 추진배경 : 공공급식 분야는 적정 가격으로 연중 안정적인 물량을 소비하는 대량 수요처로 식재료 시장규모가 연간 7조원에 달하고,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16.1.14 발효)으로 우리나라도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이 가능해짐
  - \* 미국, EU, 일본 등은 이미 공공급식에 지역산(국산) 우선 사용 제도화
  - 공공기관 급식 :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로컬푸드 공급 시범사업 추진. 단계적으로 전체 혁신도로 확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반영
  - 군 급식 : 접경지 시범지역(강원 화천, 경기 포천)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추진. 단지장 제도 폐지 등 제도 개선 추진. 장성 상무대, 논산 훈련소 등 비접경지역으로 확대 추진
  - \* 군 급식 지역농산물 사용 현황 : 강원 화천 31.1%, 경기 포천 33.2%
  - \* 단지장 제도 : 군납 농협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농가관리, 납품농산물 수집 등의 역할을 하는 관행적 중간유통단계
- 푸드플랜 사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방식을 '먹거리 계획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대해 푸드플랜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함
  - 기본방향 : 지역 푸드플랜 우수 지자체와 정부가 협약을 체결하여 푸드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지원대상 :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급식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시·군·구)
  - 대상사업 : 패키지 12개 사업(농진청 사업 2개 포함), 가점 부여 20개 사업
  - 지원내용 : 9개 시·군 선정. 5개년('19~'23) 간 국고 404억원 지원
  - \* 선정대상 : 화성시, 세종시, 청양군, 군산시, 완주군, 전주시, 나주시, 해남군, 상주시
  - 먹거리 계획 협약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간 협약
  - 운영 지원 : FD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 전담 자문단의 일대일 현장지원 추진
- ※ [참고]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 지자체가 푸드플랜 추진을 위해 패키지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최장 5년간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계획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일괄적으로 정책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추진 방식
  - 선정된 지자체에는 패키지 지원에 포함된 사업은 일괄지원하며, 연계지원 사업은 가점을 부여하여 공모 시 인센티브를 부여

〈표 II - 13〉 2019년 푸드플랜 패키지지원 사업 내역

구분	시행년도	사 업 명
패키지 지원	'19년도 (7개사업)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APC), 직매장설치교육홍보지원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신활력플러스),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사업, 식품소재및 반가공산업육성, 저온유통체계구축지원사업
	'20년도 (5개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농진청), 농산물안전분석실운영(농진청)
연계 지원 (가점)	'19년도 (20개사업)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육성지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원규모화사업(옹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사업, ICT융복합확산, 시설원예현대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산지유통활성화(옹자), 전통시장농산물판매촉진, 유통시설현대화,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농식품시설현대화(옹자),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옹자), GAP생산여건 조성(농관원), 토양용수안전성분석사업, 바른식생활교육 체험확산사업,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 광역단위 푸드플랜 확산

- 민선 7기 지자체 선거 이후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푸드플랜 수립이 확산되고 있음
- 현재 광역지자체 17개 가운데 9개 시도가 푸드플랜을 수립하였거나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3개 시도도 푸드플랜 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푸드플랜 비전 선포 : 서울시
  - 연구 완료 : 세종시, 경기도, 충청남도
  - 연구 진행중 : 경상남도, 대전시, 전라남도
  - 연구 계획중 : 부산시, 제주도 등
  - 추진검토 : 인천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 또한, 최근에는 대도시와 농촌지역이 포함된 인근의 광역지자체간 연대를 통한 광역 먹거리망 논의도 확대되고 있음




〈그림 II - 22〉 광역 푸드플랜 추진 현황

- 부산·울산·경상남도는 광역 먹거리 협약을 2019년 3월에 체결하였으며, 대전·세종·충청의 광역 먹거리망 구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음

〈그림 II - 23〉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협약 사례

**동남권  
상생발전  
협약**

- ❖ 동남권 공동변영을 위한 광역혁신 경제권 구성 협약문 발표 : 2018.6.26
- ❖ 부산·경남 공공조달 플랫폼 구축 협의 : 2018.10.31
- ❖ 동남권 상생발전 결의문 채택 : 2018.10.10
- ❖ 제1회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 협약서 채택 : 2019.3.21
- 미래세대의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를 구성



**동남권의 미래를 위해  
함께 씬시다!**

제1회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 협약서**

동남권 3개 시도(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선진화 중 주역으로, 수도권 위주의 경제를 벗어나 국가발전의 위한 혁신대거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한 산업장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강화의 일환으로 동남권의 경쟁발전과 대한민국적 번영을 이끄는 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이에 동남권 3개 시·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경제를 넘어선 협력을 다짐과 같이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하나, 동남권이 글로벌 경쟁을 위한 대한민국을 향한 다짐을 하는 데 공동 노력한다.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하는 수도권 경제권화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동남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주축으로서 수도권에 상응하는 「효율성장세력」으로 혁신, 경쟁, 번영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하나, 동남권이 교통망 확충과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동남권은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망으로 발전된 광역공동체이다. 상호 교류를 위한 혁신한 교통 중계 해빙과 수도권용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공동 대응을 위하여 「동남권 광역교통추진위원회」를 통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한다.

하나, 동남권 공동 번영을 위하여 글로벌 경제협력에 노력한다.

동남권의 국제 산업인프라, 해양물류인프라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열어놓는 노력을 같이 하고, 동남권 기업에 글로벌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하나, 동남권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남권 광역관광본부」를 신설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에 공동 대응하고, 동남권의 공동관광사·관광진흥위원회를 활용한 통합 관광개발을 구축하기 위하여 「동남권 광역관광본부」를 신설한다.

하나, 미래번영을 포함한 각종 사회·자본 세대에 대한 동남권 대응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한다.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피해와 번번히 발생하는 태풍과 자연재해는 동남권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남권 대기환경질 개선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통합 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하나, 미래세대의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를 구성한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국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친환경 육류 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적으로 공급하는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도농상생육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이상 5개 항목 외에도 동남권 3개 시·도는 지역의 새로운 강점을 확보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대한민국적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에 노력한다.

2019년 3월 21일

부산광역시장  
오 거 논

울산광역시장  
송 철 호

경상남도지사  
박 성 호

## 나. 국내 추진 사례

### ① 서울특별시

#### ■ 광역지자체 1호 푸드플랜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 2년간의 민관협의로 수립

- 서울시는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를 2013년에 1차 진행하였으나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경험이 있었음

<그림 II - 24> 서울특별시 푸드플랜의 민간 거버넌스 활동내역

주요 내용	2015	2016	2017
- 전문가 및 관련부서 회의: 식품안전·영양·농업·유통·급식분야, 소비자 등	21회	20회	7회
- 서울 먹거리거버넌스(4개 분과), 도농상생거버넌스, 먹거리거버넌스 등	13회	15회	2회
- 서울시 먹거리정책 시민제안대회(200건), 심포지엄, 토론회, 워크숍 등	2회	4회	2회
- 로컬푸드(완주, 전주, 홍성 등) 추진 지자체 등 국내외 협력·견학	-	11회	4회
- 복지시설 실태조사(5,835개소),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	16회	24회



시민제안대회



기획조정회의 워크숍



로컬푸드 직매장 견학

● 도농상생 공공급식협약식 및 토론회

- 서울시 포함 10개 광역시 참여
- 서울자치구 & 지방시군 MOU 체결 중



도농상생 공공급식협약식



먹거리 마스터플랜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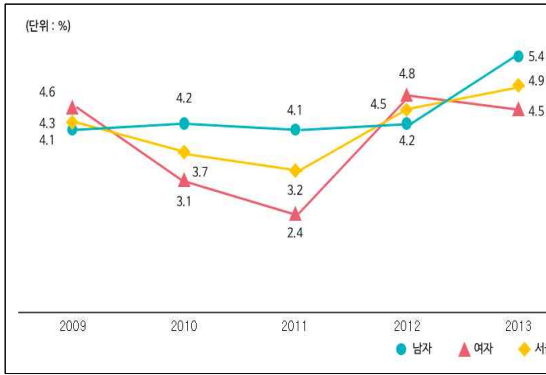
- 서울시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2015년에 다시 논의를 시작한 이후 민관 거버넌스 구성하여 공무원들의 철저한 내부학습과 협업,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일반시민의 제안과 논의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함
  - 2015년 이후 2017년 6월 계획 발표 시점까지 총 119회의 민관 거버넌스 활동이 진행됨

#### ■ 철저한 실태조사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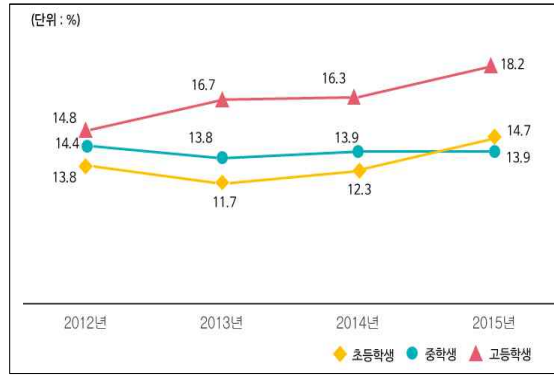
- 서울시는 계획수립 2년 동안 시민사회와 행정조직 내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감
  - 예1) 만 19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 8.4%(서울), 고혈압 유병률 23.9%(서울), 초·중·고등학생의 비만 유병률('15년) 각 14.7%, 13.9%, 18.2% 기록
  - 예2) 서울시에서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나트륨 함량 모니터링 결과 도시락 1개당 평균 1,366.2mg으로 하루 권고상한치의 68.3%에 상당('16, 서울시)
  - 예3) 경제적 이유로 식품안정성 미확보 가구 5.1%, 서울시 총 18만가구<sup>12)</sup>
  - 예4) 음식물쓰레기 1인 하루 발생량 0.31kg, 17개 시도 중 발생량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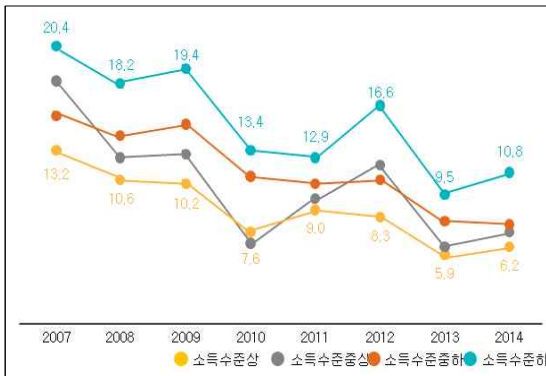
〈그림 II-25〉 서울시 먹거리실태 조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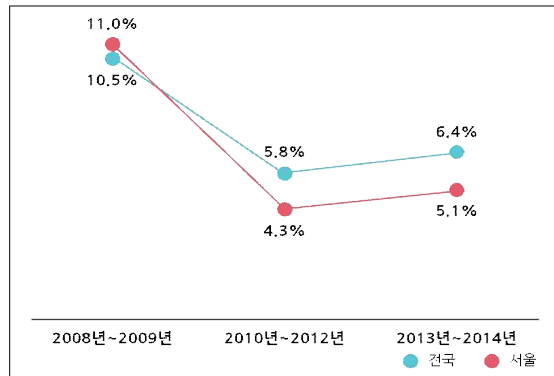
〈서울시 만19세 이상 고도비만을 추이〉



〈초·중·고등학생 비만 유병률〉



〈소득수준별 영양섭취 부족자 분율〉



〈식품안정성 미확보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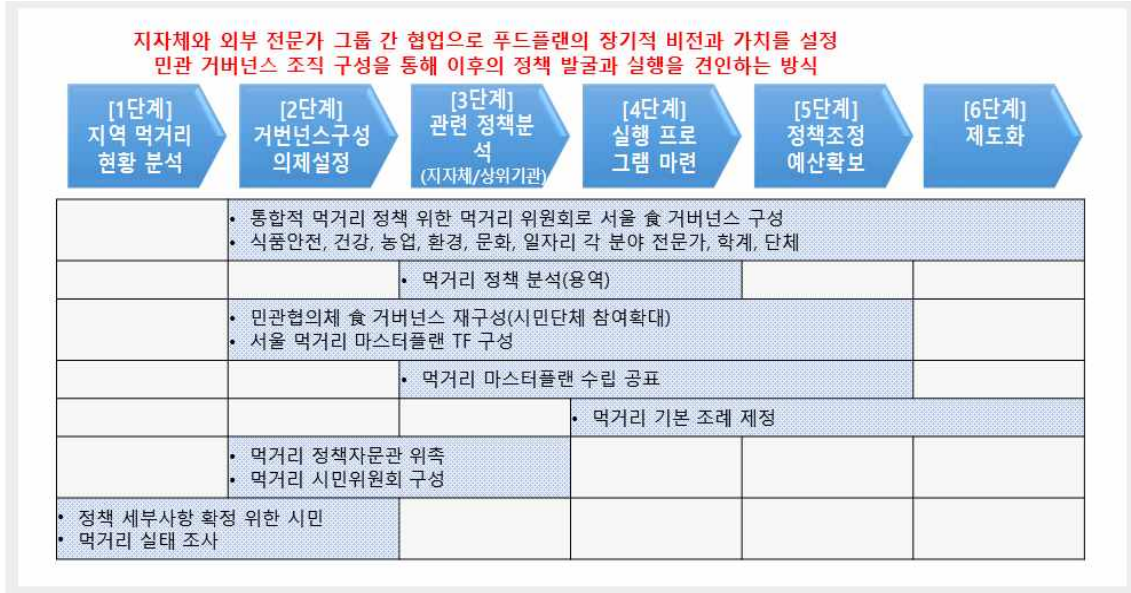
자료 :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 (2017)

■ 서울시 푸드플랜은 ‘푸드플랜 수립의 교과서’

- 서울시 푸드플랜 수립과정은 크게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지역 먹거리 현황 분석 2>거버넌스 구성 및 의제 설정 3>관련 정책분석 4>실행프로그램 마련 5>정책조정 및 예산 확보 6>제도화의 과정으로 진행됨
- 푸드플랜이 일반적인 계획수립 과정과의 가장 큰 차이는 거버넌스 구성 및 의제 설정을 먼저 진행하고, 그 거버넌스 내에서 계획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을 마련하였다는 점임
- 서울시 푸드플랜의 또하나의 특징은 거버넌스의 구성과 의제 설정, 정책조정 과정을 총괄하기 위해 2015년 계획수립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먹거리정책 조정관’을 선임하여 운영하였다는 점임
  - 조정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자칫 일하는 방식과 관심사의 차이로 인해 민관 거버넌스가 ‘갈등의 장’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부서간의 협업을 조율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매우 선진적인 사례임

12)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0.7%) 또는 가끔(4.4%)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가구 총 5.1%

<그림 II - 26> 서울특별시 푸드플랜의 추진 체계 및 프로세스



■ 서울시 푸드플랜의 비전과 주요 내용

- 비전 :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 주요 내용 : 4대 영역(건강, 보장, 안전, 상생), 5대 분야(4대 영역+추진체계), 26개 과제

<그림 II - 27>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비전 및 주요목표





● 5대 분야 26개 과제를 선정 → 중·단기로 과제를 구분해 부서간 협업 관리

- **식품안전과(총괄)**, 농수산식품공사, 복지본부, 가족담당관, 친환경급식 담당관, 생활환경과, 민생수사반

**건강한 먹거리**

- 중기 **더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 중기 **생애주기별 바른 식생활 체험교육, 음식수업**
- 중기 건강한 우리 음식 계승과 서울의 맛 즐기는 문화 확산
- 단기 **서울 건강 먹거리 제공 기준 설정**
- 중기 모든 정보가 한 곳에 '서울 먹거리 포털' 운영

**상생을 위한 먹거리**

- 중기 **공공조달 직거래 유통체계 확립,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
- 단기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한 교육·홍보 및 거버넌스 구축
- 단기 도시텃밭의 확대와 안전먹거리 생산
- 단기 먹거리 상생 가치 실현을 위한 도농 교류 확대
- 단기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제도적 기반 구축**

- 단기 **먹거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단기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
- 단기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 실행전략 수립
- 중기 서울 먹거리 통계(Seoul Food Survey)

**먹거리 보장**

- 단기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 및 먹거리 지원**
- 중기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 중기 결식아동 맞춤 급식 서비스 제공
- 중기 사회적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식공동체 활성화
- 중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확대로 소규모 복지관 등 지원

**안전한 먹거리**

- 단기 **농·수·축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강화**
- 중기 **안전관리를 통한 모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 차단**
- 단기 불량식품 4대 핵심 분야 집중점검으로 식품안전 강화
- 단기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
- 단기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시민 신뢰도 제고
- 단기 시민검사청구권 확대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 단기 『시민먹거리 지킴이』 1만명 양성

범례 ■ 신규 ■ 중요 → 핵심사업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정책지표**

상생 소비정책 → 도농상생 생산자 고려 정책	보장 양적지원 → 질적지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공공급식 친환경 식재료 40% → 70%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급식대상 인명 4만명 → 20만명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도시농업 공간 11만ha → 250ha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식품안전성 미흡보 가우 180,000명 → 160,000명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먹거리 취약계층 가구 식량부족 → 영양, 건강관리                             </div> </div>
건강 개인접근 → 환경조성 등 시스템 접근	안전 점검·단속 → 과학적 예측을 통한 예방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나트륨 함유량 3,890mg → 3,500mg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1일 500g 이상 과일채소 섭취자 39.2% → 41%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가공식품 선택시 영양표시 이용자 27% → 30%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부패한 농산물 사전 차단 건류농약 검사 18,000건 → 28,000건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식품안전 제검도 79.1% → 81%                             </div> </div>

시민과 함께  
**확장된 미래10년 계획 또한 준비하겠습니다.**

2020 먹거리 마스터플랜 → 2030 먹거리 마스터플랜

상생, 보장, 건강, 안전

공간, 환경, 경제

- ✓ 도시 재생 시 먹거리 접근성 고려
- ✓ 친환경 급식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줄이기
- ✓ 방사선 확대 등 동물복지 적용
- ✓ 위생점검 민간이전 등 먹거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
- ✓ 업주 스스로 개선 의지 확대 할 수 있도록 민간인증 기관 확대

자료 :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 (2017)

■ **도농연대 : 서울시 먹거리문제 해결의 출발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 서울시는 시민의 먹거리불안 해소와 건강 증진,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도농연대를 채택함. 이는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기반이 부족한 서울시가 먹거리정책의 출발점인 안전·안심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
- 도농연대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친환경학교급식에 더해서 2017년부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농촌지자체와 협력 방식으로 추진함
  - 2018년까지 7개 자치구와 7개 농촌지자체간 공급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9년까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역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 2018년에는 어린이집 중심으로 진행되어 사업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하반기 이후 공급대상과 공급품목이 늘어나고 공급체계도 안정화되면서 활성화되고 있음

〈그림 II - 28〉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MOU 체결 현황 (2018년 기준)

운영주체	협약시기	공급대상	특징
강동구&완주군	2017.05.	관내어린이집&복지시설	완주군 중소가족농 중심으로 생산된 제철 농산물을 강동구 공공급식센터에서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후 관내 급식시설로 공급
강북구&부여군	2017.09.		급식지원센터 주도하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산지원, 품질관리, 안전성 검사체계 재정비를 통한 식재료 공급체계 마련
금천구&나주시	2017.09.		기존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산지 직거래 방식으로 변화하여 친환경 식재료 공급.
노원구&홍성군	2017.09.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농업의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고 도농연대 강화.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가공시설지원, 유통활성을 통한 사업시행
도봉구&원주시	2017.09.		공공 급식시설 모집 후, 공공급식센터 수탁기관 선정. 우수한 관내 농/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노력.
성북구&담양군	2017.09.		친환경농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확대공급 위한 지원 강화. 식재료 직거래 외에도 식생활교육, 도농간 교류체험 등 인적교류 시행.
서대문구&전주시	2018.09.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를 개소한 뒤, 안전한 식재료의 안정적 조달을 시행. 친환경 농업 확산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

서울시는 2019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에 공공급식을 설치 예정.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70% 이상으로 올리며 서울시 전역 어린이집으로 친환경급식 확대 예정

### ■ 먹거리 시민위원회 구성 및 조례제정

- 서울시는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성공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2030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확장된 개념으로 수립하기 위해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먹거리 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 서울시의 먹거리 기본조례는 2017년 9월 제정하였으며, 먹거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추진과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현재 먹거리 시민위원회는 7명의 당연직 위원과 10개이 분과위원회(124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조정분과를 별도로 운영하여 각 분과별 세부 논의내용을 종합하고 있음
- 한편, 2017년 먹거리 마스터플랜이 시민들의 먹거리불안을 해소하고 먹거리공공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있었다면, 2030년 마스터플랜은 1>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및 음식폐기물 감축 2>먹거리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먹거리 기반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재생까지 확장된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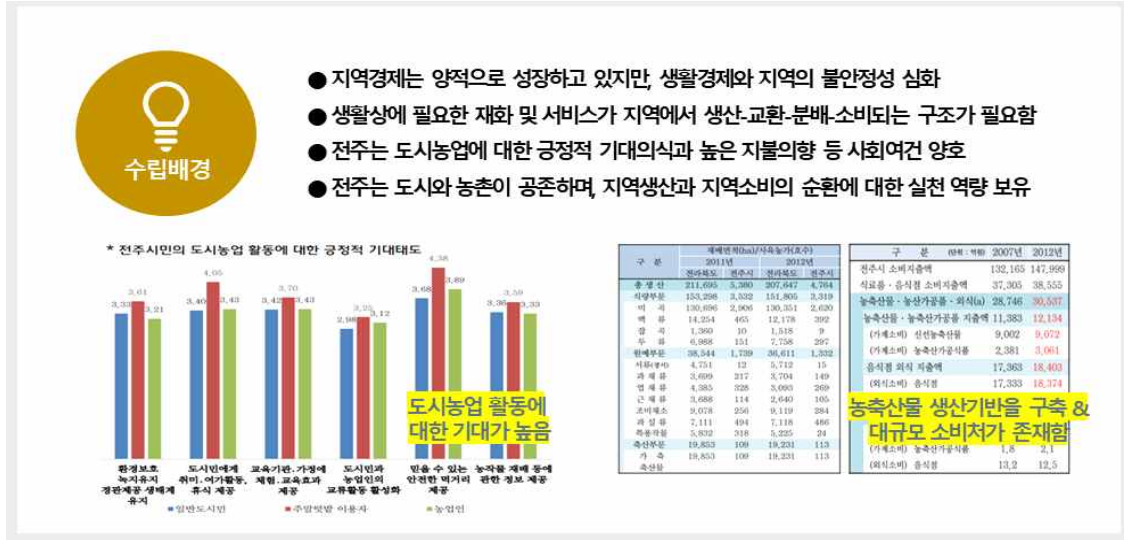
## ② 전라북도 전주시

### ■ 대한민국 1호 푸드플랜 ‘전주푸드2025플랜’

- 전주시는 인구 65만명, 농가인구 2만명, 농산물 생산액도 800억원 이상의 도농복합도시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합한 조건임

- 전주시 푸드플랜은 ‘2015년 ‘전주시 미래 농업·농촌발전계획 연구’에서 기본방향이 제시됨
-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7월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조례가 제정되고, 9월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2015년 11월에 ‘전주푸드 2025플랜’을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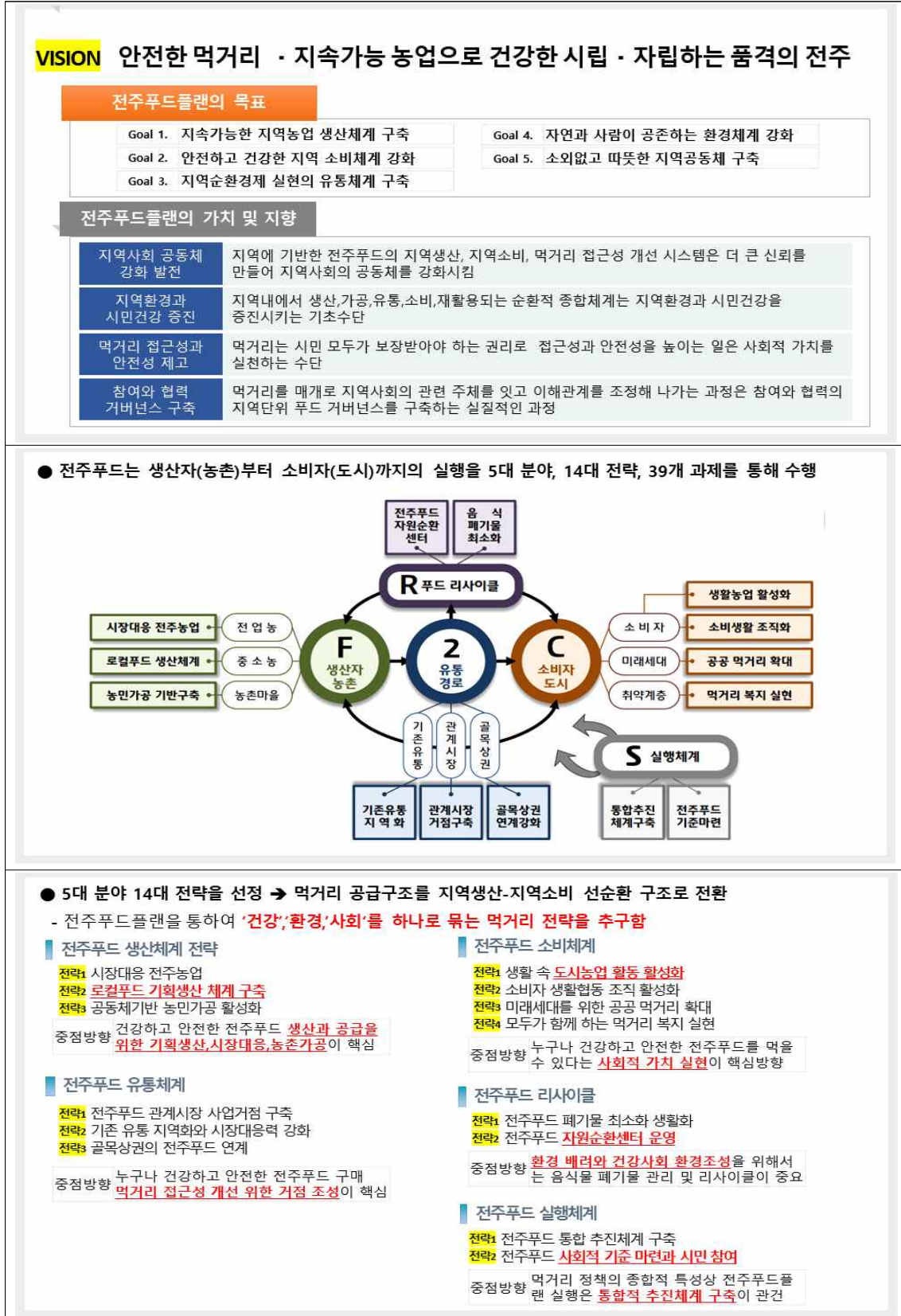
〈그림 II - 29〉 전주시 푸드플랜 수립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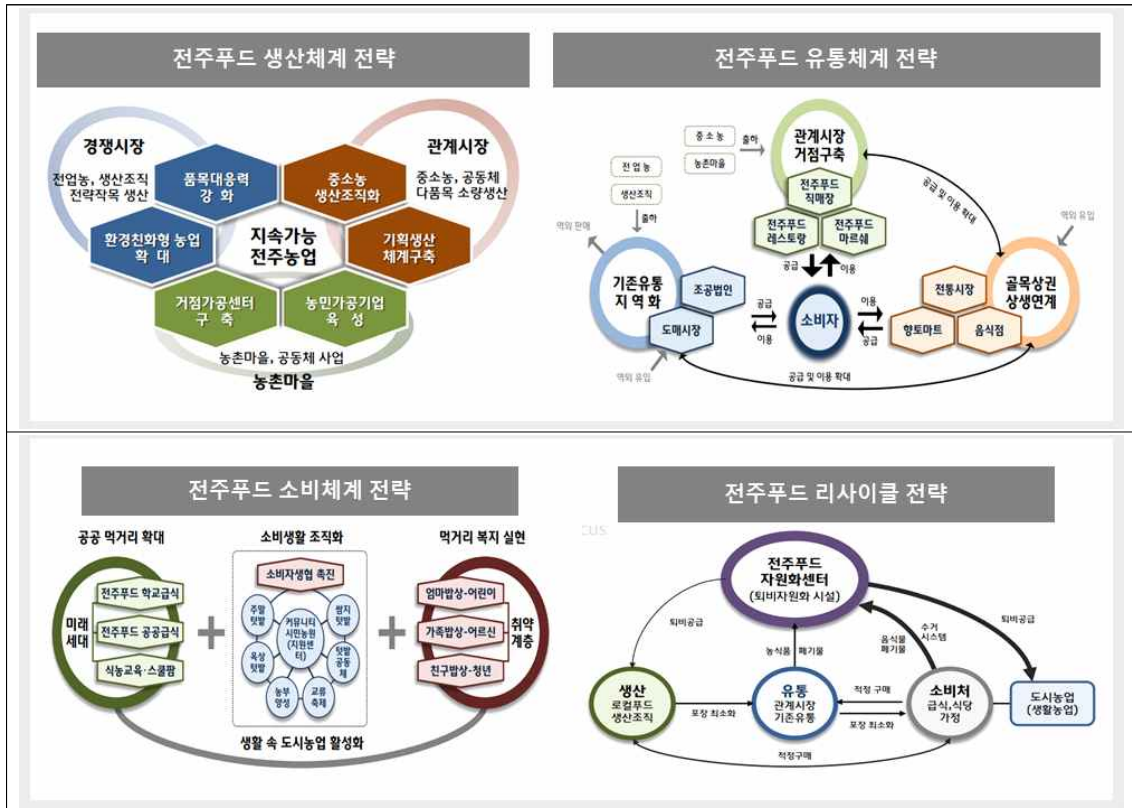
### 전주푸드2025플랜의 주요 내용

- 비전은 ‘안전한 먹거리·지속가능 농업으로 건강한 시립·자립하는 품격의 전주’로 설정하고, 지역의 먹거리체계를 지역생산-지역소비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5대 목표와 14대 핵심 과제를 제시함
  - 생산체계 : 시장대응 전주농업,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 구축, 공동체기반 농민가공 활성화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전주푸드 생산과 공급을 위한 기획생산, 시장대응 체계를 구축함. 농촌 가공이 핵심사업임
  - 유통체계 : 전주푸드 관계시장 사업거점 구축, 기존 유통 지역화와 시장대응력 강화, 골목상권의 전주푸드 연계를 강화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전주푸드 구매, 먹거리 접근성 개선을 위한 거점을 조정함
  - 소비체계 : 생활 속 도시농업 활동 활성화, 소비자 생활협동 조직 활성화,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먹거리 확대, 모두가 함께 하는 먹거리 복지 실현으로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전주푸드를 먹을 수 있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함
  - 리사이클 : 전주푸드 폐기물 최소화 생활화, 전주푸드 자원순환센터 운영으로 환경 배려와 건강사회 환경조성을 조성함
  - 실행체계 : 전주푸드 통합 추진체계와 전주푸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 참여를 제도화함

<그림 II - 30> 전주푸드2025플랜의 주요 내용







자료 : 전주푸드2025플랜 (2015)

■ 지역순환체계 활성화에 초점 : 시민수요 의제발굴,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미흡

- 전주시의 푸드플랜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순환체계 구축과 급식사업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 발표되었으며,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후적인 거버넌스 추진으로 상당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함
  - 상대적으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민관의 거버넌스와 행정조직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이로 인해 먹거리 의제 발굴과 내용도 상대적으로 좁아진 측면이 있음
  - 계획의 실행과정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이자 사업실행조직인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 직매장 및 물류센터의 확보에 많은 역량이 집중됨
  - 이 과정에서 농업인, 시민사회, 행정내부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으나 사업설명 위주로 진행되어 공감대 형성에 한계를 나타내기도 함
- 향후 민관 거버넌스의 제도화와 로컬푸드 중심의 푸드플랜에서 먹거리 의제를 확대하고 시민단체의 중심의 푸드플랜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함

〈표 II - 14〉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2019년 사업계획 기준)


사업명	사업내용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매장 2개소 운영</li> <li>•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li> <li>•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 사업 추진</li> </ul>
전주푸드 농가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농가 및 생산농가 교육</li> </ul>
전주푸드 6차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주푸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체험·교육사업 추진</li> </ul>
전주푸드 협동경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주푸드 1차 생산 농산물에 대한 가공 상품화</li> </ul>
온라인 쇼핑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전주푸드 시장 확대</li> </ul>

〈그림 II - 31〉 전주시 푸드플랜의 주요 활동


-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으나 푸드플랜 먹거리 계획 관련 조례는 없음
- 전주시 부시장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농민단체 대표, 교수, 친환경농업과장, 소비자연합회장 등이 이사직을 맡고 있음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 전주시의 자립적 순환경제 활성화 촉진
- 지역 선순환 독립경제 전주 실현


날짜	주요내용
2015.7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2015.9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창립
2015.11	-제휴 푸드 업무협약(전북도내 7개군, 2개 기관)
2017.1	-전주푸드 출하 1,127 농가 조직화




제휴푸드 업무협약




2018년 전주푸드 생산자 전진대회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전주푸드 시민설명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창립총회

## 다. 해외 추진 사례

### ① 미국 버몬트주의 ‘Farm to Plate 2011-2020’

#### ■ 추진 배경 및 주요 전략

- 전통적 농업지역인 버몬트주는 인구 62만명으로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임. 1990년대 말 경제 불황으로 농가 파산, 낙농업의 몰락, 토지황폐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의 역외유출’ 축소와 지역순환경제 육성을 목표로 직거래활동이 확산됨
- 이를 계기로 2009년 의회에서 ‘Farm to Plate Investment Program’ 법을 통과시키고, Vermont Sustainable Jobs(VSJF, 비영리기관)에 향후 10년간의 ‘Farm to Plate’ 전략 계획 수립을 위임함
- VSJF는 2009년부터 18개월간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Farm to Plate 2011-2020’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의회는 이를 승인함
  - VSJF는 1995년 버몬트 주의회가 버몬트주의 경제, 사회 및 생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주정부, 민간부문 사업 및 비영리 기관과 제휴하기 위해 만든 비영리 조직임. 주로 농업 및 식품 시스템, 산림 제품, 폐기물 관리, 재생 가능 에너지 및 환경 기술 분야에서 비즈니스 지원, 가치 사슬 촉진, 네트워크 개발 및 전략 계획 등을 제공함
  - VSJF는 주 의회의 요청에 따라 Farm to Plate에 25개 분야별 세부목표를 제시함. 매년 각 목표의 달성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매년 연차보고서로 발표하고 있음
    - \* 예산운영(2017년) : 수입 736천달러로 민간재단이 59%, 주정부 지원이 31% 차지
    - \* 운영인력 : 정규 상근직 3명, 타기관 파견직 포함시 10명

#### ■ 버몬트주 푸드플랜의 특징

- 버몬트주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푸드시스템의 전환을 위해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에너지, 지역금융 분야까지 포괄하는 푸드플랜을 수립함
  - 25개 목표를 9개 영역으로 재분류 할 수 있는데, 농업, 식품산업, 환경, 금융, 에너지 등이 포괄됨
  - 주요 9대 분야 : ①로컬푸드 경제 ②농업 생산 및 공급 ③로컬푸드 식품 및 산업분야 육성, 농장교육 ④관외 및 일반 식품점의 로컬푸드 확대 ⑤쓰레기 자원화와 주민 영양 관리 ⑥식품 관련 전문가 육성과 기업 육성 ⑦식품산업 확대 및 고도화, 자금 조달 지원 ⑧지역기금 활용, 에너지, 정책분야 등 행정의 전략적 접근 ⑨교차 이슈

<그림 II - 32> 미국 버몬트주의 푸드플랜 'Farm to Plate'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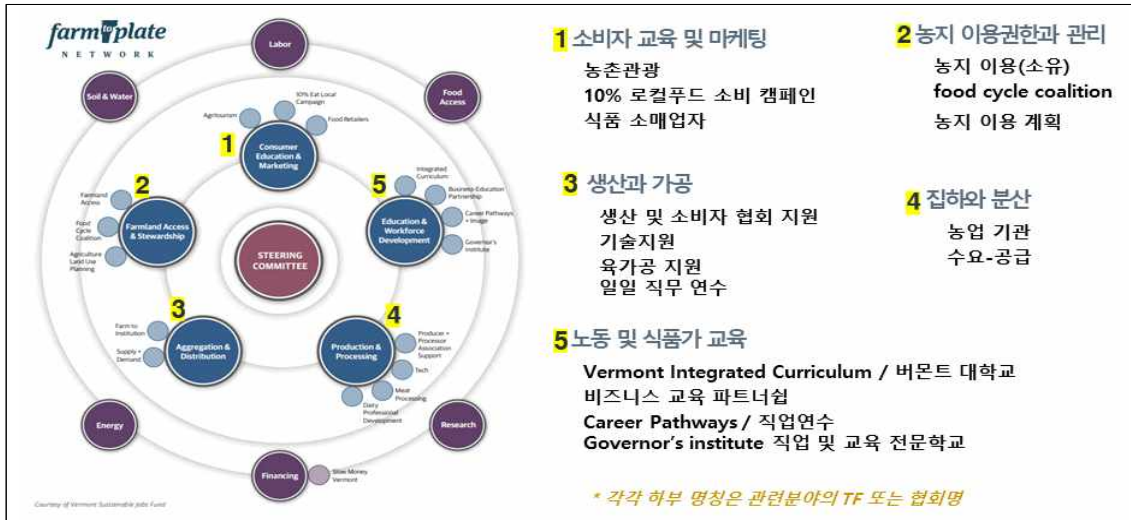
자료 : 팜투플레이트 홈페이지 (www.vtfarmtoplate.com)

■ 위원회의 구성

- Farm to Plate 계획에는 약 350여개 기관이 실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음
- 각 분야별 협의체가 활동 중이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이행상황과 사업성과를 관리해 나가고 있음
- \* 5개 네트워크 분야: 소비자교육 · 마케팅, 농지 이용권한과 관리, 생산 · 가공, 집하 · 분산, 노동 · 식품가교육



〈그림 II - 33〉 버몬트주 푸드플랜의 위원회 구성



자료 : 팜토플레이트 홈페이지 (www.vtfarmtoplate.com)

## ■ 추진 성과

- 2018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①로컬푸드 구입액이 1억 7,600만 달러에서 2억 8,900만 달러(전체 음식·음료 판매액의 12.9%)로 증가하고 ②신규 일자리가 6,559개, 신규 창업기업이 742개소가 발생하고 ③식량난에 시달리는 가정의 비율은 13.2%에서 9.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② 미국 뉴욕시

### ■ 로컬푸드 중심의 미국 먹거리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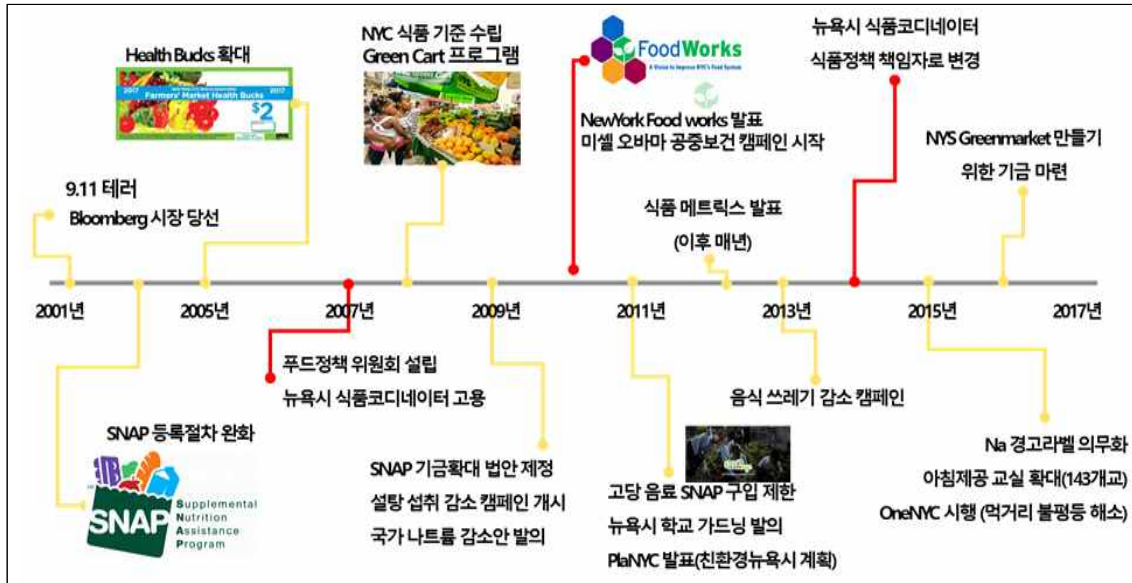
- 9.11 테러 후 미국 내 자급자족에 대한 관심 증가하였으며, 오바마 헬스케어 정책에 힘입어 신선농산물 섭취 캠페인이 활성화됨
  - 2008년 농업법 개정과 오바마 정부 로컬푸드 정책에 힘입어 자치주와 지역단위에서 먹거리 전략과 계획을 다양하게 수립됨
  - 특히, 2010년 미셸 오바마 주도로 시작된 'Let's Move(아동비만 퇴치 캠페인)'로 학교 급식, 가정에서의 로컬푸드와 신선 과일 및 채소 섭취 운동이 확산됨

### ■ 뉴욕시의 먹거리정책 비전보고서 'Food Works'

- Food Works는 2010년 블룸버그 시장 재임 당시에 뉴욕시 의회에서 제안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향한 비전'으로 행정, 시민단체 등 관련기관이 약 1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한 전략 보고서임

-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소비후 처리 등 5분야 59개 정책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권고안에 대한 실행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푸드정책위원회 신설과 보고서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푸드 정책 각 단계에 대한 현황조사 법제화 등을 제안함

<그림 II - 34> 미국 뉴욕시의 먹거리정책 주요 흐름



- 이를 기반으로 뉴욕시는 먹거리 정책의 6대 목표를 설정하고 420개 활동지표를 통해 세부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함
  - 목표① 월빙 영양개선 : 건강을 증진하고 식기 관련 질환을 감소시키는 정책
  - 목표② 먹거리 안전 홍보 : 기아와 식량 불안정을 줄이고 건강 유지에 필요한 먹거리의 질과 양을 제공하는 정책
  - 목표③ 푸드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강화 : 먹거리 정책을 형성하고, 특별 이익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
  - 목표④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푸드시스템 구축 : 먹거리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먹거리의 생산과 분배를 개선하는 정책
  - 목표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 :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물 오염 및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역의 농경지를 보호하는 정책
  - 목표⑥ 식품업계 노동자 지원 : 식품업계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과 복리 후생, 안전한 노동 조건 및 권한을 제공하는 정책

〈그림 II - 35〉 뉴욕시의 Food Works(2010)의 주요 내용



**수립배경**

● 2008년 농안법 개정과 오바마 정부 로컬푸드 정책에 힘입어 자치주와 지역단위에서 먹거리 전략과 계획을 다양하게 수립

- 2010년 미셸 오바마 주도로 시작된 'Let's Move(아동비만 퇴치 캠페인)'로 학교급식, 가정에서의 로컬푸드와 신선 과일 및 채소 섭취 운동 확산

**2010년 뉴욕 시의회가 먹거리 비전보고서 발표**



**중점목표**

1. [농업생산] 지역 농업인 육성과 지역농식품의 증대
2. [가공] 음식 관련 산업의 고용확대와 성장
3. [유통] 도시 내 음식의 분배 채널 확대
4. [소비] 뉴욕시민의 공평한 음식접근 권한 보장
5. [순환] 음식 쓰레기 절감과 재생

10년 이상 활용된 세부사업

**웰빙 영양개선**

건강을 증진하고 식기관련 질환을 감소시키는 정책

- 소외된 지역에서 건강하고 저렴한 음식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식품점의 수를 늘린다. **TOP 10**
- 지방 자치 단체에서 품질을 개선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과 음료를 제공한다. **TOP 10**
- 학교, 지역 사회 및 직장에서의 영양 교육 및 영양 증진 프로그램 개선 및 확대한다. **TOP 10**
- 건강에 해로운 음식의 마케팅 및 이용을 줄인다.
- 뉴욕시 제도적 음식 프로그램에서 도달 범위를 향상시키고 등록을 보다 쉽게 한다.
-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다른 분야의 권장을 시행한다.
- 건강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 의료 제공자의 역할을 촉진한다.

**식품 안전 홍보**

기아와 식량 불안정을 줄이고 건강 유지에 필요한 식량의 질과 양을 제공하는 정책

- SNAP, 기타 식품 혜택 및 응급 식품 프로그램 등록을 촉진한다. **TOP 10**
- 안전하지 못한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식량과 영양 교육을 향상시킨다.
- 저소득 뉴욕 거주민의 음식 구매력을 향상시킨다.
- 식품 저장고 및 주방, 기타 비상 식량 프로그램으로 가는 식품의 품질 및 공급량을 증대 시킨다.
- 식량 확보를 장려하는 기타 권고 사항을 시행한다.

**푸드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강화**

먹거리 정책을 형성하고 특별 이익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

도시 정책 기획, 조정 및 식량 정책 평가를 개선한다.

식량 정책과 식량 통제에 거주자 / 지역 사회의 참여를 증대한다.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푸드시스템 구축**

먹거리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먹거리 생산 및 분배를 개선하는 정책

- 도시의 식량 생산 및 유통 인프라를 개선한다. **TOP 10**
- 도시 농업 및 커뮤니티 정원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시행한다. **TOP 10**
-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홍보를 통한 식품 사업이나 농민의 장벽을 줄여 수익성을 증가시킨다. **TOP 10**
- 경제 및 지역 사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 권장 사항을 시행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

음식을 쓰레기와 음식물 오염 및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역의 농경지를 보호하는 정책

- 지역 및 지역 식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한다. **TOP 10**
- 도시 농업 및 커뮤니티 정원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시행한다. **TOP 10**
-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홍보를 통한 식품 사업이나 농민의 장벽을 줄여 수익성을 증가시킨다. **TOP 10**
- 경제 및 지역 사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 권장 사항을 시행한다.

**식품 노동자 지원**

식품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과 복리 후생, 안전한 노동 조건 및 권한을 제공하는 정책

- 식품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만든다.
- 식품 노동자를 위한 급여 및 혜택을 개선한다.
- 식품 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한다.
- 식품 근로자를 지원하는 기타 권장 사항을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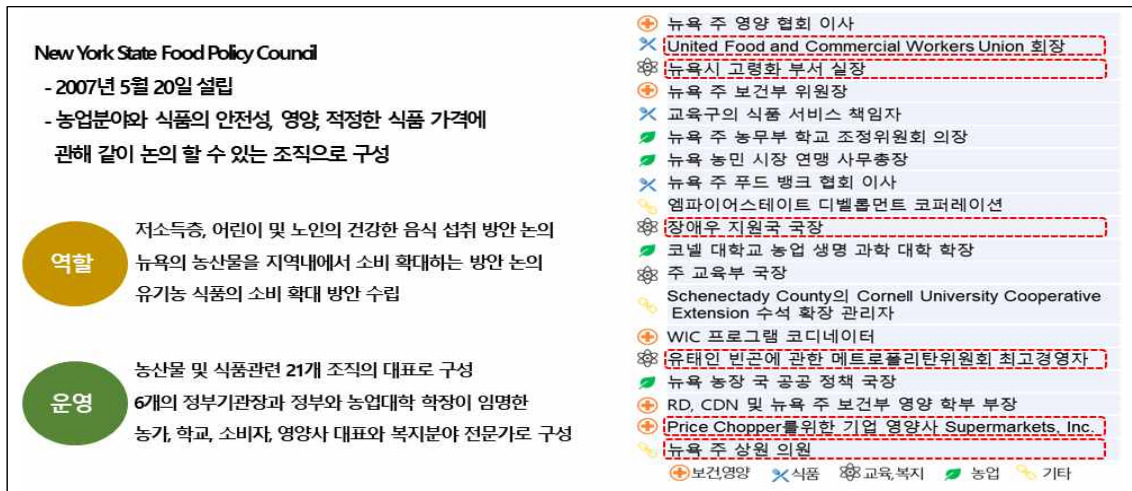
자료 : 뉴욕시의회, Food Works (2010)

57

## ■ 뉴욕시의 푸드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푸드위원회는 농산물 및 식품 관련 21개 조직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정부기관장과 정부와 농업대학 학장이 임명한 농가, 학교, 소비자, 영양사 대표와 복지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음
- 주요 역할은 1>저소득층, 어린이 및 노인의 건강한 음식 섭취 개선방향 2>뉴욕시의 농산물을 지역내에서 소비 확대하는 방안 3>유기농 식품의 소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함

〈그림 II - 36〉 뉴욕시 푸드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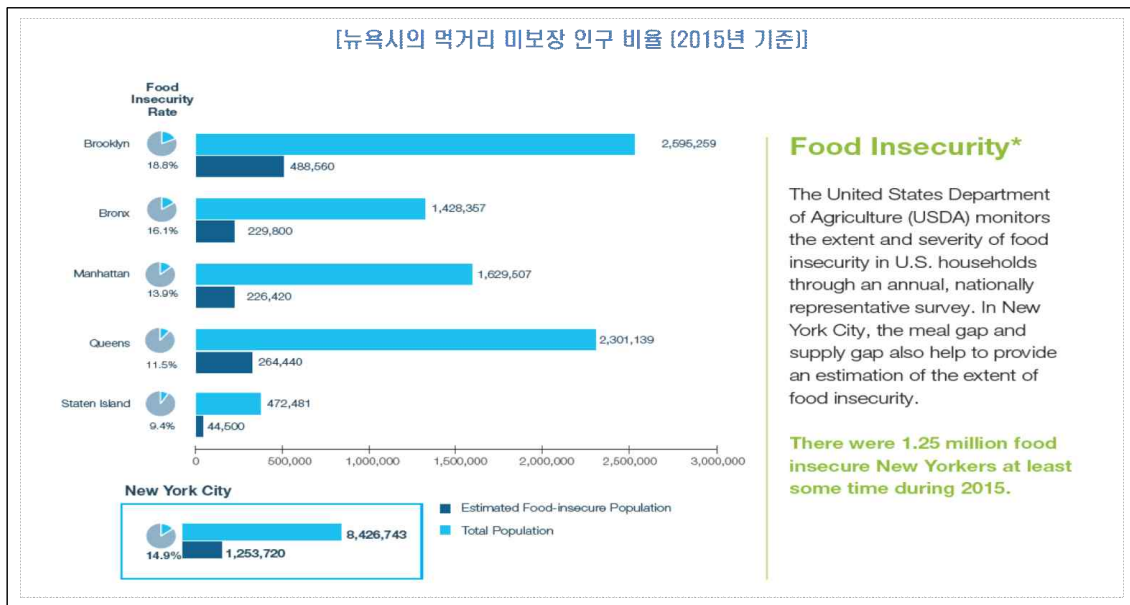
## ■ 시 조례에 따라 주기적 모니터링 결과 발표

- 뉴욕시의 Food Metrics Report : Local Law 52에 따라 먹거리정책관련 19개 지표 발표

〈그림 II - 37〉 뉴욕시의 Food Metrics Repor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참여농가의 숫자, 면적, 생산유형, 연간 도시로부터 지원받는 금액</li> <li>② 교육부의 농림부의 원산지 요구와 관련된 지출 비용 : 원산지 관련 분류, 원산지가 여러 곳인 농산물의 지출액은 분리해서 보고</li> <li>③ 평방피트 단위로 정렬된 시가 소유하는 지역 garden의 위치와 먹거리 생산에 관여하는지 여부</li> <li>④ 기업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는 식품 제조업체의 수와 그러한 식품 제조업체별 지출금액</li> <li>⑤ Hunts Point(도매시장)로 먹거리 운반을 목적으로 다녀가는 트럭과 철도 숫자</li> <li>⑥ 1인당 먹거리 저장공간의 양과 지난 5년간 개입한 식품가게의 숫자</li> <li>⑦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혜택을 받는 식료품 가게와 직원의 숫자</li> <li>⑧ 보건부에서 관리하는 건강한 Bodega 계획에 참여하는 기관의 숫자</li> <li>⑨ 중소기업관련 부서에 의해 운영되는 직무교육 프로그램의 숫자</li> <li>⑩ 공공학교 등에 국한되지 않고 시에서 제공하는 총 식사의 숫자(자동판매기 판매분 제외)</li> <li>⑪ 2008년 9월 19일 행정명령번호 1022에 따라 분류된 먹거리를 구입하거나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관련 기관의 숫자(자동판매기 판매분 제외)</li> <li>⑫ 교육관련 부서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에 위치한 자동판매기로부터 얻는 연간 수익과 양</li> <li>⑬ 농림부가 관리하는 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의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의 인구 숫자</li> <li>⑭ 인적자원 부서의 SNAP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지출내역 및 금액</li> <li>⑮ 건강관련부서와 인적자원 부서에 의해 관리되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에 지출된 내역 및 금액</li> <li>⑯ 건강관련 부서와 병원협회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과 학교의 샐러드바(식당)의 숫자</li> <li>⑰ 시에서 수돗물 이외의 물을 구입한 양</li> <li>⑱ 허가 신청자 수, 발급된 허가의 수, 이용 가능한 인원의 수, 대기자 명단에 있는 사람의 수, 그린카트에 발급된 위반의 수와 카드의 위치 등 보건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린카드 계획에 관한 정보</li> <li>⑲ 시 또는 하위 단체의 환경관련 의회에서 운영하는 그린마켓, 농부들의 시장, 유사한 시장에 공급하는 업체의 숫자와 평균 숫자</li> </ol>
--





자료 : Food Metrics Report, 2017, 뉴욕시 푸드위원회

### ③ 캐나다 토론토시

#### ■ 2010년 ‘Toronto Food Strategy : Cultivating Food Connections’ 발표

- 캐나다의 토론토시는 먹거리정책 전반에 자문과 방향설정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1991년에 세계 최초로 설립하고, 2001년 토론토 푸드헌장을 채택하였으며, 2007년에는 토론토 식품현황 보고서 발표함. 세계적으로 먹거리정책을 선도하고 있음
- 2008년 시 의회는 먹거리정책 위원회의 ‘토론토 먹거리 전략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으며, 그 결과로 2010년에 Toronto Food Strategy를 발표함. 이 전략은 토론토 먹거리 전략은 인간과 환경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푸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함
  - (주요관점) 대량생산체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건강에 기반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탄력성(resilience), 형평성, 지속가능성 실현하는데 초점을 둠
  - (푸드헌장과 푸드전략의 관계) 푸드헌장은 토론토 먹거리 전략의 기본정신이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함
  - (주요내용) 6개 분야 29개 과제로 구성됨
    - \* 식품친화적 지역공동체 지원 : 파머스마켓, 커뮤니티키친, 도시농업 등
    - \* 식품을 녹색경제의 핵심으로 : 소규모 식품기업 창업, 사회적기업 지원 등
    - \* 빈곤 퇴치 : 저소득층의 소득과 식량안보 보장, 커뮤니티 푸드센터 설치 등
    - \* 식품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연결 : 로컬푸드 공공조달, 로컬푸드 급식 등

- \* 식품 관련 스킬과 정보 제공 : 학생영양 프로그램, 먹거리교육, 토양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이민자 적응 프로그램 등
- \* 연방 및 주정부의 건강에 기반한 푸드정책 추진 촉구
- (대표프로그램) 학생영양지원, 정보시스템, 공공조달시스템, 창업지원, 도시농업, 파머스마켓, 직업교육 등
  - \* 학생영양 프로그램 : 시정부 지원으로 청소년에 아침, 간식, 점심 급식 지원. FoodShare가 주 공급기관. 350개 학교 16만명 수혜
  - \* Food by Ward : 푸드뱅크, 커뮤니티키친 등 식품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위치정보시스템
  - \* Procurement (조달) : (예시) 푸드뱅크, 보호소 등이 필요한 물품을 도매가로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 운영(Food Reach)
  - \* Processing (가공) : (예시) 소규모 창업지원을 위한 사무실 및 가공조리시설 운영 (Food Starter)
  - \* Urban Agriculture : 커뮤니티가든 등 저소득층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 외에도 교육훈련의 장으로 활용
  - \* Farmer's Market
  - \* Job Training : (예시) 집주인과 이민자를 매칭하여 이민자가 정원의 과실수를 돌보는 프로그램(Fruit Tree Care).
- (거버넌스) 전략실행을 위하여 푸드전략팀 외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별도의 공식적인 행정부서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음.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는 별도로 없음
- (기 타) 밀라노 세계푸드정책협약 참여, 2017년 'Community Food Works' 프로그램으로 밀라노 사무국으로부터 올해의 우수도시 선정
- 토론토시의 먹거리전략은 농업생산이 미약한 지역으로 주로 시민의 건강과 환경, 지역공동체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농업생산이 강한 지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참고] 먹거리와 타분야 정책간 연계 요소

- Food & Health 분야 : 공공보건, 산모-육아, 질병-영양, 기관-협회, 식품-교육
- Food & Community 분야 : 공공보건, 어린이서비스
- Food & Jobs 분야 : 경제-문화, 고용-복지
- Food & Housing 분야 : 쉼터지원, 주택관리, 적정주택
- Food & Poverty 분야 : 사회발전금융
- Food & Land 분야 : 시립면허, 도시계획
- Food as Public Good 분야 : 파크너쉽, 관리, 협업
- Food Environment 분야 : 환경에너지, 수자원, 공원휴양, 폐기물

<그림 II - 38> 토론토시의 먹거리전략(2010)의 목표와 주요 내용

기존 푸드시스템	초기 푸드 시스템(2010 TFS)	이상적 푸드 시스템(2018 TFS)
대량 생산체제	<b>건강 우선</b>	<b>건강과 환경 우선</b>
도시에서 음식은 산업분야로 미인정 받아들임	음식이 도시의 목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	음식을 도시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
저렴한 화학연료에 기반해 관련 산업 운영	농산물 생산, 가공, 분배에서 환경보호가 초석이 됨	지속가능한 식생활, 생태학적 공중보건이 푸드시스템에 적용
식품점의 위치가 시장세력에 의해 결정되어 있음	시민의 음식접근성을 염두한 계획	주민의 식량접근성, 경제력, 회복력을 염두한 개발
식품 가격에 영양적 이득이 반영되지 않음	가격보다 건강을 고려한 식품선택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식품 선택

Food & Health 분야	Food & community 분야	Food & Jobs 분야	Food & Housing 분야	Food & Land 분야	Food & Poverty 분야	Food as Public Good 분야	Food Environment 분야
<p><b>주거지역 활성화</b> 청량음료의 설탕 지표 푸드 취약점 평가 어류와 수산물에 대한 가이드 갱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 음식 폐기물 감소 아이를 대상 마케팅 중지</p> <p><b>푸드 혁신 연구소</b> 음식 Ward Mapping 식품 업체들의 커뮤니티(신규진입자 별도) 사회적 슈퍼마켓 점심 제공, Foodreach, CEED Gardens 커뮤니티 가든, 도시농업 지표, Food share 토론토 청소년 푸드정책 협의회 Golden horseshoe 식품 및 농업 연맹</p>	<p><b>공공 보건</b> 토론토 주민 건강 전략을 위한 TPH 이행 계획 식량 보장 커뮤니티</p> <p><b>어린이 서비스</b> 커뮤니티 가든 조기학습 보육 영양 교육</p>	<p><b>경제 문화</b> 식품 및 음료 분야 전문가 신규 구매자의 사명 <b>Food Starter</b></p> <p><b>고용 복지</b> 식품 업체 고객을 위한 식품 스킬 훈련 Metro Hall YMCA 교육 파트너십 직업 동기 부여 프로그램</p>	<p><b>쉼터 지원</b> 쉼터를 위한 영양 표준 <b>Creating Health Plus</b>(노숙자 음식지원)</p> <p><b>주택 관리</b> 로컬푸드의 제도적 구매 장기지도 지도자</p> <p><b>적정 주택</b> 커뮤니티 가든</p>	<p><b>시립 면허</b> <b>Urban hens TO Pilot</b> 프로그램 - 도시 사육 암탉 등록제</p> <p><b>도시 계획</b> 녹색지붕 조례</p>	<p><b>사회 발전 금융</b> TO 확대 타워 리뉴얼 프로그램 주거용아파트, 상업구역 설정 토론토 농업 프로그램 토론토 건강한 주민 전략 2020</p>	<p><b>파트너십 관리</b> 도시 식량정책 프로젝트 UTS</p> <p><b>협업</b> 긴급상황에 대비한 식량 탄력적인 식품 전략</p>	<p><b>환경 에너지</b> 살아있는 푸른색 - "식량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p> <p><b>수 자원</b> 식품 가공업자를 위한 에너지 효율 워크샵</p> <p><b>공원 휴양</b> 커뮤니티별 정원 할당 수분조절제 전략 건강한 자판기</p>
<p>아기들을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 임신을 위한 육아블로그 조기교육 및 어린이 영양체계 발전 건강한 음식 종류 산후 프로그램 모유수유 클리닉 육아프로그램 가정에 대한 지원</p> <p>토론토 내 음식 재고 관리 외교적 사건에 의한 식품안전 건강한 메뉴 선택 및 검사 수행 전쟁 상황에 대응한 비상식량 식품 취약자 인종 교육 커뮤니티 그룹 대상 식품안전 및 영양 프로그램 안전한 가정음식 캠페인 식품 리콜에 대한 반응 식품안전 연구 프로젝트</p>	<p>건강한 식습관 프로그램 개발단체 육성 식품 이해력 및 기술 프로그램 당뇨병 방지 전략 학생 영양 프로그램 <b>Nutritious food Basket</b>(영양박스) 커뮤니티 가든 <b>InTokids</b> 건강 <b>Sip smart</b>(똑똑한 한모금)</p>	<p>토론토 내 음식 재고 관리 외교적 사건에 의한 식품안전 건강한 메뉴 선택 및 검사 수행 전쟁 상황에 대응한 비상식량 식품 취약자 인종 교육 커뮤니티 그룹 대상 식품안전 및 영양 프로그램 안전한 가정음식 캠페인 식품 리콜에 대한 반응 식품안전 연구 프로젝트</p>	<p>토론토 내 음식 재고 관리 외교적 사건에 의한 식품안전 건강한 메뉴 선택 및 검사 수행 전쟁 상황에 대응한 비상식량 식품 취약자 인종 교육 커뮤니티 그룹 대상 식품안전 및 영양 프로그램 안전한 가정음식 캠페인 식품 리콜에 대한 반응 식품안전 연구 프로젝트</p>	<p>토론토 내 음식 재고 관리 외교적 사건에 의한 식품안전 건강한 메뉴 선택 및 검사 수행 전쟁 상황에 대응한 비상식량 식품 취약자 인종 교육 커뮤니티 그룹 대상 식품안전 및 영양 프로그램 안전한 가정음식 캠페인 식품 리콜에 대한 반응 식품안전 연구 프로젝트</p>	<p>토론토 내 음식 재고 관리 외교적 사건에 의한 식품안전 건강한 메뉴 선택 및 검사 수행 전쟁 상황에 대응한 비상식량 식품 취약자 인종 교육 커뮤니티 그룹 대상 식품안전 및 영양 프로그램 안전한 가정음식 캠페인 식품 리콜에 대한 반응 식품안전 연구 프로젝트</p>	<p>토론토 내 음식 재고 관리 외교적 사건에 의한 식품안전 건강한 메뉴 선택 및 검사 수행 전쟁 상황에 대응한 비상식량 식품 취약자 인종 교육 커뮤니티 그룹 대상 식품안전 및 영양 프로그램 안전한 가정음식 캠페인 식품 리콜에 대한 반응 식품안전 연구 프로젝트</p>	

자료 : 토론토 푸드위원회(<http://tfpc.to>)

## ■ 토론토 먹거리위원회 구성과 활동

- 공중보건, 보건위원회, 시의원, 시민대표 등 약 3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민간분야(전문가, 활동가, 기관) 참여가 많으며, 미래세대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동일한 구성 및 역할의 청년 먹거리 정책 협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주요 역할은 토론토 먹거리 정책과 전략에 대한 자문임
  - 도시농업 액션플랜, 토론토 지역 농업실행위원회(GTA AAC) 활동, Greater Golden Horseshoe 농장 및 먹거리 계획 수립 참여, 토론토 청년 먹거리정책 협회 운영 지원, 캐나다 국내 푸드정책 조사 실시, 빈곤지역 채소공급사업인 'Feeding diversity' 프로젝트 실시, 로컬푸드 활동, Ontario 식품 및 영양 전략 지지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그림 II - 39〉 토론토시 푸드위원회 구성

Toronto Food Policy Council 주요 활동	
<b>토론토 식품전략 자문</b> - Toronto Public Health의 Food Strategy 팀과 긴밀히 협력 - 부서간의 연계를 추진하고, Food Strategy팀의 전략실행에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o-ethnomia Inc의 평균 컨설턴트</li> <li>• Neighborhood Initiatives (NIA)</li> <li>• 풀뿌리 조직 및 공동체 개발공간 지지자(Peachtree)</li> <li>• 토론토 커뮤니티 하우스링 (Toronto Community Housing)의 자활 및 경신 커뮤니티 매니저</li> <li>• Hypenetic의 설립자이자 코디네이터</li> <li>• 세계 문화 분야의 캐나다 연구 위원장, 토론토 대학의 Culinary 연구 센터 소장</li> <li>• 건강 및 식품 시스템 컨설턴트</li> <li>• 농업 공학 박사, Hara는 학술 연구 및 요리와 농업 논문에서 근무</li> <li>• 토론토 대학의 사회학 교수</li> <li>• 시장 조사자, 인문 조리학</li> <li>• 토론토 청년 식물 정책 협의회 부의장</li> <li>• 토론토 청소년 식물 정책 협의회 부의장</li> <li>• 식물의학 전문가</li> <li>• 건강 사회적 의정이며 이천 요리 시티스와 토론토시의 사회적 의원</li> <li>• Pearson University의 식물 안전 연구 센터의 부의장이자 토론토 도시 지배자의 공물 집행자</li> <li>• 북작업식 인문 레스토랑 요리사(공공운영자)</li> <li>• United Way Toronto &amp; York Region과 함께 매니저</li> <li>• FoodShare Toronto의 코디네이터 디렉터</li> <li>• Second Harvest(식량구호 단체)의 지역 사회 관계 매니저</li> <li>• 캐나다 음식에 초점을 맞춘 레스토랑을 가업 한 후수 기업 주</li> <li>• 토론토시 권역에서 선조적 인식회 활동가</li> <li>• 도매 및 소매업에 대한 심층적 인 영향을 가진 사업가</li> <li>• Public Engagement and Food &amp;의 매니저</li> <li>• 토론토 시민들 / Golden Horseshoe Food and Family Alliance의 토론토시 대표</li> <li>• 공공성의 집안주의 활동가</li> <li>• 토론토 청소년 식물 정책위원회 (Toronto Youth Food Policy Council) 의장</li> <li>• 식물 유류 회사 인 100km Foods Inc의 설립자이자 소유자</li> <li>• Stop Community Food Center의 전무 이사</li> <li>• 토론토의 Daily Bread Food Bank의 연구 및 커뮤니티개발 담당 이사</li> <li>• North York Harvest Food Bank의 전무 이사</li> <li>• Thorncliffe Park 여성위원회 위원장</li> <li>• Green Thumbs의 집행자</li> <li>• Bendak 커뮤니티 건강 센터에서 건강한 어린이 커뮤니티 매니저</li> <li>• Social Housing 식물 구매 담당자</li> <li>• 토론토시 공공 보건부의 토론토 식물 전략 및 건강 정책 전문가</li> <li>• Lori Stahlbrand Toronto Food Policy Council에 대한 행정 간사</li> </ul>
<b>도시농업 액션플랜</b> - 도시농업 육성에 참여(시의회 2012.11.27 액션플랜 승인) - 시와 도시농업 공동체간의 연계 및 계획 실행 지원	
<b>토론토 지역 농업실행위원회(GTA AAC) 활동 참여</b> - TFPC에서 농업문제 조절 기능을 GTA에 제공 - 정보 공유 및 민-관의 소통창구 역할 수행	
<b>Greater Golden Horseshoe 농장 및 먹거리계획 수립 참여</b> - TFPC, GTA CCC 등 협회가 함께 GGH 농장 및 식량계획 수립 - GGH 농장 및 식량계획은 시의회에서 12년 4월 승인	
<b>토론토 청년 먹거리정책 협회 운영 지원</b>	
<b>캐나다 국내 푸드정책 조사 실시 (York 대학, 밴쿠버 FPC 공동)</b>	
<b>'Feeding diversity' 프로젝트 실시 (빈곤지역 채소공급사업)</b>	
<b>로컬푸드 활동</b>	
<b>Ontario 식품 및 영양 전략 지지</b>	

### ※ [참고] 토론토 청년푸드정책위원회

- 2009년 푸드정책에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설립. 현재 4개의 소위원회에서 15명이 활동 중이며 200여 청년공동체와 연대
- (주요 활동) 네트워킹, 교육, 정책참여
  - \* 네트워킹 : 다양한 소모임과 온라인 활동 등을 통해 청년층을 조직화
  - \* 교육 : 푸드정책 관련 이슈에 대한 저널 발행, 어린이용 교육자료 발간, 워크숍 개최 등
  - \* 정책참여 : 토론토 푸드정책위원회 참여(2명 당연직), 국민청원 운동 등을 통해 행정, 의회 등에 적극적인 의견개진
- 토론토시 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도시와도 활발한 교류 및 정책연대 추진
- 연간 예산은 17천달러 규모로 운영. 토론토 푸드정책위원회로부터 일부 보조



#### ④ 캐나다 밴쿠버시

##### ■ 2013년 밴쿠버 먹거리전략 2020 발표 : 'What feeds us?'

- 밴쿠버시는 2004년 푸드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푸드위원회는 2007년 먹거리 헌장을 발표함. 시의회는 2013년에 '밴쿠버시 먹거리 전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함
- 밴쿠버 먹거리전략의 특징은 '건강도시 전략'과 '녹색도시 전략' 등의 도시종합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공동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임

##### ■ 밴쿠버 먹거리전략 2020 목표

- (목표1) 식품 친화적 지역 지향 : 식품관련 기반시설 확충, 로컬푸드시스템 지원
- (목표2) 주민의 로컬푸드 수행 역량 강화 : 로컬푸드시스템 교육 확대, 푸드시스템 문제 논의 활성화, 푸드위원회와 연계된 거버넌스 조직 육성, 정보접근 및 이용 확대
- (목표3) 주민의 로컬푸드 접근성 향상 : 먹거리 보장성 향상, 생태보호, 지역커뮤니티 육성, 공동체 식량저장, 이동식 건강식품 판매, 건강코너 운영
- (목표4) 푸드중심 녹색경영 활성화 : 식품관련 녹색일자리 창출, 식품사업 인큐베이터, 푸드허브 구축, 푸드마일리지 축소, 녹색경제 참여기업의 사회적기업 모델 지원 등
- (목표5) 민관 참여를 통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육성 : 행정의 식품문제 홍보 강화, 보건·영양·교육·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 2020년 주요 달성목표 : ①지역 사회 정원은 3,540명에서 5,000명으로 증원 ②도시 농장은 17개에서 35개로 증대 ③파머스마켓은 9개에서 22개로 확대 ④지역 식료품 시장 4개에서 15개로 확대

##### ■ 먹거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먹거리위원회는 식품시스템 분야 전문가 14명(생산,가공,유통,소매,폐기물 등), 대규모 단체 대표 7명 등 의결권을 보유한 위원은 21명 이내로 구성됨
  - 임기 2년이며, 1년간 최소 4번~6번의 위원회를 개최함
  - 회의 최소 정원수는 11명임
  - 의결권이 없는 협의회 회원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함
- 먹거리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1>의회와 시청에 푸드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의견 제시 2>정책 협의회에 회부 될 수 있는 사항 논의 3>다른 주정부 및 부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밴쿠버 식품전략 담당부서에 자문 등임

<그림 II - 40> 밴쿠버시의 먹거리전략 2020(2013)의 목표와 주요 내용

■ 목표1. 식품 친화적 지역 지향

정책 대상: 주민

- 식품관련 물리적자산과 기반시설을 강화
- 로컬푸드 시스템 지원: 커뮤니티 가든, 과수원, 식당, 파머스 마켓, 커뮤니티 푸드마켓, 식품저장시설, 퇴비화시설, 건강코너상가 등 만남의 장 육성



■ 목표2. 주민의 로컬푸드 수행 역량 강화

정책 대상: 주민

- 로컬푸드시스템 이해교육 및 참여확대
- 푸드시스템 문제 논의 커뮤니티 구성
- 소통에 기반한 푸드 프로그램, 시민네트워크 등 밴쿠버 푸드위원회와 연계된 거버넌스 조직 육성
- 정보접근 및 이용 확대, 시정과 규정에 대한 정보공유

■ 목표3. 주민의 로컬푸드 접근성 향상

정책 대상: 주민, 도시전체

- 모든사람의 먹거리 보장성 향상
- 식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 생태보호, 지역커뮤니티 육성
- 사회 취약가구의 우수 먹거리 보장 확대
- 공동체 식량저장, 이동식 건강식품 판매, 건강코너 운영



■ 목표4. 밴쿠버 녹색경영 푸드 중심으로 육성

정책 대상: 도시전체, 지역

- 식품관련 녹색일자리 창출, 관련 인프라 구축
- 식품사업 인큐베이터, 푸드허브 구축
- Good food box, 파머스마켓, 노점상, 도시농민 등 육성으로 음식 이동거리 축소
- 녹색경제 참여 기업의 사회적 기업모델 지원

■ 목표5. 민-관 참여를 통한 정의를롭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육성

정책 대상: 지역, 주(州), 그 이상

- 가정, 주민, 도시 등 다양한 구성원과 권역에서의 자원을 이용한 지속가능성 확보
- 행정의 식품문제 홍보하고, 보건, 영양, 교육,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차원의 외부 파트너십 강화
- 캐나다 서남부 농장과 농가 대상 역량강화 정책 지원

■ 밴쿠버 2020 지역농산물 소비확대 목표

- ▲ 지역 사회 정원은 3,640명에서 5,000명으로 증원
- ▲ 도시 농장은 17개에서 35개로 증대
- ▲ 파머스마켓은 9개에서 22개로 확대
- ▲ 지역 식료품 시장 4개에서 15개로 확대



자료 : 밴쿠버시 먹거리전략(2013)

〈그림 II - 41〉 밴쿠버시 푸드위원회 구성과 운영

<p><b>Vancouver Food Policy Council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21명(의결권보유)의 위원으로 구성</li> <li>- 식품시스템 분야 전문가 14명(생산,가공,유통,소매, 폐기물 등)</li> <li>- 대규모단체 대표 7명</li> <li>- 임기 2년, 회의 성원 최소 수는 11명임</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권이 없는 협의회 회원 참여 기회 제공</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4번~6번의 회의를 1년 동안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EC 학교 텃밭 프로그램 회원</li> <li>✕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 및 uac 농장 센터 - 운영 이사</li> <li>☞ 지방 농업위원회 위원, 토지이용플래너</li> <li>☞ 그레이더 밴쿠버 푸드뱅크, 식품허브 전문가</li> <li>✕ Net Zero Waste, 소규모 식품 가공 업체 협회</li> <li>☞ Cultivation Healthy Places 설립자</li> <li>☞ 후아 재단(환경보전, 지속가능성 관련 비영리법인), 전무 이사</li> <li>☞ Cedar Cottage Neighborhood House 디렉터</li> <li>✕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 교육학과 (대학원생)</li> <li>✕ Zero Waste Market(포장재 없는 식료품점)의 설립</li> <li>✕ 디스커버리 오가닉 (Discovery Organics) 구매관리자</li> <li>☞ UBC 식물원 (지속 가능 경영 및 지역 사회 프로그램 준회원)</li> <li>☞ Mesh Food Exchange, RePlan의 공동 설립자</li> <li>☞ 유연 협회 캐나다 지부</li> <li>☞ 나는 도시 농업 실무 그룹 회장</li> <li>✕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이그저큐티브 세프</li> <li>✕ BC주 농민 시장 협회 회원</li> <li>☞ Vancouver Coastal Health의 선임 프로젝트 관리자</li> </ul>
<p><b>Vancouver Food Policy Council 역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의회 및 직원에게 푸드시스템에 대한 우려 및 의견 제시</li> <li>- 정책 협의회에 회부 될 수 있는 사항 논의</li> <li>- 다른 주정부 및 부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li> <li>- 밴쿠버 식품전략 담당부서에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의회, 시직원</li> <li>☞ 공원위원회 및 직원</li> <li>☞ 밴쿠버 교육위원회 관리위원</li> <li>☞ 밴쿠버 연안 건강지역 대표</li> <li>☞ BC주 농업부 지역 대표</li> </ul> <p>☞ 보건영양 ✕ 식품 ☞ 교육,복지 ☞ 농업 ☞ 기타</p>

⑤ 파리의 Sustainable Food Plan 2015-2020<sup>13)</sup>

■ 2015년 Sustainable Food Plan 2015-2020 발표

- 파리시는 2009년부터 지자체 식품조달 서비스(municipal catering service)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개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 2020년까지 지자체 먹거리 조달 서비스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50%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Sustainable Food Plan’을 발표함
  - 정책목표는 지역 농산물, 지역 제철식품, 레드 라벨(지속가능한 어업 인증)을 부착한 식품 도입을 측정하는 지표와 연결됨
  - 정책목표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역할을 환경적 역할, 경제적 역할, 사회적 역할로 구분하였고, 세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어 각 영역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함
  - 정책 대상은 파리시가 관리하는 모든 시립 레스토랑이며 학교급식, 유아시설 급식 등을 포함함(Mairie de Paris, 2015)
- 실천계획은 모두 18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계획별로 목표, 내용, 잠재적 목표대상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13) 윤지현 외(2018)의 p127~128.

〈표 II – 15〉 Sustainable Food Plan의 실천 계획

영역	실천 계획
지자체 식품조달 서비스의 수요를 통합 및 구조화	Action 1: 단체 주문의 시도
	Action 2: 모범 사례 책자의 제작
	Action 3: 지속가능한 주요리에 대한 책자 제작
	Action 4: 식사의 전반적인 비용에 대한 이해 향상
	Action 5: 지자체 식품조달 서비스의 배달 지점 수 줄이기
	Action 6: 물류 관리의 환경적 조항 및 기준 제시
	Action 7: 지자체 식품조달 서비스의 탄소배출량 평가 업데이트
	Action 8: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권장사항 실행
지자체 식품조달 서비스를 위한 지속가능한 현지 식품 공급망개발 지원	Action 9: 식품의 원산지 인증 개선
	Action 10: 수요와 공급 사이의 체계적 접점 연구 및 수립
	Action 11: 파리의 수도공기업(Eau de Paris) 유역에서 유기농법 확장
	Action 12: Bio Ele-de-France 협력 조합 회원의 편익과 타당성 평가
토론, 의사소통, 직원교육	Action 13: 현지의 유기농 및 방목한 닭의 달걀 제품 공급망 구축 참여
	Action 14: 지자체 식품조달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식품의 인증 혜택 평가
	Action 15: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종합적인 훈련프로그램 수립
	Action 16: 거래 중점 그룹(trade focus group) 설립
	Action 17: 학교기금(Caisses des Ecoles) 클럽 설립
	Action 18: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의사소통 표준화 제안

출처: Mairie de Paris(2015). 2015-2020 Sustainable Food Plan

## ⑥ 기타 해외사례

### ■ 북유럽 국가 연합

- 먹거리정책은 북유럽 5개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6가지 정책 가운데 한가지임
- 2018년 북유럽식량정책연구소에 지속가능한 식량 정책에 대한 가이드북 'Solutions Menu'를 발표함
- Solutions Menu는 5개 분야 24가지 정책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식품 정책에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됨
- 영양, 음식문화, 지속가능한 식단, 대중음식 및 식사, 음식물쓰레기 5개 분야에 대해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분야별로 시행해야 하는 필요성, 목표, 참여대상 등을 정리해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정리하여 제공함

〈그림 II - 42〉 북유럽 국가 연합의 Solution menu(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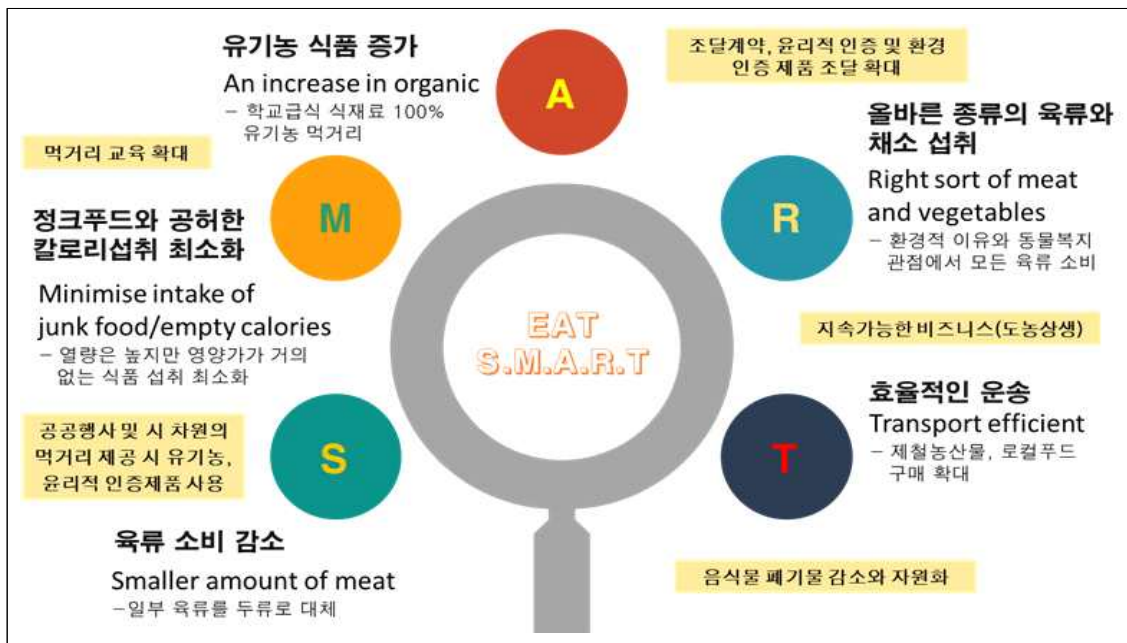
연번	주제	연번	주제
#1	북유럽 영양 권고 (NNR)	#13	북유럽 이니셔티브
#2	북유럽 행동 계획 및 북유럽 모니터링 시스템	#14	음식물 쓰레기 전략
#3	열쇠 구멍 레이블 (푸드피라미드)	#15	음식물 쓰레기 네트워크
#4	소금 파트너십 및 소금 표시	#16	보편적인 학교 급식 프로그램
#5	전체 곡물 파트너십	#17	유기농 식품의 공공 조달
#6	식사 이니셔티브	#18	공공식품 분야에서의 유기농전략
#7	영양 약속	#19	공공 급식 모델
#8	어린이 식품 마케팅 모니터링	#20	The Danish Meal Label
#9	새로운 북유럽 식품	#21	병원 식사
#10	국가의 음식 전략	#22	식생활 지침
#11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식량 문화강화	#23	기후 스마트 모델
#12	지방 당국의 식품 문화 전략	#24	핀란드 기후 프로그램

## ■ 스웨덴 말뫼시의 먹거리 정책

- 목표 : 지속가능한 발전과 먹거리 정책 추진
  - 시민 건강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말뫼 건설에 기여함
  - 먹거리의 매력 증가를 위해 시의 여러 기능에서 먹거리의 중요성을 강화함
  - 시 내에서 지속가능한 구매가 100퍼센트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
  - 시가 공식적으로 먹거리를 제공할 때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만을 제공함
- 먹거리정책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의 의미
  - 경제적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으로는 폐기물을 줄이고, 조달 협약을 준수함
  - 사회적 지속가능성 :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질 좋으며, 윤리적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 생태적 지속가능성 : 먹거리 생산이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가급적 최소화함
- 말뫼시의 먹거리 정책 모델 “EAT SMART”
  - 육류 소비 감소(S) : 일부 육류를 두류로 대체
  - 정크푸드와 공허한 칼로리 섭취 최소화(M) :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가 거의 없는 식품 섭취 최소화
  - 유기농 식품 증가(A) : 학교급식 식재료 100% 유기농 먹거리
  - 올바른 종류의 육류와 채소 섭취(R) : 환경적 이유와 동물복지 관점에서 모든 육류 소비
  - 효율적인 운송(T) : 제철농산물, 로컬푸드 구매 확대



<그림 II - 43> 스웨덴 말뫼시의 먹거리정책 모델



자료 : 길청순 외(2019a)

■ 런던시의 푸드전략 2018

- 영국 런던은 2006년 ‘지속가능 건강먹거리 전략’을 발표하고 지난 10여년간 지속함. 2018년에 ‘Good’에 초점을 둔 푸드전략 2018년을 새롭게 발표함

<그림 II - 44> 런던시 푸드 2018



자료 : 길청순 외(2019a)

## ■ 일본의 먹거리 정책

- 중앙정부의 먹거리 종합계획 : 식(食)에 관한 미래 비전 (2010년)
  - ‘식에 관한 미래 비전’은 자급률 하락과 식료 생산을 유지하는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과소화,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정의 틀을 벗어나는 범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안전·안심 및 건강하고 풍요로운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됨
  - 비전은 1>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산어촌의 활성화 2>글로벌화에 대한 대응 3>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4>식의 안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에 초점을 두고 농림수산성 장관 직속의 대신관방이 중심이 되어 수립함
  - 비전에서 제시한 10대 정책은 ①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②식문화를 축으로 한 관광산업문화정책의 추진 ③농림수산식품의 수출촉진 ④교류를 축으로 한 농산어촌의 커뮤니티 재생 및 지역활성화 ⑤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도입 확대 ⑥농림수산분야가 보유한 환경보전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의료, 개호 ⑦복지와 식, 농의 연계, 모든 세대 ⑧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생애식교육사회”의 구축 ⑨식에 관한 장애비전의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의 전개 ⑩종합적인 식료안전보장의 확립임
  - ‘식에 관한 미래 비전’의 논의 결과를 보면, 부처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시된 정책이었으나, 타 부처와의 이해관계 조정에는 실패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함. 즉, 농림수산대신을 본부장으로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부처간 연계를 통해 국가 단위 먹거리 대책에 관심이 고조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범 부처단위의 정책 이행에는 이르지 못함

## ⑦ 미국 로커보어(LOCAVORE) 지표

### ■ 로커보어(Locavore) INDEX

- 미국은 먹거리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인 ‘Strolling of the heifers’ (2002년 설립)에서 매년 지역산 먹거리의 지역소비 활동 실적을 7개 영역에 걸쳐 집계하여 가중 평균한 순위 지표를 전체 52개 주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발표하고 있음
- 지역산 먹거리의 지역내 소비 지수 항목 :
  - ①인구 10만명당 파머스마켓수 ②인구 10만



〈그림 II- 45〉 Locavore Index 분포 (2018)

명당 CSA수 ③Farm to School 참여율 ④인구 1백만명당 식품허브 수 ⑤1인당 농산물 직판금액 ⑥1인당 USDA 로컬푸드 교부금 ⑦인구 1백만명 당 로컬푸드 구매 병원 수

\* Strolling of the heifers : 2002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자는 Orly Munzing(오를리 뮌징)임. 2005년 'Locavore' 이라는 명칭 개발함. 현재는 미국 전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전 식재료의 소비자 공급, 농장과 식품 산업의 혁신을 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버니샌더스 상원의원, 피터 웰치 의원, 필 스콧 버몬트주 지사 등이 명예회원으로 활동중임

<표 II - 16> 미국 Locavore INDEX에 따른 평가결과(2018)

Rank	State	인구(명)	파머스 마켓수(개소)	CSAs 수	농장에서 학교까지 참여율	식품 허브수	직판 총금액	USDA 로컬푸드 교부금	로컬푸드 병원 수
1	Vermont	623,657	92	152	83	7	\$27,430,000	\$919,030	14
2	Maine	1,335,907	98	155	79	2	\$24,793,000	\$1,596,895	23
3	Montana	1,050,493	70	44	40	2	\$9,423,000	\$2,376,032	4
4	Oregon	4,142,776	169	277	55	5	\$44,177,000	\$2,795,830	18
5	New Hampshire	1,342,795	96	105	77	1	\$20,321,000	\$657,850	21
6	Massachusetts	6,859,819	326	422	68	10	\$47,909,000	\$2,735,822	77
7	District of Columbia	693,972	58	8	77	1	not available	\$1,142,867	2
8	Hawaii	1,427,538	98	27	47	4	\$13,215,000	\$1,321,098	1
9	Wisconsin	5,795,483	308	311	49	2	\$46,949,000	\$2,416,000	29
10	Rhode Island	1,059,639	36	29	90	2	\$6,253,000	\$415,357	9
11	Washington	7,405,743	170	299	49	8	\$45,124,000	\$6,017,200	44
12	Idaho	1,716,943	64	75	45	1	\$8,523,000	\$1,864,080	2
13	Minnesota	5,576,606	196	201	51	5	\$33,573,000	\$2,594,495	8
14	West Virginia	1,815,857	93	39	82	4	\$10,950,000	\$1,151,169	1
15	Iowa	3,145,711	230	129	29	6	\$17,522,000	\$1,153,180	7
16	Michigan	9,962,311	342	321	43	10	\$58,793,000	\$2,677,295	58
17	South Dakota	869,666	40	28	31	2	\$4,349,000	\$556,457	1
18	Connecticut	3,588,184	155	139	70	2	\$30,439,000	\$965,504	12
19	North Dakota	755,393	66	21	31	0	\$1,936,000	\$2,575,013	0
20	Nebraska	1,920,076	103	35	29	1	\$8,360,000	\$1,104,687	8
21	Wyoming	579,315	48	12	31	0	\$3,018,000	\$396,061	1
22	Alaska	739,795	38	15	76	3	\$2,227,000	\$1,005,238	0
23	Pennsylvania	12,805,537	309	346	44	12	\$86,030,000	\$2,656,621	26
24	New Mexico	2,088,070	71	35	34	1	\$8,117,000	\$2,106,231	1
25	Delaware	961,939	37	11	60	0	\$4,302,000	\$537,544	0
26	South Carolina	5,024,369	136	66	52	1	\$27,375,000	\$1,532,310	5
27	California	39,536,653	760	411	55	14	\$169,915,000	\$24,190,082	135
28	New York	19,849,399	672	495	61	12	\$100,646,000	\$4,137,045	18
29	Maryland	6,052,177	163	166	68	8	\$28,038,000	\$599,257	28
30	Colorado	5,607,154	159	173	42	3	\$19,199,000	\$2,257,623	7
31	Kentucky	4,454,189	132	132	48	2	\$16,438,000	\$1,407,165	8
32	Virginia	8,470,020	261	226	57	12	\$41,728,000	\$1,481,312	25
33	Ohio	11,658,609	335	255	27	10	\$46,615,000	\$2,074,390	44
34	North Carolina	10,273,419	254	271	62	13	\$31,826,000	\$3,075,884	6
35	Arkansas	3,004,279	108	39	22	2	\$6,369,000	\$1,256,285	5
36	Indiana	6,666,818	193	160	31	3	\$26,900,000	\$1,227,377	3
37	Mississippi	2,984,100	82	27	50	4	\$4,284,000	\$1,947,087	0
38	Missouri	6,113,532	257	141	27	3	\$19,664,000	\$1,075,231	3
39	Kansas	2,913,123	119	62	33	1	\$8,957,000	\$563,479	0
40	Georgia	10,429,379	164	164	62	7	\$13,197,000	\$2,967,289	7
41	Tennessee	6,715,984	131	162	51	4	\$19,182,000	\$1,117,756	4
42	New Jersey	9,005,644	150	140	48	0	\$33,308,000	\$1,839,368	7
43	Illinois	12,802,023	338	209	24	7	\$33,009,000	\$1,827,509	33
44	Alabama	4,874,747	140	69	31	1	\$9,183,000	\$1,136,396	1
45	Utah	3,101,833	44	43	35	0	\$15,930,000	\$315,185	0
46	Oklahoma	3,930,864	73	33	21	2	\$7,640,000	\$901,637	3
47	Florida	20,984,400	261	120	45	5	\$19,049,000	\$5,306,359	35
48	Arizona	7,016,270	90	44	25	3	\$7,963,000	\$1,788,422	5
49	Puerto Rico	3,337,177	42	2	43	0	not available	\$597,690	0
50	Louisiana	4,684,333	83	21	33	3	\$7,452,000	\$562,015	0
51	Nevada	2,998,039	39	21	22	1	\$4,265,000	\$483,020	5
52	Texas	28,304,596	215	209	28	8	\$27,966,000	\$2,517,713	21



## 라. 국내외 동향 및 사례의 시사점

### ■ 푸드플랜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

- 서울시, 토론토, 파리 등 도시지역 푸드플랜은 주로 먹거리 보장과 건강에 초점을 두고 수립됨
  - 특히, 지속가능한 식생활로의 전환, 공공조달 기준의 개선,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함
- 이에 비해 버몬트주, 전주시 등은 지역생산·지역소비를 통한 순환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 추진함
  - 그러나 버몬트주는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친 넓은 범위의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로컬푸드의 지역소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로 전환을 위한 먹거리 공공성 강화와 로컬푸드 사용 확대, 건강한 식생활을 중시하는 정책에 더해서 음식물 쓰레기 저감, 저탄소 식생활의 확산, 먹거리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등의 실천과제들이 강조되고 있음

### ■ 수립과정에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거버넌스 활성화 정도에 따라 실행력 차이 발생

- 푸드플랜은 농업인 중심의 계획이라기 보다는 농업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략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수립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 여부에 따라 어젠다의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발생함
- 한편,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들이 공감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먹거리 실태 조사와 다양한 먹거리관련 주체들의 발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함
  - 버몬트, 뉴욕, 토론토 등의 사례를 보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지역의 먹거리 실태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를 통해 계획을 수립함
- 이 두 과정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계획의 실행과정이 좌우됨. 일부지역에서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일부의 사업 내용만으로 푸드플랜 추진되기도 함

### ■ 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민사회 중심의 캠페인 활동 진행

- 뉴욕 푸드 메트릭스, 캐나다 액션플랜, 버몬트 연례보고서 등 푸드플랜 수립 이후 주기적으로 계획 이행 수준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모니터링 주체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기도 하고, 버몬트에서는 비영리단체가 진행하기도 함
- 또한, 영양 및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캠페인, Bottom Up 방식의 제안과 민간기관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전문가 조직의 위원회 참여가 활발함

###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목표 및 활동 포함

- 대부분 미국 Locavore 지표처럼 지역농산물의 소비, 경제활성화 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음. 특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식품산업관련 일자리 창출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음
- 그 밖에도 대부분의 푸드플랜에서 전문 농산물 직매장 외에도 일반 식품점과 일반식당이나 외식업체에서도 지역농산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과 활동이 포함되어 있음

## 제 3 장

###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① 지역 푸드플랜 1차 인식조사 결과
- ② 지역 푸드플랜 2차 인식조사 결과
- ③ 요약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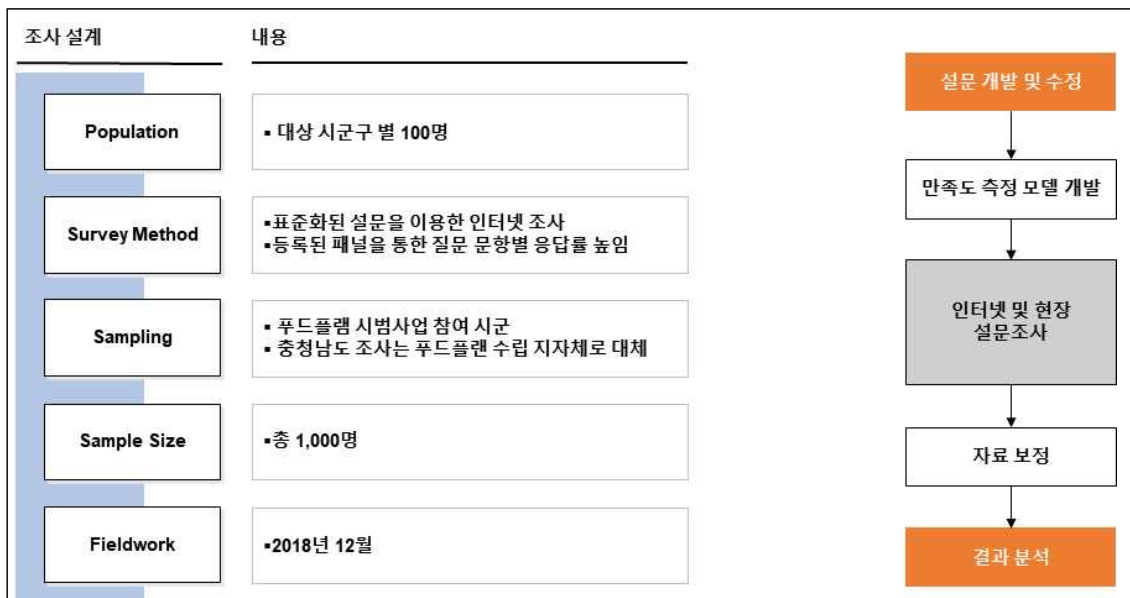
# 1. 지역 푸드플랜 1차 인식 조사 결과

## 가. 개요

### ■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조사 실시

- 조사 대상 : 지역 푸드플랜 시범사업 선정 시군 주민
  - 도시형 : 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 도농복합형 : 강원 춘천시,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 농촌형 : 충남 청양군, 전북 완주군, 전남 해남군
  - 광역형 : 충청남도(아산시, 홍성군 대체)
- 조사 방법
  - 지역별 100명씩 10개 지역에서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2018년 12월)
  - 전문 조사기관과 연계해 패널을 갖춘 지역은 인터넷 설문을 실시하고, 응답자 구성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 1:1 면담조사 실시
- 조사 내용
  - 먹거리 종합계획에 대한 인지도 조사
  - 먹거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수요 및 정책 우선순위 조사

〈그림 III- 1〉 대국민 1차 설문조사 개요



## 나. 응답자 특성

### ■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실시

- 2018년 12월 3주에 걸쳐 전문 온라인 조사기관을 통해 푸드플랜 인식조사 실시
- 응답자 구성
  - 총 응답자는 1,000명이며, 남성 42.5%, 여성 57.5%가 응답함
  - 조사 연령은 전국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령대별로 13.9%~23.5%로 구성되었으며, 40대 응답자가 전체의 23.5%로 가장 많음
  - 가구 구성원은 4인 가구 구성이 전체의 40.2%로 가장 많았으며, 1인가구는 9.8%로 나타남
  - 가구소득은 월 300~500만원이 40.3%로 가장 많았음

〈표 III - 1〉 일반국민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구성현황	
		사례수	%
■ 전체 ■		(1000)	100.0
성별	남성	(425)	42.5
	여성	(575)	57.5
연령	20대	(199)	19.9
	30대	(218)	21.8
	40대	(235)	23.5
	50대	(209)	20.9
	60대 이상	(139)	13.9
가구원 수	1인	(98)	9.8
	2인	(208)	20.8
	3인	(241)	24.1
	4인	(402)	40.2
	5인 이상	(51)	5.1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09)	10.9
	200~300만원 미만	(236)	23.6
	300~500만원 미만	(403)	40.3
	500~700만원 미만	(151)	15.1
	700만원 이상	(101)	10.1

주 1) 지역푸드플랜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및 충청남도 시군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주 2) (주)마크로빌 엠브레인 보유패널 대상 인터넷 설문 및 현장조사 실시

## 다. 설문조사 결과

### ■ 귀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구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일반소비자는 원산지 확인, 로컬푸드 구매가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방법이라고 응답함
  - 응답지역 중 완주와 나주는 로컬푸드 소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70%, 58%로 높아, 로컬푸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다고 확인됨

〈표 III- 2〉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구입을 위한 일반시민의 활동

단위 : %

구분	구매시 원산지 확인	지역 농산물 (로컬푸드) 구매	전통시장 이용	친환경 농산물 전문매장 이용	산지, 농가로부터 인터넷 직접 구매	직접 재배하여 생산	계	
전체	33.2	26.0	20.6	12.4	4.4	3.4	100.0	
지역	서울 서대문구	49.0	5.0	23.0	9.0	11.0	3.0	100.0
	대전 유성구	48.0	10.0	17.0	19.0	5.0	1.0	100.0
	강원 춘천시	37.0	34.0	9.0	13.0	3.0	4.0	100.0
	경북 상주시	39.0	8.0	35.0	9.0	4.0	5.0	100.0
	전남 나주시	1.0	58.0	31.0	9.0	0.0	1.0	100.0
	충남 아산시	32.0	28.0	16.0	12.0	9.0	3.0	100.0
	충남 청양군	25.0	20.0	24.0	17.0	4.0	10.0	100.0
	전북 완주군	0.0	70.0	13.0	7.0	5.0	5.0	100.0
	전남 해남군	32.0	20.0	30.0	14.0	3.0	1.0	100.0
충남 홍성군	69.0	7.0	8.0	15.0	0.0	1.0	100.0	
성별	남성	34.4	27.3	20.0	11.5	3.8	3.1	100.0
	여성	32.3	25.0	21.0	13.0	4.9	3.7	100.0
연령	20대	40.7	28.6	9.0	13.6	5.5	2.5	100.0
	30대	34.4	29.8	11.9	16.1	6.0	1.8	100.0
	40대	33.6	28.5	16.2	17.0	2.6	2.1	100.0
	50대	32.1	23.0	29.7	7.2	4.8	3.3	100.0
	60대 이상	21.6	16.5	44.6	5.0	2.9	9.4	100.0
가구 구성	1인	32.7	23.5	22.4	9.2	8.2	4.1	100.0
	2인	23.1	30.3	26.4	8.7	6.7	4.8	100.0
	3인	30.3	24.9	24.1	13.3	3.3	4.1	100.0
	4인	40.3	24.1	15.4	14.9	3.2	2.0	100.0
	5인 이상	33.3	33.3	17.6	9.8	2.0	3.9	100.0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26.6	21.1	27.5	9.2	7.3	8.3	100.0
	2~3백만원 미만	22.0	33.5	28.4	8.9	3.4	3.8	100.0
	3~5백만원 미만	40.2	22.6	17.6	13.2	3.7	2.7	100.0
	5~7백만원 미만	43.7	25.8	9.9	16.6	3.3	.7	100.0
	7백만원 이상	22.8	27.7	22.8	14.9	7.9	4.0	100.0

■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지역산)가 수입산이나 타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보다 신선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중 86.8%는 지역산이 타 농산물보다 신선 및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음
-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표 III- 3〉 지역농산물과 타지역 농산물간의 신선도 및 안전성 인식 비교

단위 : %

구분		예	아니오	계
전체		86.8	13.2	100.0
지역	서울 서대문구	90.0	10.0	100.0
	대전 유성구	85.0	15.0	100.0
	강원 춘천시	87.0	13.0	100.0
	경북 상주시	96.0	4.0	100.0
	전남 나주시	78.0	22.0	100.0
	충남 아산시	78.0	22.0	100.0
	충남 청양군	93.0	7.0	100.0
	전북 완주군	93.0	7.0	100.0
	전남 해남군	100.0	0.0	100.0
충남 홍성군	68.0	32.0	100.0	
성별	남성	85.9	14.1	100.0
	여성	87.5	12.5	100.0
연령	20대	85.9	14.1	100.0
	30대	85.3	14.7	100.0
	40대	88.5	11.5	100.0
	50대	85.6	14.4	100.0
	60대 이상	89.2	10.8	100.0
가구구성	1인	84.7	15.3	100.0
	2인	90.4	9.6	100.0
	3인	85.5	14.5	100.0
	4인	85.6	14.4	100.0
	5인 이상	92.2	7.8	100.0
가구소득	2백만원 미만	88.1	11.9	100.0
	2~3백만원 미만	85.6	14.4	100.0
	3~5백만원 미만	86.8	13.2	100.0
	5~7백만원 미만	83.4	16.6	100.0
	7백만원 이상	93.1	6.9	100.0



### ■ 최근에 먹거리 취약계층(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 공급받지 못하거나 영양이 부족하고, 식생활의 질이 나빠지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응답자의 46.5%는 최근 먹거리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3.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시군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도시권(서대문구, 유성구, 춘천시, 상주시)에서 농촌지역보다 취약계층 증가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표 III- 4〉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확대 인식도 차이 비교

단위 : %

구분		예	아니오	계
전체		46.5	53.5	100.0
지역	서울 서대문구	70.0	30.0	100.0
	대전 유성구	65.0	35.0	100.0
	강원 춘천시	67.0	33.0	100.0
	경북 상주시	62.0	38.0	100.0
	전남 나주시	21.0	79.0	100.0
	충남 아산시	56.0	44.0	100.0
	충남 청양군	44.0	56.0	100.0
	전북 완주군	38.0	62.0	100.0
	전남 해남군	24.0	76.0	100.0
	충남 홍성군	18.0	82.0	100.0
성별	남성	45.6	54.4	100.0
	여성	47.1	52.9	100.0
연령	20대	43.7	56.3	100.0
	30대	49.1	50.9	100.0
	40대	46.4	53.6	100.0
	50대	47.4	52.6	100.0
	60대 이상	45.3	54.7	100.0
가구구성	1인	52.0	48.0	100.0
	2인	45.2	54.8	100.0
	3인	52.3	47.7	100.0
	4인	40.0	60.0	100.0
	5인 이상	64.7	35.3	100.0
가구소득	2백만원 미만	50.5	49.5	100.0
	2~3백만원 미만	47.9	52.1	100.0
	3~5백만원 미만	41.7	58.3	100.0
	5~7백만원 미만	51.7	48.3	100.0
	7백만원 이상	50.5	49.5	100.0

■ 최근 5년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먹거리 문제점들이 어떻게 변하였다고 느끼십니까? (1점~3점 악화, 4점 비슷, 5점~7점 개선)

- 먹거리 불평등, 식품안전성, 가격변동 등 총 10가지 항목에 대한 먹거리 문제점 인식 조사를 실시함
  - 최근 5년간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던 항목은 비만, 성인병 등을 유발하는 식생활습관(3.95점),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변동성(3.98점) 두 개 항목으로 나타남
  - 위 2개 항목을 제외한 8개 항목은 최근 5년간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음

<표 III- 5> 우리 주변 먹거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악화도 평가(7점 척도)

단위 : 점

구분	먹거리 취약계층 및 계층간 먹거리 불평등	식품안전성 및 위생정도(음식점, 급식소 등)	비만, 성인병 등을 유발하는 식생활 습관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변동성	환경에 부담을 주는 농식품의 대량 생산 및 소비 추세	
전체	4.12	4.58	3.95	3.98	4.25	
지역	서울 서대문구	3.58	4.14	3.25	3.13	3.66
	대전 유성구	3.39	4.15	3.10	3.19	3.56
	강원 춘천시	3.41	4.12	2.98	3.20	3.49
	경북 상주시	4.02	4.71	3.80	3.48	3.95
	전남 나주시	4.84	5.01	5.00	5.01	5.12
	충남 아산시	3.75	4.18	3.21	3.23	3.67
	충남 청양군	4.30	4.97	3.93	4.25	4.34
	전북 완주군	4.26	4.41	4.45	4.42	4.61
	전남 해남군	4.63	5.03	4.61	4.73	5.06
성별	충남 홍성군	5.03	5.08	5.20	5.14	5.03
	남성	4.14	4.57	3.93	4.07	4.23
연령	여성	4.11	4.59	3.97	3.91	4.27
	20대	4.25	4.51	3.83	3.87	4.27
	30대	4.00	4.38	3.78	3.96	4.11
	40대	3.89	4.52	3.81	3.84	4.09
	50대	4.14	4.62	4.02	3.98	4.26
가구 구성	60대 이상	4.50	5.04	4.53	4.38	4.69
	1인	3.78	4.49	3.39	3.61	3.94
	2인	4.25	4.69	4.26	4.19	4.63
	3인	4.05	4.49	3.97	3.90	4.01
	4인	4.23	4.63	4.01	4.10	4.34
가구 소득	5인 이상	3.78	4.29	3.25	3.22	3.69
	2백만원 미만	4.09	4.58	3.74	3.80	4.15
	2~3백만원 미만	4.03	4.58	4.03	3.94	4.30
	3~5백만원 미만	4.23	4.71	4.11	4.19	4.37
	5~7백만원 미만	4.02	4.40	3.60	3.62	3.92
	7백만원 이상	4.11	4.33	3.90	3.97	4.23

〈표 III - 5〉 우리 주변 먹거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악화도 평가(7점 척도)\_계속

단위 : 점

구분	나의 국내산 농산물 섭취 비율	먹거리 표시제도 관리(친환경, GAP, GMO 표시제 등)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자의 영농 경제활동 여건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농산물 소비에 대한 인식 정도	지역 및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 육성 여건	
전체	4.56	4.76	4.46	4.93	4.63	
지역	서울 서대문구	4.26	4.53	4.06	4.79	4.39
	대전 유성구	4.39	4.65	4.01	4.98	4.41
	강원 춘천시	4.42	4.65	3.94	4.90	4.43
	경북 상주시	4.39	5.07	4.65	5.05	4.63
	전남 나주시	4.80	4.95	4.91	5.00	4.94
	충남 아산시	4.23	4.47	3.92	4.80	4.30
	충남 청양군	4.58	4.88	4.48	5.01	4.78
	전북 완주군	4.51	4.31	4.47	4.74	4.53
	전남 해남군	4.96	4.99	5.10	4.99	4.98
	충남 홍성군	5.03	5.06	5.07	4.99	4.91
성별	남성	4.48	4.64	4.36	4.87	4.56
	여성	4.61	4.84	4.54	4.97	4.68
연령	20대	4.53	4.91	4.35	4.85	4.60
	30대	4.52	4.67	4.37	4.93	4.56
	40대	4.49	4.66	4.42	4.91	4.61
	50대	4.60	4.73	4.55	4.94	4.67
	60대 이상	4.69	4.86	4.71	5.01	4.76
가구 구성	1인	4.20	4.44	4.04	4.72	4.45
	2인	4.58	4.72	4.60	4.88	4.67
	3인	4.45	4.78	4.37	4.94	4.59
	4인	4.73	4.85	4.58	4.99	4.71
	5인 이상	4.33	4.67	4.22	4.90	4.37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4.22	4.56	4.36	4.70	4.52
	2~3백만원 미만	4.44	4.59	4.28	4.86	4.49
	3~5백만원 미만	4.63	4.85	4.60	4.91	4.65
	5~7백만원 미만	4.62	4.72	4.36	5.01	4.68
	7백만원 이상	4.82	5.03	4.59	5.27	4.91

## ■ 먹거리 취약계층 및 계층간 먹거리 불평등에 대한 개선여부 평가

- 먹거리 불평등 여건은 지난 5년간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36%로 높았음
  - 시군별로는 나주시, 완주군, 해남군, 홍성군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홍성군, 해남군, 청양군, 완주군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표 III- 6〉 먹거리 취약계층 및 계층간 먹거리 불평등에 대한 개선여부

단위 : %, 점

구분	응답 비중				점수평균	
	1~3점	비슷	5~7점	합계		
전체	28.7	35.3	36.0	100	4.12	
지역	서울 서대문구	47.0	33.0	20.0	100	3.58
	대전 유성구	54.0	29.0	17.0	100	3.39
	강원 춘천시	51.0	33.0	16.0	100	3.41
	경북 상주시	28.0	40.0	32.0	100	4.02
	전남 나주시	11.0	30.0	59.0	100	4.84
	충남 아산시	37.0	46.0	17.0	100	3.75
	충남 청양군	14.0	49.0	37.0	100	4.30
	전북 완주군	32.0	24.0	44.0	100	4.26
	전남 해남군	8.0	39.0	53.0	100	4.63
	충남 홍성군	5.0	30.0	65.0	100	5.03
성별	남성	28.7	35.3	36.0	100	4.14
	여성	28.7	35.3	36.0	100	4.11
연령	20대	23.1	40.2	36.7	100	4.25
	30대	30.3	39.0	30.7	100	4.00
	40대	35.3	36.2	28.5	100	3.89
	50대	30.6	31.1	38.3	100	4.14
	60대 이상	20.1	27.3	52.5	100	4.50
가구 구성	1인	42.9	29.6	27.6	100	3.78
	2인	25.5	33.7	40.9	100	4.25
	3인	30.7	36.5	32.8	100	4.05
	4인	24.1	37.1	38.8	100	4.23
	5인 이상	41.2	33.3	25.5	100	3.78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0.3	34.9	34.9	100	4.09
	2~3백만원 미만	31.4	35.2	33.5	100	4.03
	3~5백만원 미만	23.1	39.0	38.0	100	4.23
	5~7백만원 미만	32.5	36.4	31.1	100	4.02
	7백만원 이상	37.6	19.8	42.6	100	4.11

## ■ 식품안전성 및 위생정도(음식점, 급식소 등)에 대한 개선여부 평가

- 식품안전성 및 위생 여건은 지난 5년간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55.7%로 높았음
  - 식품의 안전관리강화로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식품 안전성 및 위생정도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점수는 4.58로 높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개선 인식율은 남자 54.1%, 여자 56.9%로 비슷하게 나타남

〈표 III - 7〉 식품안전성 및 위생정도(음식점, 급식소 등)에 대한 개선여부

단위 : %, 점

구분	응답 비중				점수평균	
	1~3점	비슷	5~7점	합계		
전체	16.6	27.7	55.7	100	4.58	
지역	서울 서대문구	23.0	41.0	36.0	100	4.14
	대전 유성구	25.0	36.0	39.0	100	4.15
	강원 춘천시	28.0	29.0	43.0	100	4.12
	경북 상주시	16.0	26.0	58.0	100	4.71
	전남 나주시	13.0	15.0	72.0	100	5.01
	충남 아산시	22.0	41.0	37.0	100	4.18
	충남 청양군	7.0	20.0	73.0	100	4.97
	전북 완주군	17.0	46.0	37.0	100	4.41
	전남 해남군	13.0	12.0	75.0	100	5.03
	충남 홍성군	2.0	11.0	87.0	100	5.08
성별	남성	16.9	28.9	54.1	100	4.57
	여성	16.3	26.8	56.9	100	4.59
연령	20대	21.6	25.6	52.8	100	4.51
	30대	18.8	30.7	50.5	100	4.38
	40대	17.4	27.7	54.9	100	4.52
	50대	16.3	27.8	56.0	100	4.62
	60대 이상	5.0	25.9	69.1	100	5.04
가구 구성	1인	19.4	32.7	48.0	100	4.49
	2인	12.0	31.7	56.3	100	4.69
	3인	19.1	27.4	53.5	100	4.49
	4인	15.9	23.9	60.2	100	4.63
	5인 이상	23.5	33.3	43.1	100	4.29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16.5	35.8	47.7	100	4.58
	2~3백만원 미만	16.1	30.9	53.0	100	4.58
	3~5백만원 미만	12.9	24.6	62.5	100	4.71
	5~7백만원 미만	20.5	29.1	50.3	100	4.40
	7백만원 이상	26.7	21.8	51.5	100	4.33

## ■ 비만, 성인병 등을 유발하는 식생활 습관에 대한 개선여부 평가

- 서구화 또는 잘못된 식습관은 지난 5년간 악화되었다고 39.6%가 응답함
  - 특히, 패스트푸드와 같은 간편음식 섭취여건이 좋은 서울, 대전, 춘천시, 아산시 등에서 악화되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가구 구성별로는 1인가구, 5인이상 가구에서 악화에 대한 응답율이 높게 나왔으며, 1인가구의 취사어려움과 5인이상 가구의 가사노동이 미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함

〈표 III- 8〉 비만, 성인병 등을 유발하는 식생활 습관에 대한 개선여부

단위 : %, 점

구분	응답 비중				점수평균	
	1~3점	비슷	5~7점	합계		
전체	39.6	21.8	38.6	100	3.95	
지역	서울 서대문구	64.0	22.0	14.0	100	3.25
	대전 유성구	67.0	15.0	18.0	100	3.10
	강원 춘천시	67.0	17.0	16.0	100	2.98
	경북 상주시	47.0	14.0	39.0	100	3.80
	전남 나주시	15.0	17.0	68.0	100	5.00
	충남 아산시	59.0	28.0	13.0	100	3.21
	충남 청양군	41.0	25.0	34.0	100	3.93
	전북 완주군	19.0	36.0	45.0	100	4.45
	전남 해남군	14.0	32.0	54.0	100	4.61
	충남 홍성군	3.0	12.0	85.0	100	5.20
성별	남성	37.9	27.3	34.8	100	3.93
	여성	40.9	17.7	41.4	100	3.97
연령	20대	43.2	21.1	35.7	100	3.83
	30대	43.6	22.9	33.5	100	3.78
	40대	41.3	23.4	35.3	100	3.81
	50대	40.7	18.2	41.1	100	4.02
	60대 이상	23.7	23.7	52.5	100	4.53
가구 구성	1인	53.1	25.5	21.4	100	3.39
	2인	33.2	20.7	46.2	100	4.26
	3인	40.7	19.9	39.4	100	3.97
	4인	35.6	24.4	40.0	100	4.01
	5인 이상	66.7	7.8	25.5	100	3.25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45.0	22.0	33.0	100	3.74
	2~3백만원 미만	34.7	27.1	38.1	100	4.03
	3~5백만원 미만	32.8	23.8	43.4	100	4.11
	5~7백만원 미만	53.6	15.2	31.1	100	3.60
	7백만원 이상	51.5	10.9	37.6	100	3.90

## ■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변동성에 대한 개선여부 평가

- 5년간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변동여건은 개선, 유지, 악화의 응답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악화 및 개선 여부에 대한 전체 점수는 7점 만점에 3.98점으로 비슷하다보다 조금 낮은 결과를 보임
  - 지역별로는 농업시군인 나주, 해남, 홍성은 안정화 되었다는 응답율이 높은 반면, 도시 지역에서는 악화되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표 III- 9〉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변동성에 대한 개선여부

단위 : %, 점

구분	응답 비중				점수평균	
	1~3점	비슷	5~7점	합계		
전체	36.6	27.7	35.7	100	3.98	
지역	서울 서대문구	66.0	27.0	7.0	100	3.13
	대전 유성구	60.0	26.0	14.0	100	3.19
	강원 춘천시	65.0	22.0	13.0	100	3.20
	경북 상주시	46.0	34.0	20.0	100	3.48
	전남 나주시	12.0	15.0	73.0	100	5.01
	충남 아산시	59.0	32.0	9.0	100	3.23
	충남 청양군	24.0	35.0	41.0	100	4.25
	전북 완주군	20.0	33.0	47.0	100	4.42
	전남 해남군	10.0	30.0	60.0	100	4.73
	충남 홍성군	4.0	23.0	73.0	100	5.14
성별	남성	33.2	29.4	37.4	100	4.07
	여성	39.1	26.4	34.4	100	3.91
연령	20대	38.2	32.2	29.6	100	3.87
	30대	37.6	28.0	34.4	100	3.96
	40대	40.4	26.0	33.6	100	3.84
	50대	37.8	24.4	37.8	100	3.98
	60대 이상	24.5	28.8	46.8	100	4.38
가구 구성	1인	45.9	30.6	23.5	100	3.61
	2인	31.7	27.9	40.4	100	4.19
	3인	39.0	25.3	35.7	100	3.90
	4인	32.6	27.9	39.6	100	4.10
	5인 이상	58.8	31.4	9.8	100	3.22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8.5	35.8	25.7	100	3.80
	2~3백만원 미만	36.9	27.1	36.0	100	3.94
	3~5백만원 미만	29.3	29.0	41.7	100	4.19
	5~7백만원 미만	49.0	24.5	26.5	100	3.62
	7백만원 이상	44.6	19.8	35.6	100	3.97



## ■ 환경에 부담을 주는 농식품의 대량 생산 및 소비 추세에 대한 개선여부 평가

- 농식품 생산·소비 과정에서의 환경부담은 이전 5년보다 감소하였다는 응답률이 높음
  - 환경부담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25.1%로 가장 낮았으며, 비슷하다 34.5%, 개선되었다 40.4%로 나타남
  - 특히 친환경농업이 확대된 흥성과 전라남도에 속한 나주, 해남 응답자의 비중이 높음

〈표 III- 10〉 환경에 부담을 주는 농식품의 대량 생산 및 소비 추세에 대한 개선여부

단위 : %

구분	응답 비중				점수평균	
	1~3점	비슷	5~7점	합계		
전체	25.1	34.5	40.4	100	4.25	
지역	서울 서대문구	40.0	43.0	17.0	100	3.66
	대전 유성구	44.0	38.0	18.0	100	3.56
	강원 춘천시	46.0	40.0	14.0	100	3.49
	경북 상주시	25.0	46.0	29.0	100	3.95
	전남 나주시	10.0	17.0	73.0	100	5.12
	충남 아산시	35.0	50.0	15.0	100	3.67
	충남 청양군	20.0	33.0	47.0	100	4.34
	전북 완주군	19.0	35.0	46.0	100	4.61
	전남 해남군	9.0	20.0	71.0	100	5.06
성별	충남 흥성군	3.0	23.0	74.0	100	5.03
	남성	24.9	36.9	38.1	100	4.23
연령	여성	25.2	32.7	42.1	100	4.27
	20대	21.6	41.7	36.7	100	4.27
	30대	27.5	34.9	37.6	100	4.11
	40대	30.6	32.8	36.6	100	4.09
	50대	26.8	30.1	43.1	100	4.26
가구 구성	60대 이상	14.4	33.1	52.5	100	4.69
	1인	30.6	45.9	23.5	100	3.94
	2인	17.3	33.2	49.5	100	4.63
	3인	32.8	31.1	36.1	100	4.01
	4인	21.9	32.8	45.3	100	4.34
가구 소득	5인 이상	35.3	47.1	17.6	100	3.69
	2백만원 미만	25.7	41.3	33.0	100	4.15
	2~3백만원 미만	23.3	37.3	39.4	100	4.30
	3~5백만원 미만	21.3	30.3	48.4	100	4.37
	5~7백만원 미만	30.5	42.4	27.2	100	3.92
	7백만원 이상	35.6	25.7	38.6	100	4.23

## ■ 나의 국내산 농산물 섭취 비율에 대한 개선여부 평가

- 응답자의 51.3%가 최근 5년 국내산농산물에 대한 섭취비율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 악화 및 개선 여부에 대한 전체 점수는 7점 만점에 4.56점으로 높은 모습을 보임
  - 국내산 농산물 섭취여부에 대한 지역, 성별, 연령 등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국내산 섭취에 대한 개선 응답 비율이 소폭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III- 11〉 나의 국내산 농산물 섭취 비율에 대한 개선여부

단위 : %, 점

구분	응답 비중				점수평균	
	1~3점	비슷	5~7점	합계		
전체	18.1	30.6	51.3	100	4.56	
지역	서울 서대문구	20.0	40.0	40.0	100	4.26
	대전 유성구	24.0	26.0	50.0	100	4.39
	강원 춘천시	14.0	48.0	38.0	100	4.42
	경북 상주시	25.0	27.0	48.0	100	4.39
	전남 나주시	20.0	20.0	60.0	100	4.80
	충남 아산시	22.0	45.0	33.0	100	4.23
	충남 청양군	15.0	33.0	52.0	100	4.58
	전북 완주군	22.0	31.0	47.0	100	4.51
	전남 해남군	12.0	19.0	69.0	100	4.96
	충남 홍성군	7.0	17.0	76.0	100	5.03
성별	남성	19.3	32.0	48.7	100	4.48
	여성	17.2	29.6	53.2	100	4.61
연령	20대	19.6	29.6	50.8	100	4.53
	30대	18.3	31.7	50.0	100	4.52
	40대	19.6	32.3	48.1	100	4.49
	50대	14.8	34.9	50.2	100	4.60
	60대 이상	18.0	20.9	61.2	100	4.69
가구 구성	1인	25.5	36.7	37.8	100	4.20
	2인	17.8	28.4	53.8	100	4.58
	3인	22.0	34.0	44.0	100	4.45
	4인	13.7	27.1	59.2	100	4.73
	5인 이상	21.6	39.2	39.2	100	4.33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24.8	36.7	38.5	100	4.22
	2~3백만원 미만	20.8	32.6	46.6	100	4.44
	3~5백만원 미만	15.6	29.0	55.3	100	4.63
	5~7백만원 미만	16.6	30.5	53.0	100	4.62
	7백만원 이상	16.8	25.7	57.4	100	4.82

## ■ 먹거리 표시제도 관리(친환경, GAP, GMO 표시제 등)에 대한 개선여부 평가

- 응답자의 58.8%가 최근 5년 먹거리 표시제도 관리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 먹거리 표시관련 인증제도 및 표시제도 관리 강화로 최근 5년간 소비자의 농식품 인증에 대한 인식도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지역, 연령, 나이,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전체 응답군에서 비슷 이상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I- 12〉 먹거리 표시제도 관리(친환경, GAP, GMO 표시제 등)에 대한 개선여부

단위 : %, 점

구분	응답 비중				점수평균	
	1~3점	비슷	5~7점	합계		
전체	10.9	30.3	58.8	100	4.76	
지역	서울 서대문구	14.0	35.0	51.0	100	4.53
	대전 유성구	10.0	28.0	62.0	100	4.65
	강원 춘천시	6.0	41.0	53.0	100	4.65
	경북 상주시	10.0	22.0	68.0	100	5.07
	전남 나주시	15.0	17.0	68.0	100	4.95
	충남 아산시	9.0	45.0	46.0	100	4.47
	충남 청양군	5.0	28.0	67.0	100	4.88
	전북 완주군	26.0	35.0	39.0	100	4.31
	전남 해남군	10.0	26.0	64.0	100	4.99
	충남 홍성군	4.0	26.0	70.0	100	5.06
성별	남성	12.9	31.5	55.5	100	4.64
	여성	9.4	29.4	61.2	100	4.84
연령	20대	5.0	33.2	61.8	100	4.91
	30대	11.9	30.3	57.8	100	4.67
	40대	12.3	31.5	56.2	100	4.66
	50대	13.9	29.7	56.5	100	4.73
	60대 이상	10.8	25.2	64.0	100	4.86
가구 구성	1인	19.4	28.6	52.0	100	4.44
	2인	12.5	32.2	55.3	100	4.72
	3인	10.4	30.7	58.9	100	4.78
	4인	9.0	28.6	62.4	100	4.85
	5인 이상	5.9	37.3	56.9	100	4.67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14.7	33.9	51.4	100	4.56
	2~3백만원 미만	15.7	30.1	54.2	100	4.59
	3~5백만원 미만	8.4	28.8	62.8	100	4.85
	5~7백만원 미만	8.6	34.4	57.0	100	4.72
	7백만원 이상	8.9	26.7	64.4	100	5.03

## ■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자의 영농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개선여부 평가

- 응답자의 48.5%가 최근 5년간 생산자의 영농 경제활동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 영농 경제활동 여건 개선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상주, 나주, 청양, 해남, 홍성 등 농촌 시군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남
  - 조사 대상에 비농업인이 포함되어 농업 종사자 의견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III - 13〉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자의 영농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개선여부

단위 : %, 점

구분	응답 비중				점수평균	
	1~3점	비슷	5~7점	합계		
전체	18.2	33.3	48.5	100	4.46	
지역	서울 서대문구	29.0	38.0	33.0	100	4.06
	대전 유성구	30.0	36.0	34.0	100	4.01
	강원 춘천시	26.0	51.0	23.0	100	3.94
	경북 상주시	15.0	28.0	57.0	100	4.65
	전남 나주시	17.0	19.0	64.0	100	4.91
	충남 아산시	23.0	58.0	19.0	100	3.92
	충남 청양군	19.0	27.0	54.0	100	4.48
	전북 완주군	19.0	37.0	44.0	100	4.47
	전남 해남군	3.0	20.0	77.0	100	5.10
	충남 홍성군	1.0	19.0	80.0	100	5.07
성별	남성	21.9	33.4	44.7	100	4.36
	여성	15.5	33.2	51.3	100	4.54
연령	20대	19.1	37.2	43.7	100	4.35
	30대	18.3	37.6	44.0	100	4.37
	40대	20.0	33.2	46.8	100	4.42
	50대	17.7	30.6	51.7	100	4.55
	60대 이상	14.4	25.2	60.4	100	4.71
가구 구성	1인	25.5	42.9	31.6	100	4.04
	2인	17.3	30.8	51.9	100	4.60
	3인	22.4	27.4	50.2	100	4.37
	4인	14.4	33.1	52.5	100	4.58
	5인 이상	17.6	54.9	27.5	100	4.22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17.4	40.4	42.2	100	4.36
	2~3백만원 미만	22.0	35.6	42.4	100	4.28
	3~5백만원 미만	14.4	30.0	55.6	100	4.60
	5~7백만원 미만	21.9	33.1	45.0	100	4.36
	7백만원 이상	19.8	33.7	46.5	100	4.59

## ■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농산물 소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개선여부 평가

- 농산물 구매시 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68.3%가 최근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 먹거리 여건 개선관련 조사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인 4.93점(7점 만점)을 보였으며, 지역 및 연령대별 차이 없이 대부분 응답 항목에서 개선되었다고 응답됨
  - 응답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농산물 소비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비율이 높았음

〈표 III - 14〉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농산물 소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개선여부

단위 : %, 점

구분	응답 비중				점수평균	
	1~3점	비슷	5~7점	합계		
전체	7.4	24.3	68.3	100	4.93	
지역	서울 서대문구	11.0	26.0	63.0	100	4.79
	대전 유성구	8.0	16.0	76.0	100	4.98
	강원 춘천시	9.0	21.0	70.0	100	4.90
	경북 상주시	8.0	25.0	67.0	100	5.05
	전남 나주시	5.0	29.0	66.0	100	5.00
	충남 아산시	4.0	34.0	62.0	100	4.80
	충남 청양군	4.0	24.0	72.0	100	5.01
	전북 완주군	15.0	29.0	56.0	100	4.74
	전남 해남군	8.0	19.0	73.0	100	4.99
충남 홍성군	2.0	20.0	78.0	100	4.99	
성별	남성	9.9	23.5	66.6	100	4.87
	여성	5.6	24.9	69.6	100	4.97
연령	20대	8.0	26.1	65.8	100	4.85
	30대	6.0	26.1	67.9	100	4.93
	40대	8.1	22.6	69.4	100	4.91
	50대	9.1	22.5	68.4	100	4.94
	60대 이상	5.0	24.5	70.5	100	5.01
가구 구성	1인	13.3	27.6	59.2	100	4.72
	2인	10.1	24.5	65.4	100	4.88
	3인	7.5	23.2	69.3	100	4.94
	4인	5.0	22.9	72.1	100	4.99
	5인 이상	3.9	33.3	62.7	100	4.90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12.8	32.1	55.0	100	4.70
	2~3백만원 미만	8.9	27.5	63.6	100	4.86
	3~5백만원 미만	5.7	25.8	68.5	100	4.91
	5~7백만원 미만	7.9	16.6	75.5	100	5.01
	7백만원 이상	4.0	13.9	82.2	100	5.27

## ■ 지역 및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 육성 여건에 대한 개선여부 평가

- 응답자의 52.3%는 식품산업에 지역 및 국내산 농산물 사용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인식
  - 나주, 청양, 해남, 홍성군 등 농업시군에서 개선되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성별, 연령, 가구구성,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는 크지 않았음
  - 최근 확산된 원산지 관리 강화 정책에 의한 요인으로 해석됨

〈표 III - 15〉 지역 및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 육성 여건에 대한 개선여부

단위 : %

구분		응답 비중				점수평균
		1~3점	비슷	5~7점	합계	
전체		8.3	39.4	52.3	100	4.63
지역	서울 서대문구	10.0	47.0	43.0	100	4.39
	대전 유성구	13.0	43.0	44.0	100	4.41
	강원 춘천시	12.0	42.0	46.0	100	4.43
	경북 상주시	10.0	38.0	52.0	100	4.63
	전남 나주시	3.0	40.0	57.0	100	4.94
	충남 아산시	8.0	59.0	33.0	100	4.30
	충남 청양군	3.0	38.0	59.0	100	4.78
	전북 완주군	16.0	38.0	46.0	100	4.53
	전남 해남군	6.0	27.0	67.0	100	4.98
	충남 홍성군	2.0	22.0	76.0	100	4.91
성별	남성	8.5	44.2	47.3	100	4.56
	여성	8.2	35.8	56.0	100	4.68
연령	20대	5.0	48.2	46.7	100	4.60
	30대	10.6	41.7	47.7	100	4.56
	40대	8.9	35.7	55.3	100	4.61
	50대	10.0	33.5	56.5	100	4.67
	60대 이상	5.8	38.1	56.1	100	4.76
가구 구성	1인	10.2	51.0	38.8	100	4.45
	2인	11.1	34.6	54.3	100	4.67
	3인	8.7	41.1	50.2	100	4.59
	4인	5.7	37.3	57.0	100	4.71
	5인 이상	11.8	45.1	43.1	100	4.37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10.1	45.0	45.0	100	4.52
	2~3백만원 미만	10.2	43.2	46.6	100	4.49
	3~5백만원 미만	7.2	38.7	54.1	100	4.65
	5~7백만원 미만	8.6	32.5	58.9	100	4.68
	7백만원 이상	5.9	37.6	56.4	100	4.91

## ■ 우리 지역 또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종합정책(푸드플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응답자의 25.7%만 푸드플랜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향후 홍보 확대 필요
  - 최근 푸드플랜 수립관련 내부 홍보 및 로컬푸드 활동을 이어온 청양, 완주에서 타 지역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임
  - 푸드플랜에 대한 인지도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표 III - 16〉 먹거리종합정책(푸드플랜)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구분		예	아니오	계
전체		25.7	74.3	100.0
지역	서울 서대문구	18.0	82.0	100.0
	대전 유성구	20.0	80.0	100.0
	강원 춘천시	20.0	80.0	100.0
	경북 상주시	15.0	85.0	100.0
	전남 나주시	15.0	85.0	100.0
	충남 아산시	20.0	80.0	100.0
	충남 청양군	51.0	49.0	100.0
	전북 완주군	53.0	47.0	100.0
	전남 해남군	31.0	69.0	100.0
	충남 홍성군	14.0	86.0	100.0
성별	남성	26.4	73.6	100.0
	여성	25.2	74.8	100.0
연령	20대	24.1	75.9	100.0
	30대	24.8	75.2	100.0
	40대	31.1	68.9	100.0
	50대	25.4	74.6	100.0
	60대 이상	20.9	79.1	100.0
가구구성	1인	17.3	82.7	100.0
	2인	22.6	77.4	100.0
	3인	27.8	72.2	100.0
	4인	28.9	71.1	100.0
	5인 이상	19.6	80.4	100.0
가구소득	2백만원 미만	22.0	78.0	100.0
	2~3백만원 미만	31.4	68.6	100.0
	3~5백만원 미만	26.3	73.7	100.0
	5~7백만원 미만	22.5	77.5	100.0
	7백만원 이상	18.8	81.2	100.0



## ■ 푸드플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들었습니까?

- 먹거리 정책(푸드플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74.3%는 신문 및 TV를 통해 관련 정보를 습득함
  -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통신 매체를 통한 습득률은 낮아지고, 시군 설명회를 통한 인지율이 높아짐
  - 관광, 음식 등의 기사와 연계한 기사 게시가 정책 홍보에 유효할 것으로 예상됨

〈표 III - 17〉 먹거리정책관련 인지경로

단위 : %

구분		신문, TV 등	시군설명회	선거공약	기타	계
전체		74.3	16.3	5.1	4.3	100.0
지역	서울 서대문구	77.8	5.6	11.1	5.6	100.0
	대전 유성구	80.0	5.0	0.0	15.0	100.0
	강원 춘천시	70.0	15.0	5.0	10.0	100.0
	경북 상주시	86.7	0.0	0.0	13.3	100.0
	전남 나주시	26.7	33.3	33.3	6.7	100.0
	충남 아산시	80.0	10.0	10.0	0.0	100.0
	충남 청양군	58.8	33.3	3.9	3.9	100.0
	전북 완주군	77.4	22.6	0.0	0.0	100.0
	전남 해남군	100.0	0.0	0.0	0.0	100.0
	충남 홍성군	85.7	7.1	7.1	0.0	100.0
성별	남성	70.5	21.4	6.3	1.8	100.0
	여성	77.2	12.4	4.1	6.2	100.0
연령	20대	83.3	12.5	2.1	2.1	100.0
	30대	79.6	14.8	3.7	1.9	100.0
	40대	75.3	12.3	6.8	5.5	100.0
	50대	71.7	22.6	0.0	5.7	100.0
	60대 이상	51.7	24.1	17.2	6.9	100.0
가구 구성	1인	64.7	29.4	5.9	0.0	100.0
	2인	59.6	25.5	10.6	4.3	100.0
	3인	88.1	6.0	0.0	6.0	100.0
	4인	73.3	17.2	6.0	3.4	100.0
	5인 이상	80.0	10.0	0.0	10.0	100.0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58.3	33.3	4.2	4.2	100.0
	2~3백만원 미만	68.9	21.6	6.8	2.7	100.0
	3~5백만원 미만	79.2	12.3	3.8	4.7	100.0
	5~7백만원 미만	82.4	5.9	8.8	2.9	100.0
	7백만원 이상	73.7	15.8	0.0	10.5	100.0

■ **먹거리종합정책(푸드플랜)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점수가 낮을수록 우선순위 높음)**

- 먹거리종합정책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지역 푸드자원 순환체계마련을 꼽음
  - 과제별로는 지역 푸드자원 순환체계 마련(폐기·재활용) >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체계 구축 > 먹거리 복지 증진 > 먹거리 공급 안전성 증대 >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순으로 과제 수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표 III - 18〉 먹거리종합정책(푸드플랜)이 해결해야 할 과제의 우선도 평가

단위 : 점

구분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먹거리 공급 안전성 증대	먹거리 복지 증진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체계 구축	지역 푸드자원 순환체계 마련	
전체	3.48	3.12	3.02	2.80	2.59	
지역	서울 서대문구	3.34	3.05	3.11	2.63	2.87
	대전 유성구	3.21	3.08	2.79	2.95	2.97
	강원 춘천시	3.28	3.05	2.97	2.87	2.83
	경북 상주시	3.50	3.26	2.87	2.88	2.49
	전남 나주시	3.37	3.10	3.31	2.75	2.47
	충남 아산시	3.38	3.03	2.91	2.85	2.83
	충남 청양군	3.30	3.29	3.27	2.73	2.41
	전북 완주군	3.86	2.61	3.08	2.87	2.58
	전남 해남군	3.72	3.36	3.01	2.78	2.13
성별	충남 홍성군	3.80	3.37	2.88	2.66	2.29
	남성	3.42	3.15	3.06	2.80	2.57
연령	여성	3.52	3.10	2.99	2.80	2.60
	20대	3.42	3.01	2.95	2.89	2.73
	30대	3.44	3.11	2.98	2.83	2.65
	40대	3.46	3.11	3.00	2.88	2.56
	50대	3.44	3.12	3.20	2.64	2.60
가구 구성	60대 이상	3.71	3.32	2.94	2.71	2.32
	1인	3.66	2.76	3.15	2.94	2.49
	2인	3.55	3.26	3.06	2.48	2.65
	3인	3.46	3.14	3.05	2.73	2.63
	4인	3.41	3.15	2.97	2.95	2.52
가구 소득	5인 이상	3.43	2.94	2.84	2.94	2.84
	2백만원 미만	3.58	2.96	2.88	2.91	2.67
	2~3백만원 미만	3.60	3.00	3.03	2.92	2.45
	3~5백만원 미만	3.49	3.16	3.09	2.75	2.52
	5~7백만원 미만	3.33	3.28	2.81	2.86	2.72
	7백만원 이상	3.26	3.17	3.18	2.49	2.91

## ■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업무추진의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업무 추진 방식은 국가먹거리정책위원회와 같은 조정기구를 두는게 가장 좋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음
  - 시군별로는 조정기구 구성 4개소, 일원화 한 통합관리 3개소, 전문성 강화 2개소로 나타났으며, 상주는 조정기구와 부처 통합관리 구성이 동일한 응답률을 보임

〈표 III - 19〉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업무추진의 적절한 방법 의견

단위 : %

구분		현재처럼 각부처별로 나누어 서추진하되, 국가먹거리정책위원회와 같은협의조정기구를 만들어 관리	먹거리생산 공급 안전관리 복지 정책을 일원화하여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	현재처럼 각 부처별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처	기타	계
전체		40.9	33.4	25.5	0.2	100.0
지역	서울 서대문구	39.0	45.0	15.0	1.0	100.0
	대전 유성구	46.0	42.0	12.0	0.0	100.0
	강원 춘천시	47.0	42.0	10.0	1.0	100.0
	경북 상주시	37.0	37.0	26.0	0.0	100.0
	전남 나주시	34.0	27.0	39.0	0.0	100.0
	충남 아산시	40.0	47.0	13.0	0.0	100.0
	충남 청양군	36.0	45.0	19.0	0.0	100.0
	전북 완주군	34.0	11.0	55.0	0.0	100.0
	전남 해남군	51.0	24.0	25.0	0.0	100.0
	충남 홍성군	45.0	14.0	41.0	0.0	100.0
성별	남성	37.9	34.4	27.3	.5	100.0
	여성	43.1	32.7	24.2	0.0	100.0
연령	20대	39.7	32.2	28.1	0.0	100.0
	30대	47.7	26.6	25.2	.5	100.0
	40대	40.0	38.7	21.3	0.0	100.0
	50대	36.4	38.3	24.9	.5	100.0
	60대 이상	40.3	29.5	30.2	0.0	100.0
가구 구성	1인	39.8	31.6	27.6	1.0	100.0
	2인	38.9	31.7	29.3	0.0	100.0
	3인	45.2	34.4	20.3	0.0	100.0
	4인	40.8	32.1	27.1	0.0	100.0
	5인 이상	31.4	49.0	17.6	2.0	100.0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2.1	31.2	36.7	0.0	100.0
	2~3백만원 미만	39.8	30.5	29.2	.4	100.0
	3~5백만원 미만	43.2	31.5	25.1	.2	100.0
	5~7백만원 미만	41.7	41.1	17.2	0.0	100.0
	7백만원 이상	42.6	38.6	18.8	0.0	100.0

## ■ 먹거리 거버넌스 조직에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직 우선 순위(5개 조직 중복)

- 거버넌스 필수 참여조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5개 그룹은 지역 농식품 유통 대표자, 식품정책 행정 담당자, 지역 농업인 대표, 식품 영양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활동 순으로 나타남
- 지역농산물 소비에 우선한 농산물 유통구조 마련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 된 것으로 보이며, 도농 및 도시 소비자 대상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임

〈표 III- 20〉 먹거리 거버넌스 조직에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직 응답(5개 중복 답변)

단위 : 점

구분	지역농식품 유통대표자	식품 정책 행정담당자	지역 농업인대표	식품 영양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활동가	보건 복지 정책 행정 담당자	지역 식당 대표자	
전체	69.2	64.5	63.8	55.7	52.0	51.0	30.9	
지역	서울 서대문구	67.0	80.0	60.0	61.0	55.0	57.0	20.0
	대전 유성구	71.0	76.0	79.0	55.0	56.0	45.0	18.0
	강원 춘천시	79.0	74.0	82.0	55.0	55.0	52.0	12.0
	경북 상주시	73.0	57.0	73.0	37.0	49.0	58.0	32.0
	전남 나주시	55.0	41.0	45.0	48.0	58.0	47.0	24.0
	충남 아산시	58.0	75.0	62.0	56.0	54.0	48.0	20.0
	충남 청양군	80.0	70.0	73.0	52.0	43.0	57.0	29.0
	전북 완주군	71.0	57.0	58.0	76.0	37.0	61.0	48.0
	전남 해남군	67.0	49.0	56.0	50.0	59.0	43.0	66.0
	충남 홍성군	71.0	66.0	50.0	67.0	54.0	42.0	40.0
성별	남성	67.3	63.8	66.6	52.9	53.2	51.1	29.9
	여성	70.6	65.0	61.7	57.7	51.1	51.0	31.7
연령	20대	70.9	66.3	60.8	58.8	48.2	48.2	29.1
	30대	72.9	60.1	67.4	56.4	50.0	51.8	30.7
	40대	63.0	68.5	65.5	53.2	58.3	52.8	28.5
	50대	66.0	65.1	61.2	56.9	50.2	53.1	29.7
	60대 이상	76.3	61.2	63.3	52.5	52.5	47.5	39.6
가구 구성	1인	69.4	67.3	74.5	57.1	44.9	56.1	18.4
	2인	71.6	64.9	64.4	54.3	49.0	50.0	42.3
	3인	67.6	61.8	58.5	57.3	56.8	52.3	26.1
	4인	68.4	64.4	63.7	56.0	52.0	49.5	31.1
	5인 이상	72.5	70.6	66.7	49.0	54.9	51.0	29.4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74.3	63.3	67.0	60.6	38.5	58.7	29.4
	2~3백만원 미만	72.5	60.6	65.7	55.9	48.3	50.0	33.5
	3~5백만원 미만	66.0	63.8	59.8	57.1	55.3	48.6	34.7
	5~7백만원 미만	68.2	72.8	65.6	51.7	53.0	54.3	23.8
	7백만원 이상	70.3	65.3	69.3	50.5	60.4	49.5	21.8

〈표 III- 20〉 먹거리 거버넌스 조직에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직 응답(5개 중복 답변)\_계속  
단위 : 점

구분	관내 복지시설 운영자	학교 영양사	대학 식품관련 교수	교육 정책 행정 담당자	사·군의원	학생 및 청년 대표	기타	
전체	28.9	26.2	17.1	15.3	13.3	11.5	.6	
지역	서울 서대문구	18.0	26.0	13.0	16.0	12.0	14.0	1.0
	대전 유성구	19.0	31.0	11.0	8.0	14.0	17.0	0.0
	강원 춘천시	13.0	17.0	17.0	10.0	12.0	19.0	3.0
	경북 상주시	16.0	35.0	25.0	16.0	11.0	18.0	0.0
	전남 나주시	65.0	42.0	22.0	31.0	15.0	7.0	0.0
	충남 아산시	17.0	34.0	19.0	19.0	18.0	18.0	2.0
	충남 청양군	15.0	27.0	15.0	12.0	18.0	9.0	0.0
	전북 완주군	53.0	7.0	15.0	10.0	4.0	3.0	0.0
	전남 해남군	38.0	19.0	20.0	22.0	9.0	2.0	0.0
	충남 홍성군	35.0	24.0	14.0	9.0	20.0	8.0	0.0
성별	남성	28.2	25.6	18.4	16.2	14.8	11.1	.9
	여성	29.4	26.6	16.2	14.6	12.2	11.8	.3
연령	20대	27.1	27.6	11.1	14.6	20.6	15.1	1.5
	30대	27.5	25.2	18.8	13.8	12.8	11.5	.9
	40대	29.4	20.9	18.7	17.9	11.1	11.9	.4
	50대	29.2	32.1	20.1	13.9	11.0	11.5	0.0
	60대 이상	32.4	25.9	15.8	16.5	10.8	5.8	0.0
가구 구성	1인	21.4	26.5	14.3	12.2	19.4	16.3	2.0
	2인	28.8	22.6	15.4	18.3	12.5	5.8	0.0
	3인	34.0	26.1	19.5	13.7	12.4	12.4	1.2
	4인	30.3	28.1	17.4	15.2	11.9	11.7	.2
	5인 이상	7.8	25.5	15.7	17.6	19.6	19.6	0.0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22.9	22.0	16.5	16.5	14.7	14.7	.9
	2~3백만원 미만	27.1	24.2	18.6	16.9	17.8	8.5	.4
	3~5백만원 미만	36.2	27.8	15.6	13.6	8.9	11.7	.7
	5~7백만원 미만	18.5	28.5	21.2	12.6	16.6	13.2	0.0
	7백만원 이상	25.7	25.7	13.9	20.8	13.9	11.9	1.0

■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2가지를 골라주세요.

- 현재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 정책 중 로컬푸드 소비확대 정책,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
  - 시민 대상 생산가치교육, 식생활교육, 자원화, 거버넌스 조직 육성관련 정책은 부족하다고 평가함

〈표 III - 21〉 먹거리관련 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중복응답)

단위 : %

구분	로컬푸드 소비 확대 정책(직매장 개설, 공공급식 공급 확대)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사업(반찬 배달, 바우처 지급)	먹거리 인증 및 안전관리 정책(원산지 표시 및 자체 인증제도 운영)	지역농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식품산업 육성 정책	
전체	47.2	42.1	41.9	21.9	
지역	서울 서대문구	43.0	44.0	46.0	20.0
	대전 유성구	44.0	51.0	52.0	12.0
	강원 춘천시	60.0	32.0	42.0	34.0
	경북 상주시	38.0	37.0	41.0	24.0
	전남 나주시	39.0	53.0	37.0	20.0
	충남 아산시	48.0	43.0	40.0	20.0
	충남 청양군	59.0	28.0	32.0	36.0
	전북 완주군	67.0	48.0	23.0	16.0
	전남 해남군	26.0	35.0	60.0	22.0
	충남 홍성군	48.0	50.0	46.0	15.0
성별	남성	45.6	40.9	42.6	23.1
	여성	48.3	43.0	41.4	21.0
연령	20대	48.7	38.2	45.2	23.1
	30대	45.4	50.9	37.6	18.8
	40대	49.4	43.8	42.6	16.6
	50대	45.5	36.8	45.5	27.8
	60대 이상	46.8	38.8	37.4	25.2
가구 구성	1인	45.9	41.8	26.5	26.5
	2인	51.4	38.0	39.4	21.2
	3인	48.1	43.6	43.2	21.6
	4인	44.3	43.5	46.3	21.6
	5인 이상	51.0	41.2	41.2	19.6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52.3	40.4	29.4	29.4
	2~3백만원 미만	50.8	44.1	41.1	16.5
	3~5백만원 미만	46.7	42.4	41.2	22.8
	5~7백만원 미만	45.0	35.1	49.0	25.2
	7백만원 이상	38.6	48.5	49.5	17.8

참고 : 중복응답은 1, 2순위 응답결과 합산 도출

〈표 III - 21〉 먹거리관련 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중복응답)\_계속

단위 : %

구분		일반 시민 대상 텃밭 및 생산가치 인식 개선정책	학생 및 일반 시민 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	환경친화적 먹거리 체계 마련을 위한 폐기물 자원화 정책	민관 협의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조직 육성 정책
전체		18.1	17.2	8.2	3.4
지역	서울 서대문구	14.0	15.0	13.0	5.0
	대전 유성구	9.0	14.0	12.0	6.0
	강원 춘천시	7.0	11.0	11.0	3.0
	경북 상주시	22.0	33.0	2.0	3.0
	전남 나주시	28.0	16.0	7.0	0.0
	충남 아산시	16.0	15.0	11.0	7.0
	충남 청양군	14.0	10.0	13.0	8.0
	전북 완주군	22.0	14.0	9.0	1.0
	전남 해남군	24.0	31.0	1.0	1.0
	충남 홍성군	25.0	13.0	3.0	0.0
성별	남성	16.7	17.6	9.6	3.8
	여성	19.1	16.9	7.1	3.1
연령	20대	18.6	15.6	7.0	3.5
	30대	17.0	20.2	7.3	2.8
	40대	17.4	18.7	7.2	4.3
	50대	14.8	15.3	10.5	3.8
	60대 이상	25.2	15.1	9.4	2.2
가구 구성	1인	21.4	20.4	12.2	5.1
	2인	20.7	19.2	7.7	2.4
	3인	14.5	15.4	9.5	4.1
	4인	17.9	16.4	7.0	3.0
	5인 이상	19.6	17.6	5.9	3.9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18.3	14.7	12.8	2.8
	2~3백만원 미만	22.5	16.9	5.9	2.1
	3~5백만원 미만	16.9	18.4	7.7	4.0
	5~7백만원 미만	15.2	17.9	8.6	4.0
	7백만원 이상	16.8	14.9	9.9	4.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중복응답은 1, 2순위 응답결과 합산 도출



■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 정책 중,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 2가지를 골라주세요.**

- 앞으로 잘해야 할 정책으로 인증 및 안전관리,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역농산물 이용 식품산업육성, 로컬푸드 소비확대 정책을 꼽음
- 식생활교육 및 거버넌스 구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촌지역 일 수록 응답율이 낮게 나타남

〈표 III- 22〉 먹거리관련 정책 중 더 잘해야 할 정책에 대한 평가(중복응답)

단위 : %

구분		먹거리 인증 및 안전관리 정책(원산지 표시, 자체인증제도 운영)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사업(반찬 배달, 바우처 지급)	지역농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식품산업 육성 정책	로컬푸드 소비 확대 정책(직매장 개설, 공공급식 공급 확대)
전체		36.7	34.0	31.6	28.0
지역	서울 서대문구	41.0	25.0	32.0	31.0
	대전 유성구	33.0	28.0	36.0	29.0
	강원 춘천시	37.0	30.0	31.0	21.0
	경북 상주시	30.0	18.0	41.0	15.0
	전남 나주시	40.0	41.0	23.0	21.0
	충남 아산시	39.0	34.0	24.0	24.0
	충남 청양군	23.0	23.0	61.0	23.0
	전북 완주군	22.0	49.0	17.0	62.0
	전남 해남군	53.0	40.0	26.0	26.0
	충남 홍성군	49.0	52.0	25.0	28.0
성별	남성	38.4	34.8	31.5	29.4
	여성	35.5	33.4	31.7	27.0
연령	20대	29.6	38.2	28.1	22.6
	30대	36.2	30.3	29.4	28.9
	40대	40.9	31.5	32.3	28.5
	50대	41.1	34.0	37.8	27.8
	60대 이상	33.8	38.1	29.5	33.8
가구 구성	1인	29.6	34.7	32.7	33.7
	2인	36.5	35.1	31.3	28.8
	3인	33.6	32.0	33.6	31.5
	4인	41.5	33.8	31.1	25.1
	5인 이상	27.5	39.2	25.5	19.6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25.7	34.9	33.0	33.9
	2~3백만원 미만	33.9	40.7	29.2	30.9
	3~5백만원 미만	42.9	33.3	30.0	26.8
	5~7백만원 미만	34.4	30.5	35.1	27.8
	7백만원 이상	33.7	25.7	36.6	19.8

참고 : 중복응답은 1, 2순위 응답결과 합산 도출

〈표 III - 22〉 먹거리관련 정책 중 더 잘해야 할 정책에 대한 평가(중복응답)\_계속

단위 : %

구분		일반 시민 대상 텃밭 및 생산가치 인식 개선정책	환경친화적 먹거리 체계 마련을 위한 폐기물 자원화 정책	학생 및 일반 시민 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	민관 협의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조직 육성 정책
전체		21.0	20.7	17.3	10.7
지역	서울 서대문구	11.0	28.0	13.0	19.0
	대전 유성구	7.0	34.0	16.0	17.0
	강원 춘천시	16.0	33.0	17.0	15.0
	경북 상주시	23.0	24.0	30.0	19.0
	전남 나주시	31.0	19.0	21.0	4.0
	충남 아산시	11.0	29.0	17.0	22.0
	충남 청양군	27.0	20.0	15.0	8.0
	전북 완주군	29.0	9.0	11.0	1.0
	전남 해남군	29.0	4.0	21.0	1.0
	충남 홍성군	26.0	7.0	12.0	1.0
성별	남성	19.8	17.6	15.3	13.2
	여성	21.9	23.0	18.8	8.9
연령	20대	21.6	28.6	20.1	11.1
	30대	24.3	20.6	18.3	11.9
	40대	21.7	17.4	16.6	11.1
	50대	16.7	19.6	12.9	10.0
	60대 이상	20.1	16.5	19.4	8.6
가구구성	1인	12.2	24.5	17.3	15.3
	2인	19.7	20.7	20.2	7.7
	3인	24.9	17.4	13.3	13.7
	4인	22.4	20.9	17.9	7.2
	5인 이상	13.7	27.5	19.6	27.5
가구소득	2백만원 미만	17.4	22.0	22.0	11.0
	2~3백만원 미만	20.8	18.6	18.6	7.2
	3~5백만원 미만	23.8	17.4	14.6	11.2
	5~7백만원 미만	19.2	25.2	17.9	9.9
	7백만원 이상	16.8	30.7	18.8	17.8

참고 : 중복응답은 1, 2순위 응답결과 합산 도출

## 2. 지역 푸드플랜 2차 인식 조사 결과

### 가. 개요

#### ■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조사 실시

- 조사 대상 : 지역 푸드플랜 시범사업 선정 시군 주민
  - 도시형 : 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 도농복합형 : 강원 춘천시,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 농촌형 : 충남 청양군, 전북 완주군, 전남 해남군
  - 광역형 : 충청남도(아산시, 홍성군 대체)
- 조사 방법
  - 지역별 100명씩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 1,000명 설문조사 실시(2019년 2월)
  - 전문 조사기관과 연계해 패널을 갖춘 지역은 인터넷 설문을 실시하고, 응답자 구성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 1:1 면담조사 실시
- 조사 내용
  - 먹거리 종합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 먹거리 관련 세부 사업에 대한 중요도 및 시급성 인식 조사

<그림 III- 2> 대국민 2차 설문조사 개요



## 나. 응답자 특성

### ■ 일반인 대상 2차 설문조사 실시

- 2019년 2월에 걸쳐 전문 온라인 조사기관을 통해 푸드플랜 인식조사 실시
- 응답자 구성
  - 총 응답자는 1,000명이며, 남성 48.2%, 여성 51.8% 응답함
  - 조사 연령은 전국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령대별로 15.6%~22.5%로 구성되었으며, 40대 응답자가 전체의 22.5%로 가장 많음
  - 가구 구성원은 4인 가구 구성이 전체의 37.8%로 가장 많았으며, 5인 이상 가구는 6.1%로 나타남
  - 가구소득은 월 300~500만원이 43.6%로 가장 많았음
  - 2인 이상의 가구 구성 비율이 91%로 전체적으로 1차 조사와 비슷한 구성으로 응답함

〈표 III- 23〉 일반국민 2차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구성현황	
		사례수	%
■ 전체 ■		(1000)	100.0
성별	남성	(482)	48.2
	여성	(518)	51.8
연령	20대	(205)	20.5
	30대	(212)	21.2
	40대	(225)	22.5
	50대	(202)	20.2
	60대 이상	(156)	15.6
	가구원 수	1인	(90)
2인		(202)	20.2
3인		(269)	26.9
4인		(378)	37.8
5인 이상		(61)	6.1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17)	11.7
	200~300만원 미만	(204)	20.4
	300~500만원 미만	(436)	43.6
	500~700만원 미만	(174)	17.4
	700만원 이상	(69)	6.9

주 1) 지역푸드플랜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및 충청남도 시군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주 2) (주)마크로빌 엠브레인 보유패널 대상 인터넷 설문 및 현장조사 실시

■ 다음의 먹거리종합정책(푸드플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점수가 낮을수록 우선도 높음)

- 분야별 먹거리 정책과제중 먹거리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음
  - 순위별로는 먹거리 복지 강화 및 불평등 해소가 가장 우선시 되었으며, 다음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환경친화적 생산 및 소비, 가격 보장 순서로 나타남

〈표 III - 24〉 먹거리종합정책 과제의 우선순위

단위 : 점

구분	먹거리 복지 강화 및 불평등 해소	건강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환경친화적 먹거리 생산 및 소비 확산	적정가격 보장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 조성	먹거리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먹거리기반 도농 연대와 상생 강화	
전체	3.08	3.11	3.49	3.50	3.71	4.12	
지역	서울 서대문구	2.95	3.42	3.55	3.42	3.89	3.77
	대전 유성구	3.38	3.28	3.51	3.71	3.56	3.56
	강원 춘천시	3.12	3.36	3.92	3.56	3.87	3.17
	경북 상주시	3.27	3.55	3.64	3.87	3.61	3.06
	전남 나주시	3.87	3.23	3.18	3.32	3.26	4.14
	충남 아산시	3.17	3.56	3.56	3.45	3.20	4.06
	충남 청양군	3.22	2.60	3.32	3.41	3.69	4.76
	전북 완주군	2.70	2.99	3.27	3.46	3.87	4.71
	전남 해남군	1.94	2.39	3.55	3.45	4.14	5.53
	충남 홍성군	3.17	2.68	3.35	3.39	4.02	4.39
성별	남성	3.10	3.13	3.43	3.46	3.73	4.15
	여성	3.06	3.08	3.53	3.54	3.69	4.09
연령	20대	3.09	3.18	3.58	3.28	3.73	4.15
	30대	3.03	3.08	3.48	3.48	3.74	4.19
	40대	3.08	3.18	3.52	3.59	3.44	4.19
	50대	2.99	3.06	3.44	3.68	3.91	3.92
	60대 이상	3.24	2.99	3.39	3.48	3.78	4.12
가구 구성	1인	3.16	3.39	3.30	3.31	3.84	4.00
	2인	3.21	3.04	3.47	3.50	3.78	4.00
	3인	2.97	3.02	3.48	3.43	3.80	4.29
	4인	2.99	3.11	3.49	3.58	3.64	4.18
	5인 이상	3.52	3.26	3.80	3.59	3.30	3.52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34	2.85	3.15	3.23	3.93	4.50
	2~3백만원 미만	3.00	3.15	3.66	3.59	3.66	3.93
	3~5백만원 미만	3.00	3.12	3.47	3.47	3.68	4.27
	5~7백만원 미만	3.11	3.11	3.51	3.57	3.71	3.98
	7백만원 이상	3.28	3.32	3.59	3.72	3.70	3.39

## ■ 먹거리종합전략 \_ 건강농산물 생산 및 안전관리 분야 중요도 평가(5점 척도)

- 생산 및 안전관리 분야별 평가에서는 인증제도 및 로컬푸드 품질 관리 시스템 운영이 4.25(5점 만점)점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도시농업 확대와 같은 생산관련 활동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응답함

〈표 III - 25〉 건강농산물 생산 및 안전관리 분야 중요도 평가

단위 : 점

구분	공급 개선을 위한 체계 마련	농산물관련 인증제도 및 로컬푸드 품질(안전성)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 구성 및 지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공동체 농장(CSA) 등 도시민 연계 농촌 시설 증대	도시농업(학교텃밭, 옥상, 베란다 텃밭 등) 확대	
전체	4.14	4.25	3.96	4.17	4.01	3.68	
지역	서울 서대문구	4.13	4.26	3.66	3.95	4.03	3.30
	대전 유성구	4.07	4.26	3.66	4.06	3.88	3.32
	강원 춘천시	4.25	4.30	3.92	4.05	3.86	3.28
	경북 상주시	4.07	4.15	3.85	4.05	3.81	3.39
	전남 나주시	3.49	3.69	3.37	3.98	3.57	3.06
	충남 아산시	4.27	4.24	4.01	4.11	4.11	3.53
	충남 청양군	4.11	4.32	4.16	4.32	4.33	4.33
	전북 완주군	4.56	4.55	4.54	4.55	4.21	4.35
	전남 해남군	4.45	4.43	4.29	4.32	4.21	4.15
	충남 홍성군	4.02	4.29	4.10	4.28	4.12	4.09
성별	남성	4.13	4.17	3.94	4.12	3.98	3.63
	여성	4.15	4.32	3.97	4.21	4.05	3.72
연령	20대	4.14	4.19	3.90	4.11	4.02	3.58
	30대	4.11	4.22	3.99	4.12	4.09	3.68
	40대	4.10	4.26	3.96	4.15	3.93	3.72
	50대	4.19	4.29	3.91	4.19	3.96	3.64
	60대 이상	4.19	4.31	4.04	4.31	4.08	3.81
가구 구성	1인	3.98	4.11	3.78	3.88	3.83	3.52
	2인	4.12	4.24	3.98	4.19	4.02	3.75
	3인	4.11	4.28	3.97	4.19	4.05	3.62
	4인	4.19	4.25	3.95	4.21	4.01	3.73
	5인 이상	4.30	4.34	4.10	4.20	4.13	3.64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4.00	4.24	3.90	4.16	3.95	3.74
	2~3백만원 미만	4.12	4.17	4.02	4.13	3.98	3.74
	3~5백만원 미만	4.19	4.25	4.00	4.16	4.09	3.76
	5~7백만원 미만	4.15	4.29	3.83	4.22	3.93	3.47
	7백만원 이상	4.13	4.39	3.88	4.19	3.94	3.43

## ■ 먹거리종합전략 \_ 건강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사업분야 중요도 평가(5점 척도)

- 소비 및 먹거리 복지사업 관련 분야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과정 내 단체급식소에서의 지역 농산물 구매지원이 중요하다고 평가됨
- 공공기관, 중소기업 대상 지역식재료 공급 지원 사업은 3.9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도농복합 및 도시 지역일수록 점수가 낮음

〈표 III - 26〉 건강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사업 분야 중요도 평가

단위 : 점

구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로컬푸드 구매 확대	어린이집 급식 지역식재료 구매 지원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급식 지역식재료 구매 지원	로컬푸드 판매, 가공시설 보급 확대	
전체	4.20	4.19	3.91	3.96	
지역	서울 서대문구	4.10	3.97	3.55	3.70
	대전 유성구	4.27	4.08	3.69	3.71
	강원 춘천시	4.18	4.10	3.68	3.76
	경북 상주시	3.99	3.94	3.86	3.85
	전남 나주시	3.96	3.95	3.36	3.25
	충남 아산시	4.28	4.17	3.87	4.00
	충남 청양군	4.18	4.38	4.14	4.34
	전북 완주군	4.74	4.62	4.44	4.46
	전남 해남군	4.23	4.34	4.37	4.30
	충남 홍성군	4.08	4.30	4.10	4.24
성별	남성	4.18	4.15	3.84	3.92
	여성	4.22	4.22	3.97	4.00
연령	20대	4.10	4.12	3.86	3.95
	30대	4.25	4.15	3.86	3.91
	40대	4.27	4.25	3.89	3.94
	50대	4.17	4.18	3.94	3.92
	60대 이상	4.21	4.23	4.01	4.13
가구 구성	1인	3.99	3.96	3.82	3.87
	2인	4.19	4.12	3.94	4.00
	3인	4.22	4.23	3.95	3.94
	4인	4.22	4.23	3.91	3.96
	5인 이상	4.31	4.25	3.74	4.08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4.05	4.18	4.01	4.06
	2~3백만원 미만	4.17	4.10	3.91	3.94
	3~5백만원 미만	4.21	4.23	3.97	4.02
	5~7백만원 미만	4.33	4.23	3.80	3.82
	7백만원 이상	4.16	4.03	3.57	3.83



〈표 III- 26〉 건강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사업 분야 중요도 평가\_계속

단위 : 점

구분		커뮤니티 키친 등 먹거리 소통공간 확대	취약계층 대상 건강먹거리 및 식품 지원 확대	어린이 대상 과일간식 지원 확대	바른 먹거리 소비시민 양성 및 조직화	도농간 농산물 공급-소비 창구(직판장) 확대
전체		3.68	4.05	4.00	3.96	4.11
지역	서울 서대문구	3.40	4.04	3.69	3.70	4.00
	대전 유성구	3.18	4.01	3.85	3.68	3.99
	강원 춘천시	3.33	4.00	3.82	3.76	4.06
	경북 상주시	3.41	3.80	3.62	3.88	4.15
	전남 나주시	3.12	3.57	3.96	3.60	3.68
	충남 아산시	3.54	3.98	3.85	3.84	4.13
	충남 청양군	4.32	4.28	4.28	4.32	4.38
	전북 완주군	4.32	4.49	4.53	4.34	4.42
	전남 해남군	4.14	4.25	4.27	4.16	4.21
	충남 홍성군	4.01	4.10	4.12	4.29	4.11
성별	남성	3.65	3.99	3.95	3.83	4.06
	여성	3.71	4.11	4.04	4.07	4.16
연령	20대	3.63	4.08	4.02	3.89	4.00
	30대	3.59	4.07	4.04	3.98	4.08
	40대	3.73	3.98	4.05	3.97	4.15
	50대	3.72	4.07	3.88	3.98	4.14
	60대 이상	3.73	4.07	3.99	3.96	4.21
가구 구성	1인	3.42	4.01	3.77	3.73	3.81
	2인	3.70	4.08	3.91	3.98	4.20
	3인	3.61	4.12	4.04	3.97	4.13
	4인	3.76	4.00	4.08	4.01	4.12
	5인 이상	3.77	4.05	3.90	3.87	4.13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63	4.05	3.88	3.89	4.12
	2~3백만원 미만	3.75	4.09	4.07	3.95	4.17
	3~5백만원 미만	3.79	4.10	4.05	4.06	4.14
	5~7백만원 미만	3.47	3.95	3.99	3.83	3.99
	7백만원 이상	3.32	3.91	3.71	3.74	4.10

## ■ 먹거리종합전략 \_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여건 마련 분야 중요도 평가(5점 척도)

- 행정관련 분야와 관련된 먹거리체계 구축 중요도는 먹거리 생산, 소비, 복지, 식생활 개선 분야와 비교해 평균 4점 미만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농업 시군일수록 행정여건 마련을 통한 먹거리 정책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도시 및 도농복합시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 - 27〉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여건 마련 분야 중요도 평가

단위 : 점

구분	먹거리 거버넌스(협의체) 운영지원	먹거리(푸드) 종합지원센터 설치 확대	먹거리 관련 조례(육성근거) 마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먹거리관련 활동 연계 강화	
전체	3.90	3.97	3.90	3.94	
지역	서울 서대문구	3.61	3.67	3.76	3.78
	대전 유성구	3.57	3.69	3.71	3.72
	강원 춘천시	3.66	3.96	3.82	3.85
	경북 상주시	3.72	3.90	3.96	3.82
	전남 나주시	3.54	3.05	3.27	3.34
	충남 아산시	3.74	3.89	3.90	3.93
	충남 청양군	4.26	4.40	4.16	4.45
	전북 완주군	4.63	4.70	4.29	4.24
	전남 해남군	4.19	4.20	4.14	4.05
	충남 홍성군	4.10	4.20	3.98	4.22
성별	남성	3.88	3.88	3.87	3.91
	여성	3.92	4.05	3.93	3.97
연령	20대	3.84	3.89	3.87	3.92
	30대	3.83	4.00	3.82	3.88
	40대	3.95	3.94	3.92	3.97
	50대	3.93	4.00	3.94	3.96
	60대 이상	3.99	4.02	3.96	3.97
가구 구성	1인	3.59	3.79	3.70	3.74
	2인	3.89	3.99	3.91	3.96
	3인	3.94	3.98	3.90	3.90
	4인	3.96	3.99	3.93	4.02
	5인 이상	3.92	3.95	3.97	3.89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90	3.94	3.94	3.91
	2~3백만원 미만	3.88	3.95	3.82	3.99
	3~5백만원 미만	4.00	4.06	4.00	4.03
	5~7백만원 미만	3.75	3.83	3.72	3.72
	7백만원 이상	3.75	3.78	3.87	3.86

## ■ 먹거리종합전략 \_ 식생활 개선 및 환경 보전분야 중요도 평가(5점 척도)

- 식생활 개선 및 환경 보전 관련 세부사업 중요도 평가에서는 음식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와 관련된 사업 추진 중요도가 높게 평가됨
  - 플라스틱 사용문제, 미세먼지, 지구 온난화 등 환경관련 사회적 이슈 증가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III- 28〉 식생활 개선 및 환경 보전분야 세부사업 중요도 평가

단위 : 점

구분		식생활 교육 전문가 양성 및 교육시설 확대	맞춤형 식생활교육 확대(어린이, 성인, 고령자 등)	음식 쓰레기 감량 교육 및 캠페인 확대	음식 쓰레기 자원화(퇴비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지원
전체		4.05	4.12	4.29	4.36
지역	서울 서대문구	3.71	3.89	4.24	4.37
	대전 유성구	3.63	3.89	4.21	4.26
	강원 춘천시	3.73	3.93	4.35	4.42
	경북 상주시	3.95	3.99	4.22	4.30
	전남 나주시	3.81	3.66	4.22	4.16
	충남 아산시	3.96	4.03	4.29	4.43
	충남 청양군	4.35	4.46	4.26	4.56
	전북 완주군	4.79	4.61	4.35	4.51
	전남 해남군	4.36	4.39	4.23	4.23
성별	충남 홍성군	4.23	4.31	4.48	4.40
	남성	4.02	4.03	4.18	4.25
연령	여성	4.08	4.19	4.38	4.47
	20대	3.96	4.07	4.24	4.37
	30대	3.99	4.07	4.28	4.30
	40대	4.05	4.11	4.24	4.37
	50대	4.13	4.11	4.32	4.42
가구구성	60대 이상	4.17	4.26	4.37	4.36
	1인	3.64	3.89	4.17	4.22
	2인	4.09	4.13	4.28	4.40
	3인	4.12	4.15	4.34	4.37
	4인	4.09	4.15	4.26	4.33
가구소득	5인 이상	3.98	4.07	4.41	4.62
	2백만원 미만	3.96	4.17	4.27	4.29
	2~3백만원 미만	4.04	4.10	4.25	4.40
	3~5백만원 미만	4.17	4.19	4.28	4.36
	5~7백만원 미만	3.95	3.99	4.35	4.40
7백만원 이상	3.72	3.91	4.26	4.36	

### ■ 먹거리종합전략 \_ 건강농산물 생산 및 안전관리 분야 시급성 평가(5점 척도)

- 농산물 생산 및 안전관리 분야 시급성에 대한 평가는 공급개선위한 체계마련, 안전성 관리 강화,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련 사업이 시급하다 평가
  - 청양군, 홍성군에서 평균보다 높은 시급성 평가가 있었으며, 도시 지역일수록 시급성 평가 점수는 낮게나타남

〈표 III- 29〉 건강농산물 생산 및 안전관리 분야 시급성 평가

단위 : 점

구분	공급 개선을 위한 체계 마련	농산물관련 인증제도 및 로컬푸드 품질(안전성)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 구성 및 지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공동체 농장(CSA) 등 도시민 연계 농촌 시설 증대	도시농업(학교텃밭, 옥상, 베란다 텃밭 등) 확대	
전체	3.75	3.84	3.63	3.75	3.64	3.28	
지역	서울 서대문구	3.81	3.96	3.49	3.63	2.96	
	대전 유성구	3.72	3.91	3.51	3.75	2.90	
	강원 춘천시	3.87	3.93	3.63	3.84	2.98	
	경북 상주시	3.87	4.07	3.56	3.65	3.13	
	전남 나주시	3.26	3.33	3.15	3.63	2.81	
	충남 아산시	3.75	3.86	3.51	3.65	3.12	
	충남 청양군	4.11	4.20	4.40	4.31	4.33	4.25
	전북 완주군	3.61	3.57	3.48	3.47	3.17	3.23
	전남 해남군	3.52	3.40	3.53	3.50	3.46	3.38
	충남 홍성군	3.96	4.13	4.03	4.10	4.03	4.02
성별	남성	3.72	3.78	3.58	3.68	3.61	3.23
	여성	3.77	3.89	3.67	3.82	3.66	3.33
연령	20대	3.70	3.70	3.55	3.52	3.57	3.05
	30대	3.71	3.84	3.55	3.68	3.58	3.23
	40대	3.75	3.84	3.69	3.81	3.66	3.36
	50대	3.83	3.89	3.64	3.94	3.70	3.30
	60대 이상	3.76	3.94	3.74	3.83	3.67	3.51
가구 구성	1인	3.72	3.80	3.51	3.46	3.50	3.23
	2인	3.75	3.89	3.62	3.81	3.64	3.40
	3인	3.67	3.86	3.61	3.77	3.61	3.18
	4인	3.79	3.78	3.66	3.80	3.67	3.33
	5인 이상	3.85	3.97	3.75	3.64	3.70	3.07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67	3.79	3.66	3.69	3.62	3.47
	2~3백만원 미만	3.80	3.85	3.61	3.70	3.58	3.31
	3~5백만원 미만	3.78	3.82	3.70	3.77	3.72	3.33
	5~7백만원 미만	3.69	3.82	3.44	3.74	3.55	3.10
	7백만원 이상	3.67	4.04	3.62	3.91	3.52	3.00

## ■ 먹거리종합전략 \_ 건강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사업분야 시급성 평가(5점 척도)

- 건강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분야에서는 교육기관 로컬푸드 급식공급,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 확대를 꼽음
  - 시군별로는 청양군, 홍성군 응답자가 먹거리관련 정책 정책이 시급하다는 인식도가 높게 나타남
  - 커뮤니티 키친 도입에 대한 시급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관련시설 도입시 지역내 수요 파악이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됨

〈표 III - 30〉 건강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사업 분야 시급성 평가

단위 : 점

구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로컬푸드 구매 확대	어린이집 급식 지역식재료 구매 지원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급식 지역식재료 구매 지원	로컬푸드 판매, 가공시설 보급 확대
전체		3.82	3.79	3.55	3.61
지역	서울 서대문구	3.82	3.65	3.36	3.51
	대전 유성구	3.98	3.76	3.43	3.45
	강원 춘천시	3.93	3.86	3.51	3.53
	경북 상주시	3.71	3.66	3.46	3.39
	전남 나주시	3.63	3.82	3.22	2.99
	충남 아산시	3.94	3.84	3.43	3.68
	충남 청양군	4.26	4.30	4.24	4.33
	전북 완주군	3.60	3.63	3.39	3.70
	전남 해남군	3.44	3.27	3.49	3.52
	충남 홍성군	3.93	4.13	3.94	3.95
성별	남성	3.79	3.74	3.50	3.56
	여성	3.85	3.84	3.59	3.64
연령	20대	3.68	3.60	3.40	3.57
	30대	3.89	3.81	3.55	3.57
	40대	3.82	3.83	3.60	3.64
	50대	3.85	3.84	3.55	3.57
	60대 이상	3.89	3.90	3.65	3.69
가구 구성	1인	3.60	3.51	3.50	3.47
	2인	3.86	3.84	3.60	3.57
	3인	3.87	3.85	3.52	3.58
	4인	3.80	3.79	3.57	3.65
	5인 이상	3.97	3.82	3.43	3.75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70	3.74	3.55	3.60
	2~3백만원 미만	3.80	3.79	3.57	3.54
	3~5백만원 미만	3.82	3.84	3.62	3.70
	5~7백만원 미만	3.90	3.76	3.40	3.47
	7백만원 이상	3.93	3.65	3.39	3.55

〈표 III- 30〉 건강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사업 분야 시급성 평가\_계속

단위 : 점

구분	커뮤니티 키친 등 먹거리 소통공간 확대	취약계층 대상 건강먹거리 및 식품 지원 확대	어린이 대상 과일간식 지원 확대	바른 먹거리 소비시민 양성 및 조직화	도농간 농산물 공급-소비 창구(직판장) 확대	
전체	3.32	3.74	3.63	3.55	3.71	
지역	서울 서대문구	3.11	3.93	3.42	3.39	3.82
	대전 유성구	2.93	3.82	3.50	3.35	3.64
	강원 춘천시	3.16	3.84	3.61	3.41	3.80
	경북 상주시	3.18	3.45	3.31	3.68	3.89
	전남 나주시	2.81	3.32	3.64	3.30	3.33
	충남 아산시	3.31	3.74	3.50	3.54	3.76
	충남 청양군	4.20	4.35	4.33	4.19	4.25
	전북 완주군	3.18	3.40	3.32	3.16	3.26
	전남 해남군	3.36	3.40	3.52	3.33	3.38
	충남 홍성군	3.94	4.14	4.11	4.16	4.00
성별	남성	3.28	3.68	3.60	3.46	3.70
	여성	3.35	3.79	3.65	3.64	3.73
연령	20대	3.20	3.76	3.57	3.37	3.52
	30대	3.23	3.71	3.61	3.50	3.63
	40대	3.32	3.74	3.68	3.59	3.72
	50대	3.41	3.76	3.60	3.66	3.83
	60대 이상	3.48	3.73	3.68	3.67	3.92
가구 구성	1인	3.21	3.77	3.36	3.37	3.58
	2인	3.40	3.77	3.58	3.64	3.85
	3인	3.26	3.82	3.68	3.59	3.73
	4인	3.32	3.66	3.68	3.53	3.66
	5인 이상	3.46	3.70	3.61	3.51	3.72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38	3.76	3.56	3.56	3.79
	2~3백만원 미만	3.37	3.77	3.58	3.59	3.75
	3~5백만원 미만	3.40	3.75	3.68	3.59	3.70
	5~7백만원 미만	3.10	3.65	3.63	3.43	3.57
	7백만원 이상	3.09	3.74	3.48	3.45	3.91

## ■ 먹거리종합전략 \_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여건 마련 분야 시급성 평가(5점 척도)

-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관련 행정 여건 구축 시급성은 3.53점에서 3.60점으로 비슷한 평가를 받음
  - 청양, 홍성군 응답자의 평균 점수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나주시의 경우 행정여건 마련에 대한 시급성 평가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남

〈표 III - 31〉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여건 마련 분야 시급성 평가

단위 : 점

구분	먹거리 거버넌스(협의체) 운영지원	먹거리(푸드) 종합지원센터 설치 확대	먹거리 관련 조례(육성근거) 마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먹거리관련 활동 연계 강화	
전체	3.53	3.58	3.60	3.58	
지역	서울 서대문구	3.35	3.40	3.57	3.63
	대전 유성구	3.28	3.38	3.52	3.47
	강원 춘천시	3.38	3.63	3.56	3.59
	경북 상주시	3.49	3.56	3.66	3.55
	전남 나주시	3.18	3.02	3.17	3.06
	충남 아산시	3.47	3.59	3.61	3.62
	충남 청양군	4.25	4.35	4.43	4.46
	전북 완주군	3.58	3.45	3.13	3.03
	전남 해남군	3.34	3.31	3.41	3.29
	충남 홍성군	3.94	4.07	3.93	4.14
성별	남성	3.48	3.52	3.60	3.54
	여성	3.57	3.63	3.59	3.62
연령	20대	3.45	3.49	3.59	3.55
	30대	3.42	3.54	3.53	3.55
	40대	3.55	3.61	3.65	3.56
	50대	3.62	3.61	3.63	3.68
	60대 이상	3.60	3.65	3.59	3.59
가구 구성	1인	3.22	3.42	3.44	3.56
	2인	3.60	3.65	3.65	3.65
	3인	3.53	3.57	3.59	3.56
	4인	3.55	3.56	3.61	3.55
	5인 이상	3.56	3.69	3.62	3.72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60	3.59	3.66	3.61
	2~3백만원 미만	3.48	3.56	3.51	3.62
	3~5백만원 미만	3.64	3.66	3.69	3.63
	5~7백만원 미만	3.30	3.41	3.43	3.34
	7백만원 이상	3.36	3.48	3.64	3.72



## ■ 먹거리종합전략 \_ 식생활 개선 및 환경 보전분야 시급성 평가(5점 척도)

- 식생활 개선 및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음식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의 시급성이 더 높다고 판단함
  - 도시 및 도농복합시군에서 환경분야 관련 세부사업 추진 시급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식생활 교육관련 시급성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남
  - 식생활관련 교육 전문가 양성 및 시설 확산에 대한 시급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더 낮게 평가함

〈표 III - 32〉 식생활 개선 및 환경 보전분야 세부사업 시급성 평가

단위 : 점

구분		식생활 교육 전문가 양성 및 교육시설 확대	맞춤형 식생활교육 확대(어린이, 성인, 고령자 등)	음식 쓰레기 감량 교육 및 캠페인 확대	음식 쓰레기 자원화(퇴비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지원
전체		3.64	3.71	4.05	4.04
지역	서울 서대문구	3.39	3.52	4.13	4.20
	대전 유성구	3.34	3.56	4.08	4.14
	강원 춘천시	3.39	3.50	4.13	4.27
	경북 상주시	3.66	3.67	4.14	4.20
	전남 나주시	3.37	3.38	4.01	3.73
	충남 아산시	3.61	3.83	4.22	4.27
	충남 청양군	4.30	4.38	4.49	4.47
	전북 완주군	3.61	3.36	3.27	3.24
	전남 해남군	3.61	3.61	3.56	3.53
	충남 홍성군	4.08	4.25	4.46	4.35
성별	남성	3.58	3.64	3.94	3.93
	여성	3.69	3.77	4.15	4.14
연령	20대	3.52	3.62	4.00	4.03
	30대	3.51	3.68	3.97	3.96
	40대	3.68	3.69	4.02	4.05
	50대	3.74	3.72	4.13	4.09
	60대 이상	3.75	3.84	4.16	4.08
가구 구성	1인	3.34	3.57	4.04	4.04
	2인	3.69	3.79	4.07	4.08
	3인	3.71	3.74	4.11	4.02
	4인	3.66	3.69	3.98	3.99
	5인 이상	3.43	3.62	4.11	4.26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60	3.79	4.08	4.04
	2~3백만원 미만	3.68	3.71	4.01	4.02
	3~5백만원 미만	3.72	3.75	4.05	3.99
	5~7백만원 미만	3.47	3.57	4.06	4.09
	7백만원 이상	3.49	3.61	4.07	4.28

### 3. 요약 및 시사점

#### ■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 응답자의 25.7%가 먹거리 종합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향후 홍보 확대 필요
- 최근 푸드플랜 수립관련 내부 홍보 및 로컬푸드 활동을 이어온 청양, 완주가 타 지역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푸드플랜에 대한 인지도 확대를 위해서는 시범사업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함
- 신문, 방송매체를 통한 정보획득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관광, 음식 등의 콘텐츠와 연계한 먹거리정책 홍보가 유효할 것으로 예상됨

#### ■ 안전먹거리 소비 활동 및 인식 개선 관련

- 일반소비자는 원산지 확인, 로컬푸드 구매가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방법이라고 인식함
- 완주와 나주의 경우 로컬푸드 소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70%, 58%로 높아, 로컬푸드 인증 체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다고 확인됨
-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 먹거리가 타지역 먹거리보다 신선하고,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58.8%가 최근 5년 먹거리 표시제도 관리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원산지 관리강화, 이력추적제 활성화’등이 병행되면, 지역농산물 소비 확산에 대한 소비자 동기부여가 강해 질 것으로 판단됨

#### ■ 건강한 농산물 구입 여건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개선

- 식품안전성 및 위생 여건이 지난 5년간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55.7%로 높았으며, 관련분야 전체 점수는 7점 만점에서 4.58 수준으로 나타남
- 국내산 농산물 섭취여부에 대한 지역,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국내산 섭취에 대한 개선 응답 비율이 소폭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농산물 구매시 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68.3%가 최근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 최근 ‘먹방, 쿡방’등 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 양상 과정에서 ‘삼시세끼 프로그램’과 같은 ‘먹거리 본질’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와 구매 관심도가 개선 된 것으로 추정됨

## ■ 먹거리종합정책(푸드플랜)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 할 일

- 먹거리종합정책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지역 푸드자원 순환체계 마련을 꼽음
- 과제별로는 지역 푸드자원 순환체계 마련 >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체계 구축 > 먹거리 복지 증진 > 먹거리 공급 안전성 증대 >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순으로 과제 수행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업무 추진 방식은 국가먹거리정책위원회와 같은 조정기구를 두는게 가장 좋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음
- 거버넌스 필수 참여조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5개 그룹은 지역 농식품 유통 대표자, 식품정책 행정 담당자, 지역 농업인 대표, 식품 영양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활동가 순으로 나타남
- 지역농산물 소비에 우선한 농산물 유통구조 마련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 된 것으로 보이며, 도농 및 도시 소비자 대상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임

## ■ 먹거리 정책 분야별 세부사업의 추진 중요도가 높은 사업

- 건강농산물 생산 및 안전관리 분야 중요도 평가에서는 인증제도 및 로컬푸드 품질 관리 시스템 운영이 4.25(5점 만점)점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 건강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사업분야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과정 내 단체급식소에서의 지역 농산물 구매지원이 중요하다고 평가됨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여건 마련 분야에 대해서는 평균 4점 미만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 식생활 개선 및 환경 보전분야에 대해서는 음식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와 관련된 사업 추진 중요도가 높게 평가함
- 분야별 점수 분포를 보면, 환경보전분야, 안전관리분야 세부사업의 중요도 평가 점수가 높고, 타분야는 4점(5점 만점) 내외로 다소 낮게 나타남
- 특히 식생활교육관련 중요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식품관련 다양한 정보 범람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식생활 교육은 '질, 양'에 대한 교육보다는 '환경, 순환'과 연계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제 4 장

### 선도지자체 시범사업 모니터링

- ① 1차 모니터링 결과
- ② 2차 모니터링 결과



## 1. 1차 모니터링 결과

### 가. 개요

■ 일시 : 2018.9.13.~30.

■ 진행 : 자문위원 및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컨설팅 PM

- 자문위원 :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무총장, (사)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사)농정연구센터 부소장, 지역농업네트워크 총청 협동조합 이사장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먹거리실태 조사 : 지역내 학교급식·공공급식 현황,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안전성 관리체계, 식생활교육 현황, 먹거리관련 시민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먹거리생태계) 등
- 먹거리정책 분석 : 분야별 담당부서, 예산규모, 정책대상, 지원방식과 기준, 문제점 및 연계가능성 검토 등
-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 지자체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행정의 타부서 참여 방식 등

■ 푸드플랜 수립 자문

- 푸드플랜 수립 방향, 타지역 우수사례 제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농식품부에 전달함

### 나. 주요 모니터링 및 자문 결과

#### ① 서대문구 (9/17)

■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전략팀 4명으로 2018년 8월 설치

- 푸드플랜, 공공급식센터, 학교급식, 식생활교육 업무를 담당함

■ 도농상생공공급식 지원센터 출범 2주차로 센터 안정화에 집중

- 어린이집 식재료 공동구매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일원화함
  - 기존에는 아이쿱, 한살림 생협 등 4개 업체에서 진행함

- 전주시와 공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배송)기관은 품앗이마을임
  - 전주시 자체인증 농산물을 공급받을 예정임
  - 수탁자가 부족물품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내 생협에서 공급받음
    - \* 학교급식은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구청은 쌀과 김치 공급업체만 선정함
    - 안심식재료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음

### ■ 도농상생 공공급식 참여 현황

- 현재 어린이집 75개소(전체 158개소), 복지시설 1개소에 3,200명분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음. 어린이집 75개소 가운데 45개소는 적극적인 반면, 30개소는 관망 추세임
- 복지기관은 다소 복잡함. 무료급식을 우선으로 하며, 도시락배달 등 복잡한 구조임
  - 도농상생공공급식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인 급식시설
  - 농식품부 공공급식조례 가이드라인과 서울시 공공급식 조례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서울시의 역할과 구청의 역할에 대한 관계 정립이 필요함

### ■ 먹거리관련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마을단위 생협이 대표적임
  - 현재 생협 매장은 총 5개소임 (두레 1, 한살림 2, 마을생협 1, 아이쿱생협 1)
- 식생활교육 강사들로 구성된 집밥협동조합도 있음

### ■ 식생활교육

- 도시농부, 생태텃밭 등의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식생활교육이 일부 포함됨
- 전통발효학교, 안심식재료 사업을 구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 먹거리관련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 필요 : 기존 조직은 대부분 미활동

#### ■ (자문) 서울시 푸드플랜 계획과 연계한 푸드플랜 구체화 필요

- 학교급식, 공공급식 뿐만 아니라 식생활교육 부문도 연계 강화 필요
- 지역내 먹거리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 파악 필요

#### ■ (자문) 구청 공무원 대상 내부 학습 프로그램 기획 추진 필요

- 대전 유성구, 전북 완주군 등 푸드플랜 우수 사례 소개
- 농식품부 정책방향 등에 대한 공유 등

## ② 유성구(9/18)

### □ 실태조사

#### ■ 학교급식

- 초등학교 및 중학교 대상 연간 급식에 대한 품목과 공급량 등에 대한 분석을 완료함
- 관내 학교 eaT 프로그램을 100% 사용하고 있으며, 친환경은 별도 공급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지역 식재료 거의 사용하지 않음(쌀 포함)
- 지자체장 공약 1순위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학교(영양교사)에서는 통합 급식체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교육청 등의 의견수렴 결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자체의 몫으로 인식하고 있음

#### ■ 공공급식

- 노인, 장애인, 아동,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양로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영유아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초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음
- 지원사업 대상으로 급식시스템 분석을 완료함. 지역식재료 공급률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진행 중이며, 현재 추진중인 대상별 지원사업 중심으로 정책대상 선정 및 신규 발굴 등에 대해 검토 중임

#### ■ 공공기관급식

- 대덕 특구 연구기관 35개 중 1/3 정도 기관에 대해 기초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직영/위탁 등의 급식 시스템 파악 중임. 현재 직영 6개 기관(500명 이상)에서 참여 의향을 보임
- 주요 실태조사 내용은 단가, 식수인원, 운영형태(위탁업체 포함) 등이며, 우선으로 조사함
- 추가적으로 군부대(7개소) 및 정부청사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급식 관련 내용을 파악할 예정임. 군부대의 경우 협조가 되지 않아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많음

#### ■ 생산 현황(로컬푸드 포함)

- 바른유성찬 인증(인증비 지원 포함)에 현재 172농가 참여함. 공급 품목과 물량 확대를 위해서 인근 지역 등 판로 개척이 필요한 상황함
- 농가별 품목, 생산 계획 품목 등에 대해 작부체계, 기획생산, 계약재배 및 생산량 대비 소비량을 추정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품앗이마을)에서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매



장 및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판로 확대. 중간지원조직은 품앗이 생협 등 비영리법인 등으로 계속 분화하여 확대할 예정임

- 농가조직 관련 바른유성찬 인증 농가 외 대전 전지역 확대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바른유성찬 생산자연합회를 설립하여 개별 농가단위 가입 형태로 확대할 계획임

### ■ 가공 현황(로컬푸드 포함)

- 관내 가공업체, 유통업체가 많지만 실질적 사업 연계가 어려움. 관내 생산자가 부족하여 원재료 공급의 어려움으로 두류, 식초, 간장, 반찬 정도만 적용 가능한 상황임

### ■ 유통 현황(로컬푸드 포함)

- 학교급식, 직매장(4곳), 농협 등에 대해 지역내 소비량을 추정함
- 경로별 유통실태조사는 연구기관에서 수행 중이며, 지역농산물 소비율은 직거래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음

### ■ 소비 현황

- 소비자조직으로 품앗이 생협 12천명, 한살림 및 아이쿱 등 푸드플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비실태 파악 중임

### ■ 안전관리

- 위생점검 부분은 연구기관에서 유성구청 위생과와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 인증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는 농관원, 민간,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등이 다자협약을 통해 방사능 및 잔류농약 검사 실시하고 있음

### ■ 식생활교육

- 식생활교육은 대전식생활교육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대부분 실행하고 있으며, 별도 민간에서는 로컬푸드 교육센터를 통해 어린이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문제점으로 대전식생활교육네트워크의 경우, 구별 식생활교육네트워크 구성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단위사업이 없으며, 강사풀 조직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음
- 보건소 프로그램인 영양플러스 사업, 독거노인 도시락사업과 연계 가능함

### ■ 폐기 및 재활용

-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항은 없음. 현재는 푸드플랜 내 중점 사항이 아님
- 대전시의 경우 쓰레기 소각장/분리장 문제가 심각하며, 국가적인 지침이 필요함

## ■ 먹거리관련시민사회단체 “대전푸드플랜네트워크”

- 2018년 6월 출범한 대전푸드플랜네트워크는 생산자, 소비자, 공동체, 환경운동, 학부모, 가공(협동조합) 등의 30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생협 등이 포함되어 있어 회원이 8만명에 달함
- 민간 자치로 운영되며, 별도 지원 없음
- 푸드플랜 아카데미 운영 : 주 4시간 2개월 과정으로 푸드플랜 활동가 과정 운영 중임

## □ 먹거리정책 분석

### ■ 학교급식

- 현재 대전시는 초중 무상급식 및 친환경급식으로 700억 예산 책정, 이중 유성구는 200억 규모이며,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019년부터 360억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임
- 유성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포함 조례 준비 중임

### ■ 공공급식

- 영유아 대상 꾸러미 배송지원 등 사업 7억원이며, 2019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9억원으로 확대 예정임
- 공공기관급식 : 별도 예산 없으며, 향후에도 지원사업 없을 예정임

### ■ 생산지원 : 인증농산물 관련 검사비, 포장재 지원(연 7천만원 수준)

- 지역경제과와 별도로 생산지도사업 연계가 가능함

### ■ 가공지원사업

- 가공지원센터는 행자부 사업으로 설립함. 현재 3년차로 반찬, 제빵, 도시락 등 창업 파생 역할 수행하며 15개 협동조합형 기업 배출함
  - 운영비 및 교육프로그램 등 사업비는 연 7천만원 수준임
- 푸드통합지원센터(2층)에서 두부, 간장, 식초, 소스류 생산 예정

### ■ 유통지원사업 : 별도 연계된 지원사업 없음

- 농정 담당부서의 경우 연 10억 내외 사업비는 있으나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님

### ■ 기타사업

- 소비홍보지원사업 : 소식지 발간 등 연 1천만원 정도 예산

- 안전관리사업 : 각종 검사비 및 포장재 지원 관련 연간 5천만원 예산
- 식생활교육사업 : 구 자체 도농교류 행사 등 1.8억원 예산
- 기타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2억원(전액 구비), 공동체 지원(모임 활성화) 2억원 지원

#### □ 계획수립 거버넌스

- 기존 조직인 로컬푸드활성화위원회(20명 이내 구성, 4개 분과)를 해체하고 푸드위원회(30명 수준) 재구성 예정임
- 지자체 역량강화 : 별도 미팅, 포럼, 워크숍 계획 중
- 지역민 의견수렴 : 일반 주민대상 설문조사 진행 중이며, 생산자, 유통업체 조사는 완료함
  - 2014년 사회조사 조사 : 시급 과제로 로컬푸드 1위, 이를 통해 현사업 시작
  - 현재까지 포럼 6회, 대중 강좌 연 2~4회 진행하고 있음

#### □ 비전과 목표

- 비전(안) : “민관산군이 함께하는 먹거리 자치 1번지 육성”
- 사업목표 :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활성화, 인근 지역 도농상생 연대 등 작성 중임

#### □ 푸드위원회 및 추진체계

##### ■ 부서간 정책조정 : 복지정책과, 위생과 중심으로 정책조정 완료

- 지역경제과는 미실시 : 연계가능한 사업 없음

##### ■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 2018년 10월 개장 예정이며, 센터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대한 친환경농산물과 지역농산물 공급사업, 직매장 물류 배송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 규모 : 부지 480평, 건물 160평 등 3층, 80억원 규모(부지 20억원 포함)
- 운영인력은 33명 정도이며, 시설은 로컬푸드 유통물류센터, 가공지원센



〈그림 IV- 1〉 유성구 푸드통합지원센터

터, 식품개발실, 조리실습실, 실험실, 인큐베이팅실,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음

- 7월부터 로컬푸드를 이용하여 두부, 간장, 식초, 각종 소스류 등의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에 공급할 계획임
- 운영비는 인건비, 물류배송 차량 등 연간 2~3억원 정도로 예상됨
- 소유는 지자체가 하지만, 운영은 품앗이마을협동조합에 위탁함

## □ 자문내용

### ■ 대전·세종·충청권의 광역 먹거리망 구축 추진 검토

- 학교급식, 공공급식 현물공급체계 구축 및 확대를 위해 광역 먹거리망 구축 추진함
- 학교급식센터도 부지확보와 대규모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전과 충남 인접 지역에 광역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하고, 운영주체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운영함
- 안정적인 농산물 계약재배를 위해서도 광역먹거리망이 필요함. 특히 친환경 급식은 소규모 생산기반으로는 대처하기 힘들. 광역 먹거리망 구축이 필요함

## ③ 상주(9/28)

### ■ 학교급식 : 친환경, 일반농산물, 축산물로 구분 진행

- 초중고 58개교에 1만3천명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음
  -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음
- 금액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이 15%, 일반농축산물이 85% 비율임
-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 축산물 공급체계가 각각 다름. 학교에서는 3번 검품해야 하는 상황으로 통합 공급체계 마련을 요청함. 또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 물류효율이 낮아 공급을 꺼리고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선택권도 제약됨
  - 친환경농산물은 도 사업으로 진행. 농협 군위 유통센터에서 공급
  - 일반농산물은 지역내 농협에서 공급
  - 축산물은 축협에서 공급
- 단가결정은 친환경은 도단위로 결정되고, 부식품목은 학교별로 결정하고 있음
- 일반농산물의 경우 공급규모가 너무 적어 지역내 계획생산체계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친환경농산물도 군위 유통센터에서 도단위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산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

- 일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업체는 17개소이며,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음
- 공급업체는 대부분 도매시장에서 조달하여 공급하고, 농협 2개소는 주로 지역내에서 조달하여 공급함
- 친환경농산물은 지역산이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 공공급식

- 공공급식, 공공기관급식에 대한 기본현황 조사는 완료한 상태이며, 대부분 외주로 운영하고 있음
  - 전체적인 공공급식 대상자는 1만2천명 수준으로 추정됨
  - 현재 어린이집, 50인 이상 단체급식(기업체 15개소 포함), 공공기관급식 실태와 수요에 세부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조사대상 : 어린이집 49개소, 단체급식시설 71개소(노인요양시설, 어린이보호시설 등)
  - 조사결과, 교통소, 경북대상주캠퍼스, 법원, 세무서, 상주시청 등 지역내 큰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외주로 운영되고 있었음
- 학교·공공급식 공급업체 17개소(농협 포함)에 대해서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함. 대부분 농산물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신 공급해 주면 좋겠다고 함. 배송만 담당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음

## ■ 로컬푸드(직매장)

- 관내 로컬푸드 매장은 모두 3개소임. 그 가운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1개소, 곳감직매장내 직매장 1개소, 농협 샵인샵 1개소(매대 운영 수준)임
-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을 2018년 하반기에 개장하였으며, 조합원 193명의 상주시 로컬푸드협동조합(2017년 7월 설립)이 운영하고 있음
- 로컬푸드 공급 계약재배 조직화가 미흡함. 로컬푸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임. 현재는 직매장도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상주농업은 전반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가격이 높고, 주로 과수, 시설채소 등 가격이 높은 작물 중심으로 대량생산되기 때문에 지역내 소비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적음

## ■ 가공업체 : 관내 가공업체는 115개소로 전수조사 예정

## ■ 식생활, 복지 영역

- 식생활실태에 대해서는 사회조사 데이터가 유일하며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복지부서 등과 연계하여 세부 실태조사 추진 예정
- 그동안 식생활교육은 학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보건소에서 주로 진행하였으며, 농업부서에서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 폐기 및 재활용 영역

- 기초 실태조사 진행 중임
  - 현재 자원화센터가 1개소 있으며, 자원화된 생산물은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음

## ■ 시민사회 및 사회적경제

- 먹거리 시민단체로 현재까지 확인된 단체는 없음
- 먹거리관련 공동체는 소비자단체를 포함하여 30개소가 있음
- 소비자조직은 한살림, 아이쿱생협이 각각 1개소씩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 조합원 현황, 활동 내용 등은 추가로 파악할 계획임
- 사회적경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이나 인증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 ■ 먹거리정책 및 조례 분석

- 정책데이터 수집, 분석 진행 중임
- 학교급식조례, 친환경급식조례, 로컬푸드육성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학교급식조례는 개정 필요함

## ■ 거버넌스 구성

- 푸드플랜에 대해 현장의 요구는 높은 편이나, 행정내부의 공감대가 부족함
  - 상주시 내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음. 간담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임
  - 단체장의 관심 유도,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의 배치 등이 선행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함
  - 시장직속으로 미래전략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략사업으로 푸드플랜은 빠짐. 스마트팜밸리, 도시재생 등의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도시재생, 스마트팜밸리 사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민관 거버넌스 구성은 10월부터 운영 예정임. 현재 영역별 참여인원 발굴은 완료한 상태임
- 2019년 초에 조직개편 예정임. 먹거리 전담부서 설치를 요청한 상태임

### ■ (자문) 농업인단체와 먹거리시민단체 조사 및 공감대 형성 강화

- 상주는 대규모 농업생산 지역으로 지역생산·지역소비의 관점으로는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으며, 변화의 속도가 더딘 지역임
- 따라서 유통중심, 농협중심 접근보다는 농업인단체, 먹거리시민단체 등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함. 이를 촉진하기 위해 생협 등 소비자단체에 대한 네트워크 추진 필요

### ■ (자문) 일반주민의 먹거리 실태에 대한 세부조사를 통해 이슈화 추진

- 푸드플랜에 대한 행정내부와 지역내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일반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의제를 발굴하고 이슈화하는 추진 검토

## ④ 완주(9/27)

### ■ 학교급식 · 공공급식

- 학교급식은 89개교 초중고생 2만여명에게 지역농산물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음
- 서울시 강동구와 공공급식 도농상생 협약을 맺고 강동구 100여개 어린이집 5천명을 대상으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사업을 진행 중임
- 또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현대축구장 등 8개 공공기관에도 급식 식재료를 공급함
  - 공공기관 급식 확대가 어려움. 가장 큰 이유는 가격차로, 유통업체의 10% 이상 가격이 높음
  - 지역농산물이 신선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가격차에 대한 인식과 오랜 거래관행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음
- 2018년부터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음
  - 기존 경쟁입찰을 매월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건소와 상의하여 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계약법상 입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월별로 분할하여 2천만원 이하 단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
- 10월부터는 마을 공동급식에도 완주산 식재료 공급을 확대할 계획임
- 완주군 인구를 10만명으로 볼 때, 공공급식으로 최대 공급 가능인원은 4만명 정도로 추정됨. 완주군 관내가 2.5~3만명 수준이고, 전주혁신도시와 관외지역 공급이 1~1.5만명 수준으로 전망함

- 현재 공공급식센터 시설은 2만명 공급 가능 수준으로 사업확대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함

## ■ 생산부문

- 현재 로컬푸드는 GAP, 무제초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친환경농업으로 단계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임
- 계획생산농가는 현재 2,500명 수준으로 일부는 겹치기도 하지만 로컬푸드협동조합에 1,100명, 지역농협에 1,400명 정도 출하하고 있음. 두달에 1회씩 협동조합과 농협이 협의회를 개최함
- 계획생산 농가는 귀농귀촌인 등이 신규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계약생산 가능농가를 3,000농가 정도로 예상함. 이후에는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현재 농약사용을 억제시키고 있으며, 미판매 문제와 가격결정 문제도 큰 어려움이 없음
- 품목결정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농가들과 운영주체가 스스로 조정함

## ■ 유통·가공부문

- 관내 농산물 생산액은 3천억원 정도이며, 그 가운데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가 500억원(축산물 포함, 20% 수준)으로 25% 정도로 추정됨
  - 현재 관외 반입물량에 대한 추정자료는 없음
  - 전통시장은 4개소(상설 3, 비상설 1)가 있으나, 지역산 사용에 대해서는 조사자료 없음
- 기술센터에서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 소비·식생활부문

-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소비자 모니터단 50~60명 운영하고 있음
- 소비자 교육 실시하고 있음. 아버지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음
- 먹거리 연구회를 1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 영양교사와 교장선생님 대상으로 공동식단체 운영, 식농교육을 실시함
  - '19년에는 학생대상 실시할 예정임

## ■ 지역공동체

- 마을기업, 자활기업, CB공동체, 경력단절여성 등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2010년부터 추진함. 현재 200개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최근 전수조사 실시)
- Social goods라는 중간지원조직을 280여개 공동체 참여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함. 400개 공동체 육성을 목표로함



## ■ 재단법인 운영 및 추진체계

-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운영비로 10억원 정도를 지원함. 운영비를 먹거리 공공성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음
  - 참고로 그동안 하드웨어 구축에 350억원(공공급식지원센터, 가공센터, 직매장 등) 정도가 투자됨
  - 농협의 샵인샵 운영은 투자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행정 내부 추진체계는 먹거리정책 관련 과 신설을 추진함
- 군청내에 부서간 협력을 위해 과장급으로 구성된 TF팀(6개팀) 마련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함
- 푸드위원회는 민간 중심으로 15명 내외로 10월경 구성할 계획임

## ■ (자문) 학교급식·공공급식에 ‘건강식단’ 기준 설정 및 운영 검토

- 학교급식·공공급식 및 공공기관급식에 신선·안전에 기반한 로컬푸드 현물공급을 추진하는 것만으로 다소 한계가 있어 보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제철음식 중심으로 ‘건강식단’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로컬푸드의 새로운 가치로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함
  - 다만, 학교급식 등의 영양사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비엔나시 등의 해외사례를 참조함

## ■ (자문) 먹거리 기본권을 반영한 먹거리기본조례 제정 추진

- 먹거리 기본권 실현,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푸드플랜의 주기적 수립과 모니터링, 먹거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반영한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먹거리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 특히, 주민참여형 먹거리 의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⑤ 청양군(9/18)

### ■ 실태조사

- 생산 실태조사는 5개면에 걸쳐 100농가씩 표본조사를 실시함. 면적, 생산품목, 계약생산 참여의향 등을 조사함
- 가공 실태를 농가 단위까지 제조업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구기자 중심으로 가공의 다양성이 필요함

- 농민가공센터를 통해 반찬류, 소스류, 유지류 등 생산 후 직매장, 공공급식, 농협 하나마트 등 관내 공급을 활성화함. 그 이후 외부 시장 공급을 추진함
- 유통 및 소비 실태조사는 간략하게 조사함. 별도의 소비자 조직은 없음
-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 기획생산을 위한 농가조직화가 가능하도록 농가현황을 파악함. 이를 통해 농가조직화 대상인력을 선정할 계획임
- 2018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체계로 전환함
  - 앞으로 유치원, 대학교도 공급할 예정임. 현재 공급업체를 선정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친환경 60%, 일반 30% 정도가 지역산임. 향후 80% 까지 높여 나갈 계획임
- 현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등학교(3식 포함)까지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임
- 현재는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로당과 아동급식센터에 도시락 급식을 공급할 계획임
- 2018.8.15. 공공급식 지원조례를 공포함
- 푸드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체계로 운영할 계획임
  - 농민가공센터와 학교급식센터를 결합한 형태로 부지 및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 ■ 로컬푸드 직매장

- 로컬푸드 직매장은 1개소를 운영중이며, 연 매출은 10억원 수준임
- 앞으로 관내 1개소와 관외(대전 유성구 예정)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임

## ■ 먹거리 정책

- 앞으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임
- 경로당, 결식아동, 무위탁노인 대상 지원사업을 도시락 공급으로 변경할 예정임
- 로컬푸드 농가 대상 매년 하우스 10동(자부담 20%)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임
- 가공분야는 농민가공센터와 교육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임
- 유통분야는 직매장, 급식 분야를 중심으로 관내 수집 및 관외 직매장 물류 차량 등 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소비홍보는 관외 직매장 건축 사업(HW 20억, 부지 10억) 추경 예산에 반영 중임
- 안전관리는 기술센터와 청양푸드인증센터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임

## ■ 거버넌스

- 청양군 푸드플랜 민간거버넌스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고 있음
  -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농협, 사회적경제, 외부전문기관, 의회, 행정 등 30명으로 구성함. 현재까지 푸드플랜 설명, 계획 논의, 중간보고회 등 3차례 개최함
  - 향후 실무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임
- 내부적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주민 설명회(총 600명 정도 참석)와 행정 자체 워크숍을 진행함
- 지역민의 푸드플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을소식지, 군정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 강화 예정임

## ■ 비전과 목표(현재 확정된 상태)

- 청양군 푸드플랜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군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이며, 통합적 푸드플랜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 현재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도출을 완료한 상태임

## ■ 실행조직(안) : 거의 확정된 상태

- 푸드통합지원센터는 기존 체계인 부자농촌지원재단법인 산하로 설치할 계획임
- 행정체계도 개편하여 먹거리정책과를 신설할 계획임

## ■ 실증연구 :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제작 예정

## ■ 기타사항

- 지자체장 의지가 중요함. 전 군수 및 현 군수 모두 ‘푸드플랜’이 공약사항임
-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등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하고자 함. 현재는 푸드플랜과 바로 연계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임
- 관내 체험마을 13개소는 푸드플랜과의 연계성이 낮음. 앞으로 농촌형-도시형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푸드플랜의 수립과 실행에 전문인력이 필요함
- 현재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로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중앙에서의 관련 법령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함

## ⑥ 해남군 (9.20)

### ■ 추진체계 구축

- 먹거리전략 TF를 8.1. 설치함.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정식직재로 편입될 예정임
- 군내 핵심 관계자 2박3일 선진지(화성, 세종, 나주, 광산구) 견학으로 공감대를 강화함

### ■ 학교급식 · 공공급식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88개교 7,587명 대상 친환경학교급식차액지원 사업을 실시함
  - 전통장류지원사업(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도 4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이 사업은 2년차 시범사업으로 2018년에 10개교에 10백만원을 지원함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 부지, 운영방식 검토 단계
  -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임
  - '19년 재단법인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임
- 공공급식, 공공기관급식 실태조사 진행 중 : 26천명 수준

### ■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 '20년 개장 목표 : 직매장 1개소, 농협 샵인샵 1개소

### ■ 실태조사 : 농가전수조사 실시

- 농가전수조사, 농협DB, 소비 분석 모두 10월 완료하고, 11월 최종분석 결과 산출 예정임
  - 생산·유통 통계조사, 농협DB 분석작업 완료
  - 소비파트 자료 분석 : 로컬푸드직매장 품목별 생산량, 관내 소비량 추정
- 관내 외식업체 식재료 사용실태 조사는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함
- 가공업체 실태조사도 108개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함.
  - 지역산 사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 먹거리관련 시민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 생협은 조합원 1천명 수준의 한울남도생협이 있음
  - 한울남도생협에서 자연드림매장 운영 1개소하고 있음
  - 식생활교육은 하지 않고 단순 문화강좌만 진행하고 있음
- 학교급식관련 학부모단체로는 학부모 교육연대가 있음

### ■ 안전성검사 : 농업기술센터 검사기능 보완으로 추진

-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먹거리TF에서 320개 항목에 대해 샘플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식생활교육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영양, 보건소 영양사업 진행**
- 농업부서에서는 식생활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
- 위생팀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운영비로 연간 1~2억원을 지원함. 영양식단교육 등을 실시함
- **폐기 및 재활용 실태 : 푸드뱅크, 자원화 등 실태 조사 예정**
- **10월 이후 민관 거버넌스 및 행정내부 공감대 확대 추진**
- **무상급식조례, 로컬푸드조례(학교급식 내용 포함)**
- 공공급식조례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임
-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임
- **(자문) 급식지원센터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지역여건상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자문) 지역먹거리순환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추진 필요 :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에 대한 우선 접근 필요**

## ⑦ 나주시 (9/20)

- **공공기관 급식 시범사업에 집중**
- 현재까지 16개 공공기관과 급식관련 7차 회의 진행함
- 공공급식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10월1일 공포됨
- 14개 공공기관 대상 로컬푸드 공급 추진함. 전량 공급시 32~35억원 규모(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품 포함)로 추정됨
-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시설을 보완하여 호남권 친환경물류센터를 이용할 계획임
  - 이 시설을 이용하여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예정임
- 공공기관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조직화는 현재 진행중임 (전체 농가수 11천호)
- **공공기관급식 공급기관 :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의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은 나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와 나주 산업화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음. 공공기관급식의 공급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함
  - 재단의 총 출연금 : 19억원 (2006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액)
  -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 23명(재단 총원 29명). 인건비 4억원 수준 ('18년 출연금 9억원)
  - 수수료 10~15% : 순회차량 출하시 15%, 농가 직접 진열 10%
  - 매출액 : 27억원('17년). 직매장 개장 2015년 11월 25일 개장

#### ■ 학교급식 : 32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 158백명 ('17.3. 기준)

- 학교공급기관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매년 선정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는 정확히 파악 안됨. 조공법인 74품목 600호 수준으로 추정됨
- 학교급식에 된장, 두부 등 일부 가공품도 납품하고 있음. 공공기관 급식으로 확대 추진함

#### ■ 학교급식, 공공급식 이원화 : 조례도 별도 제정

#### ■ 로컬푸드 직매장 계약재배 농가수 : 402농가 납품 (약정서는 700농가 작성)

#### ■ 식생활교육 : 농촌진흥과에서 수행

### ⑧ 춘천시 (9/19)

#### ■ 연구용역 착수 지연 (모니터링 당일 오전 연구용역 착수보고 진행)

- 푸드플랜을 포함한 먹거리정책 전반에 대한 지역순회설명회 개최 예정
- 교육도시 : 푸드플랜 연계 방안 검토 필요
- 공공급식지원센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임
  - 추진위원회는 영양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푸드위원회로 확대할 계획임

#### ■ 공공급식 추진 : 학교급식, 공공급식으로 단계별로 확대

- 2018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하고 있음
  -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를 통해 현물공급을 추진할 계획임
  - 센터내에 과일간식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과일간식도 공급할 계획임
-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은 당초 조합공동사업법인 형태로 추진하였으나, 영양사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재단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 (시장 의지, 시민단체 등 지지)

### ■ 학교급식 : 약 3만명 규모(국공립유치원 포함. 고등학교까지)

- 학교급식 기존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업체간 협의체 구성하여 갈등 해결 추진할 예정임
  - 기존 업체들이 공산품, 가공품 납품을 담당하거나 배송업체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임
- 2017년부터 상위 20개 품목 지역내 재배 추진하고 있음
  - '17년 5개 품목, '18년 5개 품목을 추진하고 있으며, '19년에는 10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임

### ■ 가공업체 전수 조사 추진 예정 : 170개소 등록. 보건소 관리

### ■ 직매장 2개소 운영 : 300농가 출하중

- 현재 직매장 2개소의 매출액은 75억원임. 그 가운데 농산물은 40~45억 수준으로 추정됨
- '19년 시내 아파트단지에 2개소를 건물임대 방식으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임(자체 예산)
  - 운영은 재단법인 또는 민간 위탁을 추진함. 구체적인 방식을 별도로 검토할 계획임

### ■ 소비자조직 및 사회적경제조직

- 춘천생협은 두레생협 연합물류 이용을 계기로 춘천두레생협으로 전환함. 조합원은 2,500명임
- 먹거리 가공관련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은 증가 추세이나, 세부 현황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 ■ 식생활교육

- 춘천시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는 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활동하고 있으며, 시의 농업부서와 연계가 없음
- 보건소 등의 식생활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수집 중임
- 로컬푸드지원센터에 조리체험 등 식생활교육 시설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 거버넌스 및 먹거리 조례

-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예정이며, 공공급식추진협의회를 푸드위원회의 분과로 설치할 예정임
  - 춘천시 푸드위원회에는 민선7기 시정준비위원회 위원 5명과 공공급식추진협의회 위원 3명이 참여하고 있음
- 농식품부 공공급식 조례(안)을 기준을 새로운 급식 조례를 제정할 계획임
  - 기존 학교급식 조례 폐지 후, 공공급식조례로 통합할 계획임. 12월 상정 예정임

## ■ 식생활교육

- 춘천교대가 식생활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우수체험공간도 있음
- 직장어린이집에 부모와 함께 아침밥 프로그램 운영 검토 제안했으나, 춘천은 직장내 부설어린이집이 1개소도 없음

## ■ 푸드플랜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직원대상 교육은 계획 추진

## ■ (자문) 교육도시 춘천시의 특성을 살려 대학교와 협력하여 CSA 추진

- 강원대 12천명, 한림대 5천명, 춘천교대, 송곡대학, 한림성심대 등 대학생 및 교직원이 2.5만명 이상(교직원 포함)임
- 이러한 특성을 살려, 대학지원 CSA 추진을 제안함. 미국의 대학지원 CSA가 활발함

## ⑨ 충청남도

### ■ 학교급식 : 13개 시군 센터 설치 지원

- 충청남도는 14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에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함. 금산군도 학교급식 전담팀을 조건으로 2019년에 설치를 지원할 계획임
  - 시군 급식지원센터 : 지자체 직영이 7개소이며 위탁운영이 6개소임
- 가공품은 친환경식재료, Non-GMO 농산물 이용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음. 소규모 가공품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브랜드로 운영 예정임
- 현재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학교급식추진위원회(교육청),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광역유통센터 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 3개 위원회, 영양교사, 센터, 행정, 생산자 담당자가 1박2일 워크숍을 진행함
  - 교육청에서 영양교사를 도에 파견한 상태이며, 장학사와의 소통채널도 운영하고 있음

### ■ 공공급식 : 일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진행

- 조리가능 시설은 조리식재료를 공급하고, 조리가 불가능한 시설에는 완성품을 공급함
  - 홍성 : 어린이집은 풀무생협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친환경급식 26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음
  - 천안 : 시청 구내식당(600식)
  - 당진 : 어린이집 공급
- 현장간담회를 진행(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하고 있으며, 전수 온라인 설문조사를 추진



임.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9월말까지 조사를 완료 예정임

- 커뮤니티키친 추진 방안 구상 중임. 현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에 시범사업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음
  - 내부적으로는 기존 예산범위 내에 공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임.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차액 단가보전,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원 등이 필요함
- 천안은 법원, 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진행 중임 (500식 규모)
  - 공공기관 위탁급식은 행정기관에서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식재료비를 도가 지원하여 청양도립대가 위탁에서 청양센터 공급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음
  - 1일 500~1,000식 되는 경우, 지역인근 납부업자와 갈등 발생시 행정에서 조율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기존 학교급식센터 설치때 대처했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음
- 큰 쟁점은 학교급식센터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인력과 시설확충을 요구하고 있음. 기존 학교급식센터 업무에 공공급식 업무가 늘어난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현장에서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수요가 상당함. 어린이집 연합회의 일부지역에서는 학교급식센터로 식재료를 가지러 가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함

### ■ 중장기 목표 : 2022년까지 35~40만명(도민의 20~25%) 공급체계 마련

- 도내 107개 기업과 로컬푸드 상생협약을 체결함
  - 현재 상태에서 쌀, 구근류 등 일부는 가능하지만, 모든 식재료 공급이 어려움
  - 위탁업체가 일부품목만 센터에서 공급받기 보다는 전체 품목을 일괄적으로 공급받기를 희망함
- 기업급식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 어려우니, 인센티브 마련이 어려움
  - 현재는 권장만하고 있음. 기업에서는 세제혜택 등을 요구하고 있음
- 기업급식에 대해서는 광역센터에서 직거래 공급을 추진하는 등 유형별 사례 창출 필요함

### ■ 친환경 시군 출하회조직, 직매장별 출하회조직 구성 추진

-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지난 2년간 광역친환경작부체계를 구상함
- 시군단위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실증연구를 검토함 (논산, 공주 등)

### ■ 장류 공급 추진(2018년 시작)

- 학교급식 장류 공급사업은 2018년 3월부터 시작되어 시군 553개교에 초등학생 17만명에게 공급되고 있음

- 인증업체가 기존 10개소에서 현재 20개소로 증가하였으나, 고등학교까지 포함할 경우, 생산량이 수요량에 비해 부족함. 30개 정도 업체가 공급하는 것이 적정규모로 추정됨
- 또한, 2019년부터 밀, 두부, 콩나물도 학교급식에 공급할 계획이며, 카레, 짜장은 선택적으로 공급할 계획임
  - 현재 5개 품목 생산업체 10개 선정함
- 그 밖에도 수산물 가공품도 15품목에 대해 센터간 공동구매를 2019년에 추진할 계획임

### ■ 일반가구 소비자 : 아파트 조식서비스 추진 중. 서울, 경기도 현장 사례조사

- 도내 전체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100개소 대상 사업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 현재 조사지 개발을 완료하고, 4개소 공모를 받아서 교육 등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기획(역량강화)을 지원할 계획임

### ■ 광역인증센터 검토

- 센터별로 안전검사에 연간 센터별 4천만원씩 사업비 지원하고 있음
- 자주인증제도 도입에 대해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도 단계별 접근을 전제로 찬성함
- 현재 쟁점은 인증의 주체를 광역 주체가 할지, 기초 주체가 할지임. 농업기술센터 자체 인증센터 두고 있는 경우도 고려해야 함
-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원(유전자검사기관)과도 협의가 필요함

### ■ 식생활교육 : 현재 농정과, 교육청에서 분리 운영 ⇒ 사업을 푸드플랜 담당부서로 이관 제안

- 학교급식데이, 교구교재 개발 후 학교에 일괄 공급함
  - 교구교재는 영양교사 중심, 검수는 대학교수 중심으로 개발함
  - 현재 학교급식데이는 유통과 자체 예산으로 생산자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진행함
- 광역센터내에 먹거리시민교육센터 설치를 추진함
  - 민간역량 강화, 전문가상플 육성 등을 지원하고, 식생활교육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함.
  - 필수 교육으로 운영하고, 교육체험시설 설치도 추진할 계획임

### ■ 폐기, 자원화

- 흥성환경축산연구회에서 농장분뇨 자원화를 추진(음식물도 포함되어 진행)하고 있음. 자원화시 필요 요구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 학교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잔반줄이기 활동을 진행할 계획임. 특히 공모대회 진행하고, 우수사례 전파를 추진함

### ■ 먹거리 민간 네트워크로 거버넌스 확장 추진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참여 범위를 넓히고, 충남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논의 진행하고 있음. 현재 초동모임을 구성하고 있으며 10월 중 1차 모임 추진할 계획임
-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충남 시민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 중임

### ■ 관련 유관정책 분석 : 유관 행정TF 1차 회의 진행. 25개 부서 협의

- 1개부서 당 3~4개씩 100개 사업을 우선 검토할 계획임. 자료협조 요청시 제출사유 등에 대한 의문 제기하여 쉽지 않은 상황임
- 푸드플랜의 방향과 핵심사업이 나오면, 그것으로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공공급식관련 사업을 우선 협의할 계획임
- 식생활, 가공, 과일간식 등 농업관련 사업조차 협조가 쉽지 않음
- 과일간식 : 충남은 조리종사원이 타도보다 많아서 직접 가공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원물로 원했으나, 컵과일로 들어와서 오히려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

### ■ 워킹그룹 : 10월부터 운영 예정

### ■ 실증연구 : 실증대상과 협의 진행

- 음식물쓰레기 : 학교공모, 흥성과 시범연구 협의 중
- 시군단위 통합생산자조직 육성 : 통합출하회 구성 협의 중

## 2. 2차 모니터링 결과

### 가. 소결 및 시사점

#### ■ 조사일시

- 조사시기 : 2019.1.21.~2.15.
- 조사자 : 농식품부 1,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1

#### ■ 모니터링 내용 : 수립된 푸드플랜 내용의 적절성, 우수사례 등 파악

- 자문단 의견, 밀라노 푸드협약의 권장행동 등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

영역	실행과제	중점 확인사항
개요	1. 연구용역 진행 현황	진행단계
	2. 향후 추진계획	비전선포, 사업추진계획 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1. 먹거리전략 전담조직 설치	
	2.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여부	액션그룹 조직구성, 협의회횟수 등
	3. 먹거리전략관련 조례 제정	
	4. 먹거리위원회 구성	조직체계 등
	5. 먹거리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먹거리정책자문관 등
	6. 먹거리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체계 마련	통계체계 등
	7. 주민참여 공감대 활동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8. 기타 우수사례	
먹거리 공공성· 공동체성	1. 학교급식 지원	무상급식, 건강식단기준 적용 등
	2. 공공급식 지원	지원대상(어린이집, 복지시설, 공공기관), 지원내용
	3.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먹거리지원사업, 커뮤니티키친, 지원체계 등
	4. 먹거리관련 일자리 개선	
	5. 먹거리기반 사회적연대, 공동체활성화 촉진	시민조직, 마을공동체 연대활동(교육, 훈련, 연구조사 등)
	6. 먹거리 기본권, 공공급식관련 제도 마련	먹거리 기본권 조례, 공공먹거리 기준 제정 등
	7. 기타 우수사례	
지속가능 식생활	1.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홍보	식생활교육 내용, 추진체계, 조직화, 활동가 육성 등
	2. 주민건강 개선을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비만, 성인병 퇴치를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등
	3. 복지, 영양, 식생활교육의 연계	공공기관 연계 (병원, 보건소, 교육청, 관련기관 등)
	4. 주민참여 활동	지속가능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시민단체 참여 등
	5. 지속가능 식생활·영양을 위한 적절한 투자	지자체의 투자 내용 등
	6. 기타 우수사례	
먹거리 선순환 체계 (생산·유통, 소비·폐기)	1. 소량다품목 기획 생산 또는 조달체계 마련	중소농조직화, 도농연계조달 등
	2.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체계 마련	로컬푸드 소비기반 확보,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 등
	3. 토지, 물 등 생산기반의 안전·안정성 강화	
	3.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	
	4.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	지역산, 친환경, 가공품 공급 등
	5. 공공급식, 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지역산, 친환경, 가공품 공급 등
	6. 로컬푸드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방안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로컬푸드 무인판매대 설치 등
	6.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체계	인프라구축, 운영주체, 운영체계(직영vs위탁 등)
	7.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안전성 검사, 생산유통단계의 안전성 관리 체계 등
	8. 생산자 적정소득 보장 또는 공정가격 체계	학교·공공급식, 직매장 등의 가격결정 기준과 체계
	9. 먹거리 손실 저감 방안 마련	정책, 교육, 홍보, 활동가육성, 교육청·시민단체 연계 등
	10. 먹거리 재분배 방안 마련	푸드뱅크 활성화 등
11. 먹거리순환체계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모니터링 제도화 등	
12. 기타 우수사례		

## 나. 모니터링 결과

### ① 서대문구 : '19.1.25.

영역	실행과제	세부내용 / 비교
개요	1. 연구용역 진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보고 완료. 2.14. 최종보고 예정 (공공형마트 추가 등)</li> </ul>
	2.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역 완료 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먹거리종합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계획 : 3~4월 예정</li> <li>• 비전선포 등은 미정</li> </ul>
거버넌스 추진체계	1. 먹거리전략 전담조직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7. 전담조직 설치 :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전략팀 3명 - 사회적경제 연계 강화 추진 : 대전 유성구 모델 참조</li> </ul>
	2.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정책 포럼 운영, 푸드플랜 워크숍 1회</li> <li>• 푸드플랜 네트워크 구성 예정 (구의원 참여 예정)</li> </ul>
	3. 먹거리전략관련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종합전략 조례, 공공급식센터 조례 제정 예정</li> </ul>
	4. 먹거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위원회 구성 계획 미정</li> </ul>
	5. 먹거리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치조정관 운영(1명) : 푸드플랜, 공공급식 정보 제공</li> </ul>
	6. 먹거리전략 정보체계 마련	
	7. 주민참여 공감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정책 포럼 1회 : 18.10.13. 100명 이상 참여</li> <li>• 먹거리정책 포럼 1회 : 20명 참여</li> </ul>
	8. 기타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플랜 구청내 TF 회의 4회 개최</li> </ul>
먹거리 공공성· 공동체성	1. 학교급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학교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추진 : 쌀, 김치, 원예농산물 - 쌀, 김치 공급업체 자체 선정 / 원예농산물 공급업체 서울시 선정</li> </ul>
	2. 공공급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148개소 중 92개소 공급 : 친환경 비율이 68% ( '18) - '18.9. 45백만원(59개소)에서 ' 19.1. 160백만원(94개소)로 확대 - 어린이집 3개소가 전주를 방문한 이후 주문량이 크게 증가</li> <li>• 복지기관 2개소(80명) 공급 : 단계적 확대 추진 - 기존에 서비스 수요 감당 한계로 대부분 전문업체 이용 (셰프데이, 복지사 휴가 지원 등)</li> <li>• 품질, 신선도, 친환경 중요 / 서비스 대응 중요</li> </ul>
	3.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단체, 지역공동체 중심 진행 : 향후 푸드플랜 연계 확대 추진 - 동별로 자원봉사캠프에서 차상위계층 등에게 밀반찬 공급 - 빵만드는공동체 주 2회(화,토) 고령자 맞춤형 제조빵 제공</li> </ul>
	4. 먹거리관련 일자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빵 협동조합 운영. 향후 푸드플랜 연계 확대 추진</li> </ul>
	5. 먹거리기반 사회적연대, 공동체활성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마트 구상 중 (구청장 관심 사항)</li> </ul>
	6. 먹거리 기본권, 공공급식관련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제정 예정</li> </ul>
	7. 기타 우수사례	
지속가능 식생활	1.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장류교육 진행 : 자체 예산. 조리시설 부족</li> <li>• 기존에는 보건소, 서부교육지원청 중심 진행 : 협의구조 미흡</li> </ul>
	2. 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급식 진행</li> </ul>

먹거리 선순환체계 (생산,유통, 소비,폐기)	3. 복지, 영양, 식생활교육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에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 계획 중</li> <li>• '18.11.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창립</li> <li>• 집밥협동조합에서 식생활교육, 전통장류교육 진행 : 전문강사 7명</li> </ul>
	4. 주민참여 활동	
	5. 지속가능 식생활영양을 위한 적절한 투자	
	6. 기타 우수사례	
	1. 소량다품목 기획생산 또는 조달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시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진행 : '19.1. 160백만원 공급액 가운데 60% 정도 전주에서 공급 (40% 지역 생협 공급)</li> <li>-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신선도는 우수하나 기후 등의 영향으로 공급 불안정. 일반주민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해 부족</li> <li>- 친환경쌀 10일 이내 배송 완료해야 함. 10일 이후부터 일반미로 분류</li> </ul>
	2. 로컬푸드 생산-가공 -유통체계 마련	
	3. 토지,물 등 생산기반 안전·안정성 강화	
	3. 도시농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농부 학교 운영 중 : 경기도 농지를 임차하여 운영</li> <li>- '18년까지 6기 진행 : 농산물 재배교육, 요리강좌 등</li> <li>• 학교텃밭, 옥상텃밭(환경과) 보급 및 분양 증계</li> </ul>
	4.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사업으로 진행</li> </ul>
	5. 공공급식,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으로 어린이집 공급 : 농산물은 전주시, 가공품은 지역생협(행복중심생협) 중심으로 공급</li> </ul>
	6. 로컬푸드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도농상생 마을공동체 협력사업 : 완주-북가좌1동 직거래 장터 개최 (월1회 개최). 7~12월 진행. '19년 추진 검토중</li> <li>• 전주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희망 : 협동마트 구상과 연계 검토</li> </ul>
	6.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 확보가 관건 : 현재 서북지역 3개구(은평,마포,서대문)가 공동으로 서울시에 시유지 활용 허가 요청 검토</li> </ul>
7.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 안전성검사 :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li> <li>• 공공급식 안전성검사 :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li> <li>- 산지 1차 검사. 서울시 공공급식센터에서 샘플검사 실시</li> <li>- 서울시 지킴이단을 중심으로 산지에서 확인과정 진행</li> </ul>	
8. 생산자 적정소득 보장 또는 공정가격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급식 가격 : 서울시 가격결정위원회 결정 후 자치구에 통지</li> </ul>	
9. 먹거리 손실 저감 방안 마련		
10. 먹거리 재분배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뱅크 1개소, 푸드마켓 1개소 운영 중이나 애로사항 다수</li> <li>- 공급품목의 다양성 부족 : 구매자가 1개월, 2주 단위로 구매하기 때문에 신선식품 구매가 어려움. 기부자도 신선품 보다는 유통기한이 끝나는 물품 중심으로 기부. 이용자도 쌀, 장류 선호</li> <li>- 시설 미흡 : 냉장시설 등</li> <li>• 푸드마켓 : 구세군 운영. 차상위계층 이상 운영</li> <li>- 구세군의 경우 기탁물품 부족시 자체적으로 구매하여 공급</li> <li>- 차상위계층도 구매기준이 높아짐</li> <li>- 경영문제 발생 : 2층에 카페를 운영하여 운영비 총당 중</li> <li>•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대부분 외지에 위치하여 접근이 어려움</li> <li>- 매장이 협소하고, 품목이 제한적임</li> </ul>	
11. 먹거리순환체계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12. 기타 우수사례		

기타	1.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물류시설 용량이 부족</li> <li>• 자치구내에 물류시설 설치 애로 : 부지확보, 주차장, 입지 등</li> </ul>
	2.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에서 농식품부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확대 필요 : 신청자격, 기준 등도 도시지역 특성 반영 필요</li> </ul>

② 유성구 : '19.1.28.

영역	실행과제	세부내용 / 비고
개요	1. 연구용역 진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보고 완료</li> </ul>
	2.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플랜 선포식 3월 추진 : 공공급식 현판식때 비전선포 검토</li> </ul>
거버넌스 추진체계	1. 먹거리전략 전담조직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자치과에 먹거리자치팀 설치. 5명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플랜, 공공급식, 식생활교육, 거버넌스, 먹거리지원사업 (대전시), 먹거리기반 사회서비스 지원사업(복지부) 등 진행</li> <li>- 푸드플랜을 마을공동체 지원업무로 정리. 자치혁신본부 마을자치과에 설치. 먹거리기반 사회적경제 연계 강화 추진</li> </ul> </li> </ul>
	2.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운홀미팅 2회(100명, 60명), 워크숍 진행(생산자, 학부모,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 6개 분야)</li> <li>• 대전시 푸드플랜 네트워크가 분화하여 유성구 푸드플랜 네트워크 구성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협치의 정책파이니셔자 사업파트너 : 사업추진시 자부담 주체는 협의결정</li> </ul> </li> </ul>
	3. 먹거리전략관련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먹거리통합지원조례 제정 완료 : '1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버넌스, 푸드통합지원센터, 학교·공공급식, 모니터링 등의 내용 포함</li> </ul> </li> <li>•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 조례는 별도로 제정 : 전면개정 완료</li> </ul>
	4. 먹거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3. 구성 예정 : 지속가능농업, 공공급식, 교육안전 등 4개 분과</li> </ul>
	5. 먹거리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협력보좌관 채용 예정 : 푸드플랜 업무조정도 포함</li> </ul>
	6. 먹거리전략 정보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역 결과, 학교급식 실태조사는 충실하게 진행되었으나 타분야 실태 조사는 미흡 : 생산관련 조사는 별도로 진행 중임</li> </ul>
	7. 주민참여 공감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민대상 로컬푸드 아카데미 진행 : 요리교실, 푸드플랜 설명 등</li> </ul>
	8. 기타 우수사례	
먹거리 공공성· 공동체성	1. 학교급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시행 : 현금 지원</li> <li>• '20년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현물공급 추진 예정</li> <li>* 대전-세종-충남 연계에 대한 실무 검토 미흡 : 공급업체 선정, 충남지역 시군과 자치구 단위 매칭 등 다양한 이슈 대두</li> </ul>
	2. 공공급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급식을 기존에는 현금지원에서 현물지원체제로 전환 추진 : 대전시 관내 5개 구청 협약 완료 (1월말). 5개구 6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른유성찬 사용 의무화.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배송</li> <li>- '19년 하반기 준비, '20년 현물급식 예정</li> </ul> </li> <li>• '19년 현재는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꾸러미 형태로 어린이집, 유치원에 공급하는 형태로 시범 추진 예정</li> </ul>
	3.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거노인 도시락 배송사업(차상위계층 등) 진행 : 반찬, 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성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시지원으로 대전시 5개구로 확대 추진 예정</li> </ul> </li> <li>• 보건복지부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어린이식당 모델로</li> </ul>

		’ 18년 시범사업 진행. 계속사업으로 추진 예정 - ‘19년 하반기 추진 예정인’ 돌봄센터건립사업 ‘과 연계 추진
	4. 먹거리관련 일자리 개선	● 두드림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대전시 지원사업)
	5. 먹거리기반 사회적연대, 공동체활성화 촉진	● 사회적경제와의 연계 방향은 지속 유지 예정 ● 마을밥상 : 유성구에서 시작. 동구, 중구, 대덕구로 확대 추진
	6. 먹거리 기본권, 공공급식관련 제도 마련	● 지역먹거리통합지원조례 제정 완료 : ‘18.12.
	7. 기타 우수사례	* 생협이 2018년 마이너스 성장. 공공급식 시장 진출 확대 추진 - 한살림 생협 -25% 기록 (서울 기준)
지속가능 식생활	1.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홍보	● 품, 소수레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심으로 진행 : 로컬푸드, 건강한 식생활 교육 중심 진행 - 품 : 협동조합. 행정에서 지난 3년간 교육강사 육성 지원을 받아서 협동조합 설립 - 손수레 : 농식품부 지정 도시농업 양성기관. 사회적기업
	2. 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식생활교육 진행 ● 상대적으로 보건소와의 연계사업은 미흡
	3. 복지, 영양, 식생활교육의 연계	● 로컬푸드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 진행 ( ‘15년 이후 지속 진행)
	4. 주민참여 활동	● 식생활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3년간 예산 지원 : 20여명 육성
	5. 지속가능 식생활영양을 위한 적절한 투자	● 자체 교재 개발 2종 보유
	6. 기타 우수사례	
먹거리 선순환체계 (생산,유통, 소비,폐기)	1. 소량다품목 기획생산 또는 조달체계 마련	● 바른유성찬 인증 농가 : 현재 184농가에서 상반기 중으로 300농가로 확대 예정 - 평균 300~500명 규모. 150품목 공급 가능 - 하우스 등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은 농정부서 중심으로 진행
	2.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체계 마련	● 직매장 자체 확대 계획은 미정. 타지역에서 관내에 직매장 설치 - 청양, 논산에서 관내에 직매장 설치 ● 직거래 장터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4개소 운영 중
	3. 토지,물 등 생산기반 안전·안정성 강화	● 토양, 중금속, 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농정부서에 진행 중
	3. 도시농업 활성화	● 농정부서에서 진행 : 공동체텃밭 8개소, 학습농장 2개소 운영 중 ● 유성구에 소재한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동체텃밭 2개소 추가 운영 중
	4.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	●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현물공급 추진 : ‘20년 예정
	5. 공공급식,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 유성구 관내 2개 공공기관 협약 1월말 체결, 3월부터 공급 예정 - 지질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 1일 1,200식 (3식 기준) 예상 - 수발주 프로그램 활용 ● 바른유성찬 공공급식 공급체계 마련 중
	6. 로컬푸드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방안	● 직거래장터, 직매장 등 운영 중 ●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먹거리 사업 확대 예정
	6.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체계	●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중 : 대전시는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자치구 단위로 분산 설치 검토
7.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 안전성 검사에 매년 2천만원 지원 ● 대전시에서 로컬푸드 통합인증제 검토 중 - 자치구별 센터 설치시 주체 문제 발생	
8. 생산자 적정소득 보장 또는 공정한가격 체계	● 현재 로컬푸드 가격은 도매시장 상품기준 적용 (등급구분 없음) ● 클레임 발생시 직매장 운영 주체(품앗이마을)에서 처리 - 사전검사 강화 유인으로 작용 - 갈수록 농업인의 의식 약화. 정보공개 방식 등 고민 ● 로컬푸드에 대한 가격결정위원회, 품목결정위원회 구성 필요성 증대	



	9. 먹거리 손실 저감 방안 마련	
	10. 먹거리 재분배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끼나눔운동본부에서 푸드뱅크사업 연계 희망</li> <li>- 현재 무료급식소 운영 중</li> </ul>
	11. 먹거리순환체계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먹거리통합조례에 포함</li> </ul>
	12. 기타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식품제조업이 40%가 넘음. 지역산 식재료 공급 방안 마련 필요 : 현재는 연계 미흡</li> </ul>
기타	1. 애로사항	
	2.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사업 확대 필요</li> <li>• 패키지 지원사업도 자치구에서 추진할 만한 사업이 없음</li> </ul>

③ 상주시 : '19.1.28.

영역	실행과제	세부내용 / 비고
개요	1. 연구용역 진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10. 중간보고회 진행</li> <li>• 중간보고회 이후 주요 내용에 대한 주민간담회 및 홍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의 참여 희망 증가 : 지역신문 홍보, 시민 아카데미 진행</li> <li>- 행정의 인사이동으로 공감대 형성 진행 중</li> </ul> </li> </ul>
	2.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3. 연구용역 완료 예정</li> <li>• `19.2. 시민 간담회 예정 : 시장님 참여, 컨설팅 최종보고 등</li> <li>• 비전 선포식 미정</li> </ul>
거버넌스 추진체계	1. 먹거리전략 전담조직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 1. 유통마케팅과에 농식품산업팀 설치 : 4명</li> <li>- 푸드플랜 수립 및 실행, 친환경급식, 로컬푸드, 농식품가공 등</li> </ul>
	2.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태조사시 대면조사 실시</li> <li>• 주민 설명회 : 3회 진행</li> </ul>
	3. 먹거리전략관련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급식지원조례 제정 추진 : 4월경 제정 예정. 법무팀 검토 중</li> </ul>
	4. 먹거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추진단 중심 운영 : 먹거리 추진단 구성(15명). 3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단 구성 :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농업기술센터(가공,안전), 교육지원팀, 건강증진팀, 친환경급식센터 (농산,축산), 상주로컬 푸드협동조합, 상주다움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지원 중간지원 조직), 조공법인,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등</li> </ul> </li> <li>• 먹거리위원회 구성 : 미정</li> </ul>
	5. 먹거리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6. 먹거리전략 정보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 단계에서 실태조사 진행</li> <li>• 주기적 실시에 대한 제도화 방안 : 미정</li> </ul>
	7. 주민참여 공감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주소리(지역신문) 연재 보고(3회) 기획 중 : 2월 진행 예정</li> </ul>
	8. 기타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공동체육성, 신사업 발굴 추진 예정</li> </ul>
먹거리 공공성·공동체성	1. 학교급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 40억원 규모</li> <li>• 일반농산물 현물급식은 친환경농산물 현물급식의 문제점 여파로 2021년 이후 진행 예상</li> <li>•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 가운데 30% 정도는 상주농협에서 학교 에 직납한 것으로 추정 : 구체적 실적은 확인 불가</li> <li>* 경북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은 도단위의 군위 유통센터와 시군</li> </ul>

		별 학교급식센터에서 공급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 이에 대한 총괄 관리 체계 부재. 지역내 계약재배 체계 미운영.
	2. 공공급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급식 규모는 70억원 수준으로 분석</li> <li>• 대부분 현금지원 방식으로 운영</li> </ul>
	3.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사업에서 커뮤니티키친과 유사사업 진행 예정 : 연계 미흡</li> <li>• 공동체 밥상 운영 : 마을급식 등</li> </ul>
	4. 먹거리관련 일자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센터 2개소(기술센터1, 농민가공센터1), 안전성 분석센터 (농업기술 '20.7. 가동 예정)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예상</li> </ul>
	5. 먹거리기반 사회적연대, 공동체활성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주다음센터(사회적협동조합) 연계 예정</li> <li>- 귀농귀촌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li> </ul>
	6. 먹거리 기본권, 공공급식관련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급식지원조례에 먹거리기본권 조항 포함 추진</li> <li>- 집단급식소에 대한 요구조건으로 지역산, 공동식단 구성 포함</li> </ul>
	7. 기타 우수사례	
지속가능 식생활	1.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경북도 단위로 진행</li> </ul>
	2. 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주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 마련 : 영양사 30명, 단체급식소 70명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 예정</li> <li>- 교육예산 확보 : 5백만원( '19)</li> <li>- 전문강사 : 14명 확보</li> </ul>
	3. 복지, 영양, 식생활교육의 연계	
	4. 주민참여 활동	
	5. 지속가능 식생활영향을 위한 적절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에서 단체급식소 위생관리 업무 진행</li> <li>• 보건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의 연계 미흡</li> </ul>
	6. 기타 우수사례	
먹거리 선순환체계 (생산,유통, 소비,폐기)	1. 소량다품목 기획생산 또는 조달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 100여 농가 친환경 조직화 진행</li> <li>• 로컬푸드협동조합 250농가 조직화 진행 : 직매장, 꾸러미, 장터</li> </ul>
	2.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직매장 '18.7. 1호점 개장, ' 19년 2호점 개장 예정</li> </ul>
	3. 토지,물 등 생산기반 안전·안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수분석사업 진행</li> </ul>
	3. 도시농업 활성화	
	4.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품 소량 납품</li> </ul>
	5. 공공급식,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6. 로컬푸드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방안	
	6.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체계	
	7.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8. 생산자 적정소득 보장 또는 공정가격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학교급식 가격은 도단위 가격결정위원회 결정 가격 준수</li> <li>- 도내 친환경농산물 거래가격과 가락시장 친환경농산물 가격의 평균치 적용</li> </ul>
	9. 먹거리 손실 저감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립요양병원 사례 우수 : 잔반이 없어야 간식 제공</li> <li>- 간식비와 연계하여 운영. 정착단계 진입</li> <li>- 남은 잔반은 EM 발효 거름으로 활용</li> </ul>
	10. 먹거리 재분배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뱅크 1개소 운영</li> <li>• 단체급식소 조사결과, 푸드뱅크에 기부할만큼 남지 않음</li> </ul>
11. 먹거리순환체계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12. 기타 우수사례		
기타	1. 애로사항	
	2.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추진 예정</li> </ul>

④ 완주군 : '19.1.30.

영역	실행과제	세부내용 / 비교
개요	1. 연구용역 진행 현황	• 최종보고 완료. 2월 최종보고서 보완 완료 예정
	2. 향후 추진계획	• 군민먹거리 선언 완료 ('18.11.) • 용역결과 이행 추진 : 먹거리복지, 공공급식 확대 추진 예정
거버넌스 추진체계	1. 먹거리전략 전담조직 설치	• '19.1.28자로 먹거리정책과 신설 : 5팀, 19명 - 농업기술센터 가공팀 이관 - 환경위생팀이 식품위생팀 이관 : 안전성, 식품인허가까지 담당
	2.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여부	• 영양교사모임 6회(16명), 먹거리포럼 1회(100여명) 진행
	3. 먹거리전략관련 조례 제정	• 기존 6개 조례 존재. 통합조례는 검토 중 - 먹거리기본권 포함 여부 검토 중
	4. 먹거리위원회 구성	• 먹거리위원회 24명 구성 : 민간 중심
	5. 먹거리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 먹거리전략 TF 운영 : 생산, 안전, 복지, 농업기술센터, 보건팀 등 - TF 구성은 하였으나, 활성화 미흡
	6. 먹거리전략 정보체계 마련	• 통계 집적, 제도화 미흡
	7. 주민참여 공감대 활동	
	8. 기타 우수사례	• 정책협의회 운영 : 13개 직매장, 학교급식지원센터, 건강한밥상 등 운영 주체(점장 등)가 격월 단위로 운영
먹거리 공공성· 공동체성	1. 학교급식 지원	• 89개소(국공립유치원 포함) 1만2천명 대상 현물급식 실시 - 지역산 69%, 전라북도산까지 90% 차지 / 친환경 42% 점유
	2. 공공급식 지원	• 같은 방식으로 1만명에서 현물공급 진행 - 서울 강동구 공공급식 5천명 : 물류비(7~8%) 부담 증가
	3.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 영양플러스사업(200명), 농번기공동급식(70일, 57개 마을), 마을경로당 110개 마을(3개월)에 급식센터에서 현물공급 실시 • 아동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확대 예정 • 청년보부상 2명(2개면) 운영 예정
	4. 먹거리관련 일자리 개선	• 먹거리관련 지역내 일자리 창출 효과 : '17년 기준 203명
	5. 먹거리기반 사회적연대, 공동체활성화 촉진	• 소셜굿즈 추진 (협동생활경제망 구축) : 교육, 아동, 복지 등
	6. 먹거리 기본권, 공공급식관련 제도 마련	• 군민먹거리 선언 실시
	7. 기타 우수사례	
지속가능 식생활	1.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홍보	• 협동조합, 용진농협 등 식생활교육 일부 진행 • 학교영양사 모임을 진행하였으나, 인사이동 다수 - 3년에 한번씩 타시군으로 이동 • 식생활 영양 교육 : 개별적 분산적 진행. 통합적 운영 미흡 • 급식지원센터의 보건소사업, 어린이급식 지원체계 마련 미흡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진행 : 결과 미공유
	2. 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3. 복지, 영양, 식생활교육의 연계	
	4. 주민참여 활동	
	5. 지속가능 식생활영양을 위한 적절한 투자	
	6. 기타 우수사례	
먹거리 순환체계 (생산,유통, 소비,폐기)	1. 소량다품목 기획생산 또는 조달체계 마련	• 로컬푸드 출하 2,500농가 세부 실태조사 미흡
	2.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체계 마련	• 가공시설 5개소 운영 : 로컬가공센터 2, 특화가공센터(축산+과일 가능), 발효가공센터, 두유공장 • 2022년 건조채소 가공센터 건립 예정

3. 토지, 물 등 생산기반 안전·안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컬푸드 인증시 검사 : 농업기술센터 전담 관리</li> </ul>	
3. 도시농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농귀촌인 중심 텃밭 운영 : 시민텃밭, 마을텃밭 등 5개소</li> </ul>	
4.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자 기준 : 670종 이상 가공품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 공급품목 : 170여종 공급. 완주산 원료 69.7% 사용</li> <li>- 단가차이 등으로 공급 애로</li> </ul> </li> <li>* 과일간식 공업업체로 남농영농조합법인(남원시 소재)이 선정 되어 전북 산 공급 여건 개선</li> </ul>	
5. 공공급식, 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6. 로컬푸드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주·완주 지역에 36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 과잉 상태</li> <li>완주·전주 지역에는 직매장 개설 계획은 없음 : 수도권은 검토</li> <li>식품산업팀에서 관내에서 로컬 식재료 이용 업체 선발 예정 : 인증표시 작업 추진 중</li> </ul>	
6.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단법인 정규직 20명, 파트타임 10명 운영 중</li> <li>의회에서 자립에 대한 지적 증가 (수수료화 등)</li> </ul>	
7.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기술센터 : 7명 운영(정규직 3, 무기계약직(분석사)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2,500건('17년) 실시</li> <li>- 운영비 4억원 (시료비, 분석재료비만. 인건비 제외)</li> <li>- 안전성검사센터 장비설비 (세트당 5억) * 2세트</li> </ul> </li> </ul>	
8. 생산자 적정소득 보장 또는 공정가격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컬푸드 가격은 시장가격, 도매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위별 기준, 가격결정에 대한 세부기준 미설정</li> </ul> </li> <li>학교급식 가격결정위원회 운영 중</li> </ul>	
9. 먹거리 손실 저감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먹거리폐기 저감, 재활용 사업 발굴 중</li> </ul>	
10. 먹거리 재분배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눔냉장고, 나눔가게 등 3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찬나눔사업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사업 : 직매장 등에서 미판매 농산물, 농가레스토랑에서 남은 반찬들 이용</li> </ul> </li> <li>푸드뱅크 1개소 운영 중 : 사업연계 미흡</li> </ul>	
11. 먹거리순환체계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12. 기타 우수사례		
기타	1.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따른 물류비 지원(7~8% 수준)에 대해 의회 비판 증가</li> <li>서울시 강동구 지역에 거점물류시설(직매장 운영, 클레임 대응 등) 설치를 추진하나 지역내 반대 여론 형성</li> <li>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비판</li> </ul>
	2.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 교육 및 어린이집 접근 확대 방안 마련 필요</li> <li>기업체도 로컬푸드 이용 확대에는 동의 :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해결책 모색 필요</li> <li>농협은 로컬영역 사업화보다는 통합마케팅 중심 기능 강화 필요</li> </ul>

⑤ 해남군 : '19.1.30.

영역	실행과제	세부내용 / 비고
개요	1. 연구영역 진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2. 최종보고서 완료</li> </ul>
	2.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월 비전 선포식 진행 예정</li> <li>- 먹거리위원회, 주민 등 500여명 참석 예정</li> </ul>
거버넌스 추진체계	1. 먹거리전략 전담조직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8.1. 먹거리전략팀 신설 : 3명 운영</li> <li>- 지역푸드플랜수립, 로컬푸드, 생산자조직화, 공공급식센터설치 등</li> </ul>
	2.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개 읍면 순회설명회 개최 : 400여명 참여</li> <li>- 푸드플랜 사업 진행이 더디다는 의견이 대부분</li> <li>- 19.1월 부지 확정, 의회설명 추진 예정</li> </ul>
	3. 먹거리전략관련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3월 18일 조례(안) 상정 예정</li> <li>먹거리기본 조례, 공공급식지원(학교급식조례 통합) 조례 추진 중</li> <li>로컬푸드, 식생활교육 조례는 기 제정 완료</li> </ul>
	4. 먹거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1. 구성 완료 : 49명</li> <li>- 4개 분과 : 농산업위, 안전안심, 건강, 공공먹거리급식</li> <li>- 공공급식센터를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li> <li>- 기본방향은 직영체제로 3년간 운영 후 민간위탁으로 전환</li> </ul>
	5. 먹거리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련되지 못함 : 농정부서간 내에서도 이해와 협조 미흡. 사업 담당자간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li> </ul>
	6. 먹거리전략 정보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도적 업데이트 등은 최종보고회에서 방안 제시 예정</li> </ul>
	7. 주민참여 공감대 활동	
	8. 기타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민 홍보 및 인식전환 공감대 형성에 초점</li> </ul>
먹거리 공공성· 공동체성	1. 학교급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급식 대상 : 78개교 ('19개 81개교), 76백명, 35억원 규모</li> <li>- 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은 현물 공급(4개 공급업체 선정)</li> <li>- 친환경 16억원 : 쌀 100%, 잡곡류 100%, 농산물 40% 수준 추정</li> <li>- 쌀, 잡곡류 100% 지역산 / 계절과일은 일부만 지역산</li> </ul>
	2. 공공급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유치원 : 현금 지원 / 쌀, 잡곡류 100% 지역산</li> <li>복지시설 : 타부서 지원. 현금지원 / 원산지 알 수 없음</li> </ul>
	3.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급식지원 : 월 200만원 (복지과) / 대부분 지역산 이용</li> </ul>
	4. 먹거리관련 일자리 개선	
	5. 먹거리기반 사회적연대, 공동체활성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셜파티(사회적경제조직 15개) 직거래 장터 개최 : 향후 연계사업 추진 하겠다는 의사 표명</li> <li>- 주요 참여조직 : 한울남도생협(친환경 등), 친환경생산자연협회, 참살이공동체(한살림), 학부모교육희망연대 등</li> </ul>
	6. 먹거리 기본권, 공공급식관련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에 반영 예정</li> </ul>
	7. 기타 우수사례	
지속가능 식생활	1.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급식지원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진행 : 정책 연계 미흡</li> </ul>
	2. 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3. 복지, 영양, 식생활교육의 연계	
	4. 주민참여 활동	
	5. 지속가능 식생활영양을 위한 적절한 투자	
	6. 기타 우수사례	
먹거리	1. 소량다품목 기획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식센터 건립 전 : 친환경 생산농가와 공급업체간 연계 지원</li> </ul>

선순환체계 (생산,유통, 소비,폐기)	또는 조달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량 공급 가능여부도 확인하고, 협의채널 만들어갈 예정</li> <li>● 월별 입찰로 하기 때문에 기획생산 애로 대응 강화</li> <li>- 직매장 공급농가와 급식공급 농가를 구분하여 조직화 추진</li> <li>- 교육청 통해 월별 소요량 파악 및 공급가능한 농가 발굴 확대</li> </ul>
	2.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체계 마련	● 직거래 사업 중심으로 추진 중
	3. 토지, 물 등 생산기반 안전·안정성 강화	● 안전성 분석실 추진 중 : 건물 36억, 장비 20억 규모 - 농진청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3. 도시농업 활성화	
	4.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	
	5. 공공급식, 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6. 로컬푸드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방안	
	6.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체계	● 재단법인 '17년 설립타당성 용역 완료하고 도와 협의 등의 진행. '19년 말까지 설립 완료 추진 - 건립비 : 30억원 규모 (5년간 출연) - 운영 : 종사인원 30명 예상. 운영비는 연 10억원 규모로 추정
	7.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8. 생산자 적정소득 보장 또는 공정가격 체계	
	9. 먹거리 손실 저감 방안 마련	
	기타	10. 먹거리 재분배 방안 마련
11. 먹거리순환체계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제도화 필요성은 인식. 추후 방안 마련 필요
12. 기타 우수사례		
1. 애로사항		
2. 건의사항		● 지역마다 여건과 사업의 성숙도에 차이가 있음. 정책사업 추진시 세심한 배려 필요

⑥ 청양군 : '19.1.31.

영역	실행과제	세부내용 / 비고
개요	1. 연구용역 진행 현황	● 최종보고회 2.1. 예정 / 보고서는 2월말까지 보완 완료 예정
	2. 향후 추진계획	● 비전선포식 : '19.7.1. 민선7기 1주년에 맞춰서 발표 예정
거버넌스 추진체계	1. 먹거리전략 전담조직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2. 농촌공동체과에 푸드플랜팀, 공공급식팀 설치</li> <li>- 푸드플랜팀 : 총 5명 (행정 4명, 직매장 1)</li> <li>- 공공급식팀 : 총 8명 (행정 3명, 학교급식지원센터 4명(기간제))</li> <li>● 푸드플랜팀의 주요 업무 : 생산농가 조직화,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푸드플랜 종합타운건립(부지매입, 공공급식물류센터, 통합지원센터, 가공센터, 안전성분석실 등) 등</li> <li>● 공공급식팀의 주요 업무 : 학교급식, 복지급식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는 경로당 공동급식 식자재 납품시스템 구축 등 기존에 주민복지실에서 진행사업을 공공급식팀으로 이관 중</li> </ul>
	2.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군민 설명회 진행 : 군수님 초도순방때 교육 실시 등</li> <li>- 연말에도 10개읍면 312명 교육 진행</li> </ul>
	3. 먹거리전략관련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완료('18.8)</li> <li>• 먹거리 기본 조례는 필요성 인식 : 향후 추진 예정</li> </ul>
	4. 먹거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거버넌스추진단 운영 중</li> <li>• 먹거리위원회 구성은 아직 미정</li> <li>• 향후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 : 세부 추진일정 미정</li> </ul>
	5. 먹거리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정</li> </ul>
	6. 먹거리전략 정보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기반에 대한 세부 실태조사는 진행 중</li> <li>• 주기적 업데이트 계획은 미정</li> </ul>
	7. 주민참여 공감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해영농교육에 PLS와 푸드플랜 중점으로 교육.</li> <li>• 귀농귀촌인 교육도 진행</li> </ul>
	8. 기타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장들에게 교육내용을 전파하도록 요청 추진</li> <li>• 농협의 참여 미흡 : 군지부장 참여 수준</li> </ul>
먹거리 공공성·공동체성	1. 학교급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 대상 : 34개교, 3480명 (유치원 포함)</li> <li>- 고등학교 아침, 점심, 저녁, 휴일까지 공급</li> <li>- '18.3. 직영체제로 전환 : 청양유기농영농조합법인 '14.3~18.3. 공급</li> <li>- 지역농산물 47% / 친환경 58% (쌀 100%, 농산물 30% 수준)</li> <li>- 가공품은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일부 공급 : 장류, 참기름, 들기름, 두부 등 6~7개 품목</li> <li>• 청양도립대 점심 공급 : 1061명 대상</li> <li>- 도에서 48백만원 지원, 군비지원 없음</li> </ul>
	2. 공공급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복지시설 미공급 : 시설부족, 신규 급식센터 건립 추진</li> <li>- 현재 급식센터 88㎡ (냉장고 포함) 규모</li> <li>• 신규 급식센터 : '19년 준공 예정. '20년 운영 목표</li> <li>- '20년 어린이집, 경로당, 수련원2개소 등 공급 추진</li> <li>- 기존 현금지원을 현물지원으로 전환 예정</li> </ul>
	3.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급식 지원 : 복지과, 농업정책과에서 농번기에 지원</li> </ul>
	4. 먹거리관련 일자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플랜 구상 실현시 급식센터 40명, 농가조직화 1500명,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20~21명 일자리 창출 가능 전망</li> <li>- 현재 직매장 1개소(농협삼인샵),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 및 레스토랑 1개소 운영(겸용 시설)</li> </ul>
	5. 먹거리기반 사회적연대, 공동체활성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구체적인 현황 미피악</li> <li>• 마을가꾸기통합지원센터, 부자농촌센터, 급식센터를 통합한 중간지원조직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 예정. 연구용역 진행중(3월 완료 예정)</li> <li>- 부자농촌지원센터이 재단법인으로 기설립(가공 중심 운영), 학교급식 지원센터도 별도로 운영 중임</li> <li>- 통합해서 운영하고, 직매장까지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li> </ul>
	6. 먹거리 기본권, 공공급식관련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정</li> </ul>
	7. 기타 우수사례	
지속가능 식생활	1.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관련 사업 : 공공급식팀에서 식생활교육(6백), 급식데이(10백), 학부모지킴이단(1백) 운영 예정</li> <li>- 급식데이 : 친환경식재료를 이용한 조리, 맛보기 체험 등 진행.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에서 진행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기술센터 6차산업 총회 등의 행사에서 푸드플랜 교육 확대 진행 예정</li> </ul>
	2. 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3. 복지, 영양, 식생활교육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년부터 보건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식생활교육 연계 추진</li> </ul>
	4. 주민참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컬푸드영농조합에서 도시소비자 초청행사 진행</li> </ul>
	5. 지속가능 식생활영양을 위한 적절한 투자	
	6. 기타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 지역농산물 소비 캠페인 추진</li> <li>대전 유성구내 학화동 직매장에서 인근소비자 대상 식농교육 진행 예정</li> </ul>
먹거리 순환체계 (생산,유통, 소비,폐기)	1. 소량다품목 기획생산 또는 조달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는 유기농협동조합,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조달</li> <li>농가조직화 진행 중. 2025년까지 1500호 조직화 추진</li> <li>현재 300농가 교육 실시 : 출하의향 170호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별 공품품목, 시기 등 조사 중</li> </ul> </li> </ul>
	2.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2개소(관내 1, 대전 1 - 실시설계 진행. 부지매입 완료). 향후 2개 추가 추진(세종 1, 수도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 : 품앗이와 협의 진행 중(공급품목 상호 교차 추진. 가격 결정 기준과 방식 등)</li> </ul> </li> <li>직거래장터 19개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권 직매장을 거점 물류기지로 운영 추진</li> </ul> </li> </ul>
	3. 토지,물 등 생산기반 안전·안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수분석사업 진행 중 : 청남, 장평면 시설하우스 단지 중심으로 기획생산 조직화 추진(시설의 70~80% 집중)</li> </ul>
	3. 도시농업 활성화	
	4.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름류, 장류 중심 추진</li> <li>반찬류는 아직은 계획 미정. 위생시설 등 준비 미흡</li> <li>두부, 콩나물 등 관내 업체와 계획생산 공급 추진 협의중</li> </ul>
	5. 공공급식,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6. 로컬푸드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내 식당, 가공업체 등 소비확대 방안 미흡</li> </ul>
	6.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단법인으로 직영 예정 : 출원 1억원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비 '20년 10억, '21년 15억 (40명 내외) 추정</li> <li>* 기존에도 부자농촌재단 연 540백만원, 학교급식센터 운영비 100백만원 지원 실시</li> </ul> </li> </ul>
	7.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년부터 학교급식에 대한 생산단계(출하전) 안전성 검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에는 유통단계,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대상으로 실시</li> </ul> </li> </ul>
	8. 생산자 적정소득 보장 또는 공정가격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농산물 : 도 가격결정위원회에서 결정</li> <li>일반 농산물 : 가격결정위원회(영양사)에서 월 1회씩 협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조사, 유기농협회에서 참여하여 협의 결정</li> </ul> </li> </ul>
	9. 먹거리 손실 저감 방안 마련	
	10. 먹거리 재분배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푸드뱅크 1개소. 활성화는 미흡 (교회운영)</li> </ul>
11. 먹거리순환체계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개년 계획으로 작성</li> <li>주기적 작성 등에 대한 방안은 미정</li> </ul>	
12. 기타 우수사례		
기타	1. 애로사항	
	2. 건의사항	



⑦ 나주시 : '19.2.7.

영역	실행과제	세부내용 / 비교
개요	1. 연구용역 진행 현황	● 연구용역 2.16. 최종보고 예정
	2. 향후 추진계획	● 비전선포식 3월 추진 예정 : 먹거리현장 선포 예정
거버넌스 추진체계	1. 먹거리전략 전담조직 설치	● 먹거리계획과 '18.10.5. 설치 : 4팀 13명으로 구성 - 먹거리정책팀, 로컬푸드팀, 공공급식팀, 식품가공팀
	2.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여부	● 추진단으로 추진위원회, 실행위원회, 행정TF 운영 - 추진위원회 : 20명. 위원장 부시장 - 실행위원회 : 20명 - 행정TF : 10명. 농업부서, 보건소, 교육청 등 ● 추진단 민관거버넌스 : 5회 개최. 250명 참여 ● 지역별 농협 설명회 진행 : 일본연수, 선진지견학, 2회 진행(500명)
	3. 먹거리전략관련 조례 제정	● 공공급식조례, 학교급식조례, 로컬푸드지원조례, 직거래조례 기 제정 ● 먹거리 기본조례는 3월 발의 예정 : 용역사에 기본안 작성 요청
	4. 먹거리위원회 구성	● 추진단을 기본조례 제정 후에 위원회로 전환 예정 ● 먹거리위원회 : 현재는 자문기능 중심으로 운영 예정 - 향후 심의기능 포함 추진
	5. 먹거리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 행정TF 계속 운영 예정
	6. 먹거리전략 정보체계 마련	● 미정 : 연구용역은 기존 행정 데이터를 활용 방식으로 진행
	7. 주민참여 공감대 활동	● 2회 일반 시민 대상 설명회 개최 ● '19.1~2. 20개 읍면동 순회 설명회 완료
	8. 기타 우수사례	● 위원회에 농협 참여. 패키지사업에도 농협 매장 설치 사업 포함 ● 일본 선진지 견학(규슈 일원. 민관 추진단 25명) 진행. 올해도 해외 연수 예산 책정 ● 관내 외식업 회장도 민관 거버넌스에 참여.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추진 예정 - 관내 외식업 규모 : 4,000개소 1,400억원 규모
먹거리 공공성· 공동체성	1. 학교급식 지원	● 166개교(어린이집 포함), 1만6400명 공급 - 전체 규모 80억원(농산물, 축산, 수산, 가공 포함 / 공산품 제외) - 친환경 농산물은 현물공급 진행( '04년부터). 32억원 규모. 친환경 공급비율은 양곡, 농산은 100%, 축산일부(20%이내), 가공일부(20%이내) ● 현재 친환경농산물 공급은 조공법인에서 진행. 공공급식지원 센터로 통합 검토. 지역내 갈등요소로 작용 - 조공법인 운송비와 수수료율이 높다는 문제점 제거 : 운송비 12%, 수수료 10%으로 22% 수준
	2. 공공급식 지원	● 공공기관 혁신도시 10개 기관, 나주시청, 나주정신병원에 공급. 군부대는 나주원협에서 공급 - 관내 16개 기관 32억원 식재 구입비 가운데 올해 10억원 공급 목표 ( '19.1. 8천만원 기록) - 단가에서 일부 차이 발생, 투명성 확보 등을 이유로 이중 공급체계 유지 : 민간업체는 토털서비스 제공으로 영양사 선호.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는 일부 품목만 납품 받음 - 현재 기존 공급업체와 큰 마찰 없음 (4개 기관 민간 공급) - 영양사 대상 홍보, 인식전환 지속 추진 예정 - 공공기관 급식 10%(실제 공급할때 미달) ● 복지시설 대상 급식 공급 없음

3.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부서 사업과 연계는 하반기부터 추진 예정</li> <li>- 마을공동급식(160일, 도우미채용 운영 등), 영양플러스사업 (기존 현금지원, 현물공급체계로 전환 예정) 등</li> </ul>	
4. 먹거리관련 일자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법인 29명, 직매장 2개소 운영으로 10명 추가 일자리 창출 예상</li> <li>- 재단법인 : 계약직 인력 정규직 전환 완료 (15명)</li> <li>- 전남도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주체로 재단법인 선정 : 광주 소재. 9월 개장 예정. 2년간 운영</li> <li>- 나주시 금남동 소재 직매장 1개소 추가 개장 : 8월 예정</li> <li>* 참고 :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 출하 수수료 : 10%</li> <li>• 로컬푸드농가 4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 예정</li> </ul>	
5. 먹거리기반 사회적연대, 공동체활성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정</li> </ul>	
6. 먹거리 기본권, 공공급식관련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기본조례 제정 예정</li> </ul>	
7. 기타 우수사례		
지속가능 식생활	1.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진흥과에서 농업인 대상 추진</li> <li>• 향후 보건소, 교육청와는 연계하여 식농교육 추진 예정</li> </ul>
	2. 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 추진</li> </ul>
	3. 복지, 영양, 식생활교육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전부서를 대상으로 푸드플랜 교육 진행 예정</li> <li>•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대상 식농교육 진행 중</li> </ul>
	4. 주민참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는 미연계. 향후 추진 예정</li> </ul>
	5. 지속가능 식생활영양을 위한 적절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정책아이디어 및 소비자강연 연 4회 추진 예정</li> <li>• 현장활동가 양성가를 통한 모니터링 추진</li> </ul>
	6. 기타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팸투어 10회 진행 예정</li> </ul>
먹거리 선순환체계 (생산,유통, 소비,폐기)	1. 소량다품목 기획생산 또는 조달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초에 재배품목 등 조정 추진. 로컬푸드통합시스템 구축 예정</li> <li>- 6개 품목 생산자모임 형성, 20개까지 확대 예정</li> <li>- 카이스트 프로그램 도입 추진</li> <li>• 1ha 이하 농가 40% 차지 : 월 매출 100만원 수준</li> <li>- '18년 직매장 매출액 50억원 수준</li> <li>• 읍면동장 설명회에 참석하여 계약재배 참여 유도 : 마을별로 집단으로 신청 유도</li> </ul>
	2.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직매장 1(빛가람), 협약매장 2개(나주축협, 광주남구직매장) 운영 중</li> <li>• '19년 2개소(광주1, 나주시내1), '20년 빛가람점 임대매장을 복합 매장으로 신축 추진</li> <li>• 광주 서구와 직매장 개설 협의 중 : 서구는 사회적기업이 잘 되어 있어서 사회적기업 상품 판매를 위해 5대 5로 투자 협의</li> </ul>
	3. 토지,물 등 생산기반 안전·안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안전성 검사 월 80점 진행</li> <li>• '20년 안전성 검사센터 설치 예정</li> <li>• GAP 용수분석 사업 진행 중</li> </ul>
	3. 도시농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도시 텃밭조성 사업 진행 : 원예농업, 옥상농업 등</li> <li>- 도시농업 대통령상 수상</li> </ul>
	4.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가공품 공급 : 품목수, 실적은 미파악</li> <li>- 관내 업체 장류 생산품 일부 공급</li> </ul>
	5. 공공급식,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6. 로컬푸드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도농상생 급식으로 3억원(도1, 시2) 지원</li> <li>- 금천구에 년 10억원 공급 예상 ('19년 월 1억원 수준 예상)</li> </ul>
	6.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법인이 조직의 안정성이 높음 (중장기 관점 접근 가능)</li> <li>• 사업성장과 인력 확대시 운영비 예산확보 애로 예상</li> <li>• 지역농협과의 갈등 발생 가능성도 큼</li> </ul>

	7.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8. 생산자 적정소득 보장 또는 공정가격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급식 공급가는 시중가, 민간공급자 기준으로 협의 기준</li> <li>• 직매장은 인근마트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설정</li> </ul>
	9. 먹거리 손실 저감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역사에 현황파악 요청</li> </ul>
	10. 먹거리 재분배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뱅크 현황 미파악</li> </ul>
	11. 먹거리순환체계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플랜 수립 제도화 추진 예정</li> </ul>
	12. 기타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n-GMO 조례 제정('18.10.) : GMO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기타	1.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 운영비 지원에 대해 매년 의회에서 지적 : 10억원 규모</li> </ul>
	2. 건의사항	

⑧ 춘천시 : '19.2.15.

영역	실행과제	세부내용 / 비교
개요	1. 연구용역 진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역 중간보고 완료 (시장 참석)</li> <li>• 최종보고 5월말 완료 예정</li> </ul>
	2.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선포 미정 : 조례제정, 향후 추진방향 설정 후 검토</li> </ul>
거버넌스 추진체계	1. 먹거리전략 전담조직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심농식품과로 '18.9. 변경 : 식품관련 지원업무 일원화 (위생 별도 - 마케팅지원팀, 로컬푸드팀, 식품산업팀, 친환경농업팀, 유통시설팀, TF - TF :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푸드플랜 담당</li> </ul>
	2.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자문단 20명 구성. 3회 회의, 워크샵 1회 진행</li> </ul>
	3. 먹거리전략관련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급식지원조례, 지역먹거리육성조례 11월 통과</li> <li>- 학교급식지원조례 폐지 후 공공급식지원조례 제정</li> <li>•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3월 제정 목표</li> <li>• 향후 푸드플랜 지원조례 제정 예정</li> </ul>
	4. 먹거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플랜 실무TF 구성 : 행정 중심</li> <li>- TF 회의는 5차까지 진행. 담당자 교체로 공감대 형성 및 사업이해 과정 재진행</li> <li>- 6차 회의에서 현재 진행사업, 미래상에 대한 논의 진행 예정</li> <li>• 지역먹거리육성 조례에 따라 지역먹거리위원회 구성 진행 중</li> <li>- 위원 선정 단계</li> <li>- 용역결과에 따라 먹거리위원회에 대한 위상과 권한 정리 예정</li> </ul>
	5. 먹거리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는 시정비서관에게 정책조정을 위한 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조정 요청 예정</li> <li>• 제도적 도입은 미검토</li> </ul>
	6. 먹거리전략 정보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관리프로그램 도입 예정 : 2학기부터 사용 추진</li> <li>• 먹거리정보 플랫폼에 대한 고민은 없음</li> <li>• 급식센터에서 생산정보부터 관리해 나갈 계획임</li> </ul>
	7. 주민참여 공감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2. 의원대상 설명회 / 민간자문단 2차 워크샵, 3.8. 공무원 대상 확대 오픈 강좌 추진 예정</li> </ul>

	8. 기타 우수사례	
먹거리 공공성· 공동체성	1. 학교급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금지원 유초중고 75개 (국공립유치원) : 현금지원. 현물공급은 '20년부터 예정</li> <li>- 친환경 차액지원 2억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많이 쓰이지 않음</li> </ul>
	2. 공공급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간식비 500원 지원 사업(아동보육과. 950백만원) 시작 : 로컬푸드 60% 이상 사용 조건. 공급가능 매장이 2개소밖에 안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li> </ul>
	3.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먹거리 창업 플랫폼으로 (가칭) '먹거리연구센터' 구상 중</li> <li>- 운영방식 : 민간협동조합에 운영 위탁. 로컬푸드 전처리, 반가공품으로 푸드마켓 형태로 운영. 부스 하나하나를 창업 컨설팅 진행하고, 장터형태로 운영 예정 추진</li> <li>- '19년말 운영 예정</li> </ul>
	4. 먹거리관련 일자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사업은 없으나, 민간에서 먹거리관련 협동조합 설립 추진</li> <li>- 기존에 어라운드키친, 어라운드맘카페 등 관련사업 경험 보유 (브랜드는 같이 쓰나 매장별로 운영주체는 다름)</li> </ul>
	5. 먹거리기반 사회적연대, 공동체활성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계 모색 중</li> </ul>
	6. 먹거리 기본권, 공공급식관련 제도 마련	
	7. 기타 우수사례	
지속가능 식생활	1.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는 식생활교육 담당자 없음</li> </ul>
	2. 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경에 식생활교육 예산 20백만원 반영 추진</li> <li>-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중심으로 운영 예정 (식넷 활동가 20여명)</li> </ul>
	3. 복지, 영양, 식생활교육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지 못하고 있음</li> <li>- 어린이급식지원센터 : 600백만원 예산 지원. 한림대 위탁운영</li> </ul>
	4. 주민참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플랜 관련 민간 워크샵에는 참여시키고 있음</li> </ul>
	5. 지속가능 식생활영양을 위한 적절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협, 식넷 등 민간조직 중심으로 식생활교육 진행</li> </ul>
	6. 기타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자문단에 참여하고 있어서 향후 푸드플랜 참여 예정</li> </ul>
먹거리 순환체계 (생산,유통, 소비,폐기)	1. 소량다품목 기획생산 또는 조달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농가 160명 조직화 추진 : 품목군 대표자 모임 진행</li> <li>'19년 2학부부터 공급 예정</li> <li>생산량의 60%는 급식으로 공급. 40%는 전처리나 가공해서 이유식 회사에 공급 추진</li> </ul>
	2.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매장은 2~3년 내에 2~3개까지 확대 예정</li> <li>마을 단위 순회수집 추진 예정 / 공급거점 마련도 병행 추진</li> <li>(가칭) 먹거리 연구센터 마켓 활성화</li> <li>- 해물탕, 김치찌개 등 HMR 패키지 상품화 추진</li> </ul>
	3. 토지, 물 등 생산기반 안전·안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춘천푸드인증 용역 마무리 단계 : 센터 설립후 실행 예정</li> <li>도매시장에 안전성 검사센터 '19년말 완공 예정</li> </ul>
	3. 도시농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네트워크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25명 참여 중</li> </ul>
	4.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공회사들이 지역산 원료 사용한 제품 개발하고, 이를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 구상 중</li> <li>- 가공업체에 대한 기초조사 진행 중</li> </ul>
	5. 공공급식, 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6. 로컬푸드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급식센터에서 직영하는 직매장 확대 예정</li> <li>- 현재 농협 샵인샵으로 2개소 운영 : 조합원이 판매장에게 갔다놓는 수준에 그침</li> <li>- 독립 직매장 1호점 개점 추진(시유지에 예정)</li> </ul>	

6.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급식지원센터, 재단법인 설립 : '19.6. 완공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설립 후 TF팀 이전 예정. 향후 조직구상은 미정</li> </ul> </li> <li>•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매출액 300억원 목표</li> <li>-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10% : 수수료 수입 20~25억원 예상</li> <li>- 인력 70명, 운영비 30~35억원 예상</li> <li>- 행정지원 연 10억원 희망 (시설, 운영비 등)</li> </ul> </li> <li>•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반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동안은 농협에 위탁한다는 계획으로 수년 동안 공전함</li> </ul> </li> </ul>	
7.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시설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진청 사업으로 안전성센터 설립 계획은 없음</li> </ul> </li> </ul>	
8. 생산자 적정소득 보장 또는 공정가격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비, 시세를 반영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li> </ul>	
9. 먹거리 손실 저감 방안 마련		
10. 먹거리 재분배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뱅크 : 춘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li> </ul>	
11. 먹거리순환체계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먹거리조례를 개정하여 명확하게 반영 예정</li> </ul>	
12. 기타 우수사례		
기타	1. 애로사항	
	2. 건의사항	

⑨ 충청남도 : '19.2.11.

영역	실행과제	세부내용 / 비고
개요	1. 연구구역 진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보고 2회 진행 / 3.6. 최종보고회 진행 예정 (도지사 참석)</li> </ul>
	2.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선포 4월 추진 : 도지사, 의회의장, 교육감 공동 선포</li> <li>• 밀라노협약 가입 추진</li> </ul>
거버넌스 추진체계	1. 먹거리전략 전담조직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순환유통팀 6명으로 구성 : '18.1.구성, 8월 업무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직 1 : 학교급식, 공공급식 수발주 담당, 전산 업그레이드, 코드 통일 등의 업무 담당</li> <li>- 영양교사 1 : 교육청 파견 근무, 합동점검, 영양교사 워크숍 준비(연 2회), 식생활교육 (농정과에서 유통과로 이관)</li> <li>- 농업직 1 : 가공식품 공동구매, 시군센터 활성화 지원</li> </ul> </li> </ul>
	2.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위원회 35명, 4분과로 구성 : 민간 26명, 행정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위원회 출범시 해산 예정</li> </ul> </li> </ul>
	3. 먹거리전략관련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급식 지원조례 3월 제정 예정 : '20년부터 도내 전체 어린이집에 친환경 차액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급식조례(학교급식 조례 별도)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식품지원조례와의 차이점임</li> </ul> </li> <li>•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추진 : 먹거리정책의 가치, 민관 거버넌스, 실행체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포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단위 기본계획, 모니터링 등 포함 예정</li> </ul> </li> </ul>
	4. 먹거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위원회는 60명 정도로 구성 예정 : 기존 준비위원회의 건강먹거리 분과, 먹거리순환분과 보강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네트워크 구성 협의 중 : 협동조합, 생협, 급식운동단체 등 중심. 1차 협의 진행</li> </ul>	
5. 먹거리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정책조정관(자문관)의 필요성은 제기되나 구체화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에 먹거리포럼을 구성해서 지원그룹을 운영하고 의회에서 제안하는 형태로 추진 모색</li> </ul> </li> <li>• 푸드플랜 행정TF팀을 구성('18.3.)하였으나, 2회 회의하고 중단. 먹거리준비위원회로 자연스럽게 이관됨</li> </ul>	
6. 먹거리전략 정보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 공공급식 데이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급식 영역 가운데 관리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아동 센터,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은 보완 필요</li> <li>필요(주기적 조사 등)</li> <li>- 어린이집도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은 미흡</li> </ul> </li> <li>• 대상별 먹거리 요구, 영양상태, 영양제공 프로그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건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 모색 중</li> </ul> </li> </ul>	
7. 주민참여 공감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적인 측면에서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은 지속적으로 추진 하였으나, 주민대상 공유 활동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포럼 2회 개최(130명 수준)</li> <li>- 직접 도민 설명회 진행은 아직까지 계획 없음</li> </ul> </li> <li>• 전시군 순회 간담회 개최 예정 (2.15/16/18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복지시설, 생산자단체, 농협, 사회적경제조직(먹거리) 등 시군당 15~20명 수준</li> </ul> </li> <li>• 직매장 40여개소 관계자 모임은 상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생산자 참여. 작부체계 조정 등 추진</li> </ul> </li> </ul>	
8. 기타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과제 : 1)정보체계 구축 2)자주인증프로그램</li> </ul>	
사회경제적 형평성 공공성	1. 학교급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센터 13개 시군 설치 및 운영 : '19년 상반기 금산군 설치로 14개 시군 설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차역지원사업 진행 : 229억원 / 무상급식비 1263억원</li> </ul> </li> <li>• 품질기준 : 현재는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 기준 구체화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 영양교사 중심으로 품질기준 매뉴얼 개발 추진</li> <li>- 가공식품 : 시군별로 자체 품질기준 마련 확대 추진</li> <li>- 일반농산물 : 자체 품질기준 설정 추진. 논산 마련, 청양은 자주인증 방식으로 계획 중</li> </ul> </li> <li>* 자주인증제 : 수요자와 생산자간 합의를 통한 기준. 학교급식 일반농산물, 직매장 판매 로컬푸드를 대상으로 추진. 직매장 생산자협의회와 운영주체간 협의 추진, 소비자 참여 추진</li> </ul>
	2. 공공급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어린이집 전면 친환경공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시군센터 시설보강 사업 지원 (확정)</li> </ul> </li> <li>• 공공급식지원조례 통과후 공공기관 급식 추진('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조사 완료. 지사와 협약체결 예정</li> <li>- 시군 급식지원센터에서 지역농산물 공급방식으로 추진 예정</li> <li>- 대상 : 도 산하기관, 경찰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 등 130개소</li> <li>- 가격 - 급식센터 공급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음. 급식센터 공급리스트 제공, 선택가공 품목 선정</li> <li>- 물류비 지원여부 검토 중 (수수료체계 포함 여부도 비교 분석)</li> </ul> </li> </ul>
	3.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아파트) 아침조식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선정 완료 : 3개소</li> <li>- 그 가운데 천안 LH 대상 사업 시작하면서 비전선포 고려</li> </ul> </li> <li>• 공동조리장 시범사업 추진 : 홍성, 아산 자활기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사회 청년 먹거리 공유부엌 설치지원 사업 추진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경반영 추진 : 1개소 공모</li> </ul> </li> <li>•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친환경농업인단체가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일반가 격에 공급하기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친농연 이사회 결정. 상반기 추진 예정</li> </ul> </li> </ul>
	4. 먹거리관련 일자리 개선	
	5. 먹거리기반 사회적연대, 공동체활성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조리장과 마을급식 확대 검토 : 청양, 아산 추가 관심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직까지 정책간 연계 구조는 미흡</li> </ul> </li> </ul>
	6. 먹거리 기본권, 공공급식관련 제도 마련	
	7. 기타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자녀 반찬 공급사업과 케어서비스 연계 사업 추진 희망 : 추후 지역사회 연계 모델로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홍성 장애인 75 가구 사례 :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영양, 식생활 불균형 방지</li> </ul> </li> </ul>
지속가능 식생활	1.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초에 식생활교육 업무 이관 : 단계적 강화 추진</li> <li>• 먹거리복지 취약계층의 경우, 식재료 공급과 식생활교육 같이 가야 함 : 식명 탈출 교육 추진 예정</li> <li>• 보건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연계 미흡</li> </ul>
	2. 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3. 복지, 영양, 식생활교육의 연계	
	4. 주민참여 활동	
	5. 지속가능 식생활영향을 위한 적절한 투자	
	6. 기타 우수사례	
먹거리 선순환체계 (생산,유통, 소비,폐기)	1. 소량다품목 기획생산 또는 조달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작부체계 구축 ('18년말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친환경인증 5천 농가 가운데 1천 농가 대상 진행</li> <li>- 계약생산 방식으로 적용</li> </ul> </li> <li>• 일반농산물 : 직매장 통합생산자 조직 육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산을 실증연구 모델로 진행.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추경에 3개년 사업으로 예산 편성 추진</li> <li>- 직매장간 연계 추진 : 기획생산 품목 선정, 생산자 연계, 급식으로 연계 추진</li> </ul> </li> </ul>
	2.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 연계 : 광역직거래센터 구축</li> <li>• 공공급식 시장창출 : 서울, 대전 공공급식시설 대상 공급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팜투어 추진 예정</li> </ul> </li> </ul>
	3. 토지,물 등 생산기반 안전·안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인증체계 구축을 통해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 중심으로 진행. 검사비용 지원 진행</li> </ul> </li> </ul>
	3. 도시농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정. 정책연계도 미진행</li> </ul>
	4.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류 학교급식 공급 실시 : '18년 2학기 7개 품목(두부, 콩나물, 친환경 김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류는 의무구매, 7개 품목은 선택으로 진행</li> <li>- 평가후 의무전환 검토</li> </ul> </li> <li>• 도농업기술원 정통식품인증(장류, 두부 등), 향토식품활성화 등 정책 연계 추진</li> </ul>
	5. 공공급식,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급식 확대 예정</li> <li>• 공공기관급식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검토</li> </ul>
	6. 로컬푸드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정</li> </ul>
	6.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 센터와 기초 센터의 관계는 상하 관계 또는 순차적 관계가 아니라 병행 추진 및 공존 관계로 설정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부족품목 보완 등을 위해서는 광역센터 필요</li> <li>- 2020~21년 추진 예정</li> </ul>
7.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8. 생산자 적정소득 보장 또는 공정가격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 광역가격결정위원회 수수료 등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학교급식, 한살림가격, 3개년 가격을 반영하여 결정</li> <li>- 도단위에서 결정 후 시군 센터 시달</li> </ul> </li> <li>• 축산,가공품 : 공동구매 품목만 광역에서 결정하여 시달</li> </ul>
9. 먹거리 손실 저감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공모 실시. 수범사례 홍보 확대 추진 (계획중)</li> </ul>
10. 먹거리 재분배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활성화 : 푸드뱅크, 청양대학교 연계 추진 (계획중)</li> </ul>
11. 먹거리순환체계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12. 기타 우수사례		
기타	1.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행정의 친숙함 부족</li> <li>• 민간의 역량 강화 필요 : 자기일에만 관심이 있으며,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짐</li> <li>•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부족. 발굴과 교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경에 자체적으로 거버넌스 지원사업 예산 추진</li> </ul> </li> </ul>
	2.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급식센터 건립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li> </ul>



## 다. 모니터링 결과 분석

### □ 총괄

#### ■ 영역별 먹거리정책 수준 평가

- 시범지역의 먹거리정책을 4대 영역으로 나누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5점 척도로 수행 수준을 평가함
  - 지역의 먹거리정책을 1>거버넌스·추진체계 구축 2>먹거리 공공성과 공동체 활성화 3>지속가능한 식생활 실행 4>먹거리 지역순환체계 구축의 4대 영역으로 구분함
  - 모니터링 지표는 총 4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밀라노 먹거리정책 협약의 권장행동(2015)를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적용함
  - 먹거리정책에 대한 각 지표별 점수는 아래의 평가기준을 기초로 각 수준별 수행 범위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1점을 적용하여 매김

〈표 IV-1〉 시범지역의 먹거리정책 모니터링 지표별 평가 기준

영역	실행과제	주요 평가 기준
거버넌스 · 추진 체계	1.전담조직 설치	과단위 이상 5점 / 계단위 이상 3점 / 담당자 1점
	2.계획의 주민참여도	비농업인 참여, 제도적 운영 5점 / 제도적 운영 3점 / 설명회 수준 운영 2점
	3.먹거리기본조례	먹거리기본조례 5점 / 공공급식등 조례 3점 / 미제정 1점
	4.먹거리위원회	제도적 운영 5점 / 예비조직 3점 / 미정 1점
	5.정책조정제도	조정관등 제도화 5점 / 일시 행정TF운영 3점 / 미운영 1점
	6.정보체계구축	플랫폼, 제도화 5점 / 종합실태조사(일회성) 3점 / 기타 1점
	7.주민공감대형성	워크숍, 설명회 등 개최횟수 1회당 1점
	8.기타우수사례	타지역 모범사례 정도에 따라 부여
먹거리 공공성 · 공동체성	1.학교급식지원	전체현물급식 5점 / 일부 현물급식 3점 / 무상급식 2점 / 일부 현금지원 1점
	2.공공급식지원	3개 영역이상 현물지원 5점 / 1~2개 영역 현물지원 3점 / 현금지원 2점
	3.먹거리취약계층지원	커뮤니티키친 등 (어린이, 고령자, 마을, 공동주택 등)
	4.먹거리관련 일자리개선	일자리 창출실적 100명 이상 5점 / 먹거리관련 창업교육 진행, 30~100명 이상 3점 / 기타 1점
	5.사회적연대·공동체활성화	조직적 추진 5점 / 비조직적 추진 3점 / 기타 1
	6.기본권 제도화	기본권 반영 조례제정 5점 / 일부반영,먹거리선언 등 3점 / 추진예정 2점
	7.기타우수사례	타지역 모범사례 정도에 따라 부여
지속 가능 식생활	1.식생활교육	조직적 홍보 5점 / 사업연계, 자체예산 3점 / 기타 1점
	2.주민건강개선희동	주민대상 프로그램 조직적 전개 5점 / 부서별 추진, 성과 공유 3점 / 기타 (외지인대상 소비촉진성 교육체험 제외)

	3.식생활관련 정책연계	보건소,어린이급식지원센터,농진청 등 관련기관과 조직적 협력 5점 / 부문적 협력 3점 / 기타 1점
	4.주민참여 활동	조직적 전개 5점 / 일회성 진행 3점 / 기타 1점
	5.식생활·영양 투자	지속적으로 예산, 식생활교육시설 투자 5점 / 부문적 투자 3점 / 기타 1점
	6.기타우수사례	타지역 모범사례 정도에 따라 부여
먹거리 선순환 체계 -생산 -유통 -가공 -소비 -폐기 -재활용	1.기획생산·조달체계	기획생산,자체인증 5점 / 기반마련, 도농연계, 추진중 3점 / 기타 1점
	2.로컬푸드생산유통체계	직매장, 가공시설 설치 운영 5점 / 직매장 운영 3점 / 기타 1점
	3.안전생산기반확보	토양,중금속,물 안전성검사 제도화 5점 / 일부 진행 3점 / 기타 1점
	3.도시농업	도시농업 활성화 5점 / 일부 추진 3점 / 기타 1점
	4.학교급식 로컬푸드공급	농산물, 가공품 현물공급 5점 / 농산물 현물공급 3점 / 기타 1점
	5.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공급	공공급식, 공공기관 3영역 이상 5점 / 2부류 3점 / 기타 1점
	6.로컬푸드 소비자접근성개선	직매장의 충분 5점 / 일부 3점 / 기타 1점
	7.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	충분시설,지원기능 5점 / 시설운영 3점 / 예정 2점 / 기타 1점
	8.먹거리 안전성	안전성검사,인증기준설정 5점 / 일부 3점 / 기타 1점
	9.적정소득·공정가격 기준	자체기준 5점 / 협의결정 3점 / 도매시장 등 가격 2점 / 기타 1점
	10.먹거리 손실 저감	실행 우수 5점 / 구체계획, 시범사업 3점 / 기타 1점
	11.먹거리 재분배	실행 우수 5점 / 구체계획, 시범사업 3점 / 기타 1점
	12.모니터링 제도화	조례등 제도화 5점 / 자체계획 3점 / 기타 1점
	13.기타우수사례	타지역 모범사례 정도에 따라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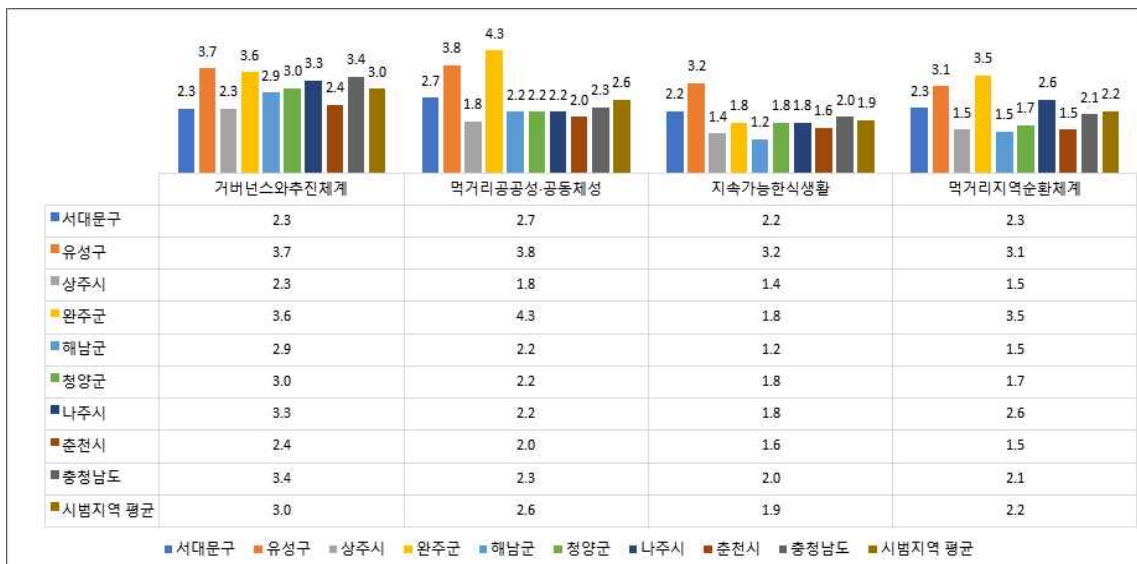
#### ■ 4대 먹거리정책 영역의 평균 이행 수준

- 모니터링 결과,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4대 영역 가운데 거버넌스와 추진체계 구축 부문은 가장 높은 3.0점을 기록한 반면,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부문이 가장 낮은 1.9점으로 나타남
  - 먹거리 공공성과 공동체 활성화 부문은 2.6점이며, 먹거리지역순환체계 구축 부문은 2.2점으로 나타남
- 거버넌스·추진체계 부문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모든 시범지역에서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전담부서를 과단위 또는 계단위 수준으로 설치하고, 먹거리 위원회 또는 푸드플랜 수립 추진단을 민관 거버넌스 방식으로 구성·운영하고 먹거리기본조례 또는 먹거리공공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기 때문임
  - 거버넌스·추진체계 부문에서도 제도화된 정책조정 방식의 도입, 먹거리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등은 상대적으로 수행 수준이 낮음
- 먹거리 공공성과 공동체 활성화 수준은 4대 영역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학

교대상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공급식이 확대된 결과임

- 먹거리공공성과 공동체 활성화 영역에서도 사회연대·공동체활성화, 먹거리기본권의 제도화 등은 학교급식·공공급식 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먹거리 지역순환체계 구축 부문은 로컬푸드의 생산-소비-폐기 정책과 관련된 부문으로 로컬푸드의 생산과 유통, 안전성 관리, 농가조직화 부문은 대부분의 시범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먹거리 손실 저감과 먹거리 재분배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추진은 미흡함으로 나타남
- 먹거리정책의 4대 영역 가운데 가장 미흡한 영역이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부문임.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일부 정책적 노력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관련정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였음
- 이러한 결과의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농식품부의 식생활교육사업을 시군에 시달하지 않고 시도단위에서 직접 수행하다 보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식생활교육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일부 지자체, 특히 도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식생활 개선 및 관련 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지자체별 수행 수준도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 상대적으로 거버넌스·추진체계 부문에서는 그 편차가 작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점수차가 2배 이상 나타나고 있음

〈그림 IV- 2〉 시범지역의 먹거리정책 영역별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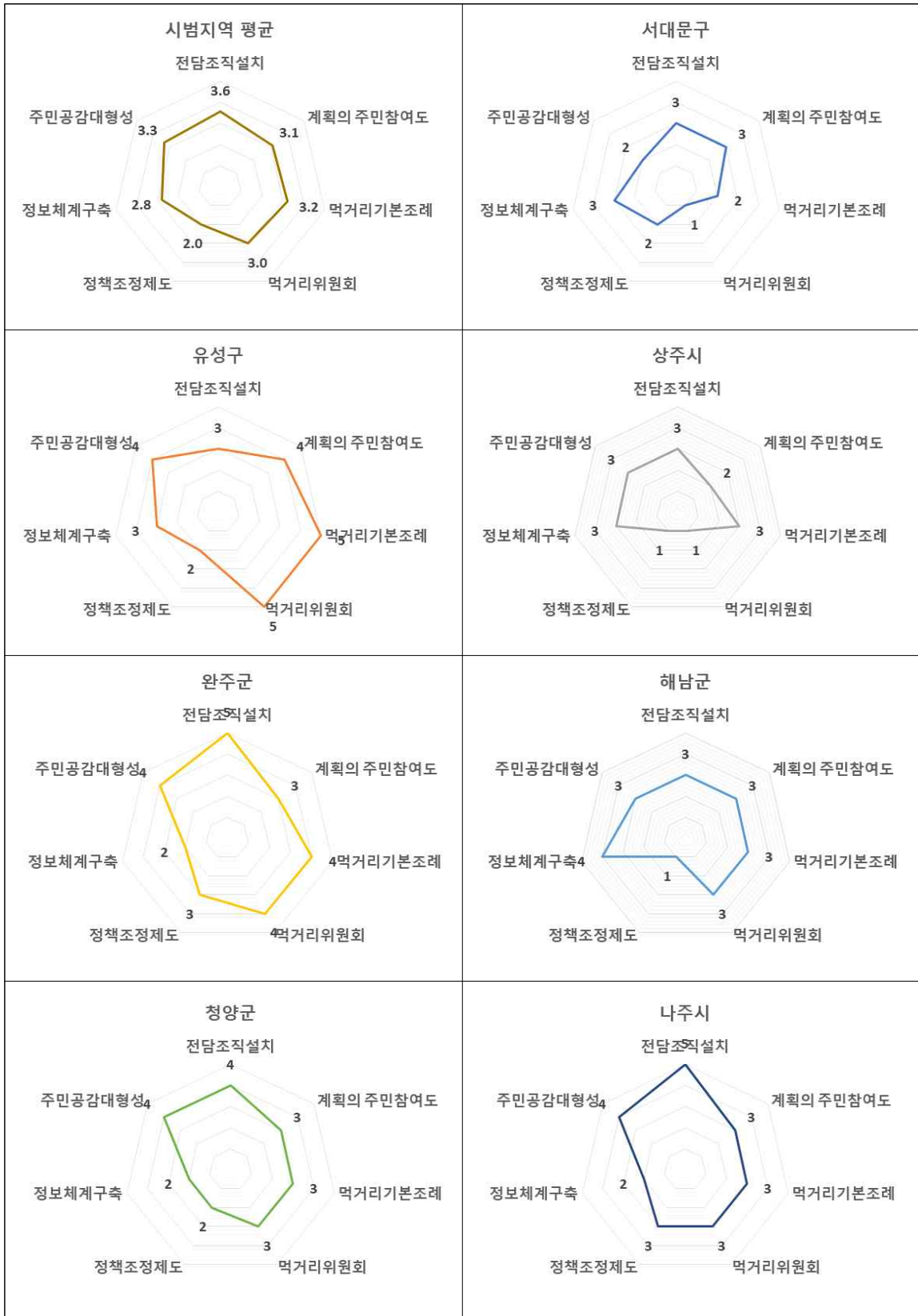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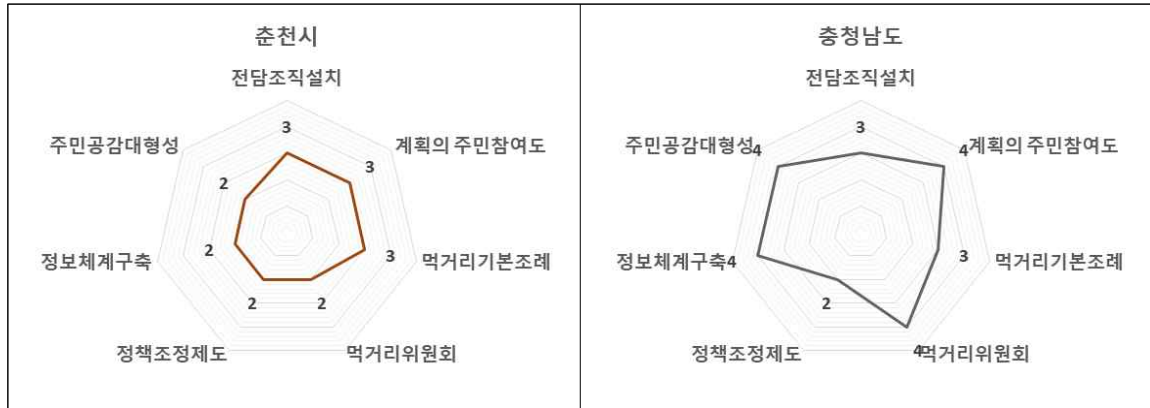
## □ 부문별·지역별 모니터링 결과

### ■ 거버넌스와 추진체계 부문

- 거버넌스와 추진체계 구축 부문은 전담조직설치, 계획의 주민참여와 주민공감대 형성 노력, 먹거리기본조례 제정과 먹거리 위원회 구성 등은 시범사업에서 비교적 잘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제도화된 정책조정 체계의 구축, 먹거리 정보체계 구축 부문은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전담조직 설치와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은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이자, 푸드플랜 지속을 위한 기반구축 사례로 판단됨
  - 정책조정 체계의 제도화, 정보체계 구축은 푸드플랜의 기초 추진여건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부문임
- 서대문구 : 푸드플랜 수립에 주민참여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거버넌스와 추진체계의 제도화 부문은 미흡함
- 유성구 : 주민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고, 먹거리기본조례 제정과 먹거리위원회 운영 등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음. 정보체계 구축 및 협치 제도화 부문은 미흡함
- 상주시 : 푸드플랜 수립의 주민참여와 공감대형성을 위해 노력은 하였으나 다소 미흡함. 아직 먹거리위원회 구성 등 거버넌스와 협치 제도화 부문이 미흡함
- 완주군 : 과단위 전담조직과 주민공감대 형성 등 전반적인 거버넌스와 협치체계 우수함. 다만, 정보체계 구축과 협치의 제도화 부문은 다소 미흡함
- 해남군 : 먹거리기본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제도화, 정보체계 구축 등 푸드플랜 추진기반은 갖추어가고 있음. 상대적으로 주민참여와 주민공감대 형성 등 거버넌스가 미흡함
- 청양군 :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개최로 주민공감대화 푸드플랜에 대한 주민인지도 높음. 상대적으로 거버넌스와 협치의 제도화되는 미흡함
- 나주시 : 과단위 전담조직 설치, 푸드플랜 추진단 운영 등 추진체계 구축과 거버넌스 활동은 우수함. 먹거리기본조례 제정, 정보체계 구축 등 사업기반의 제도화는 부족함
- 춘천시 : 늦은 사업착수 등으로 푸드플랜에 대한 행정과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미흡함. 거버넌스와 추진체계의 제도화도 아직은 마련되지 못함
- 충청남도 : 푸드플랜 수립과정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도청 내에 계단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식생활교육사업을 이관받는 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함. 다만, 먹거리기본조례의 제정,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은 부족함

〈그림 IV- 3〉 시범지역의 먹거리정책 거버넌스와 추진체계 구축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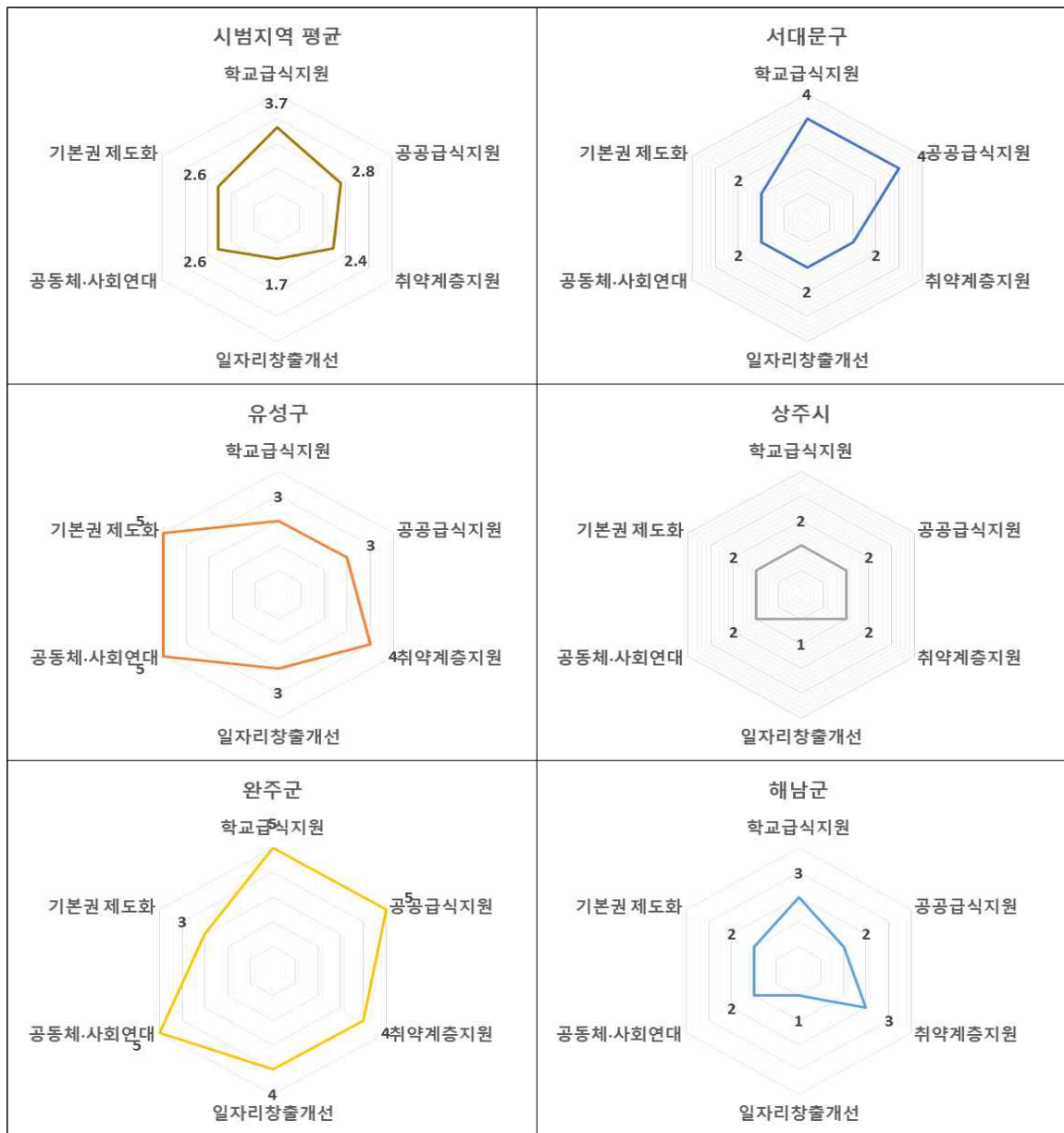
## ■ 먹거리공공성과 먹거리기반 공동체활성화

- 먹거리 공공성 및 공동체 활성화 강화 부문에서 학교급식지원은 현물급식이 확대되면서 가장 활성화된 영역이었음. 그러나 학교급식을 제외한 공공급식지원, 취약계층지원, 먹거리기본권의 제도화, 공동체활성화 관련 정책은 중간 수준이었으며, 일자리창출 개선 영역은 중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먹거리기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
  - 지역별로도 편차가 큼. 완주군,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반적으로 먹거리 공공성 제고와 공동체활성화, 일자리창출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서대문구 :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학교급식이 추진되고, 전주시와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미래세대 대상 먹거리공공성은 높은 편임. 그러나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공동체 활성화는 다소 미흡함
- 유성구 : 학교급식, 공공급식은 현금지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시민단체와 연계한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취창업교육, 마을공동체 육성 및 커뮤니티 키친 활동 등은 우수함
- 상주시 : 경북도 사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공급식, 취약계층 지원, 공동체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먹거리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미흡함
- 완주군 : 학교급식, 공공급식 모두 로컬푸드로 공급되고 있으며, 가공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함. 최근에는 마을공동체를 비롯한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동경제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해남군 : 친환경 무상급식, 공공급식을 지역내 공급기관 선정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아직은 먹거리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 먹거리 사회연대 기반은 미흡함
- 청양군 : 학교급식은 현물급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공공급식은 시설부족으로 현금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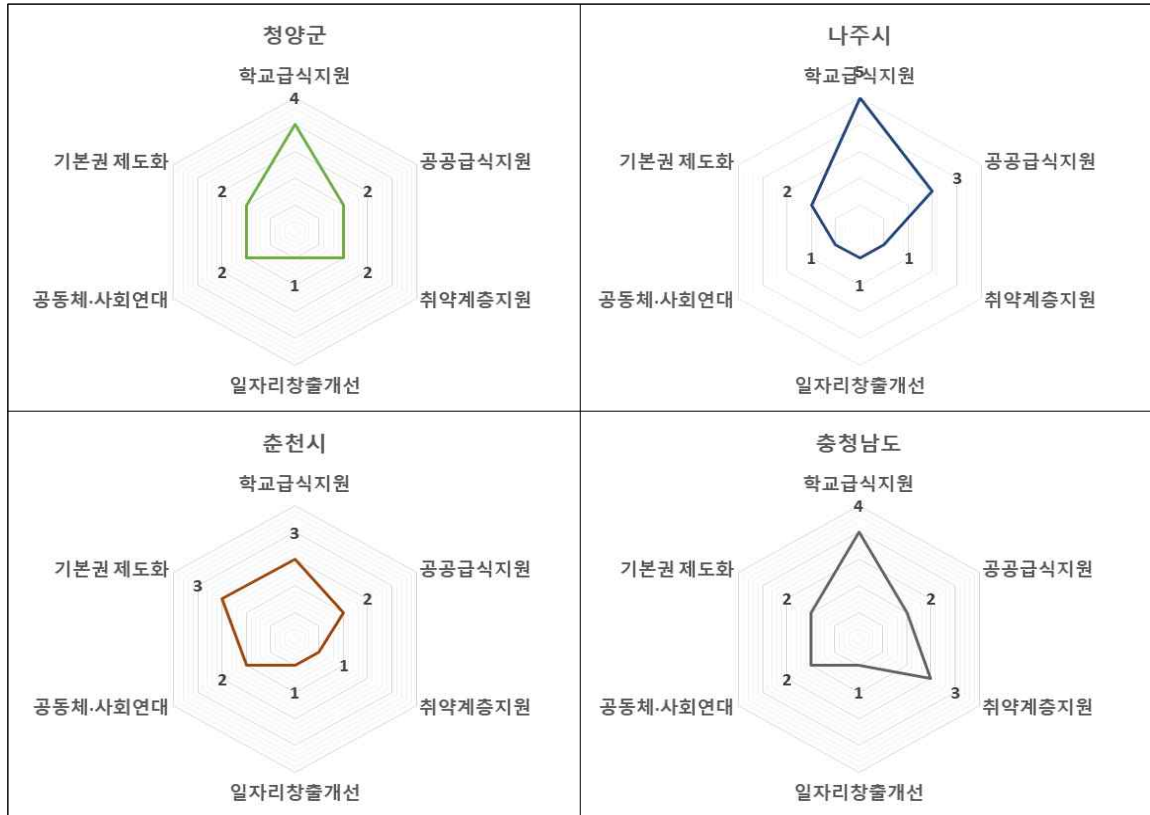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지역내 시민사회 형성 미흡으로 사회연대는 약함

- 나주시 : 친환경학교급식을 현물로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급식사업도 진행함. 그러나 상대적으로 먹거리취약계층의 발굴과 먹거리기반 사회연대 활동은 미흡함
- 춘천시 : 학교급식, 공공급식,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취약하며, 사회연대 활동도 미흡함
- 충청남도 : 14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어 학교급식 중심으로 먹거리공공성은 비교적 안정화됨. 공공급식 활성화와 취약계층 대상 커뮤니티 키친, 먹거리기반 사회연대 활동은 시작단계임

〈그림 IV- 4〉 시범지역 먹거리정책의 사회경제적 형평성 · 공공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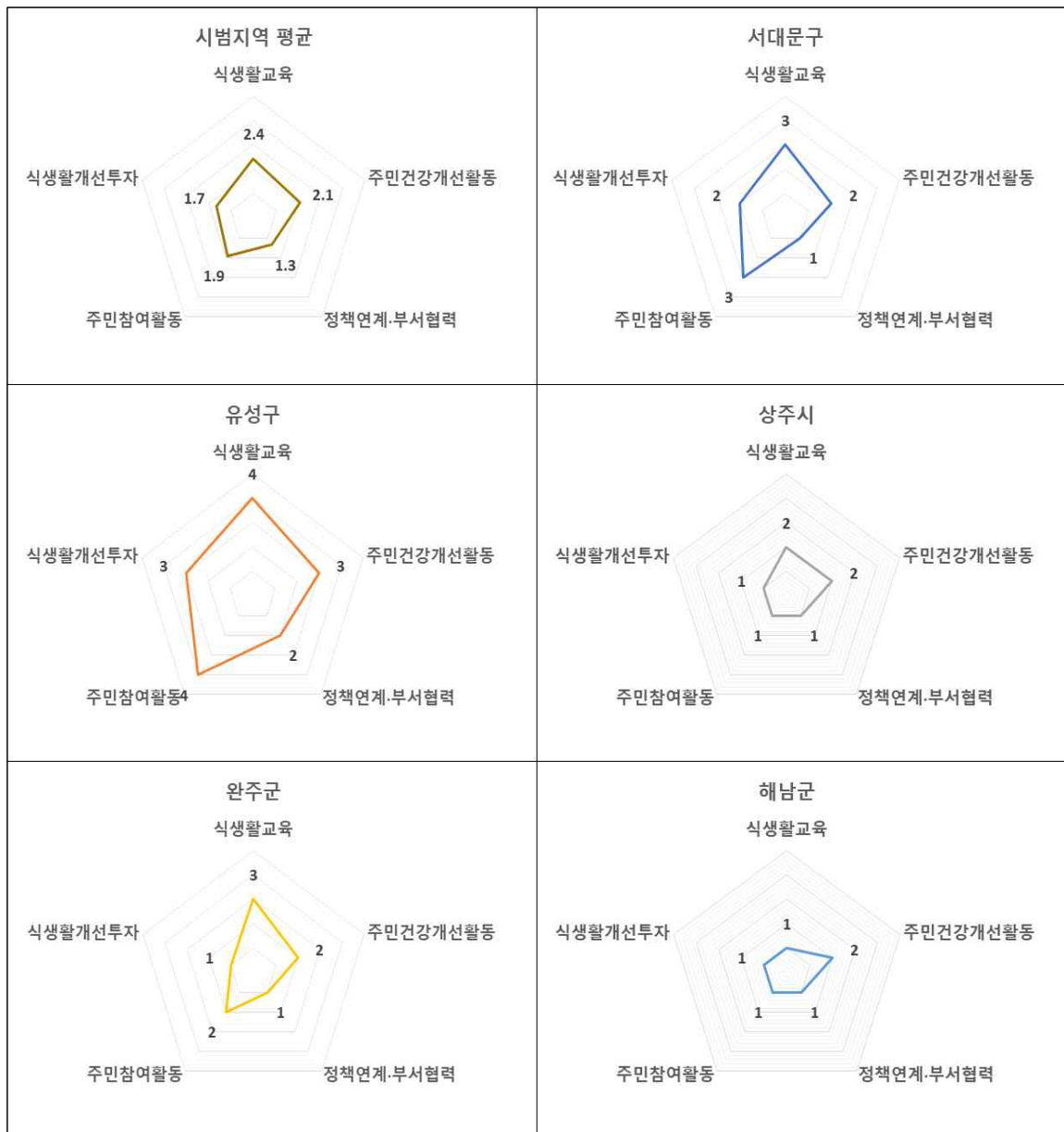
## ■ 지속가능한 식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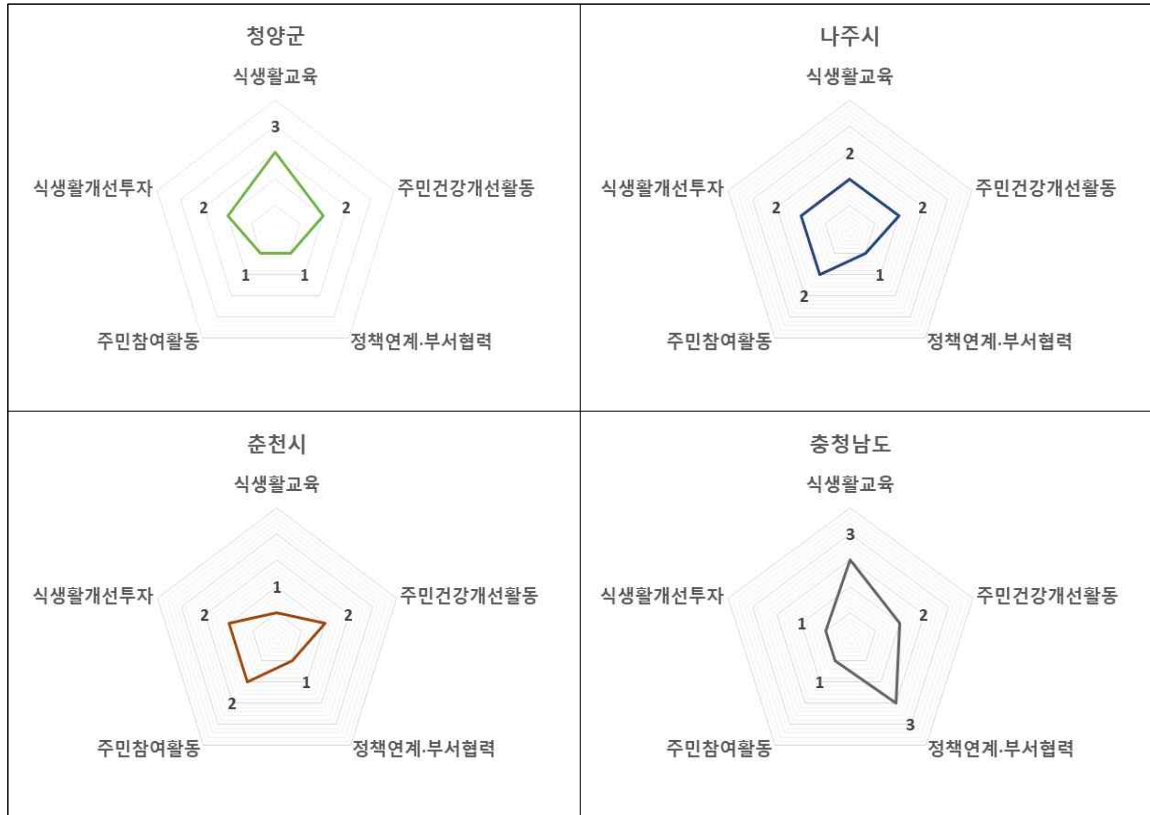
- 지속가능 식생활과 관련된 부문은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범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민참여형 교육이 부족하고, 식생활개선을 위한 투자와 정책연계·부서간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 앞으로 식생활관련 정책이 우리나라 푸드플랜에서 가장 강화되고, 정책체계도 재정립해야 하는 부문으로 판단됨
- 서대문구 :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조직이 2018년에 결성되었으며, 장르 중심 주민참여 교육을 자체예산으로 일부 진행하고 있음. 현장의 수요는 많으나 아직까지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지 못함
- 유성구 : 2015년부터 3년간 식생활교육 전문 강사를 육성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육성하고, 대전푸드플랜 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식생활개선 활동을 적극 추진함. 지역 내 먹거리 시민조직과 함께 진행한 식생활교육이 푸드플랜의 동력으로 작용함
- 완주군 :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식농교육을 지역농협, 로컬푸드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대상 식생활개선 활동 및 부서간 협력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음



- 상주시, 해남군, 청양군, 나주시, 춘천시 : 식생활교육지원사업이 시군까지 전달되는 체계가 아니어서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은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함. 향후 보건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할 계획임
- 충청남도 : 그동안은 담당부서가 달라서 푸드플랜과 연계성이 부족했음. 이에 2019년 초에 식생활교육사업을 이관받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연계할 계획임

<그림 IV- 5> 시범지역 먹거리정책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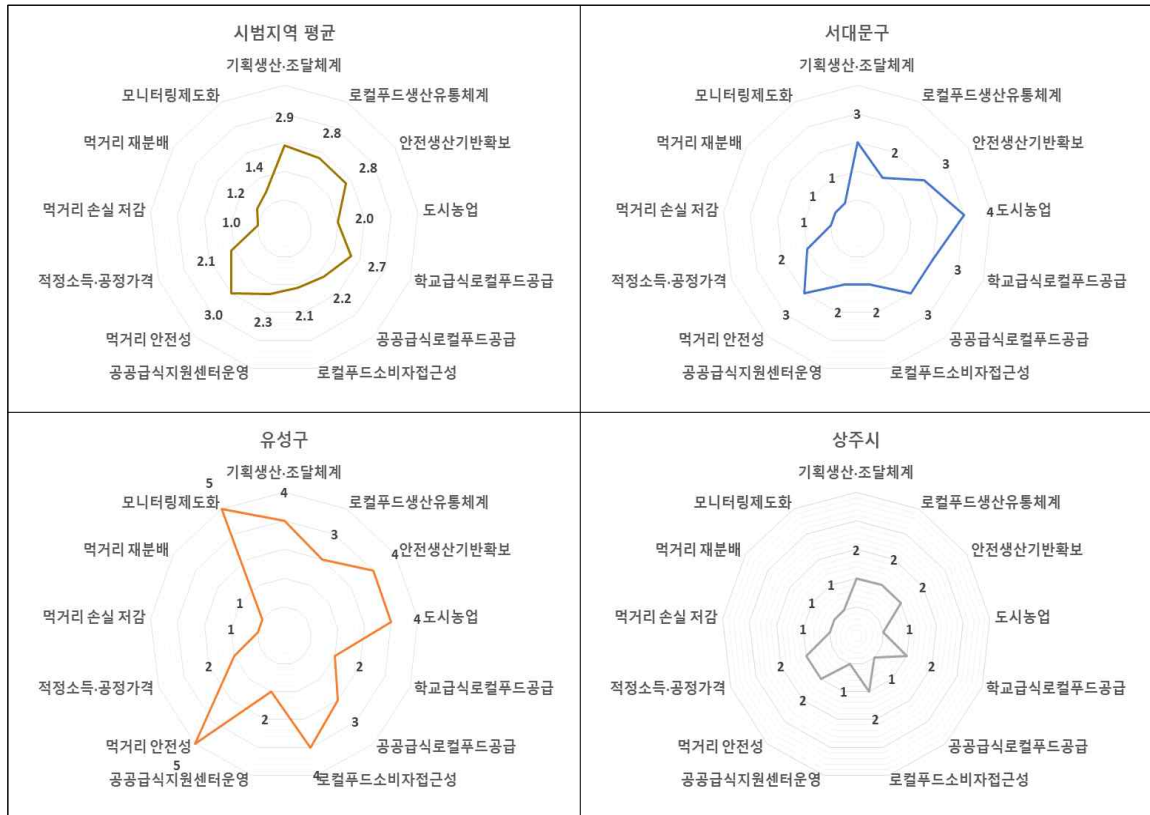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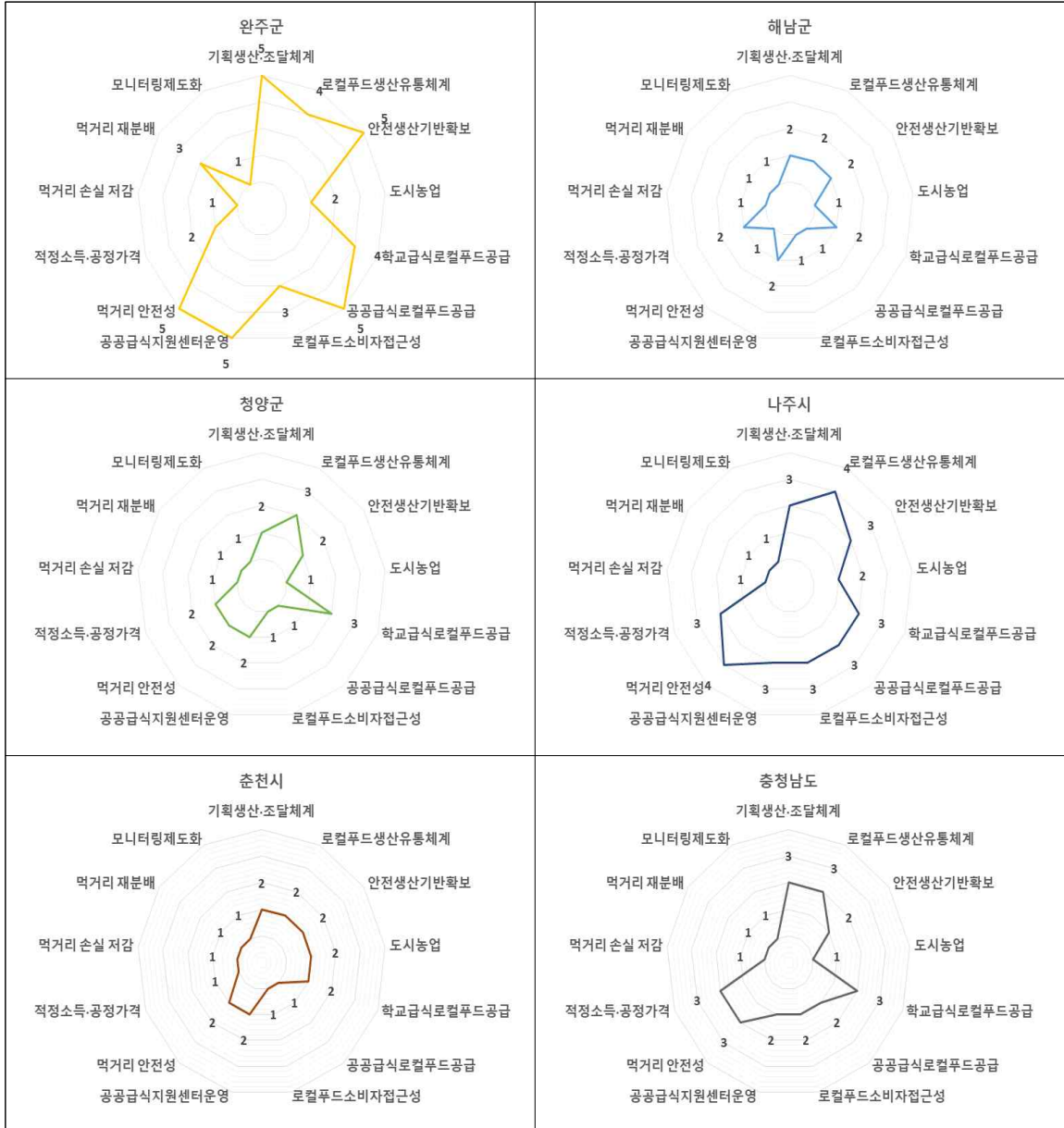
### ■ 먹거리 지역순환체계 구축 : 생산 · 유통 · 가공 · 소비 · 폐기

-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부문 가운데서 기획생산, 로컬푸드유통, 안전성관리 영역은 비교적 진척되었으나, 로컬푸드의 공적소비는 학교급식 부문을 제외하고는 미흡하였음. 또한 도시농업, 공정가격, 먹거리 손실 저감과 재분배 영역에 대해서는 모든 시범지역에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영역으로 나타남
- 서대문구 : 지역 특성상 생산기반은 거의 없으며, 서울시 도농상생 사업으로 전주시로부터 로컬푸드를 공급받고 있음. 도시농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중임. 다만, 먹거리 손실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은 미흡함
- 유성구 : 바른유성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조직화를 확대하고 있음.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아직은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현물공급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며, 공공급식에 대해서 일부 진행하고 있음. 먹거리 손실 저감과 재활용 정책은 아직 미흡함
- 상주시 :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이 개장함. 농가조직화 및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체계가 아직 미흡하며, 안전성 관리 체계 및 먹거리 손실 저감, 재활용 방안 마련도 미흡함

- 완주군 : 기획생산을 통한 학교급식·공공급식 공급체계가 우수함. 다만, 먹거리 손실 저감과 재활용 정책은 아직 미흡함
- 해남군 : 로컬푸드 직매장 2020년 개설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농가조직화는 시작단계로 학교급식·공공급식의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을 추진 중임. 폐기 분야 정책도 미흡함
- 청양군 : 로컬푸드 직매장,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며,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임. 농가조직화를 시작하는 단계임. 관내 소비뿐만 아니라 관외 소비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폐기, 재활용, 분배 정책은 미흡함
- 나주시 :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 설치하고, 학교급식·공공기관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폐기 분야 정책은 미흡함
- 춘천시 : 올 하반기부터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목표로 농가조직화 진행 중임. 이에 따른 안전성 관리 체계 등도 마련하고 있음. 폐기 분야 정책은 미흡함
- 충청남도 :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광역친환경농가조직화를 친환경농업인단체, 행정과 공동으로 추진함.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아파트 아침급식, 마을 급식 등 커뮤니티 키친을 확대할 계획임. 폐기 분야 정책은 미흡함

〈그림 IV- 6〉 시범지역의 먹거리순환체계 구축 정도







## 제 5 장

### 유형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 ① 푸드플랜 유형별 기초모델
- ② 푸드플랜 활성화 주요과제
- ③ 푸드플랜 정책 효과분석



# 1. 푸드플랜 유형별 기초모델

## 가. 푸드플랜 유형의 구분

### □ 푸드플랜의 핵심 가치 : 지속가능성

- 선진국 주요 도시들의 푸드플랜은 대부분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됨
  - 파리의 ‘지속가능 푸드플랜 2015-2020’에서도 지속가능성의 3대 영역인 환경, 경제, 사회의 각 부문에서 먹거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표 V- 1〉 파리의 ‘Sustainable Food Plan 2015-2020’ 에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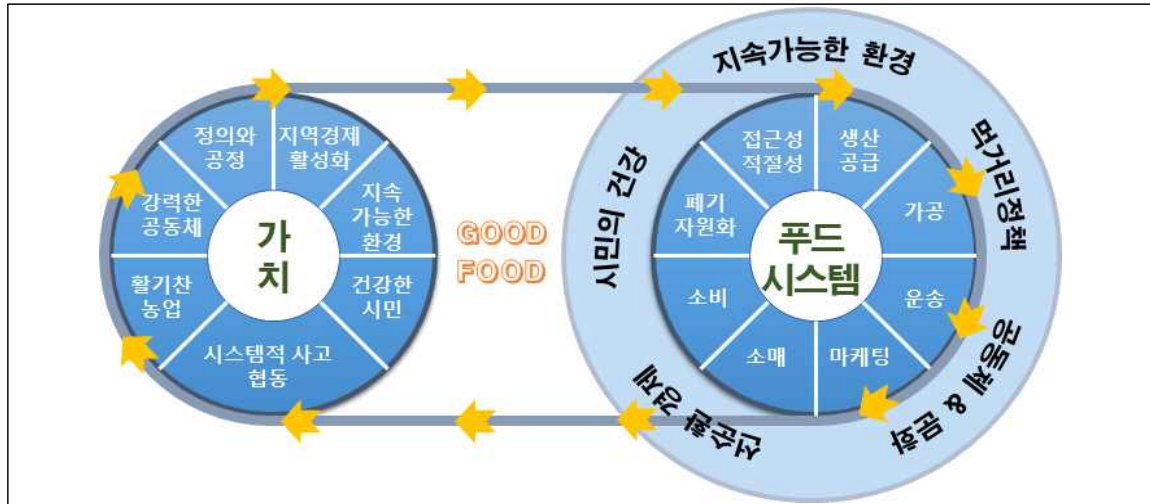
역할	내용
환경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 다양성, 수질자원, 토양 및 환경자원 보호</li> <li>•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유지</li> </ul>
사회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 회복</li> <li>• 먹거리 불평등 감소에 기여</li> <li>• 식생활개선을 통한 건강 향상</li> </ul>
경제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는 도시 근교 농업의 기능 회복</li> <li>• 농촌 개발 및 농업 고용 기여</li> <li>• 중소가족농 경영안정을 통한 농촌사회 유지</li> </ul>

출처: Mairie de Paris, 2015-2020 Sustainable Food Plan, 2015. 윤지현 외(2018) 재인용 및 수정

- 버몬트주의 ‘Farm to Plate’도 로컬푸드의 생산과 소비 확대, 로컬푸드 기반 식품산업 육성, 주민 영양관리, 식품손실 저감,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재생에너지, 인력개발, 금융, 정책조정 등 푸드시스템과 관련된 전체 영역에 걸쳐 25개의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 전환을 추구함
- 그러나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일시에 푸드시스템 상의 제 요소들을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를 균형있게 구현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따라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푸드플랜도 현실적으로 지역별, 사회적 여건과 정책적 수단의 범위, 시민사회의 성숙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적 수요와 먹거리의 다면적 가치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푸드플랜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함



〈그림 V- 1〉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순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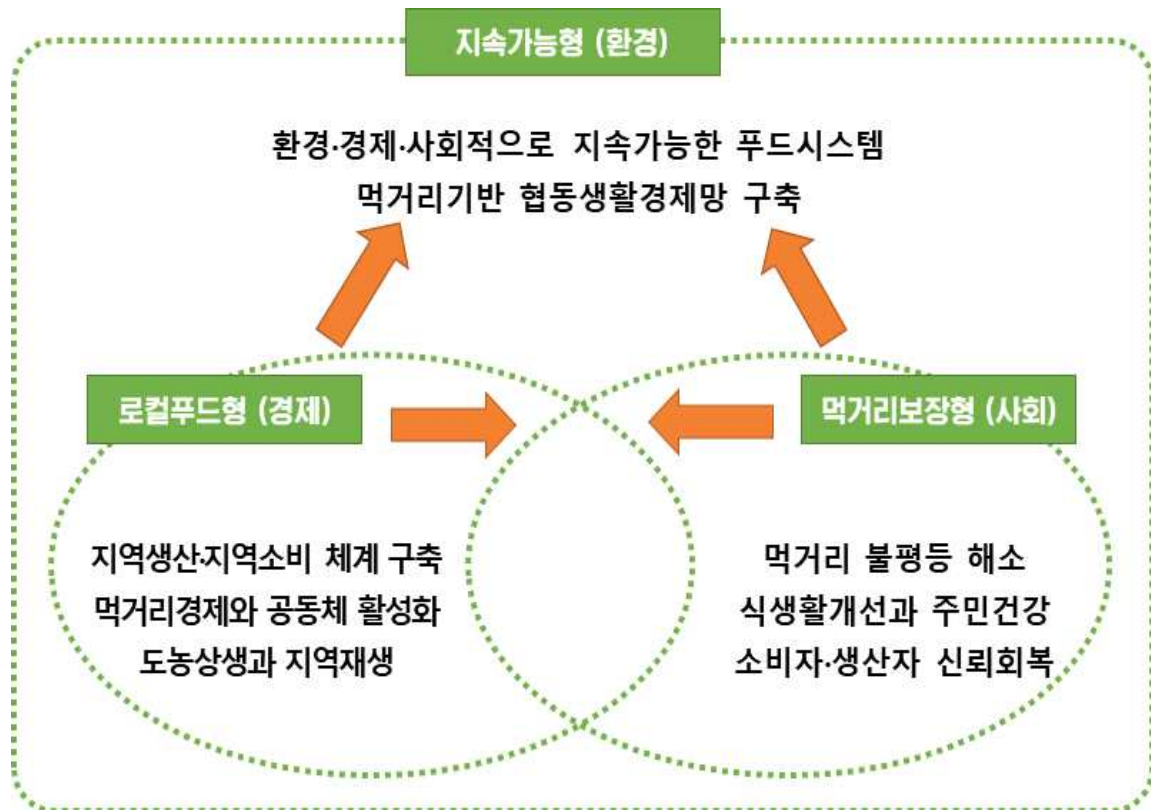
자료 : 길청순 외 (2019a)

#### □ 먹거리 역할에 기초한 유형화

- 푸드플랜은 최종적으로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3대 요소인 환경성, 경제성, 사회적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수립되느냐에 따라 푸드플랜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먹거리의 경제적 역할은 중소가족농의 경영안정을 통한 농촌사회 유지, 농촌개발과 농업 고용 기여, 지역먹거리를 공급하는 근교농업의 기능 회복 등임. 즉 '로컬푸드에 기반한 농촌사회 유지'라고 할 수 있음
- 먹거리의 사회적 역할은 소비자와 생산자간 신뢰 회복하여 도농연대 실현하고,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하며, 식생활개선을 통해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임. 즉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임
- 마지막으로 먹거리의 환경적 기능은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 수질자원, 토양 및 환경자원을 보호하고,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으로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임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내에서의 먹거리의 역할과 지향에 따라 푸드플랜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함
  - 로컬푸드형 푸드플랜 :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순환체계 구축으로 먹거리경제와 농촌사회 활성화, 지역재생에 기여하는데 초점을 둔 유형임
  -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 : 먹거리 불평등 감소와 주민 건강향상,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 회복을 통한 도농상생에 초점을 둔 유형임

- 지속가능형 푸드플랜 : 먹거리의 환경·경제·사회의 균형적 역할 수행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내용의 범위는 위의 2가지 유형의 내용을 모두 포함함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에서 제시한 유형을 모든 지역의 푸드플랜이 순차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지역적 역량과 자원, 정책적 의지에 따라 3개 유형의 목표를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고, 단계별로 확장해 나갈 수도 있음
- 해외에서도 시민사회와 먹거리 운동이 발달한 일부 지역에서는 푸드플랜 초기부터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을 목표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지역의 먹거리 의제에 따라 초점을 두는 부문에 차이가 있음

〈그림 V- 2〉 푸드플랜의 유형 구분



#### □ 유형별 정책대상과 실천과제의 범위

- 이 유형들의 특징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푸드플랜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정책의 주요 수혜자가 농업인에서 취약계층, 일반 시민으로 확장되어 감
- 로컬푸드형 푸드플랜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로컬푸드의 생산자와 소비자, 그 가운데서도 중소가족농이라고 할 수 있음

-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에서는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였던 먹거리 취약계층과 영유아·학생 등 미래세대가 가장 핵심적인 수혜자임
-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은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혜택의 범위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지역 주민 전체라고 할 수 있음
- 둘째는 푸드플랜의 내용과 범위가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중심에서 분배, 식생활, 환경 및 에너지, 주택, 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으로 확장되어 나감. 이는 정책의 대상이 확장되어 감에 따라 먹거리 의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임
-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의 내용은 지역생산과 지역소비 활동으로 다소 한정된 반면,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에서는 그 내용이 지역순환체계 뿐만 아니라 접근성, 분배, 영양 문제를 포함한 식생활 영역 전반으로 확장됨
-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의 범위는 먹거리경제와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문제를 포함하여 환경, 에너지, 주택, 복지서비스 등 생활전반으로 확장됨
- 각각의 유형에 따라 수혜의 대상과 실천과제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푸드플랜의 성숙도와 고도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도 있음

#### □ 우리나라 푸드플랜의 유형 구분

- 우리나라의 푸드플랜은 아직은 도입 초기 단계로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을 균형있게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먹거리 문제에 따라 특정 영역에 초점을 두고 수립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이미 수립된 푸드플랜과 2018년 시범지역의 푸드플랜(안)<sup>14)</sup>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로컬푸드형 푸드플랜 : 전주시, 나주시, 청양군, 해남군, 상주시
-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sup>15)</sup> : 서울시, 충청남도, 서대문구, 완주군, 유성구<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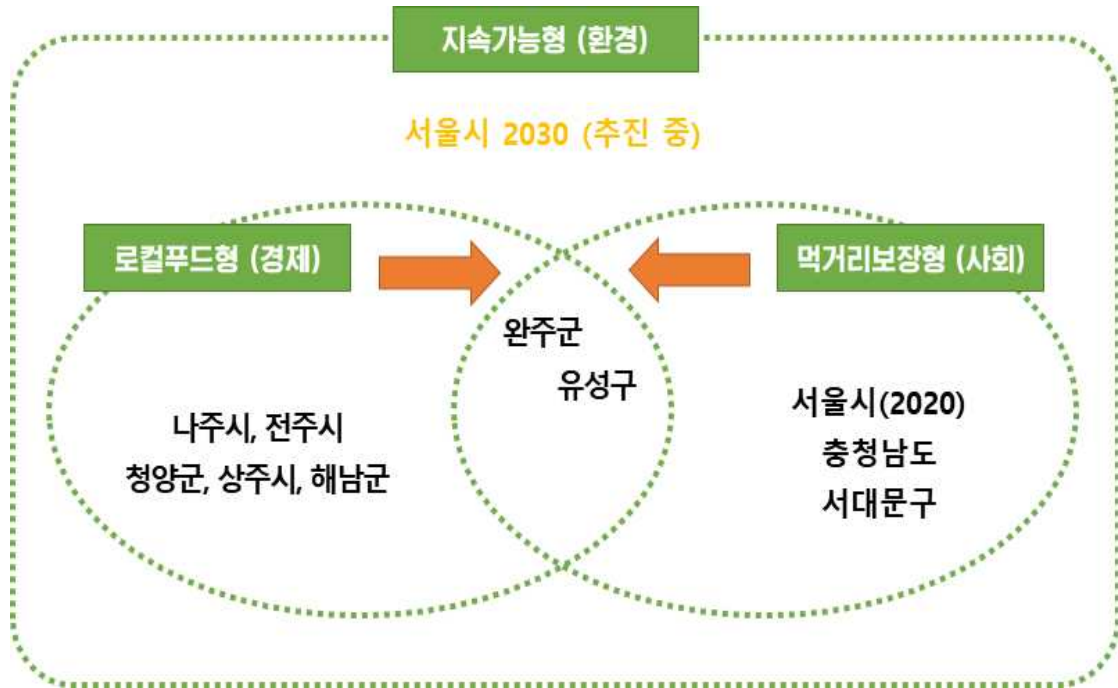
14) 시범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유형구분은 지자체의 발표 내용이 아니라 2018년 농식품부 지역푸드플랜수립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제안된 비전과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한 것임. 각 지자체별로 발표 시에 변경될 수 있음

15)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으로 분류된 5개 지자체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며 음식폐기물 저감, 지역공동체 활성화, 취약계층 교육 등의 환경, 먹거리경제 영역 사업을 일부는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 계획의 기초와 비중 등을 고려하여 먹거리보장형으로 분류함

16) 완주군과 유성구는 로컬푸드형과 먹거리보장형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 우리나라 로컬푸드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완주군은 로컬푸드 사업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먹거리 공공성과 도농상생 사업이 강화되어 먹거리보장형으로 확장되고 있음. 유성구도 바른유성찬이라는 로컬푸드 사업에 기초하여 주민들의 먹거리 공공성을 높이고 시민사회 주도의 먹거리 자치와 먹거리 취약계층 해소 활동에 주력하고 있음. 즉 유성구는 주민의 먹거리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지역 푸드플랜은 완주군, 유성구처럼 하나의 유형으로 고정되기 보다는 접근 전략, 시민사회의 성숙도, 경제사회인구 등의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변화하고 발전

- 지속가능형 푸드플랜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 마스터플랜 2030’이 두 유형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하여 각 유형별 푸드플랜의 기초모델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V- 3〉 지역 푸드플랜의 유형별 분포



## 나. 유형별 기초모델 1 : 로컬푸드형 푸드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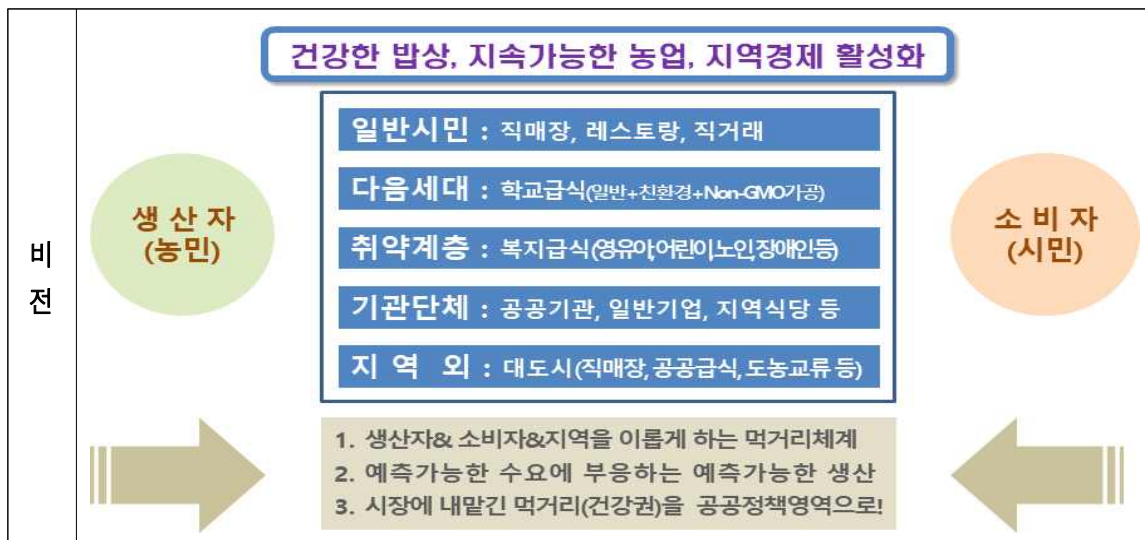
### □ 기본 특성

-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은 얼굴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관계시장을 형성하여 기획생산과 계획소비를 통해 먹거리불안을 해소하고, 중소가족농의 경영을 안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은 추진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가지 유형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음
  - 첫째는 재단법인 등 공공기관이 설립한 사업주체가 로컬푸드의 생산, 유통, 관계시장 구축을 주도하는 공공기관 주도형 모델임. 나주시, 전주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검토하는 모델임
  - 둘째는 로컬푸드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행정에서는 이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협력 모델임. 미국의 뉴욕시가 대표적인 사례임
- 현재 도농복합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의 대부분은 ‘공공기관 주도 로컬푸드형 푸드플랜’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이 모델은 시민사회의 역량과 기반이 부족하지만, 단기간내에 다수의 중소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내 일정수준의 관계시장 형성 기반이 있고, 먹거리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지역에 적합함.
  - 이 모델은 푸드플랜 추진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초기에 접근하기에 적합한 모델임
- 다만, 이 모델은 지역내 비농업 주민들의 먹거리 의제에 대한 발굴과 해결방안 제시가 미흡하고, 대부분의 사업실행을 지자체에서 직접 출연한 재단법인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과 사업운영의 효율성, 민간영역과의 경합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단법인 운영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업확대에 따라 지원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의회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직매장 입지 문제 등을 놓고 민간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학교급식·공공급식의 수수료와 공급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은 행정주도 사업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로 건강·안전, 먹거리경제, 환경 등으로 먹거리 의제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농업계-시민사회-행정이 함께하는 푸드플랜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사례1 : 나주시 푸드플랜

- 나주시는 인구 10만명, 광주광역시의 인접 도시임. 나주시의 푸드플랜 비전(안)으로 일반 시민, 다음세대, 취약계층, 기관단체, 지역 외에 기획생산·기획소비의 관계시장을 형성하여 ‘건강한 밥상, 지속가능한 농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제시함
- 정책목표는 2023년까지 700억원 규모의 관계시장을 형성하여 관내 1ha 미만의 2,000여 농가(전체 약 6000농가의 1/3)에게 월 소득 150만원(로컬푸드를 통한 소득증대)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함
- 추진체계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회, 영양교사, 학부모, 복지기관, 생산자, 외식업단체 등이 참여하는 푸드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업실행조직은 ‘재단법인 형태의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제안함
- 특히, 기획생산과 직매장·학교급식·공공급식 사업을 총괄하여 추진 기구로 시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인 ‘나주푸드통합지원센터’로 설정하고, 2019년에는 10억원, 2020~2023년에는 연간 20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할 것으로 제안함
  - 푸드통합지원센터는 농가조직화, 생산관리, 물류관리, 관계시장 창출 등을 수행함. 직접사업기능과 지원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형태로 제안됨
- 2023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생산체계, 농민가공, 안전성관리체계, 인근 대도시 직매장 설치, 통합물류체계 구축, 재단법인 운영, 푸드위원회 운영, 도농교류 및 식농교육 등에 2023년까지 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함
- 나주시 푸드플랜(안)은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의 전형적인 사례임

<그림 V- 4> 나주시 푸드플랜(안)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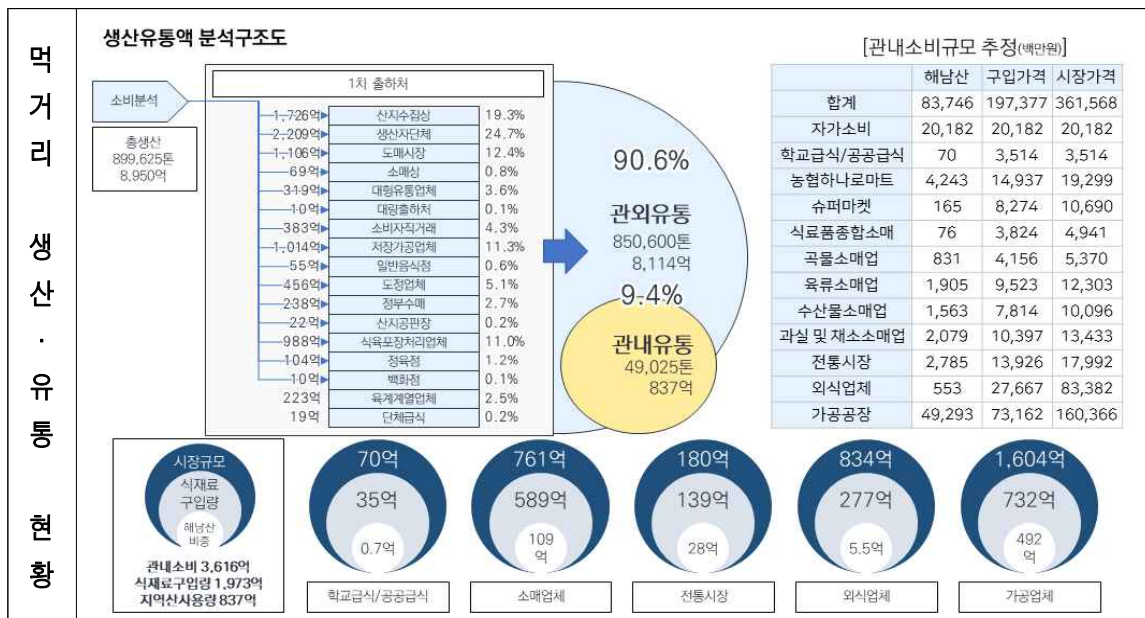


자료 : 정은미 외 (2019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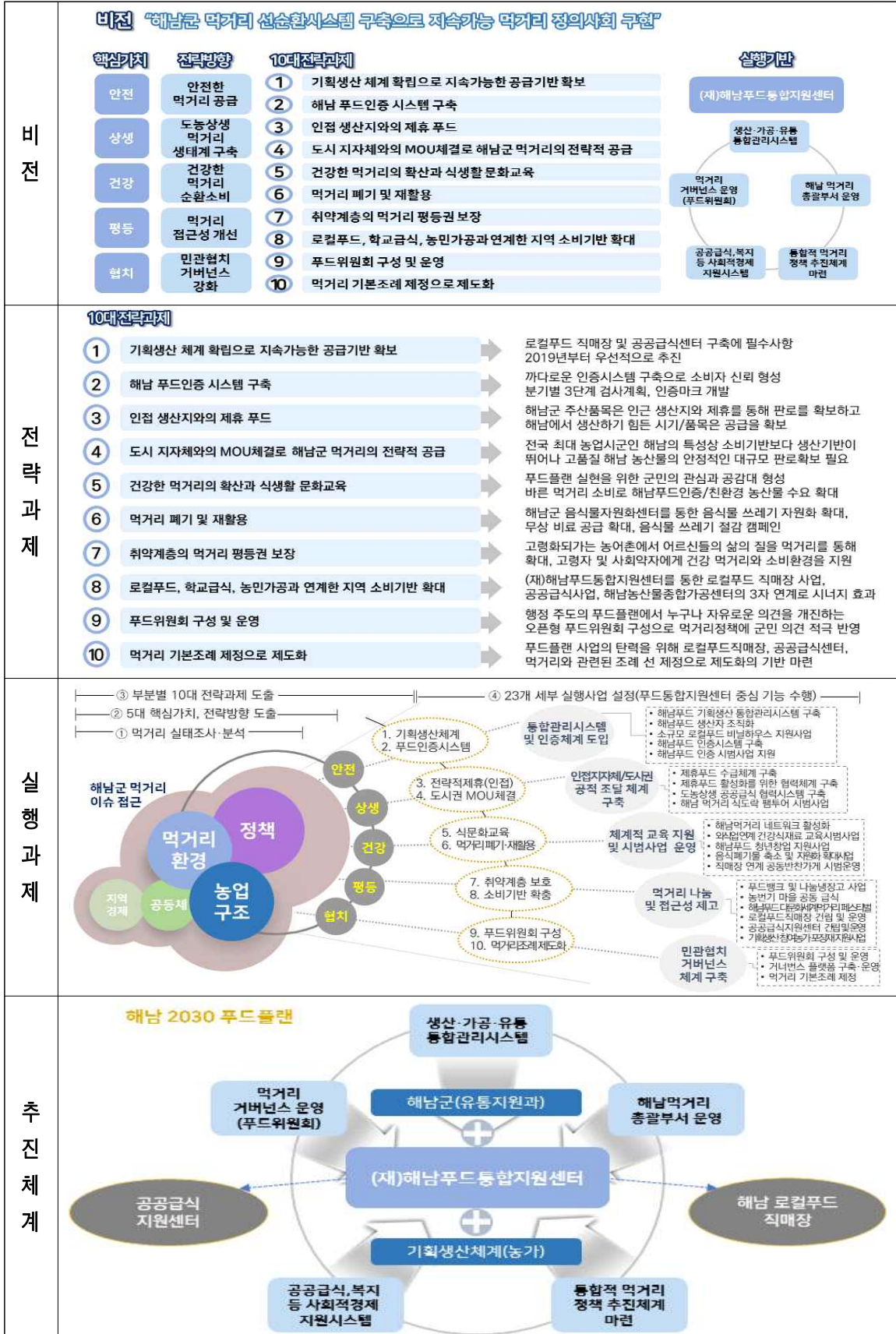
□ 사례2 : 해남군 푸드플랜

- 해남군은 인구 7만명, 대한민국 시군단위 농산물 생산액 1위 지역으로 남해안 땅끝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해남군의 푸드플랜 비전(안)으로는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먹거리 정의사회 구현’로 설정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10대 전략과제를 제시함
- 해남군 푸드플랜은 관외 출하를 목적으로 영농을 하는 전업농과 지역주민이 지역의 먹거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내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선진지 견학과 지역설명회 등을 진행함
- 전략과제 가운데 우선 과제로 1>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2>푸드통합지원센터(재단법인) 설립 3>공공급식지원센터(HW) 건립 4>농가조직화 5>제도적 기반조성(조례, 푸드위원회 등)를 추진하여 로컬푸드와 학교·공공급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 마을공동급식, 나눔냉장고, 해남푸드 청년창업지원, 식생활교육과 먹거리손실 저감 등의 사업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반 주민들을 위한 먹거리과제 발굴과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실현을 위한 종합적 방안 제시는 보완이 필요함
-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해남군 푸드플랜(안)의 사례는 농업규모가 크고, 로컬푸드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푸드플랜을 초기에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살펴볼 수 있는 모델임

〈표 V- 2〉 해남군 푸드플랜(안)의 주요 내용







자료 : 김현일 외 (2019)

## □ 로컬푸드형 푸드플랜 기본모델(안)

- 로컬푸드형 푸드플랜 모델(안)은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구성함. 기본모델(안)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부문 1 : 먹거리 실태분석
  - 부문 2 : 정책·제도 및 먹거리 생태계 분석
  - 부문 3 : 비전과 목표 설정
  - 부문 4 :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 나주시, 해남군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안)에 다음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가공·제조부문 실태조사
  - 소비부문에서 전통시장·상권특성 분석을 통한 갈등방지 방안 마련
  - 지역 먹거리 생태계 조사
  - 실행계획에서 전문인력 확보 방안 마련
  - 추진체계 구축 : 전담부서 설치 및 부서간 협력체계 제도화 등

〈표 V- 3〉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의 기본 구성(안)

### 1. 먹거리 실태분석

- 생산부문 : 인구특성, 생산기반, 생산체계, 판매·유통 방식, 소량 다품목 생산방식 수요성 등
- 가공·제조부문 : 가공업체 현황과 가공능력, 상품구색, 지역산 이용현황, 농민가공 수용성 등
- 소비부문 : 관내 소비특성, 로컬푸드 수용성, 전통시장 및 상권의 특성 등
- 공적접근 가능 영역의 소비규모 분석 : 학교, 복지시설, 기업체,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 2. 정책·제도 및 먹거리 생태계 분석

- 먹거리지원 정책 분석 : 추진체계, 예산규모, 사업대상, 성과 및 문제점 등
- 먹거리관련 조례, 위원회, 공적조직 분석 : 현황과 성과 검토, 이슈 분석 등
- 먹거리 생태계 조사 : 순환체계별 주요 주체, 농업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 3. 비전과 목표 설정

- 비전 설정 : 농업인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슬로건 형태로 구성
- 목표 설정 :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 (아래 지표는 예시)

- 조직화된 중소가족농수, 관계시장 형성 규모, 기획생산 품목수, 실행조직의 사업규모와 경영목표, 행정추진체계 정비, 거버넌스 운영 등을 포함하여 설정
- 로드맵 제시 : 제도정비·거버넌스, 조직육성, 시설기반 구축, 정책이행 부문으로 구분 제시
- 투융자 계획 제시 : 연차별, 재원별 투자 계획 제시

#### 4.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 로컬푸드 인식제고 : 먹거리시민 양성, 먹거리교육
- 관계시장 형성 : 소비자조직화, 학교급식, 공공급식, 마을급식, 커뮤니티키친, 직거래, 농가 레스토랑, 도농연계 등
- 농가조직화 : 중소가족농의 조직화. 연령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조직화 추진
- 기획생산 체계 구축 : 작부체계 구성, 생산기반시설 지원
- HW 기반 구축 : 직매장, 급식센터, 가공센터, 농민식당 등
- HW 운영체계(실행조직 육성) :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직영 vs 민간 위탁
- 전문인력의 확보 : 농가조직화 주체, 직매장·급식센터 운영인력, 정책기획 전문인력 등
- 도농연대 추진 : 인근 도시지역과의 학교·공공급식 연대, 관계시장 공동 육성 등
- 행정 추진체계의 정비 : 전담부서 설치,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 부서간 협력체계 : ①지자체장(부단체장) 조정체계 강화 ②민관위원회 설치(푸드위원회 등)  
③정책조정관제 도입 등 제도화 등

#### □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

- 푸드플랜 추진 과정에서 전업농을 중심으로 균형있는 농정추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 전업농의 소외감 해소, 중소농의 전환과정상의 불편과 어려움 이해 등 대상에 따른 이해와 소통 확대가 필요함
  - 균형있는 농정추진,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이해 및 논의를 진행함
- 학교급식은 급식센터를 통한 현물공급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연착륙 방안을 마련함
  - 영양교사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불편 최소화 방안을 협의를 통해 마련함
  - 기존 공급업체와의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함 : 배송기능 또는 공급품목 조정 등
- 공공급식은 대상별로 맞춤형 공급방식 마련이 필요함. 특히, 취약계층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충분한 배려와 맞춤형 대응이 필요함

- 대상별로 먹거리와 식생활 실태, 공급체계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복지급식은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방식 등 관련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한 대응방안을 마련함
-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함
  - 지역내 로컬푸드, 지속가능 식생활을 이해하는 활동가와 시민 육성을 추진함
  - 시민단체, 사회적경제 조직의 조직화 및 (제도적) 협의체를 운영함
  - 행정내 먹거리 정책 전문가를 육성하거나 채용함
-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계획을 수립함
  - 로컬푸드 직매장 :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 직매장 설치 계획 단계에서의 철저한 상권분석을 통한 상품구성과 디스플레이로 운영 활성화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함
  - 푸드통합센터 : 수요처의 특성 파악과 사업규모 예측을 통한 시설 설치가 필요함. 지역 특성에 맞는 먹거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주체 선정 및 운영방식 채택을 선택함. 공공성과 경제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가공공장 : 품목다각화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로컬푸드에 기반하여 농민가공, 지역가공을 우선 추진함. 지역가공을 촉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거점형 가공시설 설치도 검토가 필요함. 학교급식·공공급식 등 계획소비가 가능한 품목, 특히 두부, 콩나물, 장류, 반찬류 등을 우선 추진함. HACCP 등 안전성과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함. 경제성에 대한 세부 검토도 필요함
- 로컬푸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함
  - 뉴욕시의 그린카트(허가받은 이동 판매시설 : 가판대), 토론토의 푸드트럭, 광산구의 무인 판매대, 로컬푸드 자판기 등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함
  - 허가제 등 제도적 관리방안과 관련 법규 검토, 인근상권 사전협의 등을 통한 민원 발생 요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함
- 인근 도시와의 로컬푸드 연대 추진시 제도적 협력과 더불어 연대기관간 상호 실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함
  - 인근대도시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시 해당 지자체 및 먹거리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통한 상생방안과 갈등 방지 방안을 마련함. 인근 직매장과의 상품 공유, 계약생산 확대 등도 협의 검토함
  - 도농상생 사업 추진시 사업규모, 비용분담, 시설투자, 도농교류, 분쟁처리 절차 등에 상호 규약에 대한 사전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 다. 유형별 기본모델 2 :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

### □ 기본 특성

- 현재 일반 시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주된 관심사는 건강, 안전, 불평등 해소 등으로 도시 지역일수록 강하게 나타남. 따라서 도시에서 추진되는 푸드플랜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 먹거리 보장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은 건강, 안전, 먹거리 불평등 문제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공공급식을 추진하더라도 로컬푸드형 푸드플랜과 추진방향에 차이가 있음.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은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먹거리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은 먹거리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시키는데 우선 목적이 있음
-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은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 주로 추진됨.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의 참여를 통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고, 실행과정에서도 행정과 시민사회의 역할분담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먹거리 사각지대에 대한 접근할 수 있음
  -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의 참여 확대를 위해 행정은 먹거리실태에 대한 정보와 공론의장을 제공하고, 시민사회의 협력을 제도화함
  -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는 제도권에서 포함되지 못한 먹거리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은 도시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먹거리 공공성 강화와 식생활·식문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보에 높은 지가(地價)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됨. 따라서 유희시설, 타분야 시설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도시지역은 생산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산업형 생산·공급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단순한 구매자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먹거리의 중요성과 다면적 가치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촌지역과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와 비용을 생산자와 농촌지역에 전가하지 않고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먹거리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에 대해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못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교육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은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며, 민간 주도의 캠페인 활동이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추진되기도 함

□ 사례1 : 유성구 푸드플랜

- 유성구 푸드플랜은 2014년부터 추진한 시민들에게 먹거리의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한 먹거리 운동과 교육 활동, 먹거리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에 기반하고 있음
- 기존의 활동이 로컬푸드 차원에서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면, 2018년 진행된 연구에서는 시민들 관점의 먹거리 의제 확대에 초점을 두고 수립함
  - 조사결과 먹거리 취약인구가 전체 인구의 12%, 건강 취약인구는 20%라는 결과 도출
  - 외식비중 50%, 가공식품 섭취비율 26%, 신선농산물 섭취비율 24%, 아침결식 27%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성구 푸드플랜의 비전(안)을 건강·보장·상생·협치를 핵심가치로 하는 ‘주민의 먹거리 보장, 순환과 공생으로 다함께 행복한 유성’으로 제시함

<표 V-4> 유성구 푸드플랜(안)의 주요 내용

도시민대상	<p>◎ 생산자, 소비자, 영양사 등 이해관계자 교육 * 대중강좌(3회), 생산자소비자 세미나(20회), 타운홀미팅(1회)</p>  <p>로컬푸드 바로알기, 생산자세미나      로컬푸드 바로알기, 소비자세미나      너와 나의 공생, 유성구 로컬푸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타운홀미팅</p>
	<p>◎ 가공 교육 및 로컬푸드 아카데미 운영 * 가공이해교육(60강), 로컬푸드 아카데미(200강), 로컬푸드 전문가 양성(4회, 155강), 텃밭학교(60강), 바른먹거리 학교교육(30강)</p>  <p>가공이해교육      로컬푸드 아카데미      발효과정의 이해      제과제빵과정</p>
	<p>◎ 텃밭학교 및 바른먹거리 교육 실시 * 로컬푸드 전문가 양성(4회, 115강), 텃밭학교(60강), 바른먹거리 학교교육(30강), 도농교류(12회)</p>  <p>로컬푸드 전문가 양성      어린이 텃밭학교      바른먹거리 학교교육      도농교류</p>
	<p>◎ 생산자와 소비자 만남의 장 * 찾아가는 로컬푸드의 날(월1회), 로컬푸드 페스티벌(10월) 등</p>  <p>찾아가는 로컬푸드의 날      로컬푸드 페스티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연구기관 월 1회 운영('15~'17)</p> <p>대전 유성구, 연구원들에게 바른먹거리 대전 유성구가 지난날 20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행한것은 2015 찾아가는 로컬푸드의 날 행사 불거했다(나사장) 이날 행사는 유성구 생산농민과 소비자 체험동행 플랫폼이 참여해 과일과 반찬, 명채류 등 150종을 전시 판매했다. 특히 이날 점심 시간을 이용해 많은 연구원들이 행사장을 찾아 로컬푸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구 관계자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로컬푸드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판단"이라며 "오는 11월까지 바뀐 지자체 주 금요일에 지역을 돌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경태 기자</p>



대전 푸드플랜 네트워크	구분	생 산	유 통	소 비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전지역 생산자</li> <li>충청권 생산자</li> <li>가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류·내식(생협 등)</li> <li>외식(레스토랑, 엄마밥상)</li> <li>급식(학교, 공공, 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공동체·먹거리 공동체</li> <li>교육단체/환경·시민단체</li> <li>사회적 경제</li> </ul>
	제안 단체	[대전 지역]	[물 류]	[마을공동체]
		1. 바른유성찬생산자협의회 2.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연합회	품앗이마을	1. 자치구마을공동체넷협의회 2. 마을공동체활동가포럼
[총 청 권]		[내 식]	[건 강]	
옥천-옥천살림 금산-금산살림, 금산친환경연합회 논산계룡-논산친환경연합회, 논산로컬푸드협동조합 부여-친환경연합회 공주-다살림로컬푸드협동조합 세종-세종품앗이마을 충북-흙살림		1. 한살림대전 2. 품앗이생협 3. 대덕품앗이 4. 대전로컬푸드드래피아연합동조합 5. 옥지해너협동조합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먹거리·교육·시민·환경단체] <먹거리·교육단체> 1.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2. (사)한살림대전식생활교육센터 3. 로컬푸드교육센터 품	
		[외 식]	<환경·시민단체> 대전YMCA 대전호보전운동본부	
	[급 식]	[사회적경제]		
			1. 사회적경제대전플랜 2. 사회적경제실천연구소협동조합	

공공 시장	<p>유성구 먹거리 소비시장 규모 <b>1조 683.5억원</b></p>	<p><b>유성구 공공시장 800억원</b> <b>7.5%</b></p>	<p>초중고/어린이/유치원 : 380억 : 초중고 300, 어/유 80억 ('19) 초중고 등 친환경농산물('19-) : 30억 아동복지급식 : 80억 노인요양시설 : 40억 저소득층복지 : 15억 공공기관 : 140억 의료시설 50억 기타</p>
	<p><b>학교급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년, 유성구 초중고 학교급식 사용 식재료 : 6,300톤 220억원</li> <li>&lt;금액 순&gt; 가공식품 39.5% - 축산 31.7 - 농산 20.9 - 수산 7.9</li> <li>&lt;농산물 사용순위&gt; 백미 - 감자 - 마늘 - 찹쌀 - 양파 - 콩나물 - 호박 - 파 등</li> <li>&lt;축산물&gt; 돼지 전지 - 쇠고기 우둔 - 쇠고기 양지 - 돼지 갈비 등</li> <li>&lt;가공식품&gt; 김치류 - 튀김 - 요구르트 - 만두 - 두부 - 햄박스테이크 - 돈까스 - 참기름 - 고추장 - 어묵</li> </ul>	

식생활·보장 실태	<p><b>외식비중 50%</b></p>	<p><b>가공식품 26%</b></p>	<p><b>신선농산물 24%</b></p>	<p><b>아침결식 27.3%</b></p>
	<p><b>청소년 편의점 26.6%</b></p>	<p><b>과일채소 1일 500g ↑ 38%</b></p>	<p><b>영양부족섭취 11.1%</b> 12-18세 19.8% 19-29세 17.3%</p>	<p><b>12-18세 35%</b> <b>19-29세 53%</b> <b>30-49세 29%</b></p>

권장영양 75% 미만 섭취

- 유성구 절대적 먹거리 취약계층 : ('17) 42,000명 - 전체인구 12%
- 유성구 건강 취약계층 20% : 건강문제 만성질환 41% - 노인성질환 17.5 - 암 14.5
  - 잘못된 식생활, 외식문화, 가공식품 소비
  - 합성화학 식품첨가물, 방사성, GMO
  - 아침식사+과일/채소+친환경+ non GMO 미흡
  - 포화지방/액상과당/나트륨 과다

비전	<b>비전</b>	<b>주민의 먹거리 보장, 순환과 공생으로 다함께 행복한 유성</b>																																								
	<b>목표</b>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b>유성푸드</b>	다함께 행복한 <b>유성푸드</b>	지역상생으로 <b>혁신하는 유성푸드</b>	참여·협력으로 <b>함치는 유성푸드</b>																																					
	<b>핵심가치</b>	<b>건강</b>	<b>보장</b>	<b>상생</b>	<b>협치</b>																																					
	<b>정책영역</b>	생산체계	소비체계	유통체계	실행체계																																					
	<b>추진전략</b>	공동체기반형 생산·가공 활성화	공적조달체계 구축 먹거리자치 공동체 육성	지역상생·도농상생 지역순환경제 구축	주민참여·민관협력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추진체계																																										
	<p><b>소비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 활성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학교 전품목 현물조달</li> <li>유치원 급간식 지원</li> <li>학교급식 과일채소 간식</li> <li>시설 공공급식 확대</li> <li>영양플러스 유성푸드 제공</li> <li>결식아동 유성푸드 지원</li> <li>꾸러미 확대지원</li> <li>마을밥상 조직화, 지원</li> <li>유성푸드커뮤니티센터</li> </ul> <p><b>유통기반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직매장 확대</li> <li>로컬푸드레스토랑</li> <li>대덕연구단지 직거래장 구축</li> <li>생산자소비자 상생교류사업</li> <li>지역상권 로컬푸드 취급장</li> <li>유성푸드 지역음식점 활성화</li> </ul> <p><b>협동적 생산가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자 조직화</li> <li>기획생산체계 구축</li> <li>안전/인증 관리</li> <li>제휴푸드 공급체계 구축</li> <li>공동체기반 주민 지역 가공 육성(사회적경제조직화)</li> <li>가공지원센터 가공지원</li> </ul> <p><b>리사이클 체계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친화적 포장재 지원</li> <li>음식을 분리수거 및 재활용</li> <li>리사이클 자원화센터</li> <li>음식을 안남기기 캠페인</li> </ul>																																									
세부과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추진전략</th> <th>실행과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1 공동체 기반형 생산·가공 활성화</td> <td>계속 1-1 유성푸드 생산자조직 육성</td> </tr> <tr> <td>계속 1-2 기획생산체계 구축</td> </tr> <tr> <td>계속 1-3 유성푸드 안전/인증 관리</td> </tr> <tr> <td>신규 1-4 제휴푸드 공급체계 구축</td> </tr> <tr> <td>계속 1-5 유성푸드 지역가공 육성</td> </tr> <tr> <td rowspan="8">2 공적 조달체계 구축과 먹거리자치 공동체 육성</td> <td>계속 2-1 초·중·고 전학교 전품목 현물급식 추진</td> </tr> <tr> <td>계속 2-2 복지 공공급식 확대</td> </tr> <tr> <td>신규 2-3 유성푸드 센트럴 키친 조성</td> </tr> <tr> <td>신규 2-4 공공기관급식 확대</td> </tr> <tr> <td>신규 2-5 먹거리 주민자치활동 활성화</td> </tr> <tr> <td>계속 2-6 유성푸드 교육홍보 강화</td> </tr> <tr> <td>계속 2-7 도시농업 육성</td> </tr> <tr> <td>계속 2-8 음식 폐기물 축소 및 자원화</td> </tr> </tbody> </table>		추진전략	실행과제	1 공동체 기반형 생산·가공 활성화	계속 1-1 유성푸드 생산자조직 육성	계속 1-2 기획생산체계 구축	계속 1-3 유성푸드 안전/인증 관리	신규 1-4 제휴푸드 공급체계 구축	계속 1-5 유성푸드 지역가공 육성	2 공적 조달체계 구축과 먹거리자치 공동체 육성	계속 2-1 초·중·고 전학교 전품목 현물급식 추진	계속 2-2 복지 공공급식 확대	신규 2-3 유성푸드 센트럴 키친 조성	신규 2-4 공공기관급식 확대	신규 2-5 먹거리 주민자치활동 활성화	계속 2-6 유성푸드 교육홍보 강화	계속 2-7 도시농업 육성	계속 2-8 음식 폐기물 축소 및 자원화	<table border="1"> <thead> <tr> <th>추진전략</th> <th>실행과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3 지역상생·도농상생의 지역순환경제 구축</td> <td>계속 3-1 직매장 확충</td> </tr> <tr> <td>신규 3-2 꾸러미/온라인직매 육성</td> </tr> <tr> <td>계속 3-3 생산자·소비자 교류 활성화</td> </tr> <tr> <td>신규 3-4 지역시장 유성푸드 유통망 구축</td> </tr> <tr> <td>신규 3-5 지역 외식업 유성푸드 이용 확대</td> </tr> <tr> <td>신규 3-6 유성푸드 건강마을 혁신지구</td> </tr> <tr> <td>신규 3-7 거점유통센터 확보(광역 연대)</td> </tr> <tr> <td rowspan="9">4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의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td> <td>계속 4-1 먹거리위원회 활성화</td> </tr> <tr> <td>신규 4-2 행정지원협의체 활성화</td> </tr> <tr> <td>계속 4-3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td> </tr> <tr> <td>신규 4-4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td> </tr> <tr> <td>신규 4-5 민간네트워크 육성</td> </tr> <tr> <td>신규 4-6 유성푸드 테마파크</td> </tr> <tr> <td>신규 4-7 유성푸드 커뮤니티센터 조성</td> </tr> <tr> <td>신규 4-8 중부권 푸드올림픽트화</td> </tr> <tr> <td>계속 4-9 관련 제도 정비</td> </tr> </tbody> </table>			추진전략	실행과제	3 지역상생·도농상생의 지역순환경제 구축	계속 3-1 직매장 확충	신규 3-2 꾸러미/온라인직매 육성	계속 3-3 생산자·소비자 교류 활성화	신규 3-4 지역시장 유성푸드 유통망 구축	신규 3-5 지역 외식업 유성푸드 이용 확대	신규 3-6 유성푸드 건강마을 혁신지구	신규 3-7 거점유통센터 확보(광역 연대)	4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의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계속 4-1 먹거리위원회 활성화	신규 4-2 행정지원협의체 활성화	계속 4-3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규 4-4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규 4-5 민간네트워크 육성	신규 4-6 유성푸드 테마파크	신규 4-7 유성푸드 커뮤니티센터 조성	신규 4-8 중부권 푸드올림픽트화	계속 4-9 관련 제도 정비
	추진전략	실행과제																																								
1 공동체 기반형 생산·가공 활성화	계속 1-1 유성푸드 생산자조직 육성																																									
	계속 1-2 기획생산체계 구축																																									
	계속 1-3 유성푸드 안전/인증 관리																																									
	신규 1-4 제휴푸드 공급체계 구축																																									
	계속 1-5 유성푸드 지역가공 육성																																									
2 공적 조달체계 구축과 먹거리자치 공동체 육성	계속 2-1 초·중·고 전학교 전품목 현물급식 추진																																									
	계속 2-2 복지 공공급식 확대																																									
	신규 2-3 유성푸드 센트럴 키친 조성																																									
	신규 2-4 공공기관급식 확대																																									
	신규 2-5 먹거리 주민자치활동 활성화																																									
	계속 2-6 유성푸드 교육홍보 강화																																									
	계속 2-7 도시농업 육성																																									
	계속 2-8 음식 폐기물 축소 및 자원화																																									
추진전략	실행과제																																									
3 지역상생·도농상생의 지역순환경제 구축	계속 3-1 직매장 확충																																									
	신규 3-2 꾸러미/온라인직매 육성																																									
	계속 3-3 생산자·소비자 교류 활성화																																									
	신규 3-4 지역시장 유성푸드 유통망 구축																																									
	신규 3-5 지역 외식업 유성푸드 이용 확대																																									
	신규 3-6 유성푸드 건강마을 혁신지구																																									
	신규 3-7 거점유통센터 확보(광역 연대)																																									
4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의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계속 4-1 먹거리위원회 활성화																																									
	신규 4-2 행정지원협의체 활성화																																									
	계속 4-3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규 4-4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규 4-5 민간네트워크 육성																																									
	신규 4-6 유성푸드 테마파크																																									
	신규 4-7 유성푸드 커뮤니티센터 조성																																									
	신규 4-8 중부권 푸드올림픽트화																																									
	계속 4-9 관련 제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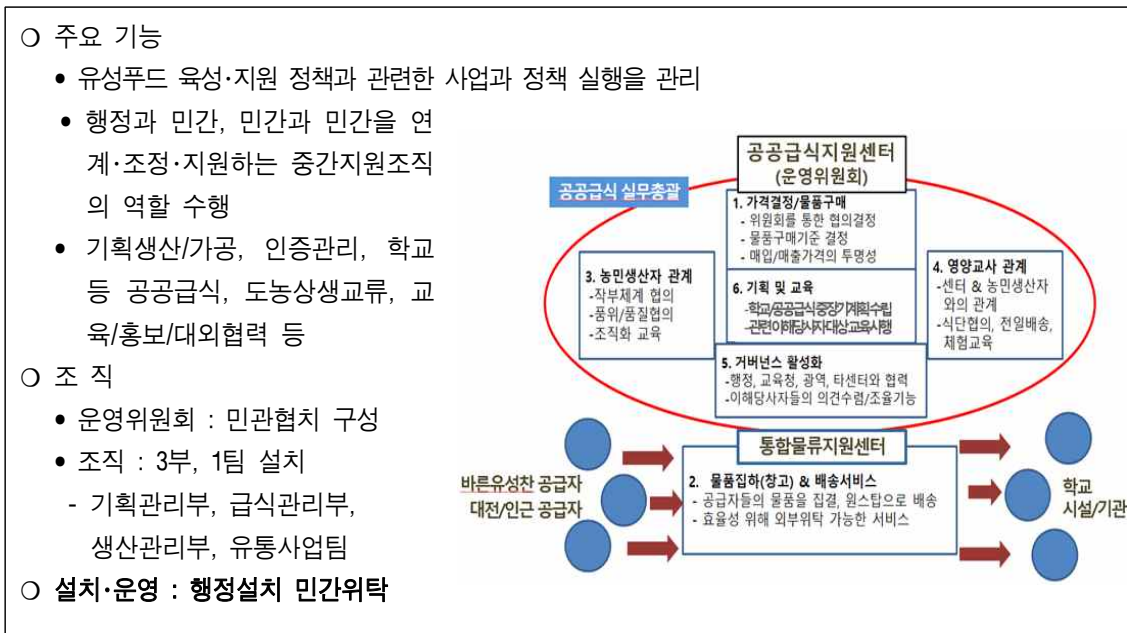
자료 : 허헌중 외 (2018)

- 유성구 푸드플랜은 현물공급형 학교급식·공공급식을 추진할 실행조직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함
  - 특징적인 점은 앞서 로컬푸드형인 나주시, 해남군과 달리, 행정의 시설을 설치하고 소유권은 보유하고, 실제 운영은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임
- 실행과제로는 4대 분야 29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지역공동체, 먹거리자치, 지역상생·도농상생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임



- 4대 정책 분야로 ①공동체 기반형 생산·가공 활성화 ②공적 조달체계 구축과 먹거리자치 공동체 육성 ③지역상생·도농상생의 지역순환경제 구축 ④주민참여의 민관협력의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함
- 유성구 푸드플랜은 도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의 관심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의 발달로 민간의 주도성이 강함
- 다만, 도시지역의 높은 지가와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제시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와 건강·안전·안심 먹거리에 대한 지역내 수요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인근 지역 또는 도농연대를 통한 먹거리망 구축 방안 검토가 필요함

〈그림 V- 5〉 유성구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안)



□ 사례2 : 서대문구 푸드플랜

- 2018년 푸드플랜 수립 연구를 통해 제시된 서대문구 푸드플랜의 비전(안)은 공공재, 기본재로서 모두가 누릴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기반 포용 도시, 서대문구’임
- 2023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는 먹거리 안정성 확보 가구비율을 현재 95% 수준에서 99%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공공급식 대상인원을 2.5만명 수준에서 20만명까지 확대하는 것임
- 추진전략으로는 1>소외없는 밥상 (먹거리보장) 2>배려하는 밥상 (환경과 농업 배려) 3>함께하는 밥상(민관협력)을 제시하고, 3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안함
- 특히, 지역사회의 요구를 세분화하고 실행체계의 구축 및 협업 지원을 위한 푸드혁신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는 등 민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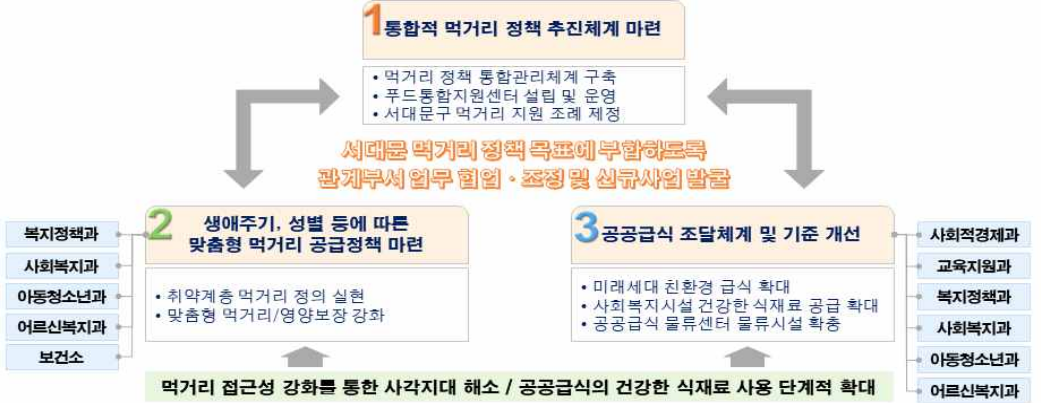
<표 V - 5> 서대문구 푸드플랜(안)의 주요 내용

		공공재, 기본재로서 향유할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권리 보장, 모두를 위한 도시환경 조성					
비 전	<b>비전</b>	지속가능한 먹거리 기반의 포용 도시, 서대문구					
	<b>목표</b>	소외 없는 밥상	배려하는 밥상	함께하는 밥상			
	<b>핵심가치</b>	정의와 공정	건강과 안전	배려와 상생	연대와 협력		
	<b>전략방향</b>	서대문구민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충분히 공급한다.	환경과 농업을 배려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소비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사회, 민·관이 함께하여 먹거리 문제를 해결한다.			
	<b>전략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애주기, 성별 등에 따른 맞춤형 먹거리 공급 정책 마련</li> <li>공공급식 조달체계 및 기준 개선</li> <li>통합적 먹거리정책 추진체계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농업 기반 확대를 통해 농업 가치 확산</li> <li>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생산자 상생 기반 마련</li> <li>음식물 쓰레기 감축 및 자원화를 통해 환경부하 감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먹거리위원회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li> <li>식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li> <li>공동체 기반의 먹거리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li> </ul>			
목 표	<b>부문</b>	<b>지표</b>	<b>기준년</b>	<b>2020년</b>	<b>서대문구 2023</b>		
	건강	1	1인 1일 나트륨 섭취량	3,890mg	3,500mg 이하		서울시 목표 연동
		2	과일채소 1일 섭취량 500g 이상 섭취자 비율	39%	41%		50%
		3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자 비율	27%	30%		서울시 목표 연동
		4	적정체중인구 비율	68%	70%		비만을 20%
	보장	5	식품안전성 확보가구 비율	95%	96%		99%
		6	공공급식 친환경 식재료 비율	40%	70%		서울시 목표 연동
	상생	7	공공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공급식대상인원 확대	25천명	20만명		서울시 목표 연동 (인구비율 적용)
		8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3,181톤	2,545톤		0.18kg/인*일
		9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	118ha	250ha		10ha
안전	10	식품안전 체감률	78%	81%	84%		

### 01 소외없는 밥상

- 경제적·사회적 형편과 상관없이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안전성을 확보하여 서대문구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과제 제안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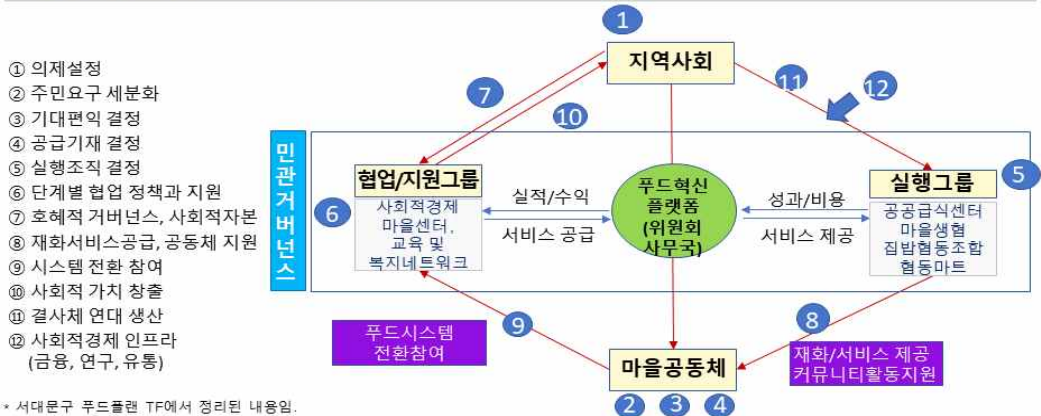
### 03 함께하는 밥상

- 서대문구 푸드플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축
- 민-관, 민-민, 관-관 협력을 통해 푸드플랜 주체간 연대 강화, 정책실행 동력 확보



푸드 혁신 플랫폼

- 먹거리 정의 실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등 지역사회 먹거리 정책 목표를 합의하고, 의제 도출
- 의제별 주민요구 세분화 및 실행조직 결성, 단계별 협업 및 정책 지원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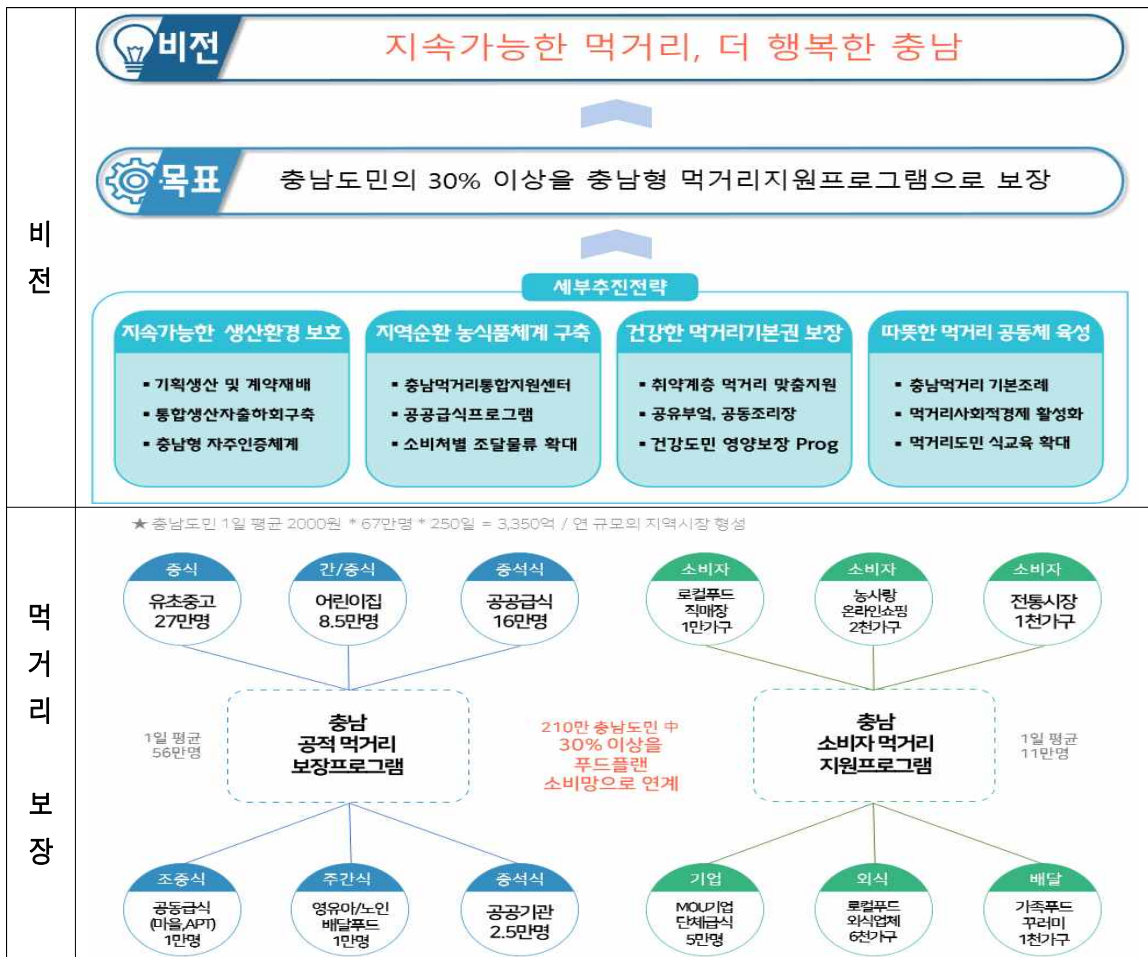


자료 : 길청순 외 (2019)

□ 사례3 : 충청남도 푸드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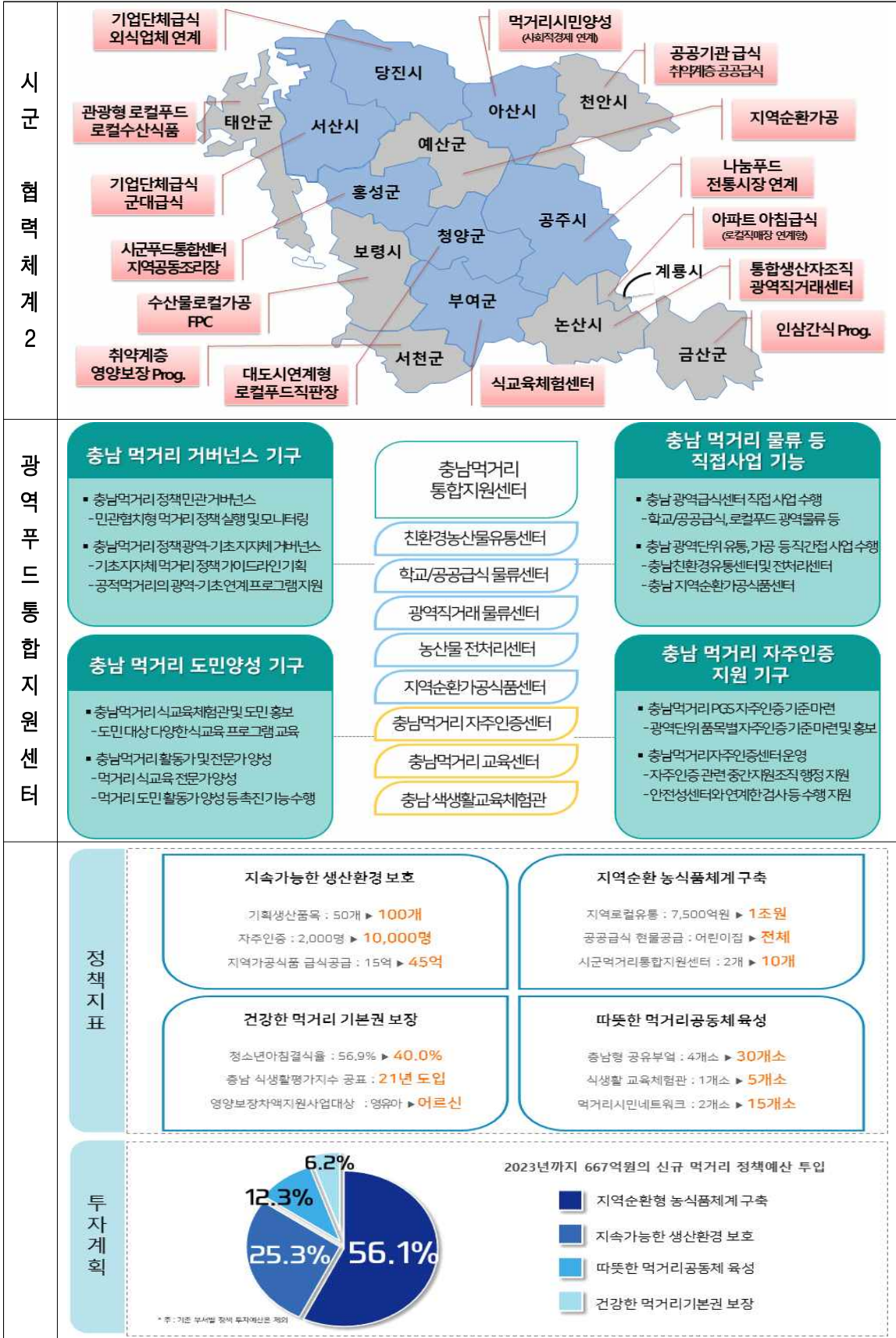
- 시범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수립된 충청남도 푸드플랜은 먹거리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도민의 30% 이상인 67만명이 푸드플랜 소비망을 이용하도록 하여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비전으로 제시함
- 이를 위해 4대 분야 50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함. 4대 분야는 ①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 ②지역순환형 농식품체계 구축 ③충남도의 건강한 먹거리보장 ④충남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임
- 대표적 실천과제로 소비자·사회적경제·취약계층 공동체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급식을 현물급식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도시와 농촌의 맞춤형 먹거리 생활SOC 확대 등을 제안함
- 또한 시군과 함께하는 푸드플랜을 위해 충남도와 시군간에 전시군 푸드플랜 추진, 시군 푸드플랜 전담조직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 먹거리시민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등을 포함한 연대선언 추진을 제안함

〈표 V- 6〉 충청남도 푸드플랜(안)의 주요 내용





추진 로드맵	<span style="color: green;">■</span> 제도 기반 정비 <span style="color: orange;">■</span> 조직 설립 육성 <span style="color: purple;">■</span> 시설 기반 구축 <span style="color: blue;">■</span> 핵심 정책 실행					
	분야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진 로드맵	지속가능한 먹거리생산체계 구축	(친환경) 광역작부 및 기획생산 전연화 (로컬) 시군단위 통합생산자출하회 육성		충남친환경유통센터		
	지역순환형 농식품체계 구축	충남형 PGS자주인증제도 도입		충남형 PGS자주인증 전연 도입		자주인증농가의 생태농업 지속 전향
	충남도의 건강한 먹거리보장	충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확정 및 지원조달		충남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학교/공공급식, 로컬매장 광역 공급 실시
	충남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공공급식 정책기획	공공급식 공급 사범사업		충남 공공급식 공급 전연화(공공급식대행자 지속 확대)	
		아파트 아침급식 사범사업(5개소 내외) 시군단위 마을부활 연계 지역급식 사범사업		충남 먹거리 영양보장 프로그램 사범사업		가정형 건강식단 꾸러미
주요 사업 내용	①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단위 친환경 작부구축 및 기획생산 지원</li> <li>광역단위 PGS 자주인증 기준 및 지침 마련</li> <li>충남친환경유통센터</li> </ul>
	② 지역순환형 농식품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형 로컬푸드 제도 실행</li> <li>광역단위 안전성 분석센터 설립 및 운영</li> </ul>
	③ 로컬푸드 유통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형 로컬푸드 제도 실행</li> <li>광역단위 안전성 분석센터 설립 및 운영</li> </ul>
	④ 먹거리 소비자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형 로컬푸드 제도 실행</li> <li>광역단위 안전성 분석센터 설립 및 운영</li> </ul>
	⑤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형 로컬푸드 제도 실행</li> <li>광역단위 안전성 분석센터 설립 및 운영</li> </ul>
	⑥ 건강한 식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형 로컬푸드 제도 실행</li> <li>광역단위 안전성 분석센터 설립 및 운영</li> </ul>
	⑦ 폭넓은 먹거리 시민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형 로컬푸드 제도 실행</li> <li>광역단위 안전성 분석센터 설립 및 운영</li> </ul>
	⑧ 남은 음식물의 재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형 로컬푸드 제도 실행</li> <li>광역단위 안전성 분석센터 설립 및 운영</li> </ul>
시군 협력 체계 1	충청남도 및 시장군수협의회와의 먹거리연대 강화 충남먹거리 연대 선언 추진(2019년 중 추진) 1. 전시군 푸드플랜 추진 합의 2. 시군 푸드플랜 전담조직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 합의 3. 먹거리시민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합의					



자료 : 김종안 외, 충청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 2019.3.,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 기본모델(안)

- 아래의 기본모델(안)의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의 사례를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구성함. 기본모델은 아래의 3부문으로 구성됨
  - 부문 1 : 먹거리 실태분석
  - 부문 2 : 정책·제도 및 먹거리 생태계 분석
  - 부문 3 : 계획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및 주민 의견수렴 체계
  - 부문 4 : 비전과 목표 설정
  - 부문 5 :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 유성구, 서대문구, 충청남도의 푸드플랜(안)에 다음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식생활 및 먹거리 복지 실태조사 : 식품안정성, 식생활평가지수, 먹거리 취약인구 등
  - 폐기·이용 실태조사 : 음식쓰레기 폐기 현황, 푸드뱅크 등 재활용 현황 등
  - 전체 먹거리 순환흐름 분석
  - 먹거리 생태계 종합 분석 :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사회적경제, 복지네트워크, 주요 사업주체 등
  - 정책우선 순위의 객관적 분석 및 의사결정 방안
  - 공유식당(커뮤니티키친) 활성화 방안
  - 좋은먹거리(Good Food)에 대한 기준마련 및 시민접근성 확대
  - 도시농업 활성화
  - 도시지역 먹거리 인프라 확충 및 유희시설 연계 활용 방안 등
  - 도농연대 및 도농교류 프로그램
  - 소비자 정보제공 : 푸드마일리지 표시제, 좋은식재료·식단 기준 표시제 등
  - (광역) 푸드플랜 단체장 협의회 등

### 〈표 V- 7〉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의 기본 구성(안)

#### 1. 먹거리 실태분석 : 먹거리순환흐름 분석, 접근성, 식생활, 안전, 거버넌스, 실행주체

- 로컬생산 : 먹거리생산(농수축) 현황, 인증먹거리 현황, 도시농업, 학교·공공급식·직매장 조달체계 분석 등
- 식품가공 : 식품제조업, 6차산업경영체 등의 가공능력, 품목과 원재료사용 현황 등 (사회적경제조직, 중소경영체 중심)
- 지역유통 : 지역내 유통 현황, 개별 품목별 지역유통 현황(농수축)

- 지역소비 : 분야별 공공급식(학교·교육시설, 복지시설, 공공기관, 민간기관), 농협 마트, 직매장, 전통시장, 외식업체, 기업급식, 공동주택, 군대급식 등의 현황, 체계 및 실태 분석
- 폐기·이용 : 음식물·가축분뇨 처리 현황(학교·공공·기업체 등), 푸드뱅크 사업 현황과 실태조사
- 먹거리순환체계 : 지역순환(생산-유통-가공-소비-폐기)과 유출입 흐름 종합 분석
- 먹거리복지 : 식품안정성, 식생활평가지수, 식습관 분석 / 먹거리 취약인구 산출
- 식생활교육 : 사업실적, 제도(조례 등), 정책 및 추진체계, 인프라(활용가능한 타분야 시설 등), 전문인력, 수요도 조사
- 먹거리 생태계 조사 :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식생활교육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복지기능 수행 네트워크, 주요 사업주체 등 파악

## 2. 정책 · 제도 분석

- 먹거리지원 정책 분석 : 추진체계, 예산규모, 중앙/자체 사업, 사업대상, 성과 및 문제점 등
  - 농업부문 이외의 타부처, 타부서 관련정책 분석
  - 정책간 연계 가능성 검토 : 단계별 접근 필요
- 먹거리관련 조례, 위원회, 공적조직 분석 : 현황과 성과 검토, 이슈 분석 등

## 3. 푸드플랜 협의체 운영 및 주민 의견수렴 체계

-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 예) 푸드플랜 준비 위원회 등
- 행정내 푸드플랜 추진 TF 운영 : 부단체장, 정책조정관, TF 등 가능 형태 검토
- 주민의 의견수렴 : 설문조사, 공청회 등 개최

## 4. 비전과 목표 설정

- 비전 설정 : 시민과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슬로건 형태로 구성
- 목표 설정 :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 (아래 지표는 예시)
  - 보장 : 먹거리보장 가구율, 영양섭취부족가구율, 공공급식 이용인원수, 복지기관 공급률, 도시농업 실적, 커뮤니티키친 이용자수 등
  - 건강 : 식생활개선 분야별 지표 (나트륨섭취량, 과일채소 적정섭취율, 비만비율 등)
  - 상생 : 농가조직화수, 먹거리공동체수, 로컬푸드식재료 사용율, 도농연대 공공급식 이용율 등
  - 안전 : 먹거리안전 체감률, 식품안전사고감소율 등
- 정책우선 순위 검토 : AHP 등 객관적 분석기법 활용



- 로드맵 제시 : 제도정비·거버넌스, 조직육성, 시설기반 구축, 정책이행 부문으로 구분 제시
- 투융자 계획 제시 : 연차별, 자원별 투자 계획 제시

#### 5.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세부사업은 거버넌스를 통해 설정. 아래사업은 예시)

- 좋은먹거리(Good Food) 인식 제고 : 먹거리시민 양성, 먹거리교육, 아카데미 운영
- 관계시장 형성 : 소비자조직화(마을생협 등), 학교급식, 공공급식, 공공기관, 마을급식, 커뮤니티키친(어린이식당, 아파트조식 등), 직거래, 농가레스토랑, 도농연계 등
- 좋은먹거리 시민 접근성 확대 : 이동식 판매대, 무인 판매대, 자판기, CSA(교육기관, 기업, 소비자조직 연계) 등
- 농가조직화 : 중소가족농의 조직화, 연령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조직화 추진
- 기획생산 체계 구축 : 작부체계 구성, 생산기반시설 지원
- 도시농업 활성화
- 지역인증제 : 인증, 안전관리 체계 / 제휴푸드 공급체계
- 지역가공 육성 : 고품자용 상품개발,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취창업 교육 및 정책 연계 등
- HW 기반 구축 : 직매장, 급식센터, 가공센터 등
- HW 운영체계(실행조직 육성) :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직영 vs 민간 위탁
- 먹거리정책 인프라 확충 : 생활SOC 확충 등, 유희시설 및 타분야 시설 연계 추진 등
- 학교급식, 공공급식 현물지원체계 구축 : 도시지역의 경우, 인근 지역과 연계 방안
- 음식 폐기물 저감 및 자원화 : 시민사회 연계 등
- 도농연대 및 도농교류 강화
- 소비자 정보 제공 : 푸드마일리지 표시제, 좋은식재료 식단 기준 표시제 등
- 전문인력 육성 : 직매장·급식센터 운영인력, 정책기획 전문인력, 시민사회 활동가 등
- 도농연대 추진 : 인근 도시지역과의 학교·공공급식 연대, 관계시장 공동 육성 등
- 먹거리기본조례 제정, 공공급식 식재료 가이드라인 제시 (Good Food 기준)
- 행정 추진체계의 정비 : 전담부서 설치,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 부서간 협력체계 : ①지자체장(부단체장) 조정체계 강화 ②민관위원회 설치(푸드위원회 등)  
③정책조정관제 도입 등 제도화 등
- (광역) 푸드플랜 단체장 협의회 : 광역지자체 소속 기초지자체와 공동 운영

## □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

### ■ 농업인의 이해와 동참 중요 : 도시지역 시민사회와의 인식차이 해소. 갈등조정 중요

-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이 주로 수립·추진되는 농촌 또는 도농복합 지역과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 중심으로 수립되는 도시지역의 먹거리 의제 상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빈부의 격차에 따른 먹거리 접근성, 신선먹거리의 안정적 섭취와 건강한 식생활 편차가 크고, 대량소비에 따른 환경문제도 심각함
- 푸드플랜의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농촌지역은 여전히 행정의 주도력이 강하고 정책수단이 다양한 반면, 도시지역은 시민사회가 발달하여 전문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푸드플랜에 적합한 정책수단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또한, 먹거리의 보장, 식생활과 관련정책은 복지부, 교육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 다부처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민관 거버넌스와 더불어 부처·부서간 협력 중요함. 정책시스템을 재정비 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상황임

### ■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좋은먹거리의 가치확산의 제도화

- 소비자 조직화를 통해 지속가능 식생활과 좋은먹거리의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시키는 정책과 활동이 필요함. 이를 통해 로컬푸드와 공정가격 등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을 높여야만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생산체계의 전환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를 위해 뉴욕시, 비엔나시처럼 좋은먹거리 식재료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학교급식·공공급식 영역에서부터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그림 V - 6〉 국내외의 공공먹거리 조달 기준 적용 사례

오스트리아 비엔나시의 공공먹거리 조달 기준	뉴욕의 공공먹거리 조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 이상의 유기농 식재료 사용 목표</li> <li>• 유기농 제철 과일과 채소 사용.</li> <li>• 식재료의 2/3 이상 채식 식재료 사용</li> <li>• 식재료의 1/3이 지역산</li> <li>•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식품 1개</li> <li>• 포장재 사용하지 않음 / 혁신적인 레시피</li> <li>• 신선하게 조리할 것</li> <li>• 유기적 생산, 유전자조작이 없어야 함,</li> <li>• 자연적으로 좋은 요리</li> <li>• 사회적, 윤리적 기준: 공정무역, 동물복지</li> <li>• 건강 기준: 트랜스지방산 저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시 식품기준(NYC City Food Standards)(2008년 제정) : 학교, 경로당(senior center), 아동보육원, 병원, 교도소, 임시숙소(shelter) 등에서 연간 제공되는 2억 6천만 인분의 식사와 간식에 적용되는 식단 기준.</li> <li>▫ 이 기준은 병원 구내식당, 음료 및 과자 자판기에도 적용됨</li> <li>▫ 트랜스지방, 소금, 설탕 함량은 제한되며, 과일 및/혹은 채소는 매 끼니마다 제공되어야 하고, 마실 물은 항상 이용가능해야 한다.</li> <li>▫ 이 기준은 연령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미국 의학협회(Institute of Medicine) 최신정보에 부합함.</li> </ul>
<small>자료) 배옥병, '지속가능한 먹거리 종합정책과 먹거리 공공조달 정책방향', 2018.9.</small>	<small>자료) 정해량, 뉴욕시의 먹거리정책과 식생활교육, 2015. 먹거리정책 실행지침.</small>
<b>서울시 공공급식 조달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n-GMO 농산물</li> <li>•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li> </ul>

### ■ 학교급식 · 공공급식 고도화 및 커뮤니티키친(공동체식당, 마을부엌 등)의 확산

- 학교급식, 공공급식의 실행주체를 재단법인 형태의 공적 조직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로 자립경영에 대한 요구와 법인 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등의 공적 조직을 실행주체로 계획하는 경우, 3~5년 후에 자립화 계획도 동시에 마련하여 의회 또는 시민사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설립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폐합하여 명실상부하게 공적기능을 수행한 비영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도 또다른 대처 방안임
- 지역단위에서 공공급식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차원에서 지원되는 공공급식이 대부분 중앙부처의 복지정책과 연계되어 있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전달체계 개선, 맞춤형 지원체계, 취약계층에 대한 정서적 배려 등의 조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잦은 외식과 불균형적인 식생활을 개선하고, 먹거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 어린이식당과 같은 커뮤니티키친(공동체식당) 확산이 확산되고 있음. 커뮤니티키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영주체(사회적경제조직 등)의 발굴, 수요자 맞춤형 사업방식의 개발, 그리고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함

### ■ 도시지역의 경우, 저비용 먹거리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필요

-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이 필요하고 식생활개선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도 식생활 교육·체험 인프라가 필요함. 그러나 도시지역은 특성상 높은 지가와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대규모 투자가 어려움
-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물류시설이나 유희시설을 활용하고, 인근지역과 공동으로 설치·이용하거나 타분야 시설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등 먹거리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도시지역의 먹거리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라. 유형별 기본모델 3 : 지속가능형 푸드플랜

### □ 기본 특성

-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의 가장 큰 특징은 먹거리의 사회성, 경제성, 환경성이 모두 발현되는 체계로 관련 정책과 활동의 범위가 로컬푸드에 기반한 먹거리순환체계, 먹거리 보장과 건강의 영역을 뛰어 넘어 먹거리경제, 소비자선택권, 지역개발·지역재생, 먹거리자치, 지역금융, 지역생활경제망, 먹거리연대 등으로 크게 확장되면서 시민사회의 자율적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임
  - 앞서의 로컬푸드형 푸드플랜과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이 상대적으로 지역이 직면한 먹거리 문제 또는 의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강했다면,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은 시민사회에 기반한 민관협력 정책이자 시민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음
  - 이러한 성격으로 유형별 특성으로 인해 로컬푸드형 푸드플랜과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은 지자체의 계획적 정책수립과 추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반면,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은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며 민간의 아이디어에 대해 일부 지원하는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은 생활 속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직간접 영역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의 거의 모든 정책이 연계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처럼 관련된 모든 사업을 기획·조정·실행·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따라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먹거리체계)’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각 영역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은 지자체와 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행동원칙이자 권장행동, 그리고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 또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새로운 정책사업으로서의 성격은 약함
- 지속가능형 푸드플랜<sup>17)</sup>의 선진사례를 볼 때,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
  - 첫째, 자율적 계획과 실행을 위한 일정 정도 이상의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의 역량과 사회적자본이 갖추어져야 함. 특히 분야별로 먹거리정책을 시민사회와 연계할 중간지원

17) 필자가 보기에는 영국의 런던시, 캐나다의 토론토시, 미국의 버몬트시 등의 푸드플랜이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또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형성되어 있어야 함
- 둘째, 지자체 또는 행정이 주기적으로 지역사회 푸드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 스스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져 있어야 함
- 마지막으로 지자체 내부의 정책간 연계 및 자율적 정책조정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의 자율성, 부서간 칸막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체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 필자는 푸드플랜의 목적과 주요 정책 범위, 민관 거버넌스 및 시민사회의 참여도, 지자체의 정책조정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됨
- 완주군, 유성구, 서울시 푸드플랜이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차기 푸드플랜 수립 단계에는 그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 □ 지속가능형 푸드플랜 기본모델(안)

- 아래의 기본모델(안)의 해외의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푸드플랜의 정책 범위와 내용을 구성함
  - 부문 1 : 먹거리 실태분석
  - 부문 2 : 정책·제도 및 먹거리 생태계 분석
  - 부문 3 : 계획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및 주민 의견수렴
  - 부문 4 : 비전과 목표 설정
  - 부문 5 :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은 전체 구성 측면에서 로컬푸드형,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에 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됨
  - 먹거리경제 : 식품·외식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 일자리의 질 향상, 지역금융 연계 등
  - 먹거리 에너지체계 : 고탄소 에너지체계 실태, 탄소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윤리적 소비 촉진 정보 : 지역인증제 기준 반영
  - 먹거리기반 지역개발, 지역재생 연계 : 에너지, 먹거리인프라 확충
  - 먹거리기반 지역협동생활경제망의 구축 : 마을자치 등의 연계, 사회적경제 연대 강화
  - 먹거리 생산·유통주체의 경영안정성 확보 : 적정소득, 공정가격 등 기준마련
  - 먹거리연대 : 다른 지역, 해외 도시 지역과의 먹거리기반 연대활동 강화
  - 시민사회, 먹거리경제, 마을자치, 재생에너지, 지역금융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정보기반 구축 : 먹거리 정보 플랫폼 구축. 정보의 내용과 신뢰성, 현행화, 활용성 강화

〈표 V - 8〉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의 기본 구성(안)

**1. 먹거리 실태분석 : 먹거리경제, 환경성, 소비자선택, 지역개발·지역재생, 먹거리자치, 지역금융, 지역생활경제망, 먹거리연대, 먹거리정보 등으로 확장**

- 로컬생산 : 먹거리생산(농수축) 현황, 인증먹거리 현황, 도시농업, 학교·공공급식·직매장 조달체계 분석 등
- 식품가공 : 식품제조업, 6차산업경영체 등의 가공능력, 품목과 원재료사용 현황 등 (사회적경제조직, 중소기업 중심)
- 지역유통 : 지역내 유통 현황, 개별 품목별 지역유통 현황(농수축)
- 지역소비 : 분야별 공공급식(학교·교육시설, 복지시설, 공공기관, 민간기관), 농협 마트, 직매장, 전통시장, 외식업체, 기업급식, 공동주택, 군대급식 등의 현황, 체계 및 실태 분석
- 폐기·이용 : 음식물·가축분뇨 처리 현황(학교·공공·기업체 등), 푸드뱅크 사업 현황과 실태조사
- 먹거리순환체계 : 지역순환(생산-유통-가공-소비-폐기)과 유출입 흐름 종합 분석
- 먹거리복지 : 식품안정성, 식생활평가지수, 식습관 분석 / 먹거리 취약인구 산출
- 식생활교육 : 사업실적, 제도(조례 등), 정책 및 추진체계, 인프라(활용가능한 타분야 시설 등), 전문인력, 수요도 조사
- 먹거리 생태계 조사 :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식생활교육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복지기능 수행 네트워크, 주요 사업주체 등 파악
- 먹거리경제 : 식품산업 및 외식사업과의 연계 수준, 지역금융과의 연계성, 식품산업 인력의 전문성과 교육체계, 먹거리경제의 일자리의 질 등 조사
- 먹거리관련 에너지체계 : 먹거리 탄소배출(고탄소 생산체계 등)와 재생에너지 이용실태 조사
-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윤리적 소비 확대 기반 : 먹거리 정보 수요 및 제공 실태조사
- 먹거리기반 지역개발, 지역재생 연계 : 에너지, 주택, 먹거리인프라 등 실태조사
- 먹거리기반 지역협동생활경제망의 구축 : 교육, 보육, 문화, 마을자치 등의 연계 가능성 조사. 시민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생태계 조사
- 먹거리 생산·유통주체의 경영안정성 : 농가와 중소 유통주체의 소득 및 경영안정 실태 조사
- 먹거리연대 : 다른 지역, 해외 도시 지역과의 먹거리기반 연대활동 현황 조사
- 먹거리 정보 및 활용 실태 조사 : 먹거리정보의 범위, 내용, 정확성, 품질, 활용성 등 조사

## 2. 정책·제도 분석

- 먹거리지원 정책 분석 : 추진체계, 예산규모, 중앙/자체 사업, 사업대상, 성과 및 문제점 등
  - 농업부문 이외의 타부처, 타부서 관련정책 분석
  - 정책간 연계 가능성 검토 : 단계별 접근 필요
- 먹거리관련 조례, 위원회, 공적조직 분석 : 현황과 성과 검토, 이슈 분석 등
- 먹거리경제, 소비자 선택권 관련 각종 정책과 법률, 규제사항 등 분석
- 지역개발, 지역재생 정책 분석 : 농지보호, 먹거리 생산기반 확보 등
- 재생에너지, 교육, 보육, 문화, 마을자치, 주택 등의 정책과 제도 분석
- 지역금융관련 정책과 관련 법규 분석
- 푸드플랜 도시 연대 : 국내외 푸드플랜 도시간 교류와 연대

## 3. 푸드플랜 협의체 운영 및 주민 의견수렴

-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 예)푸드플랜 준비 위원회 등
- 행정내 푸드플랜 추진 TF 운영 : 부단체장, 정책조정관, TF 등 가능 형태 검토
- 주민의 의견수렴 : 설문조사, 공청회 등 개최
- 먹거리경제 관계자 참여 및 주요 의견 수렴 : 농업인, 유통·가공, 식품제조, 외식산업, 폐기 등
- 먹거리 기반 시민사회단체, 먹거리경제, 마을자치, 재생에너지, 지역금융기관 네트워크 운영
- 푸드플랜 도시간 연대활동 네트워크 구축 등

## 4. 비전과 목표 설정

- 비전 설정 : 시민과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슬로건 형태로 구성
- 목표 설정 :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 (아래 지표는 예시)
  - 보장 : 먹거리보장 가구율, 영양섭취부족가구율, 공공급식 이용인원수, 복지기관 공급률, 도시농업 실적, 커뮤니티키친 이용자수 등
  - 건강 : 식생활개선 분야별 지표 (나트륨섭취량, 과일채소 적정섭취율, 비만비율 등)
  - 상생 : 농가조직화수, 먹거리공동체수, 친환경식재료 사용율, 도농연대 공공급식 이용율, 음식물쓰레기 저감률, 경제약자의 취창업 실적 등
  - 안전 : 먹거리안전 체감률, 식품안전사고감소율 등

- 환경 : 친환경농산물 이용률, 생태농업 증가율, 동물복지 축산물 이용률, 토종종자 이용률(생물다양성 배려실적), 음식물쓰레기 저감률, 탄소마일리지(탄소배출량) 저감률, 재생에너지 이용률 등
- 공간 : 먹거리인프라 확대율, 먹거리자치 공동체 증가율, 생활경제망 구축율 등
- 경제 : 로컬푸드기반 식품산업 증가율, 지역내 외식산업 연계율, 먹거리경제 일자리 증가율, 먹거리경제 일자리의 질 개선률, 재생에너지 일자리, 협동생활경제 일자리, 먹거리경제의 지역금융 비율, 금융부가가치의 지역순환율 등
- 연대 : 국내외 푸드플랜 도시간 교류 및 연대 활동 내용 등
- 정책우선 순위 검토 : AHP 등 객관적 분석기법 활용
- 분야별 추진체계 구축 : 분야별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
- 로드맵 제시 : 제도정비·거버넌스, 조직육성, 시설기반 구축, 정책이행, 국내외 네트워크 부문으로 구분 제시
- 투융자 계획 제시 : 연차별, 재원별 투자 계획 제시

#### 5.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세부사업은 거버넌스를 통해 설정. 아래사업은 예시)

- 좋은먹거리(Good Food) 인식 제고 : 먹거리시민 양성, 먹거리교육, 아카데미 운영
- 관계시장 형성 : 소비자조직화(마을생협 등), 학교급식, 공공급식, 공공기관, 마을급식, 커뮤니티키친(어린이식당, 아파트조식 등), 직거래, 농가레스토랑, 도농연계 등
- 좋은먹거리 시민 접근성 확대 : 이동식 판매대, 무인 판매대, 자판기, CSA(교육기관, 기업, 소비자조직 연계) 등
- 농가조직화 : 중소가족농의 조직화, 연령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조직화 추진
- 기획생산 체계 구축 : 작부체계 구성, 생산기반시설 지원
- 친환경먹거리 생산체계 구축 : 생태농업, 동물복지, 생물종다양성(토종종자) 확대
- 도시농업 활성화 : 텃밭, 옥상정원 등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 지원
- 먹거리 순환체계의 탄소마일리지 및 탄소배출량 저감 : 생산·유통·소비·폐기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포함
- 지역인증제 : 인증, 안전관리 체계, 제휴푸드 공급체계, 환경성·동물복지·지역재생·윤리적소비 기준 등을 반영한 인증제 운영
- 지역가공 육성 : 고품자용 상품개발,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취창업 교육 및 정책 연계 등



- HW 기반 구축 : 직매장, 급식센터, 가공센터 등
- HW 운영체계(실행조직 육성) :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직영 vs 민간 위탁
- 먹거리정책 인프라 확충 : 생활SOC 확충 등, 유희시설 및 타분야 시설 연계 추진 등
- 지역개발 정책과의 연계 : 지역재생사업, 마을개발사업 등
- 학교급식, 공공급식 현물지원체계 구축 : 도시지역의 경우, 인근 지역과 연계 방안
- 음식 폐기물 저감 및 자원화 : 시민사회 연계. 바이오매스 생산 등
- 도농연대 및 도농교류 강화
- 소비자 정보 제공 : 푸드마일리지 표시제, 좋은식재료 식단 기준 표시제 등
- 전문인력 육성 : 직매장·급식센터 운영인력, 정책기획 전문인력, 시민사회 활동가 등
- 로컬푸드 기반 먹거리경제 활성화 : 식품제조, 외식산업 연계. 취약계층, 고령자 등 대상 맞춤형취창업 교육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 먹거리경제기반 일자리 질 향상 : 근로조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
-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먹거리 기반 지역협동생활경제망 구축 :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교육, 보육, 문화, 마을자치 동동체의 연계망 구축 및 먹거리 기반 활동 촉진 등
- 먹거리경제, 협동생활경제와 지역금융의 연계 강화
- 지역재생, 지역개발, 마을자치사업 등과의 연계성 강화 : 취약계층, 고령자 등 지역 맞춤형 먹거리 기반 활동 강화
- 도농연대 추진 : 인근 도시지역과의 학교·공공급식 연대, 관계시장 공동 육성 등
- 푸드플랜 도시간 연대 추진 : 국내는 푸드플랜 도시간 협의체 운영(지자체 협의체 등), 해외 푸드플랜 도시와의 국제 교류 강화
- 먹거리정보 기반 구축 : 먹거리 정보 플랫폼 구축. 먹거리정보의 내용과 질, 활용성 등 강화
- 먹거리기본조례 제정, 공공급식 식재료 가이드라인 제시 (Good Food 기준)
- 행정 추진체계의 정비 :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먹거리정책 컨트롤타워 마련 등
- 시민단체 및 사회적경제 등 민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분야별 중간지원조직 육성. 분야별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 분과 체계 구축

## □ 주요 과제

### ■ 시민사회 중심의 푸드플랜 실행력 확보

-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은 내용적 범위와 운영 방식에서 시민사회의 실행력이 중요함. 특히, 수립된 계획을 각각의 영역별로 추진하고 해당분야의 네트워크를 주도할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해당 분야별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는 로컬푸드형 푸드플랜과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에서는 로컬푸드, 학교·공공급식을 담당할 공공성을 담보할 사업주체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유형별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음
-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은 크게 8대 영역(보장, 건강, 상생, 안전, 환경, 공간, 경제, 연대)에 걸쳐 구성되는데, 이들 모든 영역을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마련하기도 어려움
  - 학교·공공급식도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공적관리와 민간중심의 공급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현재의 푸드플랜을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영역별 중간지원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노력이 사전적으로 필요함

### ■ 먹거리의 환경성에 대한 가치 확산

-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환경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앞선 유형들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임. 그러나 환경적 가치는 다소 추상적인 경향이 있고, 현실적으로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문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합의가 중요함
- 따라서 먹거리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시민교육 및 인식확산이 중요함. 특히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이 매우 필요함. 이 과정이 없이는 지속가능형 푸드플랜 추진 과정에서 계층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먹거리의 환경적 가치 반영을 위해서는 공공정책의 역할이 중요함. 모든 계층이 환경성을 고려한 좋은먹거리(Good Food)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로써 공공먹거리 조달기준에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공공부문에 친환경 먹거리 공급을 확대하는데 일반농산물에 비해 재정투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함

## ■ 로컬푸드 기반 먹거리경제 활성화와 공정가격 형성

- 식품제조가공업 및 외식산업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이용을 확대하고자 할 때 직면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정량·정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적정 가격의 설정의 문제임
- 일반적으로 로컬푸드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이지만, 대부분 지역의 중소가족농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에 대량생산·대량공급 먹거리에 비해 가격도 높고 소량으로 생산·공급 되는 것이 특징임
- 로컬푸드 기반 먹거리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노력만으로는 활성화하기 어려우며, 식품제조가공업체, 외식업체가 로컬푸드의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과 판매방식, 가격구조를 개발해야만 접목이 가능함
- 이 과정은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하고, 상호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이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수요가 안정되어 있고, 단기적 지원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활성화가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먹거리경제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 지속가능한 푸드플랜의 핵심과제 가운데 한가지가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임. 이를 위해서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폐기 등 전체 순환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도 화석연료 기반에서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로 필요함
  - 특히, 화석연료에 의한 난방과 공장가동, 운송 등을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정부는 농업부문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생산, 유통, 제고가공, 폐기 기술에 대한 투자와 보급체계를 강화함

## ■ 먹거리기반 지역협동사회경제망 구축

- 좋은먹거리는 사람이 생활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며, 약화된 우리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자치 기반을 강화시키는데 주요한 매개 수단이 될 수 있음. 완주군, 유성구, 원주시 등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지역에서 활동한 먹거리기반 시민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을 조직화하여 푸드플랜을 확산 시킴과 동시에 교육, 문화, 복지, 육아, 보육, 주택, 의료 등 생활경제 전반으로 협동경제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조직이라 하더라도 조직의 목표와 지향점, 주어진 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적인 것(Commons)를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공동의 활동과 연대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물적, 인적 기반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자립역량 확보가 연대활동에 가장 중요한 기초임
  - 자립기반 확보 없이 지자체 지원이나 외부의 기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안정적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나 연대활동을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재 일부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자립기반을 훼손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
- 시민주도형 푸드플랜은 먹거리정책 분야에만 그치는 지역사회와 생활전반의 영역으로 협동경제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기초가 될 수 있음. 즉 푸드플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성 회복해 나가는 것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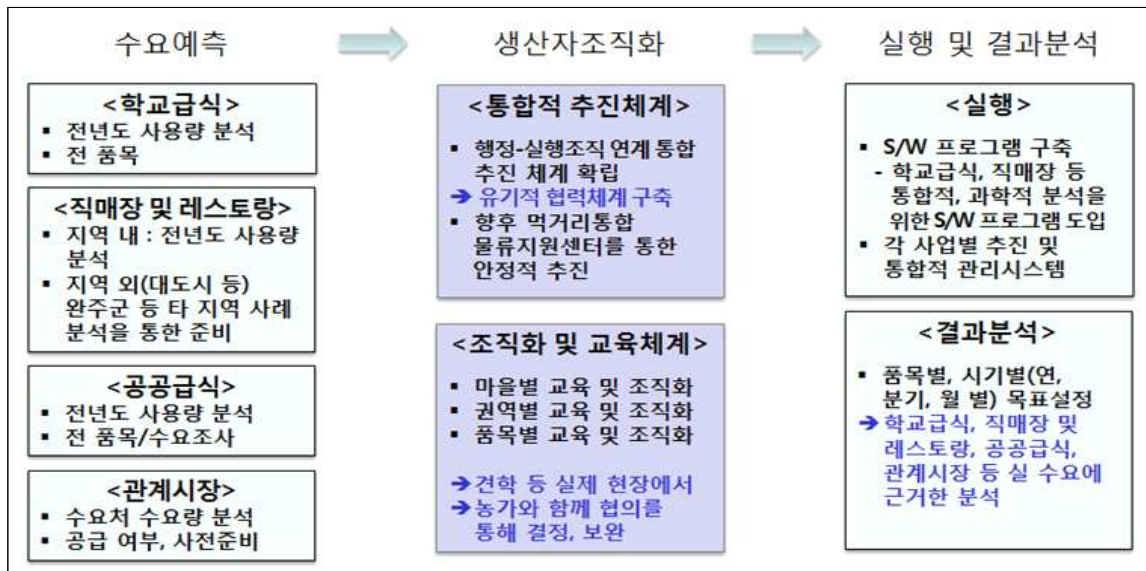
## 2. 푸드플랜 활성화 주요과제

### 가. 농가조직화<sup>18)</sup>

#### ■ 3단계로 추진 : 수요예측-생산조직화-실행·피드백

- 농가조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급가능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지역산 공급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생산팀의 전문성과 더불어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이 중요함. 특히 신속한 현장대응은 정형화된 업무대응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담당자의 헌신적 노력과 농가와 원활한 소통능력이 중요함
- 또한, 품목별 농가출하협의회를 구성하여 연중 필요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함. 이 때 다양한 품목이 생산, 출하 가능하도록 농가생산을 장려하고 제휴 푸드 및 외부조달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함

〈그림 V-7〉 농가조직화의 3단계



#### ■ 연중공급, 주요품목 분석

- 지역생산 가능품목과 부족품목을 농가조직화시 조사, 분석하여 연중생산과 공급체계를 구축함. 이 때 농가와 운영조직 간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이 중요함

18) 이 부문은 정은미 외(2019)의 '나주시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함

- 연중공급 품목 분석은 학교, 공공기관, 직매장 등 공급처의 연간 판매품목 중에서 10개월 이상 판매된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판매금액, 생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이 때,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저장품목과 계절대응 품목을 관리함. 특히 계절대응품목은 동한기와 혹서기 등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마련함
  - 중점 관리품목은 공급체계가 안정화되기 이전까지 연, 월, 일별 관리체계 마련하여 대응함
  -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저온창고, 혹한기 및 혹서기 대응 비가림하우스 및 관정 등 지원함
  - 나물류 등은 연중공급이 가능하도록 건나물 소형건조기를 지원함

〈그림 V- 8〉 연중 공급 및 수요 품목 분석

중분류	품목수	필수품목
과수류	7	배, 사과, 건대추, 감, 밤, 수박, 참외 등
식량작물	26	감자, 고구마(밤, 호박), 백미, 현미, 수수, 찰현미, 찹쌀, 흑미, 서리태, 보리, 찰보리, 참깨, 들깨, 기장, 팥 등
채소	과채류(13)	가지, 애호박, 오이(취청, 백다다기), 고추(청양, 아삭이, 풋, 파리)파프리카, 피망, 토마토(방울, 대추, 완숙)
	산채류(8)	콩나물, 숙주나물, 참나물, 도라지(깎), 케일, 들나물, 취나물 등
	근채 및 조미채소류(12)	대파, 양파, 당근, 무, 생강, 열무, 쪽파, 간마늘, 마늘, 실파, 연근, 총각무 등
	엽경채류(13)	상추(적, 청, 로메인), 배추(얼갈이, 속음), 부추, 깻잎, 양배추, 쌈채소, 근대, 머위 등
	양채류(6)	시금치, 아욱, 치커리, 콜라비, 겨자채, 쑥갓 등
특용작물	건나물(8)	무시래기, 호박고지, 건토란줄기, 무말랭이, 건가지, 건고사리, 건고추, 건취나물 등
	버섯(3)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
	건과류(2)	은행, 간은행
	약용작물(5)	오가피, 헛개나무, 엄나무, 율나무, 옥수수 수염

□ 분석방법

- 로컬푸드직매장 연간 판매품목 중 10개월 이상 판매된 품목을 우선 선정
- 이 중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품목 선정
  - ※ 식량작물은 백미 등 중량단위 고려하여 선정

□ 중점 관리품목

- 저장품목 : 배, 사과, 감자, 고구마, 양파, 당근, 무, 생강, 마늘, 양배추 등
- 계절대응품목 : 과채류, 산채류, 엽경채류, 양채류 등의 품목은 동한기와 혹서기 등 대응 필요

➔ 중점 관리품목은 직매장 안정화 시기 이전까지 연, 월, 일별 관리체계 마련

➔ 저장에 필요한 저온창고, 혹한기 및 혹서기 대응 비가림하우스 및 관정 등 지원

➔ 연중공급이 가능하도록 건나물 소형건조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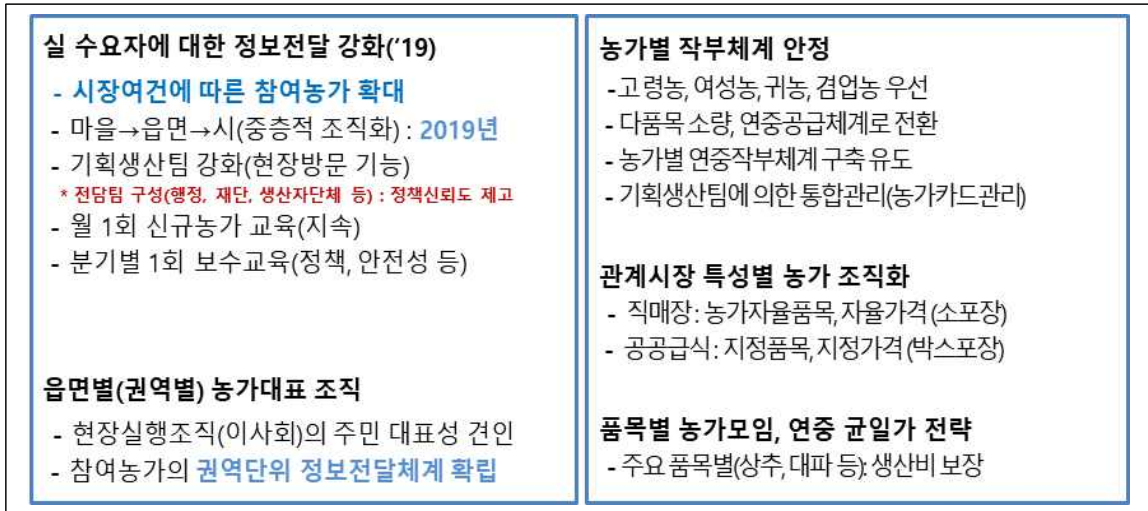
### ■ 기획생산체계 구축 (액션 플랜)

- 기획생산은 관계시장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함. 이 때 농가대표 조직을 육성하고 이 조직과 지속적인 실수요자(판매처)에 대한 정보전달과 피드백을 실시함
- 이를 통해 농가들이 사업진행과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공급품목과 가격, 포장, 상품 관리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중간지원조직은 농가별로 농가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격은 최소한의 생산비는 수준에서 협의 결정함

※ [참고] 농가조직화의 원리

- “약속된 농가와 준비된 품목 없이 관계시장은 커지지 않는다”
- “농가는 푸드플랜의 주인, 어떤 경우에도 갑질해서는 안된다 “(교육과 동의가 힘)
- 안전성관리(잔류농약검사)/ 원산지표지제 위반 등은 철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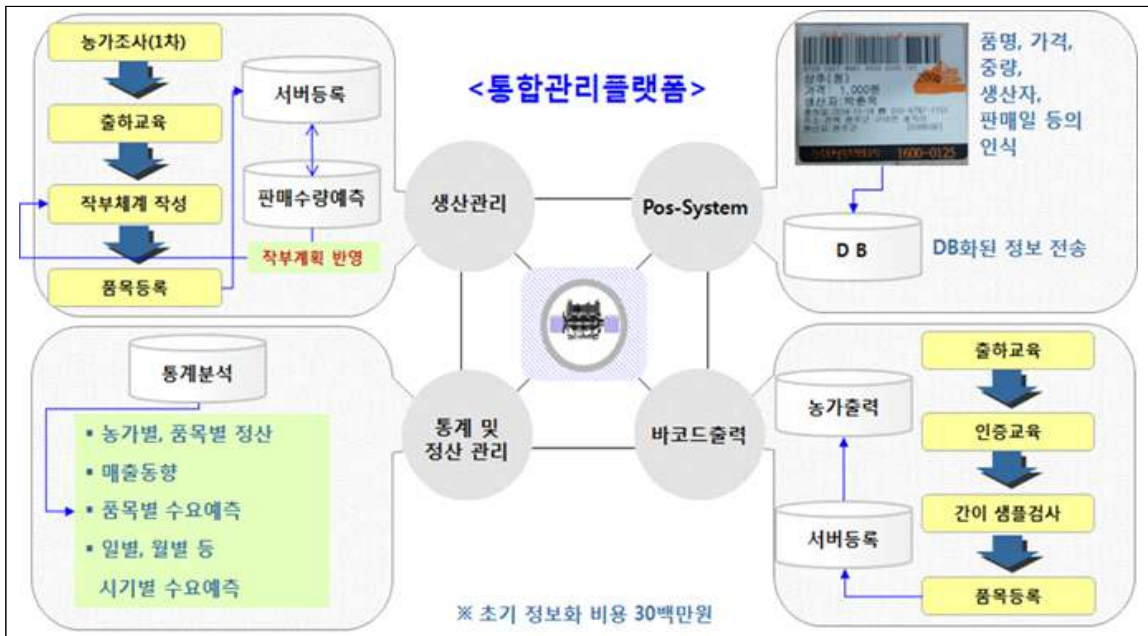
<그림 V-9> 기획생산체계 구축 활동



■ 기획생산 통합관리

- 기획생산 통합관리시스템은 생산관리-포스시스템-바코드출력-정산관리-통계분석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시스템임
- 위의 5가지 프로세스와 관련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 기획생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따라서 통합 DB 구축과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함

<그림 V-10> 기획생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 농민가공 및 지역가공 활성화

- 가공사업은 상품 특성에 맞게 농민가공센터를 중심으로 한 농민가공, 전문가공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가공을 중심으로 하고, 마을가공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마을가공은 농촌개발 사업 등과 연계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함

〈그림 V - 11〉 가공사업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동시다발적 가공활성화 전략 요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형(농민가공센터)</li> <li>- 전략형(전문가공센터)</li> <li>- 마을가공, 지역가공 등</li> </ul> </li> <li>• <b>두부, 콩나물, 장류 등 필수품목 우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부공장 : 개소당 1억 원</li> <li>- 김치공장 : 50평/ HACCP/ 2억 원</li> <li>- 장류 : 50평/ 1억 원 / - 콩나물 : 4.5억 원</li> </ul> </li> <li>• <b>마을개발 사업 등 정책사업 연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플랜패키지사업,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권사업, 청년일자리 연계</li> <li>- 자체 예산 확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 농민가공센터 운영 혁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CCP의무적용에 따른 공간재편</li> <li>- 떡 가공설비의 분리방안 검토</li> <li>- <b>습식공간 중심 청정구역 위주 HACCP적용</b> (설계변경, 용도변경 등 50백만원)</li> <li>- <b>공공성 확립을 위한 자체 운영규정</b></li> </ul> </li> <li>• <b>통합적 관리운영체계 확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적 가공활성화 계획수립(5년)</li> <li>- 다양한 부서간 협력(자활, 노인 등)</li> <li>- <b>통합관리 및 지원 : 전담인력 배치</b></li> <li>- 교육, 시제품, 포장재, 디자인 등</li> </ul> </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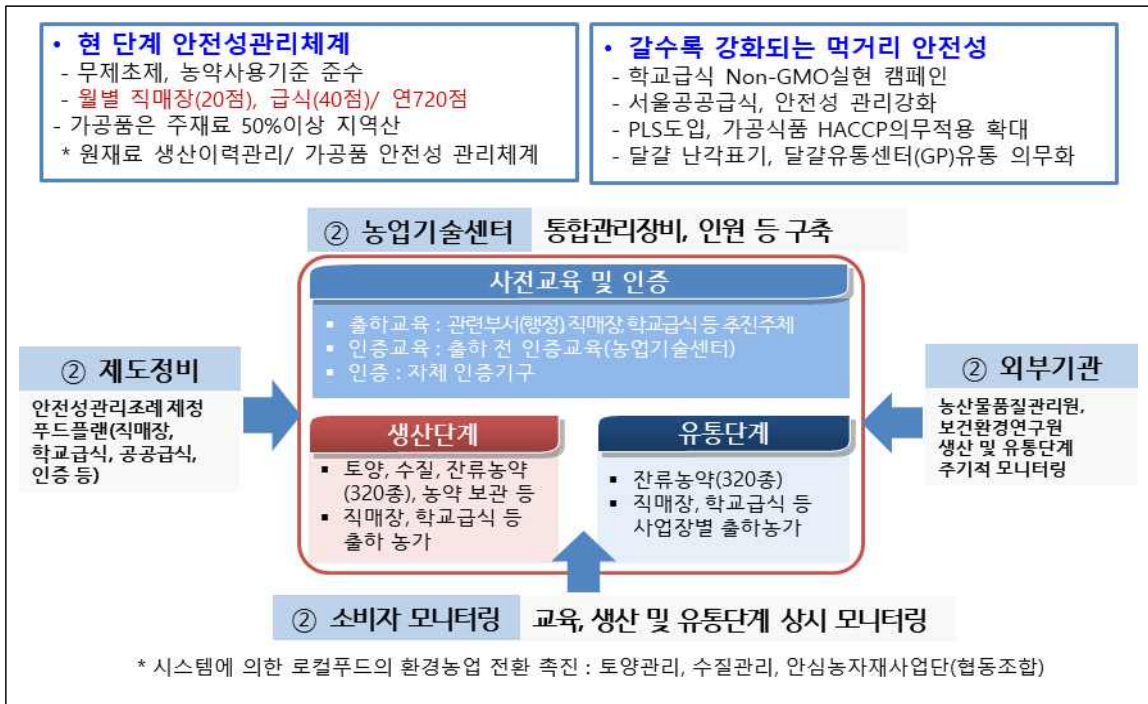
- 두부, 콩나물, 장류 등은 학교급식, 공공급식에서 필수품목으로 사용되어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음. 이들 품목부터 가공사업화 하는 것이 필요함
- 가공시설의 경우 HACCP 등 위생안전 기준 강화에 대비한 시설보완 및 운영규정 마련도 철저하게 시행함
  - 참고로, 2020년까지 음료류, 빵 및 떡류, 국수 및 유탄면류, 즉석식품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HACCP을 취득해야 함

## ■ 안전관리체계 강화

- 안전관리체계는 인증제도, 단계별 안전성관리, 친환경농업 전환을 통해 강화해 나감
- 현재 무제조체, 농약사용기준 준수 수준의 안전성 요구수준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추진함



<그림 V-12> 안전성 관리체계 강화



## 나.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체계 구축

### □ 푸드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

#### ■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성격과 쟁점

-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역순환체계 구축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중심 조직임
- 주요 기능은 학교급식·공공급식 등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기능과 안전성관리, 인증관리, 식생활교육, 거버넌스(위원회 등) 운영지원 등의 지원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 푸드통합지원센터의 기능 : 지원기능 vs 직접사업기능 / 각 기능의 범위
  - 센터의 운영 형태 : 행정직영 vs 출연기관 설립 vs 민간위탁
  - 광역 푸드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 여부 : 광역과 기초의 역할 분담

#### ■ 쟁점에 대한 검토

- 현재 푸드플랜 추진 지역에서 대부분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고려할 때, 대부분 직접사업기능과 지원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거나 설치가 추진되고 있음

- 운영형태는 ①행정이 설치하고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 ②지자체가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치 운영하는 방식 ③행정이 직영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민간위탁 방식은 행정의 운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민간위탁자의 경영상태가 부실해지거나 부정행위 발생시 공익적 목적을 크게 훼손함. 이 방식은 민간의 역량이 우수하거나 지자체 출연법인을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나타남
  - 공적 운영체계는 크게 지자체 출연에 의한 재단법인 형태와 지자체 직영 방식이 있음. 재단법인은 공공성 확보에 유리한 반면, 출연금, 운영비 등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민간역량 강화를 제한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큼. 재단법인을 아예 설립 초기부터 자립경영 및 민영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과도적 형태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음
  - 행정 직영 방식은 초기의 푸드통합센터의 안정적 정착, 먹거리 공공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자체 운영에 재정적, 인력적 부담이 발생함. 따라서 행정직영 방식은 장기간 지속되기 보다는 재단법인 또는 민간위탁의 과도적 형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표 V - 9〉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형태별 장단점 비교

구분	민간위탁(행정설치)	출연기관(재단법인) 설립	행정직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조직 자립운영</li> <li>▪ 행정 인건비 등 경상보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법인 설립</li> <li>▪ 민간협력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에서 직영</li> <li>▪ 민간협력 운영</li> </ul>
운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에서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위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재단법인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의 부서 형태로 직영</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역량 강화 기반 마련</li> <li>▪ 행정적 부담 경감</li> <li>- 직접 채용인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li> <li>▪ 정책적 지원 용이</li> <li>▪ 공익적 목표 달성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li> <li>▪ 공익적 목표 달성 용이</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리스크 발생시 파산 위험</li> <li>▪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영 안정화 노력 절실</li> <li>▪ 공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장치 마련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 및 행정적 부담 가중</li> <li>▪ 의사결정의 독립성 제한(산하기관)</li> <li>▪ 민간역량 강화 제한</li> <li>▪ 민간영역을 침해한다는 비판 제기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 및 행정적 부담 가중</li> <li>▪ 민간역량 강화 제한</li> <li>▪ 인사이동 등 내부여건에 따른 불안 요소 존재</li> </ul>
비고	서울시 공공급식센터,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원주푸드통합지원센터	화성시 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시 푸드통합지원센터	경기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종공공급식지원센터

자료 : 길청순 외(2019a)

-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형태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학교급식 중심의 단일 영역 사업으로 민간 위탁이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먹거리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행정직영 방식은 충청남도 학교급식센터를 중심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음
  - 2000년대 이후 지역농산물·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우선공급 운동이 확산되고, 2000년

- 대 중후반부터 학교급식센터 설치가 시작되면서 농협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 시기에는 대부분 학교급식만 수행하였기 때문에 기능도 비교적 단순하고 농산물만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업물량도 크지 않고, 농협도 경영여건이 지금보다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헌과 환원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2010년 이후 무상급식, 친환경급식에 대한 시민사회 활동과 먹거리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면서 먹거리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인식과 기존의 민간위탁 방식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
- 특히 계약재배나 기획생산에 의한 지역농산물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고, 농가와 위탁기관 간 갈등이 심화되고, 무엇보다도 학교급식 이외에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등에 지역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민간위탁방식보다는 공공성을 갖춘 운영체계가 확산되고 있음

〈그림 V - 13〉 캐나다 토론토의 푸드셰어(food share) 사례

◦ 기관 개요

- 1985년 토론토시의 빈곤문제를 다루기 위한 2만달러 규모의 시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
- 설립 초기 미션은 FoodLink라고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식량지원 전화망을 구축하고 푸드정책위원회에 빈곤감소 및 푸드뱅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 제안하는 것이었음
- 1992년에는 푸드정책위원회로부터 토론토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식품공급시스템인 'Field to Table' 프로젝트 운영기관으로 지정, 매월 약 15천명에 식품을 공급
- 현재는 학생 영양프로그램, 먹거리교육, 직거래장터, 음식폐기물 퇴비화사업, 쿠킹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주요 프로그램 및 활동실적(2016년 기준)

- (Growing) 옥상 양봉장 커뮤니티 가든, 학교 텃밭 등 79개 도시농업 프로젝트 추진, 신규 고용 창출(22명), 학교텃밭 생산(7640lbs), 교육훈련(1,609명)
- (Fresh Produce) Good Food Market(42개소 운영), Mobile Good Food Market(10개소), Good Food Box(31,519개), Bulk Produce(265개 기관 및 학교 공급), Grab Some Good Market(3개소)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신선 채소, 과일류 공급
- Good Food Markt : 식료품점이 없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파머스마켓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지역공동체 등이 운영하는 신선채소, 과일류 전용 마켓, 토론토시 내 42개소 운영 중
- Mobile Good Food Market : 일종의 푸드트럭(버스)으로 식품점이 없거나 소득수준이 낮거나 차량이동이 쉽지 않은 지역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 교통공사에서 버스 제공, 55개 품목 판매
- Good Food Box : 꾸러미 형태로 온타리오주에서 생산된 제철농산물 패키지 상품으로 레시피와 함께 주 단위로 공급, 지역별 코디네이터를 통해 주문하고 거점까지 배송
- Bulk Produce Program : 학교, 유치원, 커뮤니티센터 등에 채소와 과일류를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최소한의 수량도 배송 가능, 공급상품은 25명의 지역농가 및 도매시장(온타리오 푸드 터미널)에서 구매
- Grab Some Good Market :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사내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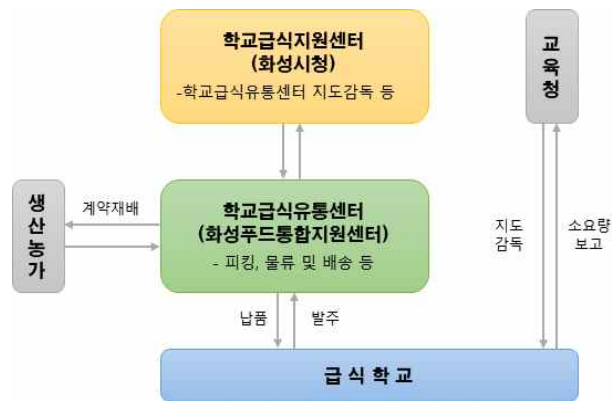
- 또 한가지 큰 쟁점은 광역푸드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임. 광역푸드통합지원센터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 첫째는 도시지역 특광역시의 대부분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현물공급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도시지역의 경우 대규모 부지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민간영역 침해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급식센터를 지역, 특히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적절성, 실현가능성에 대해 제기되고 있음
  - 둘째는 시군별 급식센터가 있는 상황에서 광역급식센터를 설치하는 문제임. 광역급식센

터를 통해 부족한 농산물, 특히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시군 센터에 공급하고, 지역농산물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시군 센터와 지역내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공급하며, 식생활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광역인증제 운영 등을 통해 기존의 시군단위 센터에서 부족했던 기능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임. 그러나 시군에서는 시군센터가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사례 1 : 화성시

■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본현황


- 화성시는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공급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2012년 3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함.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화성시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 1명을 포함한 5명이 근무하고 있음
- 화성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과 유통센터 기능을 분리하여, 유통센터 기능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함



〈그림 V- 14〉 화성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체계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학교급식사업과 로컬푸드직매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학교급식에는 현재 관내 194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산물, 양곡류, 김치류, 장류 등 가공품을 공급하고 있음

〈표 V- 10〉 화성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개요	⇨ 화성시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시기 : 2012년 3월 26일) ⇨ 설립 지원근거 :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2012년 2월 21일)	
인력 현황	⇨ 학교급식지원센터(화성시 농정과) : 센터장 1명, 일반직공무원 2명, 계약직 2명 ⇨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유통센터 기능) : 11명	
시설 현황	○ 운영주체 : 화성시청(행정직영) - 소속 : 화성시 농정과 - 구성 : 센터장 1, 일반직공무원 2, 계약직 2 ○ 물류·유통 주체 :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화성시 봉담읍 덕리 5-18번지 외</li> <li>- 면적 : 894㎡</li> <li>- 주요시설 : 저온저장고, 냉동고, 사무실 등</li> </ul>	물류·유통시설(학교급식배송장)
운영체계	<p>○ 농산물, 가공품, 청과류, 장류 - 배송업체에 위탁</p> <p>○ 김치류, 수산류 : 업체 직배송 / 양곡 : 관내 RPC에서 담당</p>	
식재료 공급대상	<p>↔ 194개 학교 103,649명(56개 어린이집·유치원 5,793명, 79개 초등학교 55,292명, 33개 중학교 23,899명, 22개 고등학교 17,190명, 2개 특수학교 208명)</p>	
공급품목	<p>↔ 농산물, 가공품, 청과류, 김치류, 수산류, 장류, 양곡</p> <p>- 양곡의 경우 잡곡류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직배송함 / 쌀 계약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로 하지만 관내 RPC에서 직접 공급하며 수수료가 없음.</p>	
농산물 조달조직	<p>↔ 화성친환경영농조합법인, 호스쿨양파작목반, 호스쿨감자 작목반, 화성능금영농조합, 햇살사과작목반, 참사과, 화성자두 영농조합, 친환경송산포도, 송산거봉작목반 등 9개 조직 및 94농가 참여</p>	
거버넌스 운영	<p>○ 학교급식운영위원회(위원 15명) : 지원센터 운영 사항 및 식재료 품목과 가격 결정</p> <p>○ 학교급식 식재료개선 소위원회(위원 5명) : 식재료 품목 및 가격결정 사전 논의</p>	

###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현황(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식재료 공급액은 154억원으로 초등학교가 99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37억원, 고등학교 15억원 순임
- 품목별 식재료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공급금액 기준으로 농산물이 65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양곡류가 42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음
- 수산물은 26억원, 김치류는 18억원, 공산 가공품은 3억원 수준임

〈표 V-11〉 식재료 공급대상 학교, 학생수 및 연간매출액

(단위 : 개교, 명, 천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연간 매출액
유치원	56	5,793	341,883
초등학교	79	55,292	9,920,335
중학교	33	23,899	3,711,423
고등학교	22	18,457	1,452,139
특수학교	2	208	34,367
합계	192	103,649	15,460,147

자료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내부자료, 2017년 3월 ~ 2018년 2월 기준.

〈표 V-12〉 공급 품목 부류별 연간매출

(단위 : 천원)

구 분	양곡류	농산물	수산물	김치류	공산가공품	합계
유치원	180,603	87,110	52,635	17,257	4,278	341,883
초등학교	2,549,930	4,408,450	1,679,281	1,078,055	204,619	9,920,335
중학교	690,832	1,746,829	596,171	599,550	78,041	3,711,423
고등학교	814,148	266,456	283,219	77,701	10,615	1,452,139
특수학교	10,674	-	20,261	3,432	-	34,367
기타	-	-	-	-	-	0
합계	4,246,187	6,508,845	2,631,567	1,775,995	297,553	15,460,147

자료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내부자료, 2017년 3월 ~ 2018년 2월 기준.

- 2017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에 공급한 농산물은 총 81개 품목 1,233톤임.  
이중 관내에서 조달한 품목은 49개 품목으로 584톤임

〈표 V-13〉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공급 현황

(단위 : 개, 톤)

학교급식 공급		관내 조달		비중	
품목수(A)	물량(B)	품목수(a)	물량(b)	(a/A)	(b/B)
81	1,223	49	564	60.5%	46.1%

자료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내부자료, 2017년 1월 ~ 2017년 12월 기준.

## □ 사례 2 : 아산시

- 아산시 학교급식센터는 2013년 운영을 시작할 때는 행정기능과 공급기능을 모두 농협(원예농협)에 위탁하는 통합위탁 방식으로 시작하였으나,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논의 끝에 2016년에 물류기능만 위탁하고 행정기능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위탁 방식으로 전환함
  - 운영인력 : 아산시청 학교급식지원팀 5명, 원예농협 급식센터 12명
- 또한, 2017년부터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가공품, 수산물, 가공류까지 전품목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두부, 빵류, 떡류, 기름류 등을 관내 생산자단체를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전통장류와 우리밀가공식품 등 가공품 공급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공급실적 : : 15,122백만원(2016년) → 29,423백만원(2017년) → 33,302백만원(2018년)



〈표 V - 14〉 아산시 학교급식센터 운영 사례

<p><b>학 교 급 식</b></p> <p><b>추 진 경 과</b></p>	<p>▣ 2004. 12.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p> <p>▣ 2005. 3. 조례에 따라 친환경 쌀 지원사업 실시</p> <p>▣ 2010. 9. 친환경우수농산물 추가지원사업 실시(1식당 400원 추가지원)</p> <p>▣ 2011. 3.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친환경우수농산물 추가지원사업 전면 확대 (2014년까지 전체 중학교로 연차적 확대 : 면 → 읍 → 동)</p> <p>▣ 2011. 9. 아산시 우수식자재 학교 무상급식지원조례 제정(무상급식 및 센터운영 근거 마련)</p> <p>▣ 2013. 3.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개시</p> <p>▣ 2015. 9.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 지원대상확대(어린이집), 센터 운영위원회, 센터의 기능(행정, 교육, 물류 등) 명시</p> <p>▣ 2017. 3. 학교급식지원센터 전품목 공급 확대(농축산물 → 가공품, 수산물, 가공류 등 전체)</p> <p>▣ 2018. 3.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식품비 지원)</p> <p>▣ 2019. 3.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식품비 지원)</p>																								
<p><b>지 자 체</b></p> <p><b>지 원 내 용</b></p> <p><b>지 원 내 용 2</b></p>	<p><b>1)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b></p> <p>- 사업 예산 : 2,096,321천원(도비20%, 시비30%, 교육청 50%)</p> <p>- 대 상 : 유치원 61개원 5,773명</p> <p>- 지원 내용 : 유치원 급식비 중 식품비 50% 지원, 인건비·운영비 전액, 식품비 50% 교육청 부담</p> <p>- 지원 기준 : 1일 1식(중식)/ 단설·사립 年 220일/ 병설 年 190일/ 1식 단가 1,700원(18년 총액대비 11.5% 인상)</p> <p><b>2)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b></p> <p>- 사업 예산 : 20,964,394천원(도비40%, 시비60%)</p> <p>- 대 상 :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76개교 42,386명</p> <p>- 지원 내용 : 학교 급식비 중 식품비 무상지원(인건비, 운영비 교육청 부담)</p> <p>- 지원기준 : 1일 1식, 연간 190일, 1식 평균단가 초등 2,219원, 중학교 2,801원 고등 3,400원, 특수 3,340원 * 학생수에 따라 차등단가 적용</p> <p><b>3) 친환경 식재료 현물(차액) 지원</b></p> <p>- 사업 예산 : 3,940,269천원(도비30%, 시비70%)</p> <p>- 대 상 :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36개교 48,159명</p> <p>- 지원내용: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차액)지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유치원</th> <th>초등학교</th> <th>중학교</th> <th>고등학교</th> <th>특수학교</th> </tr> </thead> <tbody> <tr> <td>급식일수</td> <td>단설·사립 220일 병설 190일</td> <td>190일</td> <td>190일</td> <td>190일</td> <td>190일</td> </tr> <tr> <td>지원횟수</td> <td>1일 1식</td> <td>1일 1식</td> <td>1일 1식</td> <td>1일 1식</td> <td>1일 1식</td> </tr> <tr> <td>지원단가</td> <td>280원</td> <td>390원</td> <td>470원</td> <td>560원</td> <td>494원</td> </tr> </tbody> </table> <p><b>4) 친환경,지역농축산물 식재료비 지원 사업</b></p> <p>- 사업 예산 : 900,000천 원(시비 100%)</p> <p>- 대 상: 고등·각종학교 11개교 9,567명</p> <p>- 지원내용: 친환경·우수식재료, 지역농축산물 일부 지원</p> <p>- 지원 기준 : 1일 1식, 년 190일(1학기 100일, 2학기 90일)</p> <p>- 지원단가 : 280원</p> <p>※ 모든 급식지원금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 공급</p>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급식일수	단설·사립 220일 병설 190일	190일	190일	190일	190일	지원횟수	1일 1식	1일 1식	1일 1식	1일 1식	1일 1식	지원단가	280원	390원	470원	560원	494원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급식일수	단설·사립 220일 병설 190일	190일	190일	190일	190일																				
지원횟수	1일 1식	1일 1식	1일 1식	1일 1식	1일 1식																				
지원단가	280원	390원	470원	560원	494원																				

<p><b>센터</b></p> <p><b>시설 현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아산시 염치읍 충무로 358번길 13</li> <li>▣ 개 소 일 : '13. 1. 1.(공사기간 : '12. 7.~'12. 12.)</li> <li>▣ 면 적 : 부지 2,980㎡ / 건축연면적 2,104㎡</li> <li>▣ 사 업 비 : 4,085백만원(도비 1,507 시비 1,323 자부담 1,255)</li> <li>▣ 시설현황 : 전처리 시설 및 물류기계.장비 등 HACCP 기준에 맞게 설치</li> <li>▣ 공급현황 : 관내 전체학교(136개교 4만 6천여 명) ※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라 급식센터를 통한 현물 공급</li> <li>▣ 공급실적 : 15,122백만 원(2016년) → 29,423백만 원(2017년) → 33,302백만 원(2018년)</li> <li>▣ 조직구성 : 아산시청 학교급식지원팀(5명), 원예농협 급식센터(12명)</li> </ul>																																																																																																		
<p><b>운영 체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개정을 통해 통합위탁형 센터에서 부분위탁형 센터로의 전환(2016년 시행)</li> <li>▣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생산자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한 협업 운영</li> <li>▣ <b>부분위탁형으로 센터운영 개선</b></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45%;">개선 전</th>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30%;">개선 후</th> </tr> </thead> <tbody> <tr> <td>운영방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위탁형</li> <li>- 농협연합사업단 운영</li> </ul>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부분위탁형</b></li> <li>- 행정기능과 물류기능 분리운영</li> </ul> </td> </tr> <tr> <td>생산관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을 통한 생산관리</li> <li>- 자체적인 작부계획 수립</li> </ul> </td>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생산자영농조합법인</li> <li>- 작부계획 등 생산자 역할 강화</li> </ul> </td> </tr> <tr> <td>공급품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농산, 축산 등)</li> </ul> </td>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품목(가공품, 수산물 등 확대)</b></li> </ul> </td> </tr> <tr> <td>협약기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위원회</li> </ul> </td>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T/F협의회 등</b></li> </ul> </td> </tr> <tr> <td>예산집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 현물지원 병행</li> </ul> </td>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전액 현물지원(공립유치원 제외)</li> </ul> </td> </tr> <tr> <td>학부모참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위원회 대표 참여</li> </ul> </td>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건강먹거리 지킴이단 운영</li> <li>- 위생·안전 모니터링 참석</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위탁형</li> <li>- 농협연합사업단 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부분위탁형</b></li> <li>- 행정기능과 물류기능 분리운영</li> </ul>	생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을 통한 생산관리</li> <li>- 자체적인 작부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생산자영농조합법인</li> <li>- 작부계획 등 생산자 역할 강화</li> </ul>	공급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농산, 축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품목(가공품, 수산물 등 확대)</b></li> </ul>	협약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T/F협의회 등</b></li> </ul>	예산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 현물지원 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전액 현물지원(공립유치원 제외)</li> </ul>	학부모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위원회 대표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건강먹거리 지킴이단 운영</li> <li>- 위생·안전 모니터링 참석</li> </ul>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위탁형</li> <li>- 농협연합사업단 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부분위탁형</b></li> <li>- 행정기능과 물류기능 분리운영</li> </ul>																																																																																																
생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을 통한 생산관리</li> <li>- 자체적인 작부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생산자영농조합법인</li> <li>- 작부계획 등 생산자 역할 강화</li> </ul>																																																																																																
공급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농산, 축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품목(가공품, 수산물 등 확대)</b></li> </ul>																																																																																																
협약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T/F협의회 등</b></li> </ul>																																																																																																
예산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 현물지원 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전액 현물지원(공립유치원 제외)</li> </ul>																																																																																																
학부모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위원회 대표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건강먹거리 지킴이단 운영</li> <li>- 위생·안전 모니터링 참석</li> </ul>																																																																																																
<p><b>푸드 플랜 현황</b></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ton, 백만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아산</th> <th colspan="2">충남</th> <th colspan="2">전국</th> <th colspan="2">합계</th> </tr> <tr> <th>공급량</th> <th>금액</th> <th>공급량</th> <th>금액</th> <th>공급량</th> <th>금액</th> <th>공급량</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농산물</td> <td>1,306</td> <td><b>5,060</b> (62.7%)</td> <td>142</td> <td>531 (6.6%)</td> <td>491</td> <td>2,489 (30.8%)</td> <td>1,939</td> <td>8,080</td> </tr> <tr> <td>축산물 (소,돼지)</td> <td>398</td> <td><b>6,553</b> (95.3%)</td> <td>0</td> <td>0</td> <td>11</td> <td>325 (4.7%)</td> <td>410</td> <td>6,879</td> </tr> <tr> <td>가공품</td> <td>41</td> <td>527 (4.8%)</td> <td>0</td> <td>3</td> <td>1,504</td> <td>10,412 (95.1%)</td> <td>1,545</td> <td>10,943</td> </tr> <tr> <td>수산물</td> <td>0</td> <td>0</td> <td>0</td> <td>13 (0.5%)</td> <td>178</td> <td>2,717 (99.5%)</td> <td>178</td> <td>2,730</td> </tr> <tr> <td>가금류</td> <td>0</td> <td>0</td> <td>0</td> <td>0</td> <td>231</td> <td>2,212 (100%)</td> <td>231</td> <td>2,212</td> </tr> <tr> <td>계란류</td> <td>42</td> <td><b>223</b> (99.6%)</td> <td>0</td> <td>0</td> <td>0</td> <td>1</td> <td>42</td> <td>224</td> </tr> <tr> <td>김치류</td> <td>347</td> <td><b>1,348</b> (10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347</td> <td>1,348</td> </tr> <tr> <td>우유</td> <td>493</td> <td><b>887</b> (10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493</td> <td>887</td> </tr> <tr> <td>합 계</td> <td>2,627</td> <td>14,599 (43.8)</td> <td>142</td> <td>547 (1.6%)</td> <td>2,432</td> <td>18,155 (54.5%)</td> <td>5,201</td> <td>33,302</td> </tr> </tbody> </table>	구분	아산		충남		전국		합계		공급량	금액	공급량	금액	공급량	금액	공급량	금액	농산물	1,306	<b>5,060</b> (62.7%)	142	531 (6.6%)	491	2,489 (30.8%)	1,939	8,080	축산물 (소,돼지)	398	<b>6,553</b> (95.3%)	0	0	11	325 (4.7%)	410	6,879	가공품	41	527 (4.8%)	0	3	1,504	10,412 (95.1%)	1,545	10,943	수산물	0	0	0	13 (0.5%)	178	2,717 (99.5%)	178	2,730	가금류	0	0	0	0	231	2,212 (100%)	231	2,212	계란류	42	<b>223</b> (99.6%)	0	0	0	1	42	224	김치류	347	<b>1,348</b> (100%)	0	0	0	0	347	1,348	우유	493	<b>887</b> (100%)	0	0	0	0	493	887	합 계	2,627	14,599 (43.8)	142	547 (1.6%)	2,432	18,155 (54.5%)	5,201	33,302
구분	아산		충남		전국		합계																																																																																												
	공급량	금액	공급량	금액	공급량	금액	공급량	금액																																																																																											
농산물	1,306	<b>5,060</b> (62.7%)	142	531 (6.6%)	491	2,489 (30.8%)	1,939	8,080																																																																																											
축산물 (소,돼지)	398	<b>6,553</b> (95.3%)	0	0	11	325 (4.7%)	410	6,879																																																																																											
가공품	41	527 (4.8%)	0	3	1,504	10,412 (95.1%)	1,545	10,943																																																																																											
수산물	0	0	0	13 (0.5%)	178	2,717 (99.5%)	178	2,730																																																																																											
가금류	0	0	0	0	231	2,212 (100%)	231	2,212																																																																																											
계란류	42	<b>223</b> (99.6%)	0	0	0	1	42	224																																																																																											
김치류	347	<b>1,348</b> (100%)	0	0	0	0	347	1,348																																																																																											
우유	493	<b>887</b> (100%)	0	0	0	0	493	887																																																																																											
합 계	2,627	14,599 (43.8)	142	547 (1.6%)	2,432	18,155 (54.5%)	5,201	33,302																																																																																											



주 요 성 과	<b>■ 친환경 농산물 공급현황</b> <span style="float: right;">(단위: ton, 백만 원)</span>								
	구 분	아 산		충 남		전 국		합 계	
		공급량	금액	공급량	금액	공급량	금액	공급량	금액
	친환경	1,062	<b>3,860</b> (70.8%)	97	740 (13.6%)	171	855 (15.7%)	1,331	<b>5,454</b> (67.5%)
	합 계	1,306	<b>5,060</b> (62.7%)	142	531 (6.6%)	491	2489 (30.8%)	1,939	8,080

**■ 친환경쌀 전량 지역에서 생산 공급**  
**■ 친환경 농산물 67.5%, 지역농산물 62.7% 공급, 친환경농산물 중 아산산 70.8%**  
 -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충청남도 센터 평균 60% 수준)  
**■ 생산자 전문조직사업(생산자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지역농산물 작부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및 농가소득 보장하는 가격체계 운영**  
**■ 두부, 빵류, 떡류, 기름류 등 관내 생산자단체를 통해 공급**  
**■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통장(고추장, 된장, 간장), 가공식품(콩나물, 우리밀가공식품 등)공급**

자료 : 안충섭, 아산시 학교급식지원 사업 추진사례, 2019.

### □ 시사점 및 제안

#### ■ 민간의 역량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체계 확립 필요

-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주민의 먹거리 공공성을 높이는데 있음
- 이론적으로 보면, 운영체계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정 운영체계가 적합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우선, 공공성과 중장기 투자 의향을 갖춘 민간주체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 방식이 공공성과 더불어 전문성, 효율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함
  - 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영리조직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약화시키거나 농가조직화,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 등을 통한 중장기 투자에 소홀한 경우가 많았음
- 행정직영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사업초기에 센터의 운영체계를 확립시키는 단계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서는 공무원 직무의 특수성과 전문성 확보의 한계 등으로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공공성과 전문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재단법인 형태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자립경영체계 구축 방안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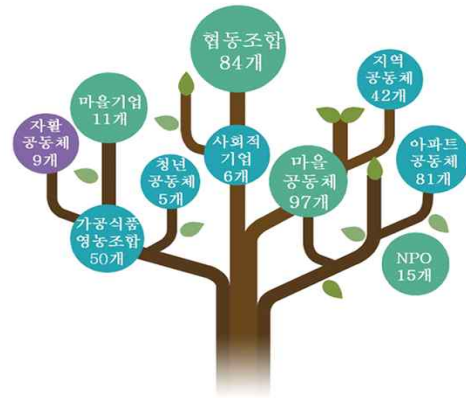
## 다.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 ■ 시민참여형 푸드플랜 추진

- 푸드플랜이 시민들의 먹거리 의제가 반영되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계획이자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선계획-후공유가 아닌 선참여-후실행의 체계로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민단체, 시민대표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계획수립 이후에도 먹거리기본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의 먹거리 시민위원회처럼 분야별로 시민참여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도화해야함

### ■ 시민·마을·실행·지원 그룹이 참여하는 푸드플랜 네트워크 구축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마을-실행-지원 그룹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형성하여 푸드플랜을 먹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 대표적으로 2017년 창립한 대전시의 '대전 시푸드플랜네트워크', 2018년 발족한 완주군의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들 수 있음



**나무가 나무에게,  
우리 더불어 숲이 되자**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체 조직도]

〈그림 V-15〉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례

〈표 V-15〉 푸드플랜의 수립과 실행 거버넌스 사례

계획수립 단계 : 충청남도 사례	
푸드플랜 수립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 18.10월부터 19.1월까지 월 1회 공동학습, 월 1회 공동기획의 형태로 먹거리포럼 및 준비위원회 운영</li> <li>- 운영 : 10~12월까지 15회 개최 (분과위 12회, 포럼 3)</li> <li>▪ 충남 민관협치먹거리준비위원회는 현재 4개 분과, 33명으로 구성</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공동 학습</p> <p>↓</p> <p>공동 기획</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충남먹거리포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div style="text-align: center;"> <p>먹거리순환팀</p> <p>지역식품순환체계 푸드통합지원센터 푸드플랜 실행과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건강먹거리팀</p> <p>안전관리체계 맞춤형 건강증진 소비자식교육</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지속가능먹거리팀</p> <p>생태친화적 생산체계 공동체지원농업 농식품 지역순환가공</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먹거리인권팀</p> <p>취약계층 먹거리복지 먹거리공공성강화 (공공급식/학교급식)</p> </div> </div> </div> </div>

푸드플랜 추진단 - 나주시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추진위원(21명)</th> <th colspan="2">실행위원(20명)</th> </tr> <tr> <th>소속</th> <th>직위</th> <th>소속</th> <th>직위</th> </tr> </thead> <tbody> <tr> <td>나주시</td> <td>부시장</td> <td>나주시 먹거리계획과</td> <td>과장</td> </tr> <tr> <td>나주시 농업기술센터</td> <td>소장</td> <td>나주시 먹거리계획과</td> <td>팀장</td> </tr> <tr> <td>나주시 먹거리계획과</td> <td>과장</td> <td>나주시 교육지원청</td> <td>팀장</td> </tr> <tr> <td>나주시의회</td> <td>대표</td> <td>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td> <td>단장</td> </tr> <tr> <td>나주시 교육지원청</td> <td>교육지원과장</td> <td>영산포농협</td> <td>상무</td> </tr> <tr> <td>농협 중앙회 나주시지부</td> <td>지부장</td> <td>금천농협</td> <td>상무</td> </tr> <tr> <td>남평농협</td> <td>조합장</td> <td>공공기관협의회(aT)</td> <td>차장</td> </tr> <tr> <td>산포농협</td> <td>조합장</td> <td>나주시 농어업회의소</td> <td>사무국장</td> </tr> <tr> <td>공공기관 협의회(aT)</td> <td>부장</td> <td>나주시 농민회</td> <td>사무국장</td> </tr> <tr> <td>나주시 농어업회의소</td> <td>회장</td> <td>사회복지시설기관연합회</td> <td>총무</td> </tr> <tr> <td>나주시 농민회</td> <td>회장</td> <td>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지회나주시지부</td> <td>사무국장</td> </tr> <tr> <td>사회복지시설기관연합회</td> <td>회장</td> <td>나주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td> <td>사무국장</td> </tr> <tr> <td>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지회나주시지부</td> <td>지부장</td> <td>생활개선나주시연합회</td> <td>사무국장</td> </tr> <tr> <td>나주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td> <td>회장</td> <td>공공급식 영양사</td> <td>영양사 대표</td> </tr> <tr> <td>생활개선나주시연합회</td> <td>회장</td> <td>학교급식 영양교사</td> <td>총무</td> </tr> <tr> <td>학교급식 영양교사</td> <td>대표</td> <td>어린이집 연합회</td> <td>총무</td> </tr> <tr> <td>어린이집 연합회</td> <td>회장</td> <td>학부모 대표</td> <td>사무국장</td> </tr> <tr> <td>학부모 대표</td> <td>대표</td> <td>나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td> <td>팀장</td> </tr> <tr> <td>나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td> <td>센터장</td> <td>로컬푸드 생산자회</td> <td>사무국장</td> </tr> <tr> <td>로컬푸드 생산자회</td> <td>회장</td> <td>로컬푸드 가공협동조합</td> <td>총무</td> </tr> <tr> <td>로컬푸드 가공협동조합</td> <td>이사장</td> <td></td> <td></td> </tr> </tbody> </table>	추진위원(21명)		실행위원(20명)		소속	직위	소속	직위	나주시	부시장	나주시 먹거리계획과	과장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주시 먹거리계획과	팀장	나주시 먹거리계획과	과장	나주시 교육지원청	팀장	나주시의회	대표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단장	나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영산포농협	상무	농협 중앙회 나주시지부	지부장	금천농협	상무	남평농협	조합장	공공기관협의회(aT)	차장	산포농협	조합장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공공기관 협의회(aT)	부장	나주시 농민회	사무국장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회장	사회복지시설기관연합회	총무	나주시 농민회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지회나주시지부	사무국장	사회복지시설기관연합회	회장	나주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지회나주시지부	지부장	생활개선나주시연합회	사무국장	나주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공공급식 영양사	영양사 대표	생활개선나주시연합회	회장	학교급식 영양교사	총무	학교급식 영양교사	대표	어린이집 연합회	총무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학부모 대표	사무국장	학부모 대표	대표	나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팀장	나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로컬푸드 생산자회	사무국장	로컬푸드 생산자회	회장	로컬푸드 가공협동조합	총무	로컬푸드 가공협동조합	이사장		
	추진위원(21명)		실행위원(20명)																																																																																										
소속	직위	소속	직위																																																																																										
나주시	부시장	나주시 먹거리계획과	과장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주시 먹거리계획과	팀장																																																																																										
나주시 먹거리계획과	과장	나주시 교육지원청	팀장																																																																																										
나주시의회	대표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단장																																																																																										
나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영산포농협	상무																																																																																										
농협 중앙회 나주시지부	지부장	금천농협	상무																																																																																										
남평농협	조합장	공공기관협의회(aT)	차장																																																																																										
산포농협	조합장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공공기관 협의회(aT)	부장	나주시 농민회	사무국장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회장	사회복지시설기관연합회	총무																																																																																										
나주시 농민회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지회나주시지부	사무국장																																																																																										
사회복지시설기관연합회	회장	나주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지회나주시지부	지부장	생활개선나주시연합회	사무국장																																																																																										
나주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공공급식 영양사	영양사 대표																																																																																										
생활개선나주시연합회	회장	학교급식 영양교사	총무																																																																																										
학교급식 영양교사	대표	어린이집 연합회	총무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학부모 대표	사무국장																																																																																										
학부모 대표	대표	나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팀장																																																																																										
나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로컬푸드 생산자회	사무국장																																																																																										
로컬푸드 생산자회	회장	로컬푸드 가공협동조합	총무																																																																																										
로컬푸드 가공협동조합	이사장																																																																																												
푸드플랜 추진단계	<p style="text-align: center;"><b>실행 단계 : 서울시 사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먹거리 시민위원회는 7명의 위원직과 10개의 분과위원회(124명)로 구성 - 매월 분과위원회 개최</li> <li>서울먹거리 기본조례 2017.09.21 제정 :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및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먹거리 시민위원회</b></p> <p style="text-align: center;">위원직 7명 (시장, 행정1부시장,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p> <p style="text-align: center;">분과 위원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공공급식분과 (14명)</td> <td>도시농업분과 (14명)</td> <td>식품안전분과 (10명)</td> <td>도농상생분과 (15명)</td> <td>지속가능식생활분과 (영양과건강)10명</td> </tr> <tr> <td>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 (먹거리산업)13명</td> <td>먹거리자치분과 (12명)</td> <td>먹거리문화교육 홍보분과(11명)</td> <td>먹거리생태분과 (12명)</td> <td>먹거리복지분과 (13명)</td> </tr> </table>	공공급식분과 (14명)	도시농업분과 (14명)	식품안전분과 (10명)	도농상생분과 (15명)	지속가능식생활분과 (영양과건강)10명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 (먹거리산업)13명	먹거리자치분과 (12명)	먹거리문화교육 홍보분과(11명)	먹거리생태분과 (12명)	먹거리복지분과 (13명)																																																																																		
공공급식분과 (14명)	도시농업분과 (14명)	식품안전분과 (10명)	도농상생분과 (15명)	지속가능식생활분과 (영양과건강)10명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 (먹거리산업)13명	먹거리자치분과 (12명)	먹거리문화교육 홍보분과(11명)	먹거리생태분과 (12명)	먹거리복지분과 (13명)																																																																																									
서대문구 혁신플랫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제설정</li> <li>주민요구 세분화</li> <li>기대편익 결정</li> <li>공급기재 결정</li> <li>실행조직 결정</li> <li>단계별 협업 정책과 지원</li> <li>호혜적 거버넌스, 사회적자본</li> <li>재화서비스공급, 공동체 지원</li> <li>시스템 전환 참여</li> <li>사회적 가치 창출</li> <li>결사체 연대 생산</li> <li>사회적경제 인프라 (금융, 연구, 유통)</li> </ol> <p>* 서대문구 푸드플랜 TF에서 정리된 내용임.</p>																																																																																												

## 라.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 □ 푸드플랜 및 먹거리위원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

- 현재 먹거리기본조례는 서울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이 제정한 상황임
- 주된 내용은 먹거리 보장 실현과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등이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먹거리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지원, 먹거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 (2017년 제정) : 총칙,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먹거리시민위원회 등으로 구성
  -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19년 제정) : 목적, 먹거리전략 수립과 시행, 먹거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으로 구성
  -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019년 제정) : 목적, 지역먹거리 통합지원계획의 수립, 지역먹거리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지역먹거리의 생산·가공·인증·유통지원·시설운영·소비촉진, 유통안전기금의 조성 등으로 구성
- 모든 시범지역에서 푸드플랜의 제도적 기반으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는 예시(안)을 제공하여 푸드플랜의 수립과 추진, 먹거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민참여의 제도화,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그림 V-16〉 푸드플랜 기본조례 사례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2017)	경기도 먹거리 보장 조례 (2019)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b>먹거리기본권</b>”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p> <p>3. “<b>먹거리보장</b>”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상태를 말한다.</p> <p>7. “<b>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b>”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경기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b>먹거리 기본권</b>”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연령, 성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p> <p>3. “<b>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b>”란 지역 먹거리를 도 또는 생산·가공한 해당 시·군에서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p> <p>제3조(기본원칙)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p>

### 3. 푸드플랜 정책 효과분석

#### 가. 푸드플랜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증가 효과

##### ■ 분석의 기초

- 푸드플랜 일자리 창출 형태 : 푸드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 또는 주민 레스토랑, 가공센터, 사회적경제(식생활교육, 마을기업, 가공업체, 프랜차이즈 등)
-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일자리 순증 효과 : 1억원당 0.31명
  - 산식 :  $1 - [(푸드시터 1인당 매출액 \div \text{급식기업 1인당 매출액})]$ 
    - ※ 산출기초 (1인당 매출액 ( '18.12 기준) : 급식기업 잡코리아, 푸드센터 자체 조사)
      - 급식기업의 직원 1인당 매출액 : 현대그린푸드 3.0억원, 삼성웰스토리 5.7억원, CJ프레시웨이 3.2억원, 풀무원푸드앤컬처 2.4억원. 평균 3.6억원
      - 푸드센터의 직원 1인당 매출액 : 완주군 2.7억원, 전주시 2.3억원. 평균 2.5억원
-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 레스토랑 : 인구 10만명당 1개소 적용
- 로컬푸드 직매장 인력 : 7명 적용 (완주 6.4명, 유성 7명의 평균치)
-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에 따른 인력증가 효과 (7명 근무 매장 기준) : 2.87명
  - 산식 :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인력  $\times$  [로컬푸드직매장 순매출 효과율] =  $7 \times 0.41$ 
    - ※ 산출기초 : 완주군의 로컬푸드 직매장 순효과 매출액 비율 : 41.0% (전북연구원 2015년 추정치<sup>19)</sup>)
- 농가 레스토랑 인력 : 8명 적용 (완주 기준)
- 가공센터 및 가공기업 : 5명 적용 (완주 가공센터 5명, 유성 로컬푸드 가공기업 5.2명의 평균)
- 사회적경제조직 인력 기준: 1명 (사무장 1명 기준)
- 로컬푸드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수 : 5천명당 1명 적용
- 2022년까지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 : 인구 10만 이상 100개소. 평균인구수 30만명 기준
  - 푸드통합센터 매출액 : 학교급식센터 기준 30만명\*학생수비율 11.1%\*1인당 급식비 524천원 (31,241억원 $\div$ 5,706천명)

##### ■ 일자리 창출 효과

- 위의 데이터를 기초로 2022년 푸드플랜 정책 목표인 100개 지자체(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할 경우, 총 1만 3,67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19) 이민수 외 (2016), 로컬푸드 소비자행태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전북연구원



- 분야별로 보면,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5,410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860개, 로컬푸드 레스토랑에서 2,400개, 가공센터 및 가공기업에서 2,000개, 사회적경제에서 3,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표 V-16〉 인구 10만 이상 100개 지자체 푸드플랜 추진의 일자리 창출 효과 추정

구분	지역수 (개소)	평균 인구수 (명)	푸드통합지원센터				직매장		
			학생수 (명)	학교급식 공급액 (백만원)	1억원당 일자리수	일자리 창출효과 (명)	개소수	매장당 일자리 창출수	일자리 (개)
지역수	100	300,000	33,300	17,449	0.31	54.1	3	2.87	8.6

레스토랑		가공센터(기업)		사회적경제		지역별 신규 일자리 소계	전체 신규 일자리 총계
개소수	일자리	개소수	일자리	개소수	일자리		
3	24	4	20	30	30	136.7	13,670

## 나. 환경비용 절감 효과 (종이박스 사용량 감축, 온실가스 저감 효과)

### ■ 분석의 기초

-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율 (2016년) : 80.6% (aT KAMIS)
  - 과일류 94.4%, 과채류 79.5%, 양념류 66.0%, 엽근채류 78.3%, 서류 88.4%
- 농산물 부류별 생산량 (2016년 기준) : 채소류 8,040천톤, 과수류 2,652천톤, 서류 217천톤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상품화율 : 과일류 95%, 과채류 95%, 양념류.엽근채류 90%, 서류 95%
- P박스 물류기기 회전율 : 13.2회/연 (K사 17년 기준)
- P박스 가격 및 감가상각 기간 : 5천원/1개. 감가상각 기간 5년
- 골판지박스 1,000g(10kg박스) 기준 CO2 발생량 : 330g<sup>20)</sup>
- 분석의 편의를 위해 10kg 박스 출하로 가정
  - 골판지박스 10kg 가격 : 1,200원 (800~1600원의 평균가)<sup>21)</sup>
- 탄소배출권가격(KAU18) : 24,000원/톤 (18.11.30.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20) 박성호 외, 과일류 골판지 상자 포장개선 효과, 2010.4., 농촌진흥청·김수일포장개발연구소

21) 김수일 외, 농수축산물 과대포장 방지방안 연구, 2011.7. 농림축산식품부.

## ■ 종이박스 사용량 저감 효과

- 청과물 유통에 따른 종이박스 사용량 추정 (10kg 기준) : 733,631천매
  - 채소류 : 생산량 8,040천톤 × 상품화율 90% × 표준규격 출하율 66.0% ÷ 10kg 박스 = 477,576천매
  - 과일류 : 생산량 2,652천톤 × 상품화율 95% × 표준규격 출하율 94.4% ÷ 10kg 박스 = 237,831천매
  - 서류류 : 생산량 217천톤 × 상품화율 95% × 표준규격 출하율 88.4% ÷ 10kg 박스 = 18,224천매
- 로컬푸드 지역소비 비율에 따른 종이박스 비용
  - 지역내 소비 20%시 종이박스비 비용 : 146,726천매×1,200원=176,071백만원
  - 지역내 소비 10%시 종이박스비 비용 : 73,363천매×1,200원=88,036백만원
  - 지역내 소비 5%시 종이박스비 비용 : 36,682천매×1,200원=44,018백만원
- P박스 사용량과 비용
  - 지역내 소비 20%시 P박스 사용비 : 146,726천매÷회전율13.2회×1,000원=11,116백만원
  - 지역내 소비 10%시 P박스 사용비 : 73,363천매÷회전율13.2회×1,000원=5,558백만원
  - 지역내 소비 5%시 P박스 사용비 : 36,682천매÷회전율13.2회×1,000원=2,779백만원
- 로컬푸드 지역소비 비율에 따른 종이박스 절감효과
  - 지역내 소비 20%시 절감 효과 : 176,071 - 11,116 = 164,955백만원
  - 지역내 소비 10%시 절감 효과 : 88,036 - 5,558 = 82,478백만원
  - 지역내 소비 5%시 절감 효과 : 44,018 - 2,779 = 41,239백만원

## ■ 종이박스 사용량 감축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

- 로컬푸드 지역소비 확산으로 종이박스 절감에 따른 CO2 저감량
  - 지역내 소비 20%시 온실가스 저감량 : 146,726천매×330g=4,842톤
  - 지역내 소비 10%시 온실가스 저감량 : 73,363천매×330g=2,421톤
  - 지역내 소비 5%시 온실가스 저감량 : 36,682천매×330g=1,210톤
- 종이박스 사용감소에 따른 CO2 배출량 감소의 경제적 가치
  - 지역내 소비 20%시 : 4,842톤×24천원=116,208천원
  - 지역내 소비 10%시 : 2,421톤×24천원=58,104천원
  - 지역내 소비 5%시 : 1,210톤×24천원=29,052천원

**■ 푸드플랜 확대에 따른 종이박스 사용 감소에 따른 환경비용 감소 효과**

- 로컬푸드 소비 확대에 따른 종이박스 절감효과는 로컬푸드 비중이 20%에 달할 경우 1,650억원, 10%일 경우 825억원, 5%일 경우 4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종이박스 사용감소에 따른 CO<sub>2</sub> 배출량 감소의 경제적 가치는 로컬푸드 비중이 20%일 경우 11.6억원, 10%일 경우 5.8억원, 5%일 경우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제 6 장

### 지역 푸드플랜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 ① 지역 푸드플랜 공감대 확산과 역량강화 지원
- ② 지역 푸드플랜 고도화 지원
- ③ 지역 푸드플랜 지원체계 강화






# 1. 푸드플랜 공감대 확산과 역량강화 지원

## 가. 푸드플랜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 ■ 푸드플랜의 확산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온라인 강좌 개발

- 푸드플랜과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먹거리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를 실천하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먹거리정책 담당 공무원, 영양교사, 식생활 교육 강사와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조직, 소비자 단체를 대상으로 푸드플랜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푸드플랜 실행에 연계가 예상되는 부서의 담당자에 대해서는 심층교육을 실시함
-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온라인 교육 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 현장교육을 지원함
  -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강좌를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에 활용함
- 또한, 푸드플랜 계획수립, 실행과정 중 정기적인 정책홍보 기사를 게시해 푸드플랜 이슈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을 유도함

〈그림 VI-1〉 맞춤형 푸드플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온라인 교재 개발

 <p>푸드플랜 시민대상 교육 사례</p>	 <p>푸드플랜 역량강화 교육 사례</p>	 <p>주민 역량강화 교육 사례</p>																		
<p><b>전체 공무원용 동영상강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푸드플랜 추진사례, 한국 푸드플랜 정책의 특징, 푸드플랜 실행을 위한 담당 직원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된 동영상 자료제공</li> <li>• 각 파트별 20분 분량, 3개 과정 동영상을 개발하고, 공무원 필수 학습자료로 제공</li> </ul>	<p><b>푸드플랜 공감대확산 및 TF 대상 심층교육(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 및 사회적경제 관련 담당부서 대상 푸드플랜 심층교육 실시*</li> </ul> <table border="1" data-bbox="613 1462 1340 1617">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교육 주제</th> <th>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심화</td> <td>1차</td> <td>푸드플랜 정책 및 생산, 가공, 유통 조직화 이해</td> <td>4</td> </tr> <tr> <td>2차</td> <td>거버넌스 구축 및 먹거리관련 종합 이슈 도출(문임토의 포함)</td> <td>4</td> </tr> <tr> <td>3차</td> <td>사회적 경제와 지역혁신, 도농상생공공급식 추진 사례</td> <td>4</td> </tr> <tr> <td>공감대확산</td> <td colspan="2">푸드플랜에 대한 이해(영양교사, 식생활강사, 일반시민)</td> <td>2</td> </tr> </tbody> </table>		구분	교육 주제		시간	심화	1차	푸드플랜 정책 및 생산, 가공, 유통 조직화 이해	4	2차	거버넌스 구축 및 먹거리관련 종합 이슈 도출(문임토의 포함)	4	3차	사회적 경제와 지역혁신, 도농상생공공급식 추진 사례	4	공감대확산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영양교사, 식생활강사, 일반시민)		2
구분	교육 주제		시간																	
심화	1차	푸드플랜 정책 및 생산, 가공, 유통 조직화 이해	4																	
	2차	거버넌스 구축 및 먹거리관련 종합 이슈 도출(문임토의 포함)	4																	
	3차	사회적 경제와 지역혁신, 도농상생공공급식 추진 사례	4																	
공감대확산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영양교사, 식생활강사, 일반시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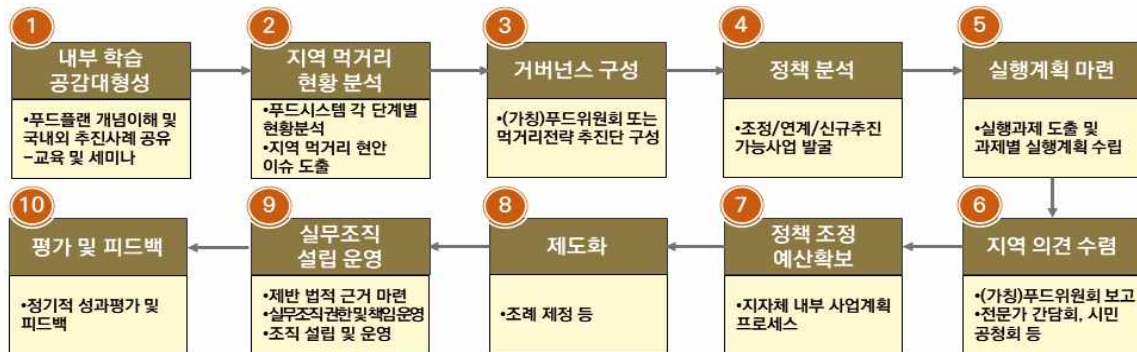
## 나. 참여형 푸드플랜 수립 가이드라인 제공

### ■ 시민참여형 먹거리의제 발굴 추진

- 푸드플랜은 선계획-후공유 방식이 아닌 민관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여 먹거리 의제와 정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정책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아래의 푸드플랜 수립 절차에 따르면,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역 먹거리 실태에 대한 1차 현황분석이 완료되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함
- 정부는 민관거버넌스의 운영 가이드라인과 실무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거버넌스 활성화를 지원함
- 계획수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는 1>시민대표와 농업인,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식 2>먹거리관련 주요 대표기관들로 구성하는 방식이 있음. 두 번째 방식으로 구성하는 경우, 실무추진단을 운영하여 논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그림 VI- 2> 푸드플랜 수립 절차



## 다. 지역먹거리체계·정책분석 방법의 개발 보급

### ■ 기초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분석방법 개발 보급

- 푸드플랜의 수립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부문 가운데 한가지가 먹거리 실태분석 과정임
- 먹거리실태 분석은 크게 1>통계데이터 분석 2>자체 조사(설문 등) 3>면접조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통계데이터 분석이 가장 기초적인 것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먹거리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간 비교를 통해 전국적 수준을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먹거리, 국민건강, 먹거리보장 관련 정보가 있는데, 각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자료의 형태와 원시데이터의 제공방식 등이 다양함
  - 농식품부 차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지역에 보급함으로써 먹거리 실태분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필요함
  - 이 때 제공되는 데이터는 시군군 단위로 세부적으로 제공되어야 활용 가능함. 시군구단위로 제공하기 어려운 조사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함

- 또한, 주기적으로 통계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지역간 비교 분석하여 푸드플랜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

〈그림 VI- 3〉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주요 내용



자료 : 김현일 외(2019)

〈그림 VI- 4〉 충남도의 식생활평가 지수 및 식품안전성 확보율 분석



자료 : 김종안 외(2019g)

### ■ 정책분석 방법 개발하여 지역의 먹거리정책의 개선방향 파악

- 자치단체별로 먹거리관련 정책의 예산과 내용 등을 DB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함. 이를 통해 먹거리관련 정책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농업분야 이외의 타부서, 타부처의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만 정책간 연계를 추진

할 수 있기 때문에 먹거리관련 정책 분석은 푸드플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필요함  
 - 특히, 상대적으로 정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민간 거버넌스에서 관련정책을 이해하고  
 원활한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 한편, 먹거리정책 DB와 분석은 푸드플랜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필요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정책의 유무가 모니터링 항목에 포함되기도 함

<그림 VI- 5> 밀라노 푸드협약 기준 정책분석 프레임



\* 동일한 사업이나, 세부사업 내용별로 영역이 다름.

자료 : 길청순 외(2019a)

<표 VI- 1> 예시 : 서울시 먹거리정책 분류체계

연번	분류기준	세부분류 기준
1	사업번호	1, 2, 3~
2-1	담당부서(과)	식품안전과, 민생경제과, 자활지원과, 친환경담당관, 생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2-2	담당부서(팀)	식품정책팀, 식품관리팀, 외식업위생팀, 축산물안전팀, 농수산물안전팀, 가공식품팀, 식생활개선팀, 민생정책팀, 농수산유통팀, 도시농업지원팀, 텃밭조성팀, 영농관리팀, 자활지원팀, 친환경급식관리팀, 친환경급식협력팀, 농업기술센터
3	사업명	지침상 목차에 있는 사업명
4	사업기간	1월~12월
5	사업대상	시민, 관련단체, 관련 업체, 농업인 등
6	지원내용	세부 지원 내용
7	사업분야별	경영 및 운영 지원, 점검, 평가, 마케팅 및 홍보지원, 유통 및 가공지원(HW, SW), 생산기반조성(SW), 교육, 거버넌스 구축, 복지 및 복지 자금 지원
8	푸드플랜 시스템	생산, 소비, 유통, 공간 / 사회, 환경, 경제, 공간
9	밀라노푸드정책	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 먹거리 공급, 생산, 거버넌스, 사회 경제적 형평성, 식품폐기물 관리
10	세정투입 유형별	국비, 시비, 구비, 국비/시비, 국비/시비/구비, 국비/시비/자부담, 국비/시비/구비/자부담

자료 : 길청순 외(2019a)



### ■ 정책 우선순위 결정 방법 개발 보급

- 객관적 방법에 의한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과 조정으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방법을 개발, 보급하여 민관 거버넌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
- 충청남도는 민관 거버넌스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을 ‘AHP’라고 하는 의사결정기법을 도입하여 원활하게 조정함

※ [참고] AHP기법(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

-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비교에 의한 판단을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하나의 새로운 의사결정 방법임
- AHP 기법은 주로 우선순위 선택, 자원배분, 비용편익분석 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용됨

〈표 VI - 2〉 통계기법을 이용한 정책우선순위 결정 사례 (충청남도)

우선순위	정책명	기준값	우선순위	정책명	기준값
1	충남 먹거리 기본조례제정	2,613	26	학교 연계형 취약계층 식품기부 공급사업	1,154
2	푸드플랜 도민홍보/조직화 프로그램	2,228	27	가족사랑 푸드사업단 사회적기업 지원	1,143
3	광역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건)립 운영	2,007	28	농촌지역연계형마을공동체운영사업	1,139
4	광역 친환경 작부구축 및 가축생산 지원	1,941	29	하나로마트 광역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1,118
5	시군단위 친환경생산자출하회 육성	1,925	30	기업급식 연계형 로컬푸드 공급사업	1,108
6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	1,920	31	전통시장/외식업체 연계형 로컬푸드 공급망 구축 지원	1,093
7	시군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건)립 지원	1,890	32	공동주택 연계형 아침급식프로그램 시범	1,055
8	충남 먹거리교육 및 활동가 전문양성	1,890	33	(영유아) 영양플러스 연계 현물공급사업	0,988
9	시군단위 통합생산자조직 육성	1,809	34	단체급식 지역순환 가공식품 사용확대를 위한 TF운영	0,955
10	지역단위 식생활교육통합위원회 운영	1,788	35	수산물FPC건립및운영	0,942
11	건강한 식생활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1,706	36	(중장년) 건강식단 건강식재료 배달사업	0,922
12	권역단위 안전성분석센터 설립 운영 지원	1,696	37	로컬 식물성기름 사용장려 차액 지원사업	0,912
13	전통작물/트루채소 보존 프로그램	1,693	38	우리밀 연계형 제분공방 설치 지원	0,886
14	로컬푸드 사용 외식업체 지원사업	1,689	39	(청소년) 친환경 아침도시락 공급사업	0,874
15	생산자 설명표시제 도입 및 포장재 지원	1,688	40	1시군 지역순환가공식품 육성	0,857
16	푸드미일리지 시범표시제 운영	1,651	41	(청년)대학생협 연계형 마을부엌 시범	0,835
17	충남 먹거리 식교육체험관 설(건)립 운영	1,639	42	조청/물엿 OEM/ODM 생산 시범사업	0,809
18	공공급식 지원조례 제정 및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1,533	43	집단지식소 중심 음식물폐기 감량화 실천	0,757
19	외식업 연계 건강 식재료 활용 교육	1,528	44	(수험생)인삼간식 프로그램 시범사업	0,744
20	CSA 참여농장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1,474	45	축산분뇨와 음식물폐기를 연계형 바이오매스생산시설	0,742
21	충남형 PGS 자주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	1,466	46	음식물종합처리장설치및운영	0,729
22	시군단위 도시락급식 통합지원센터운영	1,338	47	푸드뱅크 연계형 식품기부공급사업 확대	0,639
23	공공급식 현물공급 프로그램	1,303	48	여유농산물 식재료 기부 프로그램	0,584
24	영양만점 어린이식당 운영 시범 사업	1,263	49	나눔냉장고 지원 및 운영활성화 지원	0,584
25	취약계층 먹거리상담지원센터 운영	1,232	50	(어린이) 과일간식 전처리센터 운영사업	0,563

자료 : 김종안 외(2019g)

### ■ 푸드플랜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푸드플랜 유형별로 기본적인 모니터링 지표와 측정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함. 이는 앞서 제시한 먹거리실태조사, 정책분석 방법 등과 연계하여 측정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제시함
- 또한, 밀라노 정책협약의 권고안 등을 참고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표 VI-3〉 밀라노 먹거리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지표 (2018년)

부문	지표	비고	
지속가능한 식단과 영양	16	공공시설에서 영양이 풍부하고 다양한 먹거리의 이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및 정책의 존재 여부	
	17	안전한 식수 및 적절한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	
사회 및 경제적 자본	18	식량 불안정 경험 척도(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FIES)에 근거한 식량 불안정 가구의 비율	
	19	식량 및 사회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받는 사람의 비율	
	20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아동 및 청소년(18세 미만)의 비율	
	21	최저 임금 또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먹거리 관련 일자리의 수	
	22	도시 공동체 기반의 먹거리 자산의 수	
	23	사회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먹거리 정책 및 목표의 존재 여부	
	24	푸드시스템, 영양 프로그램 등 분야에서 취업 훈련 및 기술개발 기회 제공 수준	
먹거리 생산	25	(도시)농업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주자의 수	
	26	지역에서 농업생산 및 가공을 촉진하는 정책과 규정의 존재 여부	
	27	지역 내 잠재적인 농업 공간의 면적	
	28	식량 생산을 위한 농지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농촌 인구의 수	
	29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할 수 있는 농경지의 비율	
	30	지난 12개월 간 기술훈련 및 지원으로 혜택을 받은 먹거리 생산자의 수	
지속가능한 식단과 영양	16	공공시설에서 영양이 풍부하고 다양한 먹거리의 이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및 정책의 존재 여부	
	17	안전한 식수 및 적절한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	
사회 및 경제적 자본	18	식량 불안정 경험 척도(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FIES)에 근거한 식량 불안정 가구의 비율	
	19	식량 및 사회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받는 사람의 비율	
	20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아동 및 청소년(18세 미만)의 비율	
	21	최저 임금 또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먹거리 관련 일자리의 수	
	22	도시 공동체 기반의 먹거리 자산의 수	
	23	사회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먹거리 정책 및 목표의 존재 여부	
	24	푸드시스템, 영양 프로그램 등 분야에서 취업 훈련 및 기술개발 기회 제공 수준	
먹거리 생산	25	(도시)농업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주자의 수	
	26	지역에서 농업생산 및 가공을 촉진하는 정책과 규정의 존재 여부	
	27	지역 내 잠재적인 농업 공간의 면적	
	28	식량 생산을 위한 농지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농촌 인구의 수	
	29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할 수 있는 농경지의 비율	
	30	지난 12개월 간 기술훈련 및 지원으로 혜택을 받은 먹거리 생산자의 수	
먹거리 생산	31	지역 먹거리 생산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가공 및 유통기반 시설의 수	
	32	도시의 공공시장에서 먹거리는 판매하는 지역 내 생산자의 비율	
식량 공급 및 분배	33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농업생산에 재사용되는 유기 폐기물의 비율(연간)	
	34	먹거리 공급체계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35	지역 식량 공급 물류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의 존재 여부	
	36	지자체가 지원하는 주민 1,000명 당 신선한 과일 및 채소 공급량	
	37	도시 거주자에게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는 농식품 시장 또는 소매점에 대한 연간 재정투자 비율	
	38	근거리 유통의 먹거리에 대한 공공 기관의 식품 조달 지출 비율	
	39	식품 안전 법규 및 시행 절차의 존재 여부	
음식물 쓰레기	40	먹거리 관련 사업계획, 재정투자 및 개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민간 차원의 지원 서비스 존재 여부(푸드통합지원센터 개념)	
	41	연간 총 음식물 손실 및 낭비량	
	42	식량 손실 및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캠페인 건수(연간)	
	43	음식물 쓰레기 절감, 자원화를 다루는 정책 또는 규정의 존재 여부	
	44	회수되고 재분배되는 잉여식품의 연간 총량	

자료 : 길청순 외(2019a)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 2. 지역 푸드플랜 고도화 지원

### 가. 학교급식·공공급식 고도화 지원

#### ■ 급식센터 종합운영시스템 개발 보급

- 전국적으로 61개의 학교급식센터가 물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식·공공급식의 확대에 따라 급식센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급식센터의 기능도 고도화되어 식재료의 조달, 저장, 상품화, 배송 등의 물류 기능과 더불어 가공, 안전성검사, 식생활교육, 인증 등으로 기능이 점차 고도화되어 가고 있음
- 급식센터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각 센터별로 개별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인력, 회계, 사업, 인증, 교육 등을 종합한 (가칭) ‘푸드통합지원센터 종합운영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 보급,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 식재료 코드 표준화 및 통합수발주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최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식재료 코드 표준화가 진행 중이나 지역과 급식별로 식재료 코드가 달라 학교급식, 공공급식의 공적조달체계 마련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식재료 코드 표준화를 각 공공급식 영역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통합수발주 프로그램도 공적으로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 일부 중소기업에서도 학교급식·공공급식에 대한 수발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변화된 상황의 현행화, 유지보수, 정보의 분석·활용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학교급식·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식재료 코드 표준화 및 통합수발주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필요함. 또한 정보의 관리와 활용성을 고려하여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학교급식·공공급식 식재료의 관리와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회사 등과 연계하여 배송차량 관리시스템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함

#### ■ 공공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 사례 창출 및 확산

- 어린이집, 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군대, 교도소 등의 공공급식 영역에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함

- 농식품부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개발하거나 지역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함. 특히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함
- 사업추진시 지역별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모델링화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킴으로 공공급식 활성화의 효율성을 높임
  - 공공급식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접근 방향 마련도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정책추진을 보다 효율화함

※ [참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수발주시스템 운영 현황

- 학교급식지원센터 중 농산물을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65개소로 가장 많고, 양곡류 60개소, 축산물 48개소임
- 관리형 학교급식지원센터 : 21개소. 서울, 경기도 14개소 소재
- 축산물 공급 학교급식지원센터 : 48개소. 농산물과 별도 센터 운영은 경북에 22개소 소재

〈표 VI- 4〉 식재료 공급부류별 학교급식지원센터 분류 현황

(단위 : 개소)

시도	지자체수 (광역포함)	학교급식지 원센터수	학교급식지원센터 취급 식재료 부류						관리형 (미공급)
			양곡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김치류	공산가공	
서울	26	7	1	1	1	1	1	-	6
부산	17	3	3	3	-	1	-	-	-
대구									
인천									
광주	6	2	-	-	-	-	-	-	2
대전									
울산	6	1	1	1	1	1	-	-	-
세종	1	1	-	-	-	-	-	-	1
경기	32	13	5	5	2	4	5	5	8
강원	19	4	4	4	3	3	3	4	-
충북	12	1	-	-	-	-	-	-	1
충남	16	13	12	12	12	10	12	12	1
전북	15	13	8	10	4	5	3	4	-
전남	23	5	5	5	1	1	1	1	-
경북	24	23	19	22	22	10	4	7	1(센터공급)
경남	19	2	2	2	2	2	1	1	-
제주	3	1	-	-	-	-	-	-	1
전국	245	89	60	65	48	38	30	34	21

※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 부류별로 중복 체크한 수치임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실태조사

미실시(경기도, 충청남도, 경북도, 당진, 공주, 서산, 서천, 순천, 영광, 영덕), 2018년도에 운영(임실군)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총 11개소)는 현황에서 제외된 수치임

자료 : 정상택 외 (2018)

〈표 VI- 5〉 학교급식지원센터 수발주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수 (분석대상)	수발주 프로그램명							기타
		SIMS (aT)	미주 아이티	농협경제정보 통합S	도농	TDL	쉬프	노도시스	
서울	1								광역 : 통합물류정보 시스템
부산	3								
광주	관리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실적없음)								광산구(엑스인터넷)
울산	1	1							
세종	관리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실적없음)								
경기	4			2					화성 : MC-FOOD
강원	4				1				원주:원주푸드종합센터통합수발주시스템
충북	관리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실적없음)								
충남	10				1		1		충청남도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전북	12	2				2			남원 : 쉬프, 김제시 : 오토마트, 진안군 : 메디앙, 원주 : 발품 시스템
전남	3								목포 : 농협목포농산물유통센터 학교급식 시스템, 여수 : 돌팔매, 나주 : 나주조공법인급식관리시스템
경북	22	22	25					2	예천군 : S2B
경남	2	1		1					김해 : U-IT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시스템
제주	관리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실적없음)								
전국	62	26	25	3	2	2	1	2	

\* 전체 학교급식지원센터 89개소 중 관리형 센터 21개소와 미파악 센터 6개소(경기, 서산, 서천, 영광, 순천, 영덕)를 제외한 실적 분석결과임  
 자료 : 정상택 외 (2018)

〈그림 VI- 6〉 경기도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사례

**1-1: 가운다 지역의 취약계층 식재료 원물지원 사업**

경제적 취약층의 단순 먹거리 제공을 넘어, 먹거리 특산물 지원은 지역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취약계층 건강 개선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사업 개요**

- 사업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
- 사업시기: 2022년부터
- 사업량: 30만명
- 지원단가: 1인당 10만원 (사: 25만원으로 확대)
- 총사업비: 300억(국: 180억, 도: 120억)

**추진 방안**

- 복지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취약계층에 고품격농산물로 생계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대상자 34만명에게 월 10만원 수준의 지역농산물 지원
- 영양플러스 등 식량이 25.42만톤과 일반 가우 지원 식량이 235.71톤을 지역수급에서 지원

**영역: 경기도**

**1-1: 나주시 무위리의 전업과일 공급사업**

2019년 기준 과일·채소 생산액 500억을 충족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산율 17.9%를 넘어, 특히 사과·포도·배·복숭아·19종의 경우 국산율 20%로 성장에 박차를 가해 농민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대상: 경기도 내 17개 시군
- 사업시기: 2018년부터
- 사업량: 지역과일 23만톤, 그중 농산물 147만톤
- 지원단가: 지역과일 14만원, 그중 농산물 14만원, 영남과일 14만원
- 총사업비(19-23년): 52,450백만원

**추진 방안**

- 지역과일센터 등 특수농산물사업 지원에 G마크, GAP인증 토산산 과일 우선 공급(1톤 120g 기준)

**영역: 나주시**

**1-1: 나주시 대학생 1,000원 아침 공급사업**

2017년부터 시행사업으로 주간에 대학생 1,000원 아침 공급사업에 대한 정책적 성과를 고려하여 사업확대를 확대하고자 함

**사업 개요**

- 사업대상: 도내 종합 대학교
- 사업시기: 2020년부터
- 사업량: 320명 (전통시장) / 19-23년: 2만명
- 지원단가: 1인당(사) 100원, 학기당 60일 지원
- 총사업비(19-23년): 2,700백만원

**추진 방안**

- 사업확대를 희망하는 학교 및 대학생활지원사업의 진행 확고를 우선 선정하고 1인당 1만원 수준의 식재료비를 지원

**영역: 나주시**

**1-1: 가운다 영양플러스사업에 지역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지원하는 식량 및 값싼 값싼 농산물 수요를 충족하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사업 개요**

- 사업대상: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 사업시기: 2019년부터
- 사업량: 3,000명
- 지원단가: 29만원(농: 100%)
- 총사업비(20-23년): 2,040백만원

**추진 방안**

-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 가격 차액 30% 지원
- 영양플러스 지원금액 중 약 40%가 친환경 농산물 구매 비용
- 학교급식비와 연계하여 공급

**영역: 가운다**

**2-1: 가운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환경 등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안보 확보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 지원 확대

**사업 개요**

- 사업대상: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사업시기: 2019년부터
- 사업량: 2,179톤, 17,420만원, 197명
- 지원단가: 공급가격 30% 인센티브 50%
- 총사업비(19-23년): 147,000백만원

**추진 방안**

- 경기도 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계약직을 바탕으로 친환경 우수 농산물 공급 가능농업인(50여명) 인센티브 지원

**영역: 가운다**

## ※ [참고] 공공급식 추진 사례

### ■ 대전 유성구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사업

구분	주요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로컬푸드 급식재료 공급을 통한 유아기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li> <li>○ ‘바른유성찬’ 인증 농산물 판로 확대로 소득증대 도모</li> </ul>
주문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꾸러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꾸러미 방식의 다품목 농산물 구성</li> <li>■ 5~8개 품목 제철농산물로 4만원 꾸러미 구성</li> <li>■ 매달 10일 다음 달 꾸러미 구성 안내</li> </ul> </li> <li>○ 온라인 개별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꾸러미 품목 중 품목&amp;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선주문</li> <li>■ 매달 10일까지 품목을 공지하고 20일까지 주문 마감</li> </ul> </li> <li>○ 매장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앗이마을 매장(지족/노은/도안/관평) 방문 직접 구매</li> <li>■ ‘바른유성찬’ 인증 농산물 자율 구매 가능</li> </ul> </li> <li>○ 추가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달 10일 안내된 꾸러미 품목 중 필요한 추가 분량 주문 가능</li> <li>■ 20일까지 주문 마감</li> <li>■ 지정된 꾸러미와 별도로 자부담 결제 가능</li> </ul> </li> </ul>
배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성구 전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배송</li> <li>○ 현원기준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격주 1회(수요일/목요일)</li> <li>○ 현원기준 21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은 매주 1회(월요일/화요일)</li> <li>○ 꾸러미 배송 요일에 견학 등 원 부재 시 사전에 급식팀 연락 요청</li> </ul>
결제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어린이집 2회 지원금 지급, 사업기간 대비 매달 평균 금액 지출</li> <li>○ 꾸러미 배송 시 친환경급식지원카드로 대금결제, 미결제시 다음 공급 결제</li> <li>○ 매장 구매 시, 원명과 친환경급식지원금 사용여부를 밝히고, ‘바른유성찬’ 농산물에 한해서 구입(‘바른유성찬’ 농산물 이외 물품 구입의 경우 지원금 환수)</li> </ul>
지원예산 (2018년 기준)	○ 220원*11,800인(450여개 어린이집)*155일=402,380천원

자료 : 바른유성찬 급식주문 쇼핑몰(<http://poomlocalfood.com>)

-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이 유성구 로컬푸드 인증브랜드인 ‘바른유성찬’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구성하여 어린이집 공급
- 유성구는 친환경 급식지원비로 원아당 220원/1식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음. 어린이집은 친환경급식지원카드로 지원금액만큼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을 통해 식재료 구매 가능
  - 어린이집은 꾸러미 구매, 온라인 개별구매, 매장주문 등 총 3가지 방식으로 바른유성찬 농산물 구매 가능
  - 꾸러미는 4만원 상당의 5~8개 품목의 농산물로 구성되며 어린이집 지원규모에 따라 수량 결정

## ■ 전라북도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 지원사업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어린이집 급식 지원으로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도민 요구에 부응 ○ 친환경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친환경농업 확대 및 농업인 소득 향상
추진방향	○ 도, 시·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보육단체 등 유관기관 협조 및 지원체계구축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시·군단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 강화 ○ 어린이집이 유기농·무농약쌀을 급식(중식)에 사용할 경우 일반쌀과 친환경쌀의 차액 지원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조 (책임) ○ 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어린이집 ○ 사업량 : 240일(중식), 공휴일 및 방학 제외 ○ 사업내용 : 친환경쌀 급식 사용 시 일반쌀 가격 대비 차액 지원 ○ 지원품목 :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인증 쌀(도정 후 7일 이내 납품 원칙) ○ 지원단가(1인 1식) : 유기농쌀 54원(50g)

자료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 어린이집은 시·군에 친환경쌀 차액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쌀 구입
- 친환경쌀을 구매할 때 대금을 지원센터에 지급하고, 분기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정산받아 친환경쌀 차액보조금을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구조

##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구분	주요 내용
추진근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발표(' 16.11.30) ▪ 9개 광역지자체(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와 MOU 체결 ○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시장 방침(' 16.12.7) ○ 2017 상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 실행계획」 부시장 방침(' 17.3.29) ▪ 시범 1호 「강동구공공급식센터」 개소(' 17.5.29) ▪ 강동구·완주군 1:1 매칭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7.7.12.)
사업규모	○ 2017년 시범운영 6개구(강동·금천·동북4구) ○ 2018년 신규참여 4개구 ○ 2019년(13개구) → ' 20년(16개구) → ' 21년(20개구) → ' 22년(25개구)
지원대상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지원품목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전 품목 공급
추진체계	○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산지 지자체와 자치구 간 1:1 매칭을 통해 식재료를 직거래로 공급

자료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그림 VI- 7>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체계



자료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홈페이지(<http://donong.seoul.go.kr>)

<표 VI- 6>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위탁운영주체 및 매칭 산지

공공급식센터	위탁 운영주체	매칭 산지
강동구공공급식센터	한살림	완주
금천구공공급식센터	(사)한국유기농업협회	나주
동북4구공공급식센터	한살림, 행복중심생협, 수도권생태육아공동체생협 컨소시엄	부여, 홍성, 원주, 담양
서대문구공공급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전주

자료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홈페이지(<http://donong.seou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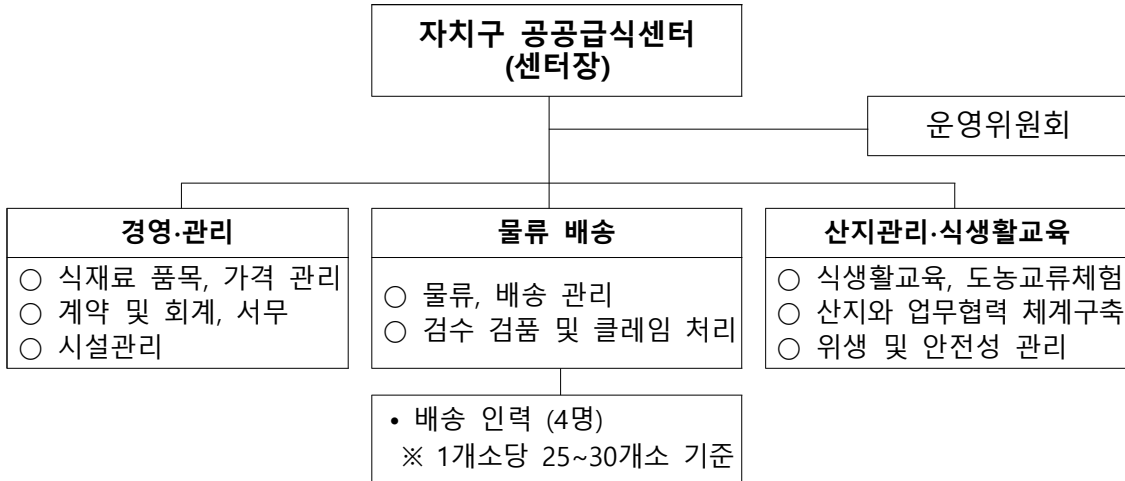
- 2018년 8월말 기준 도농상생 공공급식 참여시설은 606개소로 대상시설 1,877개소의 약 23.3%에 해당 : 어린이집이 35.7%, 지역아동센터 16.2%, 복지시설 2.7% 참여
- 서울시는 공공급식센터 참여시설에 대해 공공급식센터 월 구매율에 따라 300~500원/식 지원
  - 월 구매율이 50% 이상 70% 미만인 경우 300원을 70%이상인 경우 500원 지원
- 차액지원사업 이외 공공급식센터 설치(식재료 배송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인건비, 안전성관리비, 배송비 등) 지원

<표 VI- 7>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차액지원 기준

공공급식센터 월 구매율	1식당 지원금액	비 고
70% 이상	500원	- 어린이집은 당월 현원 기준 (간식비 포함한 중식) -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시설은 급식인원 및 급식수(1식~3식)에 따라 산정
50% 이상 70% 미만	300원	

자료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표 VI- 8〉 서울시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체계



자료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 나. 도시지역 학교급식 현물공급체계 구축 지원

### ■ 고등학교 무상급식 현물공급체계 확대 추진

- 지난해 민선 7기 지방자치제가 출범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시작함
-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은 지역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현물공급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현물지원이 친환경농산물 일부이거나 대부분 현금지원에 그치고 있음
-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물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학생수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현물공급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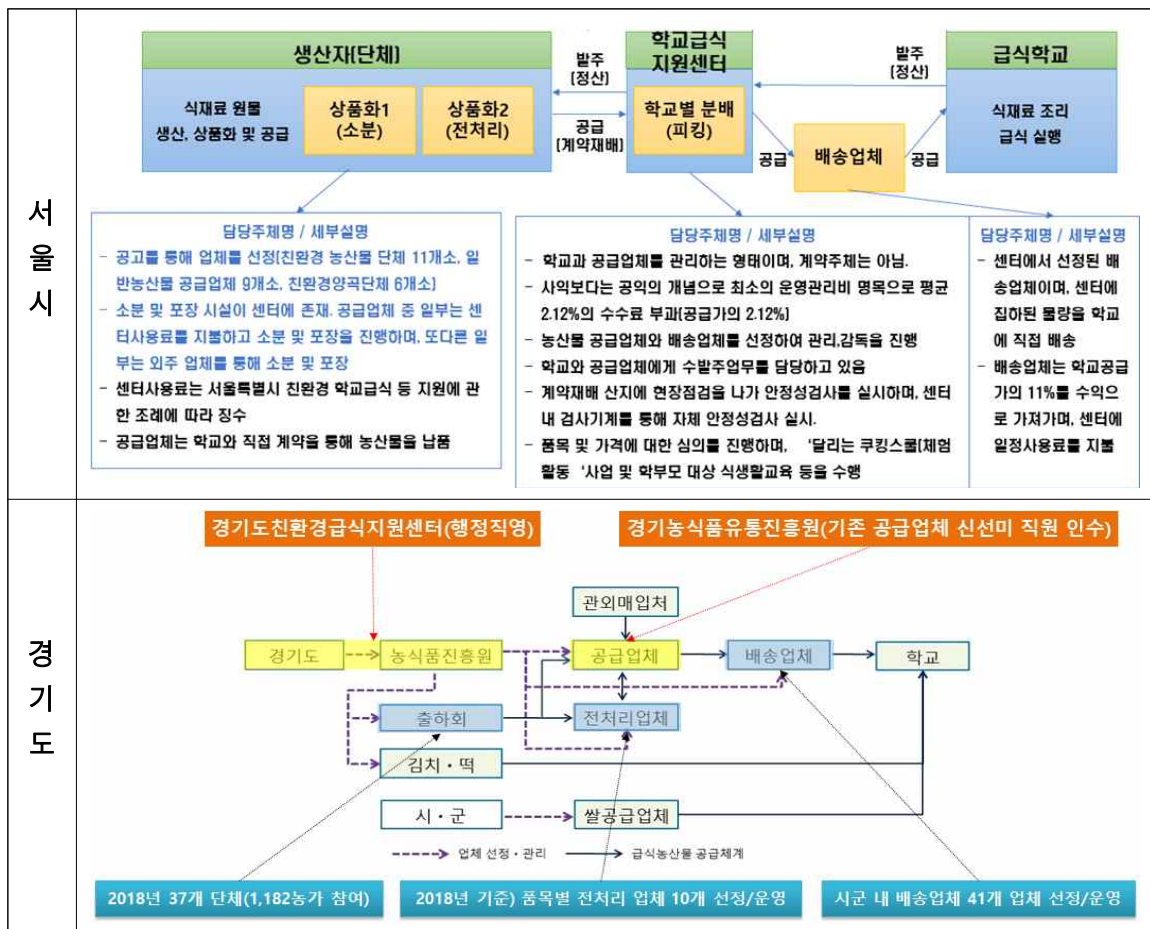
시도	무상급식 범위	비고
서울시	초, 중, 고	친환경급식 (초, 중)
부산시	초, 중, 고	'19년 예정
인천시	유, 초, 중, 고	'18년 시행
대전시	유, 초, 중, 고	'19년 예정
대구시	초, 중	'19년 예정
광주시	초, 중, 고	'18년 시행
울산시	초, 중, 고	'18년 하반기 시행
세종시	초, 중, 고	'18년 시행
경기도	초, 중, 고	'19년 하반기 실시
충청남도	유, 초, 중, 고	'19년 시행
충청북도	초, 중, 고	'19년 시행
전라남도	초, 중, 고	'18년 시행
전라북도	초, 중, 고	'18년 시행
경상북도	초, 중	'19년 시행
경상남도	초, 중, 고	'19년 시행
강원도	초, 중, 고	'18년 시행
제주시	유, 초, 중, 고	'19년 시행

〈표 VI- 9〉 2019년 무상급식 추진 현황



-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급식센터의 건립과 운영 지원, 지역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의 계약공급체계 마련을 지원함
- 도시지역의 경우, 농산물 생산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 근교의 지자체와 연계하여 건강하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현재 부산·울산·경남이 먹거리 연대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대전·세종·충청도 관련 연구에 착수한 상태임
- 한편, 대도시의 친환경 학교급식은 대부분 광역으로 운영되고 있음. 서울시, 경기도가 대표적인 경우이며, 충청남도도 친환경 학교급식은 광역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 이는 대규모의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단위로는 수급불안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대도시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단위 학교급식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와 지원체계를 마련함

〈표 VI- 10〉 서울시와 경기도의 친환경학교급식 체계



자료 : 정상택 외 (2018)

## ■ 급식센터 등 물류기반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 연계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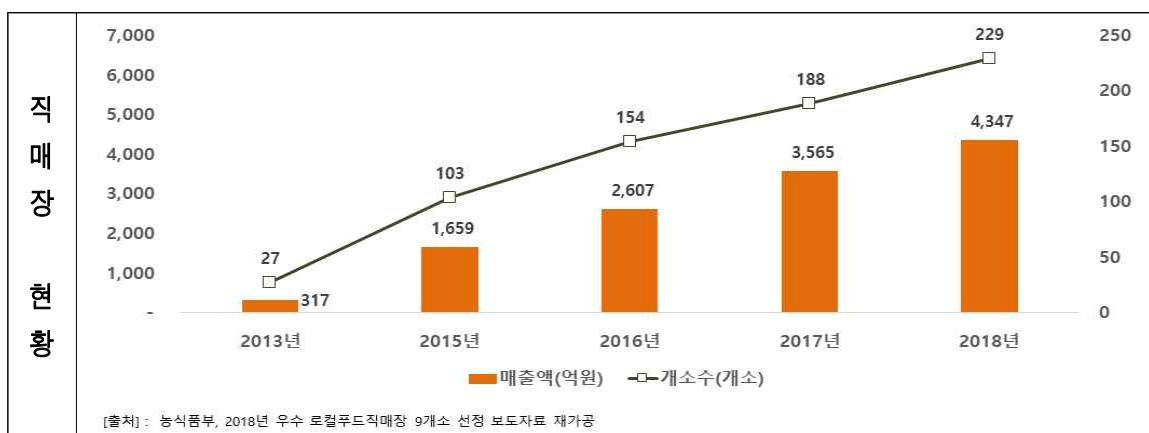
-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 높은 지가와 대규모 부지 부족 등으로 현물공급체계 운영에 필요한 물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움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농산물 유통의 핵심 인프라인 도매시장과 연계하거나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치바현의 경우, 도매시장과 연계하여 학교급식의 물류기능을 효율화함
  - 치바현 학교급식 사례 : ①지역산농산물 조달은 학교급식회가 진행하지만 물류는 도매시장에 외주화 ②학교급식을 통해 애향심과 농업에 대한 이해 향상, 식생활교육과 연계 ③ 지역산 농식품을 가공하여 학교급식에 제공함으로써 계절성을 극복함. 지산지소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음

## 다. 로컬푸드 내실화 및 고도화 지원

### ■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 온·오프라인 결합, 기획생산·판매 ICT, 경영 내실화

-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하여 그동안 직매장 중심으로 성장함. 최근의 유통 트렌드를 반영하여 로컬푸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가 결합되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방식의 도입을 지원함
- 이를 위해서는 ICT 기술을 접목한 ‘로컬푸드 유통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에 보급 운영함으로써 계획생산 업무의 효율화, 농산물 판매 DB 구축, 지역별 소비패턴 분석 등을 통해 직매장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표 VI- 11〉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과 새로운 유통혁신 사례



로컬푸드유통혁신사례	마켓컬리 새벽배송	무인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O2O 배송
	<p>밤 11시 전 주문해도 아침 7시면 문 앞에!</p>  <p>내일 아침 필요한 식재료와 생활 필수품 정보기도 잠들기 전 모바일로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p> <p style="color: red;"><b>수도권 지역에 한함</b></p>	<p>광주평동농협에서 광산구청에 무인점포 운영</p>  <p>광주평동농협 6개 무인지점 운영 2~3평 팝업 매장 년매출 3억8천만원 매출 손실률 2~3% 이내 농협중앙회 경제주치 전국확산 추진</p>	 <p>농장, 작목반, 조합, 가공공장</p> <p>로컬푸드 O2O서비스</p> <p>아파트, 학교, 커뮤니티</p>

- 이를 통해 매장 계획생산을 위한 웹프로그램 도입확대로 관리체계 강화 및 ICT화를 통한 업무 경감하고, 농업분야 ICT 기술 이용확산과 직매장 출하 농산물 판매 DB 구축과 지역별 소비패턴 분석 기획 마련함

〈표 VI- 12〉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의견조사 결과 및 로컬푸드유통관리시스템(예시)

직매장 의견조사	 <b>생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가 실시간으로 본인 상품의 판매량 확인이 가능한 프로그램 요청</li> <li>- 소농대상 비닐하우스 보수사업 필요(신규 설치보다 '시설 보수' 수요가 많음)</li> <li>- aT가 별도의 인증을 만들기보다는 GAP 인증을 활용할 방법을 고민</li> </ul>	
	 <b>직매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관리, 매장관리 시스템, 재배조사 시스템, 순회집하시스템을 관리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필요</li> <li>- aT가 전국, 지역별 농산물의 가격을 일정 기간별로 제공해 주었으면 함</li> <li>- aT가 기획생산 프로그램 이용료를 지원해 주기를 희망함</li> </ul>	
	 <b>소비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매장 신규설치 보다는 소비자교육지원과 안전성 관리에 집중</li> <li>- 소비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매칭사업을 중앙정부에서 마련해 주면 시도에서 사업 매칭이 쉬움</li> </ul>	
	 <b>기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레스토랑 원물 공급식지원센터 연계 구매 방안 검토(원물 구매가격 낮춰 매장손실 절감하기 위해)</li> <li>- aT에서 직매장간 제휴푸드 거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긍정적이며, 거러되는 제휴푸드의 품질 및 상품관리(검증)를 위한 지원</li> <li>- aT가 직매장 인증 및 우수 직매장 평가 규모를 늘려서 전국 단위로 선정하는 것도 좋음</li> </ul>	
관련 전산 프로그램	①영역 : 생산자 대상	②영역 : 소비자 대상	①, ④영역 : 매장 및 배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관리] 생산계획 입력, 출하관리, 직매장 사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영농일지, 출하일지 작성, 중간가격동향 제공 등</li> <li>• [판매관리] 판매현황조회, 정보공유 등</li> </ul>  <p>안주로컬푸드 (판매) 세중로컬푸드 생산: 안주로컬푸드 예미스 예디알시스템 THE HAPPY ICT FOUNE Unnedoomm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 판매] 상품구매, 직매장 소개 및 상품정보제공, 꾸러미 연계 판매</li> <li>• [커뮤니티 창구] 직매장 연계된 문화관 강좌 홍보, 접수, 매장 품질정보 알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관리] 입고현황, 판매현황, 매출정보 등을 통합관리(단일 또는 다수 매장가능)</li> <li>• [배송관리] 개인 배송업자를 대상으로 한 급식 배차 플랫폼 구축 사례 有</li> </ul>  <p>로컬푸드 화물운송 (주)얼미아텍</p>
	특이점	특이점	특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스 판매정보와 연계한 프로그램 다수</li> <li>• 생산계획 연동을 위해서는 직매장 직원의 별도 작업 필요</li> <li>• 기획생산 컨설팅 가능 프로그램 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온라인 쇼핑물방식 운영(직매장이 매입 판매), 12시이전 주문 당일배송</li> <li>• 품질여부만 표시하고, 재고, 판매자 등은 표시하지 않고 판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생산과 연계된 어플의 경우 상품, 출하자, 매장별 관리로 노동력 절감효과 有</li> <li>• 기타 플랫폼 이용도, 활성화 정도는 낮음</li> </ul>



### ■ 로컬푸드 시설의 경영 내실화 지원

-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공장, 레스토랑 등의 상당수가 경영안정화가 미흡하고, 매장 운영의 전문성과 혁신역량이 부족함. 또한 적자경영시 행정지원을 요구하여 지역사회에 갈등요인을 유발하기도 함
-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로컬푸드통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한 경영 효율화 지원과 더불어 경영진단, 원가분석 등의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적정수수료율 산출 등 직매장 내실화를 지원하고 로컬푸드 세부 영역별 매장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지원함

### ■ 로컬푸드 상품 다양화 및 가공사업 확대

- 현재는 로컬푸드 가공사업이 떡류, 장류, 과자류, 건조식품 중심에서 진행되고 있음
  -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신선농산물 중심으로는 반찬류나 반가공품, 축산물, 수산물 등의 가공상품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익성 하락, 고객 이탈 등으로 경영악화가 예상됨
  - 특히 인구의 고령화가 진척될수록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고령자식의 특성이 가미된 가공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
-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로컬푸드 시설의 상품구성을 농산물, 가공품, 축산물, 수산물, 신선편의식품, 반찬류, 반가공품 등으로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를 위해 가공상품별 특성에 맞는 생산을 위해 농민가공, 전문가공, 권역별 가공 등 방식의 최적 결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을 지원함



- 또한, 농가레스토랑, 로컬푸드 조리장 등을 확산하고, 식생활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임

### ■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 개발 : 공모사업화

-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로컬푸드 사업의 혁신과 내실화를 위해 시군단위로 (가칭) ‘로컬푸드 혁신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함
- 신규 업화가 어려울 경우, 농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거나 직거래 기본계획에 의한 패키지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함

### ■ 지역인증제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 현실적으로 로컬푸드 지역인증제가 시군 단위와 광역 단위로 확대되고 있음. 전국적으로 푸드플랜 확산에 따라 확산 예상됨
- 그러나 지역인증제에 따른 정보의 혼란, 국가단위 인증과의 관계 설정, 일반 농산물에 대한 불신 증가,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요소를 검토하여 지역인증제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특히 안전성 인증 중심의 지역인증제를 앞서 제시한 뉴욕시나 비엔나시처럼 조달기준이나 영양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함
- 또한 로컬푸드 상품 다양화,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제휴푸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휴푸드 관련 규정이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곳은 일부에 불과함. 로컬푸드에 대한 신뢰의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표 VI- 13〉 주요 지역인증제의 현황

안전성 관리 기준	고양 행주치마	[농산물] GAP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경기도지사 인증 [축산물] - 없음 [가공품] 주원료가 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50% 이상 사용, 식품제조, 및 가공업 허가 시설생산
	안성 로컬푸드	[농산물] GAP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인증 [가공품] 주원료를 인증 받은 농산물로 50%이상 사용하며 제도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
	바른 유성찬 (대전 유성)	[농산물] 식약처장 고시 농약잔류 허용 기준의 2분의 1이하, 유전자변형농산물 중자 미사용, 유기합성 제조제 미사용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인증 [가공품] 원 부재료 50%이상인 로컬푸드 인증받은 농산물 사용 및 함유비율이 50%이상
	완주 로컬푸드	[농산물] GAP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유기합성 제조제 미사용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인증 [가공품] 원 부재료 50%이상인 완주로컬푸드 인증받은 농산물일 경우

외 식 인 증 제 — 총 판

- | 인증 기준  | 인증 현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농산물 기준]</b> 인근지역 50km 안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 별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된 농산물</li> <li><b>[신청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재료 지역농산물 비중 40%이상</li> <li>- 주재료 수입농산물 사용 10% 이하</li> </ul> </li> <li><b>[신청기준]</b> 80점 이상이면 인증부여, 70~80점 사이는 예비인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음식점 인증]</b> 2017년 기준 44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19년까지 100개소 선정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더유 인증 활성화를 위한 내부 검토</li> </ul> </li> <li><b>[연계활동]</b> 대학생 기자단 모집해 블로그를 운영하고, 홍보활동 지원</li> </ul> |



**충남 로컬푸드 인증제 미더유 평가기준 예시**

지역농산물 사용량 기준 %				등급	지역농산물 사용가중점수
지역농산물 주재료	지역농산물부재료	수입농산물주재료	수입농산물부재료		
90%	60%	10%	5%	별3개	75

**충남 로컬푸드 음식점 : 미더유 인증업체 현황**



**음식점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충남 농산물을 최소 60% 이상 사용하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18년 현재 44개 인증 외식업체 운영중 ('13년 시작)**

이용자수 ('15~'17)	이용자수 ('18추정)	'18 일평균 이용자수	'18 업체평균 이용자수
208만	190만명	5,205명	4.3만명

구분	2017년(A)	2018년(B) *추정	증감율(B/A-1)
매출액	8,720백만원	9,735백만원	11.6%증
일평균매출액	24,000	27,000	
업체평균매출액	224,000	250,000	
업체일평균매출액	6,126	6,839	

'18 매출액 (A)	상위3대 원재료 구입비(B)	비중(B/A)
9,735백만원	3,226백만원	33.1%

\* 자료 : 충남6차산업활성화센터, 내부자료

**<그림 VI- 8> 제휴 로컬푸드의 인증기준과 내용 검토**

인증 범위 및 기준	음식점 및 광역인증	제휴푸드 관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인증 목적]</b> 품질 기준 제시</li> <li><b>[인증 범위]</b> 농산물, 가공품, 음식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 시군권역 거주자 생산</li> <li>- 가공품 : 시군권역 거주자 생산 원료로 제조, 가공한 상품</li> </ul> </li> <li><b>[신청 및 심사]</b> 인증기관은 대부분 농업기술센터로 선정, 별도의 인증센터 두기도함</li> <li><b>[인증 센터 역할]</b> 인증심사, 평가, 전문인력 양성, 인증교육, 연구, 컨설팅, 정보 수집, 인증 홍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음식점 인증]</b> 인증 대상에 '음식점'으로 표기하는 정도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충청남도 미더유 인증사례 있음</li> </ul> </li> <li><b>[광역인증]</b> 도단위 농산물 인증 사례는 G-마크 인증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 무농약농수산물인증, 유기식품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 천일염인증 등 정부 인증을 받은 상품 중 경기도내에 있는 업체 대상 광역인증 표시 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제휴푸드]</b>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다른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식품</li> <li><b>[기준 사례]</b> 소비자가 제휴푸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휴 푸드 구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b>농산식품 판매면적의 20% 이하</b>일 것</li> </ul>

### ■ 로컬푸드 소비자 접근성 제고

-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유통경로를 마련함
  - 이동식 판매 시설을 도입하여 신선한 먹거리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로컬푸드를 쉽게 접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함. 이 때 관련법규 및 위생안전 문제를 함께 검토함
  - 또한, 광산농협 사례처럼, 신뢰에 기반한 무인점포 운영도 시도해 볼 만한 사업임
- 특히, 먹거리 정의 차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로컬푸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표 VI- 14〉 로컬푸드 소비자 접근성 향상 사례

<p>미 국  규 격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장터 쿠폰 (Health Bucks)</li> <li>▣ 저소득층 동네에 과일, 채소 행사 운영 (Green Carts)</li> <li>▣ 소형 식료품점의 리노베이션 및 상점 소유주들에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ShopHealthy)</li> <li>▣ 슈퍼마켓 관련 인센티브 제공 (FRESH) <small>[시에서 지정한 먹거리권성 낮은 동네에 슈퍼마켓 증축 및 신설 지원]</small></li> <li>▣ 학교 구내식당에 샐러드 바 운영 (1000개 이상 학교의 1,379개)</li> <li>▣ 공영주택단지 근처에 도시농장 증대</li> <li>▣ 먹거리를 생산하는 커뮤니티 가든에 재정지원과 교육 제공</li> <li>▣ 급식소와 무료 식료품배포처에 과일과 채소 배분</li> <li>▣ 지역 농장에서 생산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돈을 지불한 개인, 아동보육시설, 병원에 배송하는 '신선식품 꾸러미(fresh food box)' 프로그램</li> </ul>	
<p>토 론포  푸 드 슈 어</p>		<p>평 일 공 개  무 인 점 포</p>

## 라. 커뮤니티키친(공동체식당) 활성화 지원

### ■ 커뮤니티키친(공동체식당) 확산 지원

- 먹거리 복지 관련 지자체 활동은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 청년, 1인 가구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 특히 기존 현금지원 방식의 복지 서비스를 현물, 지역농산물 연계 지원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임
- 커뮤니티키친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기능을 강화함
  - 특히 관련법규 검토, 사례소개, 수요 분석, 수익성 및 적정가격 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운영과정에서의 갈등요인 해결을 지원함



-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추진 프로세스, 타부처 정책 소개 등을 포함한 공유식당 유형별로 추진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단체 등을 전문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그림 VI- 9〉 공동체식당 및 지역내 유휴자원 활용 사례

커뮤니티 키친 운영사례	대전 동네함끼 운영사례	공동체 식사제공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커뮤니티 키친]</b> 동네부엌과 비슷한 의미로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매개로 소통하는 공간(1990년대 중반 캐나다에서 확산)</li> <li>• <b>[무중력지대]</b>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 조성된 청년 커뮤니티 공간 카페, 식당 스타디움 등 다양한 공간 구성</li> <li>• <b>로컬푸드 소비와 연계</b>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확대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소개]</b> 로컬푸드 간식과 먹거리 교육을 진행하는 어린이 식당</li> <li>• <b>[지원내역]</b>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특별교부세(4천만원) 지원과제에 선정된 주민자치형 사회안전망 모델 사업</li> <li>• 2018년 시범사업을 종료하였고, 향후 사업 지속을 위한 예산 마련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식아파트]</b> 프리미엄아파트, 공동체 활동 조성 등을 목표로 최근 확산</li> <li>• <b>[주민복지 연계 확대]</b> 먹거리 공공성, 아침 밥먹기 캠페인 등과 연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li> <li>• <b>[대학교]</b> 국립대학교 중심으로 '천원의 아침' 급식제공 사례 증가 → 일부 낭비 및 사립대간 차별로 폐지 요청도 있음</li> </ul>
 <p>공유부엌 사례(무중력지대)</p>	 <p>동네함끼 어린이식당</p>	 <p>아침조식 사업(광주 광산구)</p>

신나는 마을 공동부엌 개요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77, 919동 102호
연혁	• 2012년 : 은평구 내 교회 부엌에서 시작 • 2013년 11월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마을부엌 개시
배경/목적	• 공동구매와 조리로 반찬 나눔 • 바른먹거리, 조리기술 배우기 • 재능기부, 독거노인 반찬나눔, 다문화가정과의 교류 등을 통한 따뜻한 마을만들기
조직형태	• 지역공동체 기반 회원모임 • (사)국제슬로우푸드협회 은평지부(2017년 7월 12일)
운영	• 자발적 회원모임 : 요리팀(반찬나눔), 봉사팀(소외계층반찬봉사), 간식들봄팀(아이들 간식 나누기) • 파트타임 직원 : 2인 •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사업 등) 사업 지원 받음
주이용자	• 회원 : 지역주민, 주로 기혼여성(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회원은 약 30명)
주요사업	• 반찬만들기, 간식만들기 회원 모임(월, 화, 수) •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나눔 봉사(목) •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해 먹거리 교육
이용방법	• 회원은 참가비로 월 2만원 납부, 월 8회까지 프로그램 참여 가능(재료비는 별도)



\* 자료 : 환경정의, 마을부엌 운영자 네트워크 워크숍 자료집

문화파출소 사례

- 목적 : 치안센터 공간 조성 및 활용,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예술향유 저변 확대
- 추진방식 : 시범 치안센터(1개)를 통한 운영모델 개발 후 9개 센터에 적용  
\* 시범운영결과물을 활용, 9개 치안센터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공간 조성, 지역주민·범죄피해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문인력 배치, 문화예술활동 공간 제공 등
- 부처협업 : 문체부-경찰청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	센터명	지역	센터명
서울	수유6치안센터(시범)	충청	사천지구대(정원)
	신정5치안센터	호남	금암치안센터(전주)
경기, 강원	동면치안센터(춘천)	영남	안산치안센터(여수)
	산본치안센터(군포)		신선치안센터(울산)
제주	서문치안센터		도림치안센터(대구)

\* 자료 : 문체부



## 마. 먹거리정책 인프라 확충 지원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활성화

- 농식품부는 2019년 처음으로 먹거리정책 협약을 기초로 먹거리관련 농림사업을 패키지화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함. 향후 연계된 정책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지역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함
  - 기존 농림사업도 자치구 지역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을 추진하거나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함
- 또한 먹거리정책 협약 이후에 실제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협약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도화함

〈표 VI - 15〉 지역개발사업과 푸드플랜의 연계 사례



### ■ 생활SOC, 지역재생, 사회적경제, 지역일자리 분야 정책 사업과 연계 강화

- 먹거리정책 인프라를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문화·복지·행정시설 건립, 생활SOC 사업, 지역재생사업, 지역일자리지원 등과 추진되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함
- 또한, 마을만들기사업, 먹거리기반 취창업 교육사업의 푸드플랜 연계성을 강화함

〈그림 VI- 10〉 타사업 연계를 통한 먹거리 인프라 확충 및 사업 활성화 방향과 사례

#### 00 시민선 7기 공약사업

(2-6)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16) 지역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건립
(2-18)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진로코칭센터 설치
(2-19) 신도시 공공어린이집 설치
(2-21)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3-1) 복합기능의 문예회관 건립
(3-8) 온천엘스케어 힐링산업 실증센터 추진
(3-9) 주변자원 연계 온천 활성화
(3-10) ~지역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4-1) 임기내 일자리 5만개 창출 (공공일자리 등)
(4-3) 청년일자리 매칭기능 강화

#### 생활 SOC 정책

#### 아산시 도농복합형 마을만들기

- 2015년 설립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인 아산공동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농복합형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농촌현장포럼, 마을학교, 마을기업 육성 등 추진 (마을기업 10개소 육성 등)
- 농가조직화를 통해 로컬푸드, 학교·공공급식 생산자로 육성

#### 대전 유성구의 먹거리기반 취창업 지원

◎ 로컬푸드 기반 전문가 양성(먹거리 매니저, 가공개발, 소셜벤처창업)

로컬푸드 활동가 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 1. 교육 대상: 로컬푸드 활동가
- 2. 교육 기간: 12월 14일(수) 14:00~17:30
- 3. 교육 장소: 유성구청 3층 대회의실
- 4. 교육 내용: 로컬푸드 생산·유통, 가공·가공식품 개발, 소셜벤처창업
- 5. 교육 신청: 유성구청 3층 대회의실

◎ 도시형 먹거리 기반 취창업 일자리 지원

- 청년 창업지원, 기업지원, 영아학교(교육사업), 실버창업학교(도시농업전문가과정), 거드너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식품파일럿플랜트 조성 (2016. 4~2018. 6.)</li> <li>② 통합물류센터 조성 (2016. 4~2018. 6.)</li> <li>③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2017. 3~2018.12.)</li> <li>④ 기업시범생산 지원 등 (2017. 3~2018.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컬푸드 활용 두부, 식초, 소스류 등 가공식품화</li> <li>로컬푸드 및 로컬푸드 가공식품 유통 지원시설 조성</li> <li>로컬푸드를 활용한 청년소셜 차이즈 창업 지원</li> <li>지역 중소식품기업의 제품리뉴얼, 시제품생산 등 경쟁력 강화</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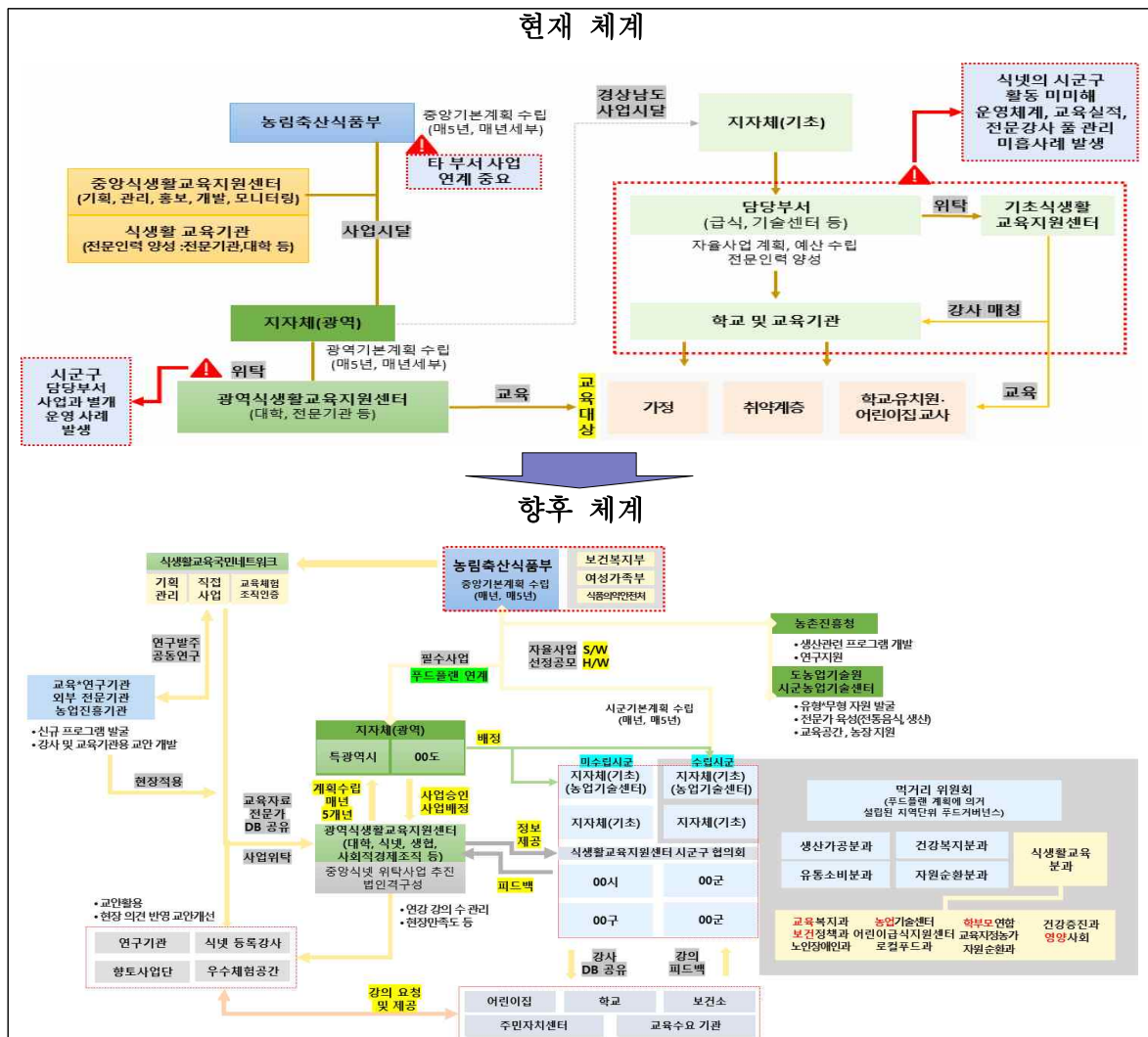
### ■ 식생활교육과의 연계 강화

- 시범지역 9개소의 푸드플랜을 밀라노 협약의 권장 행동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앞서

모니터링 결과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 식생활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푸드플랜은 주로 시군구 단위로 수립되는데 비해, 농식품부의 식생활교육지원사업은 시도 단위로 지원되어 시군구에서는 식생활교육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보건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도 식생활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서간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 따라서 농식품부가 식생활교육의 주관부서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푸드플랜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정책추진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20~2024년 추진되는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추진체계를 개편하여 제3차 기본계획 이행 기간에 적용해 나감

<그림 VI- 11> 식생활교육 체계 개편 방향



자료 : 김중안 외(2018f)

### 3. 지역 푸드플랜 지원체계 강화

#### 가. (가칭)중앙먹거리전략지원센터 설치

##### ■ (가칭)중앙단위 먹거리전략 통합지원센터 운영

- 직거래법을 근거로 먹거리정책 또는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을 추진함
  - 공적조직으로 산하기관 또는 대학교 내에 설치하거나 민간기관을 지정함
  - 유사사례 :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해 ‘중앙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민간기관으로 지정함.  
일정기간 단위로 재지정 여부를 심의 결정함
  - 참고로, 직거래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여 푸드플랜 지원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부처간 공감대 형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직거래법의 전문기관 지정 조항을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주요기능은 ①지역의 먹거리정책 추진시 관련 정보 제공(먹거리관련 법규와 정책 정보 등) ②푸드플랜 또는 직거래 기본계획 이행상황 모니터링 ③주기적으로 먹거리정책 주요 성과 분석 ④관련 연구 지원 ⑤먹거리정책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⑥주요 먹거리정책간 연계성 강화 및 갈등관리 지원 등으로 함
- 푸드플랜 수립 지역이 확대될 경우, 권역별 지원센터 지정도 검토함

#### 〈그림 VI-12〉 직거래법의 관련 조항

**제8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경영·컨설팅 지원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지원
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나. 푸드플랜 지자체 협의체 구성 및 지원

### ■ 지자체간 연대

- 푸드플랜의 성공적 추진과 지방정부간 공공정책, 정보를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우리사회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함
- 지자체간 연대는 ①기초지자체간 연대 ②광역지자체내에서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연대 ③광역지자체간 연대로 추진될 수 있음
- 지자체간 연대를 통해 ①국민 공감대 형성과 미래비전 제시 ②협동 프로젝트 진행 ③먹거리기반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④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시범사업과 관련연구 진행 ⑤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개발 및 시행 ⑥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함
- 유사 사례로 전국 96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한 ‘건강도시’ 협의회가 있음
  - 건강도시 협의회는 WHO의 건강도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질 향상을 목표로 함

〈그림 VI- 13〉 유사사례 : 건강도시협의회

-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 달성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임
- 우리나라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1996년 과천시 시범사업을 계기로 시작
- 2006년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현재 93개 지자체가 정회원으로 가입
-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도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관련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위하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함께 합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의장 김영종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OKHC)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006년, 14개 도시로 출발한 우리 협의회는 건강할 사회, 물리적 환경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한 회원 단체장님 및 학술위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현재 명실상부 대한민국 건강도시를 대표하는 행정협의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여기서 건강도시란, 도시화로 인해 등장한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시작한 개념으로 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에 주목하며, 공평하고 포용적인 사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시를 가리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이러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93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회원도시와 11개 준회원 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와 헌신 덕분에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회원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협회와 활동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년에는 각지만 핵심한 행보이라는 '소확행(小確幸)'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건강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큰 함성을 내는 때가 되길 바라며, 건강도시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모두가 '대확행(大確幸)'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장  
총 로 구 청 장 **김영종**

지역연맹	지역사무소	회원국
서태평양	필리핀 마닐라	27
동남 아시아	인도 뉴델리	11
중동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21
유럽	덴마크 코펜하겐	53
아메리카	미국 워싱턴	35
아프리카	콩고 브라자빌	46

###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주요 요소

1. 정책성명서에 따른 정치공약 및 지방자치단체 공약
2. 여론을 통한 미래 비전 및 목표 제시
3. 진행자 임명과 함께 부문간 위원회/협동팀을 구성하고 건강도시 계획의 기획 및 실행에 있어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
4. 신체활동과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건강위험요인이 포함된 건강도시 프로파일의 작성, 부문간 협의를 통한 우선순위 건강 문제의 발견과 우선순위 건강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역활동 계획을 공식화 하는 것
5. 지역사회의 참여를 위해 협동팀을 구성하여 우선순위 연구과제 활동을 함
6. 건강도시 계획의 실행의 정기적인 감시와 평가체계와 함께 계획 실행의 과정을 감시하기 위한 지표와 목표치 개발
7. 일반 대중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제공서비스 체계 구축

\* 출처 : 이우식, '건강도시'

### 회원 현황 (96개 도시)



\* 출처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홈페이지

## 다. 직거래 기본계획 운영 내실화

### ■ 직거래 기본계획 내실화 : 이행상황 주기적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 시도별 직거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
  - 특히, 지방이양 확대 등을 고려하여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도의 기능 강화하고, 계획협약제도로 발전시킴
- 우수 시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직매장지원사업, 푸드플랜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 선정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함

### ■ 로컬푸드 관련 연구 확대 : 기대효과 주기적 성과 분석 및 발표

- 로컬푸드의 내용적 충실성과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 설정에 대한 연구를 개발함
  - 중소가조직의 생산품목수, 중소가족농의 소득 안정화, 푸드마일리지 감소, 일자리창출 등
- 농진청 또는 농경연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





## [참고 문헌]

- 강성욱(2018), 전주푸드2025 추진전략, 농업·농촌의 길 2018
- 길청순 외(2017), 화성 푸드플랜 2030 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길청순 외(2019a), 서대문구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길청순 외(2019b), 춘천시 지역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김수일 외(2011), 농수축산물 과대포장 방지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김종안 외(2018a), '푸드플랜 추진전략과 활성화 방안', 농업전망 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종안 (2018b), '지역단위 푸드플랜 추진 전략', 농정연구센터 292회 세미나 발제자료
- 김종안 외(2018c), '사례분석을 통한 푸드플랜의 추진방향과 실천과제', 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 세미나 발제자료
- 김종안 외(2018d),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푸드플랜의 지향과 실천과제, 한국식품유통학회
- 김종안 외(2018e), 푸드플랜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연구, 한국농식품유통공사
- 김종안 외(2018f), 지역 식생활 교육 추진모델 구축 연구,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 김종안 외(2019g), 충청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김진희 외(2019h), 상주시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서,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김현일 외(2019), 해남군 지역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농림축산식품부(2019),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수범사례집
- 문은숙 (2018), '도시먹거리 정책 방향과 과제', 정책기획위원회 세미나 발표자료.
- 박성호 외(2010), 과일류 골판지 상자 포장개선 효과, 농촌진흥청·김수일포장개발연구소
- 박영범 외(2018), '먹거리계획(푸드플랜), 생산소비관계의 재편 전략', 정책기획위원회 세미나 발제자료
- 박영범 외(2019), 포용 농어촌 중장기 비전과 전략연구, 정책기획위원회
- 박진도 외(2018),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 전략, 정책기획위원회
- 배옥병(2018), '지속가능한 먹거리 종합정책과 먹거리 공공조달 정책 방향', 농림축산식품부 먹거리선순환체계구축TF 워크샵
- 안충섭(2019), 아산시 학교급식지원 사업 추진 사례, aT유통교육원

- 윤지현 외(2018), 지속가능한 식생활·영양 정책 선진 사례 및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개편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 이민수 외 (2016), 로컬푸드 소비자행태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전북연구원
- 정상택 외(2018),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정은미 외(2018a), 청양군 지역 푸드플랜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 외(2018b),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기대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 외(2019a), 나주시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 외(2019b), 완주군 지역 푸드플랜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남혁(2013), '선진국의 도시 먹거리 계획 : 캐나다 토론토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와도시 203호, 서울연구원
- 허헌중 외(2018), 유성구 푸드플랜 최종보고서, 지역재단
- 후지시마 히로시(2012), 도매시장 유통의 사회적 역할과 전망, 다리
- 황영모 외(2015), 푸드플랜 시대,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방향과 전략, 전북연구원
- KB금융지주, 2018 한국 1인가구 보고서
- 뉴욕시 의회(2010), Food Works
- 뉴욕시 푸드위원회(2018), Food Metrics Report
- 런던시(2019), Food Strategy 2018
- 버몬트주(2010), Farm to Plate
- 밴쿠버시(2013), What feeds us?
- 서울시(2017),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
- 토론토시 푸드위원회(2010), Toronto Food Strategy
- 파리시(2015), Sustainable Food Plan 2015-2020
- 한국농식품유통공사(2018), 지역 푸드플랜 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추진결과 보고

## 부록

### 먹거리 기본조례 사례와 설문지

- ①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②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 ③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 ④ 지역 푸드플랜 설문 조사지 (1차)
- ⑤ 지역 푸드플랜 설문 조사지 (2차)



## 1.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 개요

- 제정 : 2014-04-18 조례 제 1073호
- 제정당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소관부서 : 식품정책과

### □ 조례 내용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축산물과 식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축산업인의 소득안정,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유성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먹거리 통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로컬푸드, Local)란 생산자에게는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축산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7.11.10., 2018.12.21.>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18.12.21.>
3.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 등의 순환, 에너지 및 화학 영농자재 사용의 최소화 등을 통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3조(지역먹거리 통합지원계획의 수립)

-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방법에 의한 지역먹거리의 통합지원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5. 7. 3., 2018.12.21.>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 통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1.>
  1. 지역먹거리 정책의 목표와 활성화·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주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3. 지역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먹거리 농·축산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5. 지역먹거리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6. 지역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간 협의 또는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먹거리의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8.12.21.]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21.>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삭제 <2017.11.10.>
  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 통합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1.>
  3. 지역먹거리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1.>
  4. 지역먹거리 장터 및 전문판매장, 가공시설 등 로컬푸드 관련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3., 2018.12.21.>
  5. 지역먹거리 인증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1.>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7.3.,2017.11.10.>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15. 7. 3.>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1의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역먹거리 및 지역경제 등 관련 업무 공무원 <신설 2015. 7. 3., 2018.12.21.>
  2.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지역 내 회사 급식담당 및 학교급식 관련자(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조리사 등)
  4. 생산자조직·소비자조직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 대표
  5. 지역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개정 2018.12.21.>
  6.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7.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 7. 3.>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자치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7. 3., 2018.12.21., 2019.03.12.>

## 제6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10.>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먹거리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적용 등)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9조의2(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 사업

2. 통합물류 등 지역먹거리 직거래유통 활성화 사업
3. 지역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 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 사업
5. 지역먹거리 안전성 확보, 홍보, 교육,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 물류, 전처리, 가공 등
2. 판매시설 : 지역먹거리 판매
3. 교육시설 : 지역먹거리 관련 교육, 상담, 자문 등
4. 시험·연구·인증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8.12.21.]

#### 제9조의3(통합지원센터의 운영)

- ①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단체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1.]

#### 제10조(지역먹거리의 생산)

- ① 지역먹거리는 소규모 생산자들의 다품목 소량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농·축산업인이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조성 및 상호간 협력과 연대에 의한 경영 방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의 생산은 소비처를 예측한 후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재배, 사육 또는 생산하는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1. 품목별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지원 사업
2. 친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 자재 및 농가 이력관리 사업
3. 학교급식, 공공급식 및 회사급식용의 맞춤형 식품생산 지원 사업
4. 안전·안심 농·축산물 생산 및 식품가공 지원 사업
5. 지역먹거리의 상표등록 지원 사업 <개정 2018.12.21.>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목개정 2018.12.21.]

#### 제11조(지역먹거리의 가공)

① 지역먹거리 가공사업은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마을단위의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개정 2018.12.21.>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가공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가공을 위한 연구개발, 소기업 유치 등 로컬푸드 가공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 2018.12.21.>

[제목개정 2015.7.3., 2018.12.21.]

#### 제12조(지역먹거리의 인증 등)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촉진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② 구청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 주체와 협력하여 지역먹거리의 생산·유통·판매 등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③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인증·표시, 안전성 검사,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④ 지역먹거리의 인증 기준·품목 및 절차 등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3., 2018.12.21.>

[제목개정 2015.7.3. 2018.12.21.]

#### 제13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1.>

#### 제14조(인증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4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역먹거리 관련 기관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③ 삭제 <2016.7.1.>

#### 제15조(지역먹거리 유통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생산참여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먹거리의 유통·소비 등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장터(이하 “장터”라 한다), 지역먹거리 전문판매장(이하 “전문매장”이라 한다),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지역먹거리 유통·소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3., 2016.7.1., 2017.11.10, 2018.12.21.>

② 구청장은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3.2016.7.1., 2017.11.10.>

③ <삭제 2015. 7. 3.>

1. <삭제 2015. 7. 3.>

2. <삭제 2015. 7. 3.>

3. <삭제 2015. 7. 3.>

④ <삭제 2015. 7. 3.>

[제목개정 2015. 7.3., 2018.12.21.]

#### 제15조의2(지역먹거리 관련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의 가공시설과 제15조제1항의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을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기여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1., 2017.11.10.,

2018.12.21.>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의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조문신설 2015. 7. 3.] [제목개정 2018.12.21.]

#### 제16조(지역먹거리의 소비촉진)

- ① 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 및 복지시설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먹거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2017.11.10., 2018.12.21.>
-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이용자들이 장터나 전문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한다. <개정 2018.12.21.>
-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별 건강밥상 꾸러미사업단을 조직·육성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소포장·포장박스·직배송·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목개정 2018.12.21.]

#### 제17조(유통안전기금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가격이 각종 재난 또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급등 또는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관공동의 유통안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 제18조(지역먹거리 참여주체의 책임)

- ①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식생활 교육·홍보 및 자료조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먹거리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12.21.>

③ 생산자인 농·축산업인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인증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축산업의 소득안정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지역먹거리 이념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12.21.>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8.12.21.]

#### 제19조(지역먹거리의 날 지정)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소비촉진과 인증 농·축산식품의 소비촉진과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지역먹거리의 날” 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목개정 2018.12.21.]

#### 제20조(인근 지역과의 협약 등)

① 구청장은 특정 농·축산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농·축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 인력 및 기술의 교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12.21.>

#### 제21조(공익적 민관거버넌스)

구청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구축 및 지역먹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법인 등과 다양한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등 상생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2.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 □ 개요

- 제정 : 2017-09-21 조례 제 6667호
- 소관부서 : 식품정책과

### □ 조례 내용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먹거리가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 ② 보건, 복지, 고용, 주택, 도시계획 등의 정책과 결합된 먹거리정책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 ③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 ④ 미래의 식량보장을 위해 중소가족농을 배려하는 도농상생의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 ⑤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며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는 생태적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식품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상태를 말한다.
4. "도농상생"이란 도시와 농어촌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말한다.
5. "중소가족농"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자신 및 가족의 노동력을 근간으로 다품목 생산을 지향하는 생산자들을 말한다.
6.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8.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 환경적·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

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정책을 시행 및 추진함에 있어 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 2. 분야·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 4.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서울 먹거리현장)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먹거리현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제10조(먹거리정책자문관)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 제3장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 제11조(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 ① 시장은 시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에 대하여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을 할 수 있다.
1. 과일·채소 판매 공간 확대 조성에 이바지한 식품판매·취급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청소년수련시설"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등
- ② 인증을 받은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③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표시, 신청절차,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기준설정 등)

- ① 시장은 시민이 먹거리보장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 및 시 산하기관에서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에 적합한 먹거리를 판매·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민간기관 등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④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 및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지표설정 및 평가)

-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먹거리정책 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먹거리정책 지표 적용에 따라 시의 먹거리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 제14조(통계·정보)

-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 및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보장 및 건강, 영양 등 전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조사표 문서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집한 통계 및 정보를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 먹거리 및 영양소 섭취,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조사
2. 시민 먹거리보장 실태조사
3. 시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체계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시민의 참여)

시장은 먹거리정책 수립과 시행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7조(먹거리 지원)

① 먹거리 지원은 시민 또는 시민 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그 외 먹거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먹거리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먹거리 위기관리)

시장은 각종 재난 등으로 먹거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제20조(교육 및 홍보)

-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대중매체, 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장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 제2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2.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4.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
5.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6.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2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1부시장,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2. 위촉위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간사와 식품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4조(위원장 등)

- 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한다.
- ②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7조에 따른 기획조정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⑤ 감사는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5조(고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 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기획조정위원회)

-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기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하며, 기획조정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기획조정위원회는 기획조정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 기획조정위원회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업무에 관한 협의·조정
  2. 위원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총괄 조정
  3.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 ⑤ 기획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28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공공급식분과위원회 : 도농상생을 통한 공공급식의 확산 등을 위한 자문 및 정책개발, 공공급식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 영양개선, 공공급식의 건강먹거리 조달체계 확립
  2. 도시농업분과위원회 :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 등의 활성화 사업
  3. 식품안전분과위원회 :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시민교육, 식품안전사고 조기 대응 등을 위한 자문, 정책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도농상생분과위원회 : 먹거리와 관련한 도농상생 시책 및 사업, 도농교류 활성화
  5. 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과 지침 개



발, 영양 부족과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NCD), 보건과 먹거리 부분 통합 전략 및 정책 개발

6.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 강화
7.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 시 자치구와의 협력,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 개발 및 지원, 활성화 사업
8.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 구현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활동
9.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 도시회복력, 먹거리 자원 순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 해결
10.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 먹거리취약계층, 취약지역 등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 활동

② 분과위원회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다른 위원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1회 하되,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

#### 제29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3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전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1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9조에 따른 조사·연구 및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2조(위원의 제적·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33조(수당)

시장은 제26조, 제27조, 제28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046호,2019.3.28.>(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3.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 □ 개요

- 제정 : 2019-01-07 조례 제 6006호
- 소관부서 :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 □ 조례 내용

####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경기도민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도 또는 생산·제조·가공한 해당 시·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민관협치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 경기도교육청 및 시·군과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도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가 부족한 도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먹거리전략 수립)

- ①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먹거리전략(이하 “먹거리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먹거리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취약계층, 어린이·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도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 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 라.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 마. 성·연령,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및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활성화 등 도농상생 확대에 관한 사항

- 다.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라.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 환경 친화적 농업 확대에 관한 사항
  - 마.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민관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 전담부서 운영 및 민관합동 협의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 나.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한 도 관련 부서 및 시·군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 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 제7조(먹거리전략 시행)

- ① 도지사는 먹거리전략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도지사와 도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전략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먹거리 위원회)

- ①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계 마련을 위해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의 협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거리전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 경기도교육감 및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가.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 나. 경기도교육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 실·국장
  - 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한 시장·군수

라.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도민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3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 및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담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예

② 아니오

4. 귀하께서는 최근 5년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먹거리 문제점들이 어떻게 변하였다고 느끼십니까? [7점 척도]

구분	5년 전보다 나빠졌다 ◀◀◀◀◀◀◀			비슷하다	5년 전보다 나아졌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 먹거리 취약계층 및 계층간 먹거리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식품안전성 및 위생정도(음식점, 급식소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비만, 성인병 등을 유발하는 식생활 습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변동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환경에 부담을 주는 농식품의 대량 생산 및 소비 추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의 국내산 농산물 섭취 비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먹거리 표시제도 관리(친환경, GAP, GMO 표시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자의 영농 경제활동 여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농산물 소비에 대한 인식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지역 및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 육성 여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ART 2 푸드플랜 정책 이해도**

5. 귀하는 현재 우리 지역 또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종합정책(푸드플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5-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6번으로 이동)

5-1. [5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에만 답변] 귀하께서 거주하는 시군지역의 푸드플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들었습니까?

① 선거공약

② 시군설명회

③ 신문, TV 등

④ 기타 ( \_\_\_\_\_ )

6. 아래는 우리 지역 주민과 국민의 안전먹거리 보장을 위해 먹거리종합정책(푸드플랜)이 해결해야 할 5대 과제입니다. 이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                   |                      |
|-------------------|----------------------|
| 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 ② 먹거리 공급 안전성 증대      |
| ③ 먹거리 복지 증진       | ④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체계 구축 |
| ⑤ 지역 푸드자원 순환체계 마련 |                      |

7. 현재 먹거리 관련 정책은 분야별로 나누어 시행 중입니다. 분야별로 보건복지부(먹거리 복지 분야), 교육부(학교급식 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 분야), 농림축산식품부(먹거리 생산 및 공급), 환경부(먹거리 폐기)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업무추진의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처럼 각 부처별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처
- ② 현재처럼 각 부처별로 나누어서 추진하되, 국가 먹거리정책위원회와 같은 협의조정기구를 만들어서 협의·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 ③ 먹거리 생산·공급·안전관리·복지 정책을 일원화하여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
- ④ 기타 ( \_\_\_\_\_ )

8. 우리지역의 먹거리 종합정책(푸드플랜)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조직의 활동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아래 선택지 가운데 귀하가 생각하시는 거버넌스 조직에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직 **5개를 골라주세요.**(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 |                   |                 |
|-------------------|-----------------|
| ① 식품 정책 행정 담당자    | ② 시·군의원         |
| ③ 학교 영양사          | ④ 관내 복지시설 운영자   |
| ⑤ 소비자 단체 활동자      | ⑥ 지역 농업인대표      |
| ⑦ 보건 복지 정책 행정 담당자 | ⑧ 식품·영양관련 전문가   |
| ⑨ 지역 식당 대표자       | ⑩ 지역 농식품 유통 대표자 |
| ⑪ 대학 식품관련 교수      | ⑫ 교육 정책 행정 담당자  |
| ⑬ 학생 및 청년 대표      | ⑭ 기타 ( _____ )  |

9. 우리 지역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선택지 가운데 **현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2개**와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 2개**를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 ( \_\_\_\_\_, \_\_\_\_\_ )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 : ( \_\_\_\_\_, \_\_\_\_\_ )

- ① 로컬푸드 소비 확대 정책(직매장 개설, 공공급식 공급 확대)
- ②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사업(반찬 배달, 바우처 지급)
- ③ 먹거리 인증 및 안전관리 정책(원산지 표시 및 자체 인증제도 운영)
- ④ 일반 시민 대상 텃밭 및 생산가치 인식 개선정책
- ⑤ 학생 및 일반 시민 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
- ⑥ 지역농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식품산업 육성 정책
- ⑦ 환경친화적 먹거리 체계 마련을 위한 폐기물 자원화 정책
- ⑧ 민관 협의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조직 육성 정책

☺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아래는 우리 지역 주민과 국민의 안전먹거리 보장을 위해 먹거리종합정책(푸드플랜)에서 해결해야 할 6대 과제입니다. 이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① 먹거리 복지 강화 및 불평등 해소                      ② 건강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 ③ 환경친화적 먹거리 생산 및 소비 확산              ④ 적정가격 보장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 ⑤ 먹거리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⑥ 먹거리기반 도농 연대와 상생 강화

**PART 2                      먹거리종합전략(푸드플랜)의 세부 사업별 중요도 및 시급성**

영역	푸드플랜 분야별 사업 구분	중요도	중요하지 않음 ◀◀◀		보통		중요함 ▶▶▶	
		시급성	시급하지 않음 ◀◀◀		보통		시급함 ▶▶▶	
3-1 건강 농산물 생산 및 안전 관리	① 농산물 수요-공급 개선을 위한 체계 마련 - 수요공급 일치를 위해 구체적 소비량에 근거한 생산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것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② 농산물관련 인증제도 및 로컬푸드 품질(안전성)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③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 구성 및 지원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④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⑤ 공동체 농장(CSA) 등 도시민 연계 농촌 시설 증대 - 생산자와 소비자가 농산물의 구매가격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공급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농장모델로, 소비자는 일정액의 회비를 지급하고 농가로부터 정기 꾸러미를 제공받는 농장 운영 방식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⑥ 도시농업(학교텃밭, 옥상, 베란다 텃밭 등) 확대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영역	푸드플랜 분야별 사업 구분	중요도	중요하지 않음 ◀◀◀		보통	중요함 ▶▶▶	
		시급성	시급하지 않음 ◀◀◀		보통	시급함 ▶▶▶	
3-2 건강 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로컬푸드 구매 확대 - 급식 식재료 구입시 지역농산물 구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차액, 구매체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② 어린이집 급식 지역식재료 구매 지원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③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급식 지역식재료 구매 지원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⑤ 로컬푸드 판매, 가공시설 보급 확대 -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생산(하우스)시설, 로컬푸드 레스토랑, 카페, 로컬푸드 이용 가공식품 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⑥ 커뮤니티 키친 등 먹거리 소통공간 확대 - 커뮤니티치킨은 공동주거단지의 여러세대가 함께 어울려 밥을 짓고, 먹는 공간으로 공동부엌, 공동식당, 커뮤니티 키친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음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⑦ 취약계층 대상 건강먹거리 및 식품 지원 확대 - 로컬푸드 농산물 구입 바우처 발행 등 -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을 위한 센트럴키친 확대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⑧ 어린이 대상 과일간식 지원 확대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⑨ 바른 먹거리 소비시민 양성 및 조직화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⑩ 도농간 농산물 공급-소비 창구(직판장) 확대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영역	푸드플랜 분야별 사업 구분	중요도	중요하지 않음 ◀◀◀		보통	중요함 ▶▶▶	
		시급성	시급하지 않음 ◀◀◀		보통	시급함 ▶▶▶	
3-3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 여건 마련	① 먹거리 거버넌스(협의체) 운영지원 - 행정, 전문가, 일반시민 등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② 먹거리(푸드) 종합지원센터 설치 확대 - 지역단위 먹거리관련 정보, 유통시설, 가공시설 행정(부서)등이 한곳에 모일 수 있도록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③ 먹거리 관련 조례(육성근거) 마련 - 먹거리 관련 생산, 지원, 운영 등 다양한 사업과 행정적 업무가 계획되고 진행되도록 시군단위 법적 근거(조례) 마련을 실시하는 사업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④ 사회적경제 조직의 먹거리관련 활동 연계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표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음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3-4 식생활 개선 및 환경 보전	① 식생활 교육 전문가 양성 및 교육시설 확대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② 맞춤형 식생활교육 확대(어린이,성인,고령자 등) 및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증대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③ 음식 쓰레기 감량 교육 및 캠페인 확대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④ 음식 쓰레기 자원화(퇴비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지원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최종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